



상안

iversities

velopment

국토연 2004-10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글쓴이 · 임승달, 권영섭, 변세일 / 발행자 · 이규방 / 발행처 ·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 제2-22호 / 인쇄 · 2004년 6월 26일 / 발행 · 2004년 6월 30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 · 031-380-0426(출판팀) 031-380-0114(대표) / 팩스 · 031-380-0474

값 · 7,000원 / ISBN · 89-8182-331-6

<http://www.krihs.re.kr>

©2004, 국토연구원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4-1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Measures to Foster Regional Universiti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임 승 달 · 권 영 섭 · 변 세 일



연구진

연구주책임 임승달 초빙선임연구위원
연구부책임 권영섭 연구위원
연구반 변세일 연구원
자문연구진(Advisor)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진영환 부원장(주심)
김영정 전북대 교수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서태성 연구위원
최은옥 교육부 지방대학발전기획팀장
하대성 건교부 국토정책과 서기관
박헌주 기획조정실장(간사)

연구협의(자문)위원 안영진 전남대 교수
임정덕 부산대 교수
장지상 경북대 교수

발 간 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역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소위 세방화(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자본, 노동력, 자원 등에 좌우되던 산업사회에서 창의적 지식에 의해 좌우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함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이에 부응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지난 산업사회에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과밀지역의 집중 억제 관리와 낙후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성장 거점 개발 등을 통한 물적 생산 기반 조성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창의적 지식이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물적 생산기반 공급위주의 하드웨어(hardware)적 접근 보다는 산·학·연·관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소프트웨어(software)적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지방 대학의 육성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대학은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과 경제시스템 뿐 아니라 사회·문화, 기술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은 혁신을 창출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주요대학의 6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의 수능 성적 우수자의 80%이상이 서울에 진학하고 있는 등 지방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과 연구 및 교육 여건의 열악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날로 쇠퇴되어 결국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국토공간 활용의 여러 비효율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방의 대학, 산업, 문화 발전의 자생력을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 분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방 분권, 지방 분산, 지방 분업 등 삼분 정책의 추진과 함께 지방대학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주체 중의 하나로 육성하는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대학에 관한 연구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의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당위론적 논의와 첨단산업육성과 테크노파크 등 산업정책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지방대학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침체와 지역 불균형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육성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과업에서 제시하는 좋은 아이디어와 다양한 방안이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해 강건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임승달 초빙선임연구위원, 권영섭 연구위원, 변세일 연구위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준 부원장을 비롯한 원내의 연심위원들은 물론 좋은 자문을 해준 안영진 전남대 교수, 임정덕 부산대 교수, 장지상 경북대 교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각종 자료조사와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준 교육청 관계자, 사례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대학의 처·실장님, 그리고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공성에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4년 6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서 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중앙정부 주도, 요소투입형 성장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 서구 200여 년의 산업발전의 역사를 압축하여 1만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의 폐해가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지방의 저발전이라는 과제를 남겼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고는 지식정보화시대 고도성장과 2만불 국민소득 달성은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지난 시대의 폐해를 시정하고 현재의 1만불 시대를 마감하여 실질적인 2만불 시대에 진입하며,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 하여야 하며, 지방의 발전을 유도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분야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요소투입형 성장을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어떤 주체들의 역량보다 대학의 역량이 중요하다. 지방에 공공 연구기관이 거의 없고, 기업도 지사공장이어서 고급인력이 취약한 반면에 지방대학에는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 이들이 교육자이자 연구자이고 지역내 혁신주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지방에서 대학은 우수인재의 보고이기 때문에 대학을 제외한 지역혁신체

계 구축과 자립형 지방화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체계구축의 중심축으로 삼아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 결국에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주요대학의 6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 수능 성적 우수자(상위 5%이내)의 80%이상이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하며 지방대학은 정원미달과 우수학생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 기업들 또한 인재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지방에서의 기업활동을 어려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방대학을 통해서 자립형 지방화의 계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대학이 각 지역의 구심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지방대학육성 → 지역혁신 활성화 → 지역산업의 발전 →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 → 인재의 지방정착 →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침체와 지역불균형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사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에 활용한 자료들은 지방고교생들의 대학 진학실태 설문조사결과, 해외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사례, 그리고 대학 CEO들의 지방대학육성에 대한 의견 등 최신의 자료들을 조사·분석하여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로 판단해 보건대 지방대학의 인재들과 지역의 혁신주체들을 결집하고 기업지원을 착실히 하여 혁신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의 다른 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상승효과를 발휘한다면 자립형 지방화도 머지않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지방대학육성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해소되고 우리나라의 지방도 경쟁력 있는 도시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4년 12월

권영섭 연구위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대학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침체와 지역 불균형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육성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1장 서론

21세기는 지역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소위 世方化(glocalization)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자본, 노동력, 자원 등에 좌우되던 산업사회에서 창의적 지식에 의해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이에 부응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요소투입형 성장을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학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 경우 인프라가 취약하고 기업지원기관도 부족하며 기업입지 매력도 떨어지지만 지방대학에는 우수한 대학교수와 지역인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지역내 주요 혁신주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대학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주요대학의 65%가 수도

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의 수능 성적 우수자(5%이내 학생)의 80%이상이 서울에 진학하고 있는 등 지방대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과 연구 및 교육 여건의 열악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날로 쇠퇴되어 결국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국토공간 활용의 여러 비효율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의 대학, 산업, 문화발전의 자생력을 약화시켜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 분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학문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대학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지방대학 침체와 지역 불균형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육성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토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나아가 관련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 지방대학과 지방발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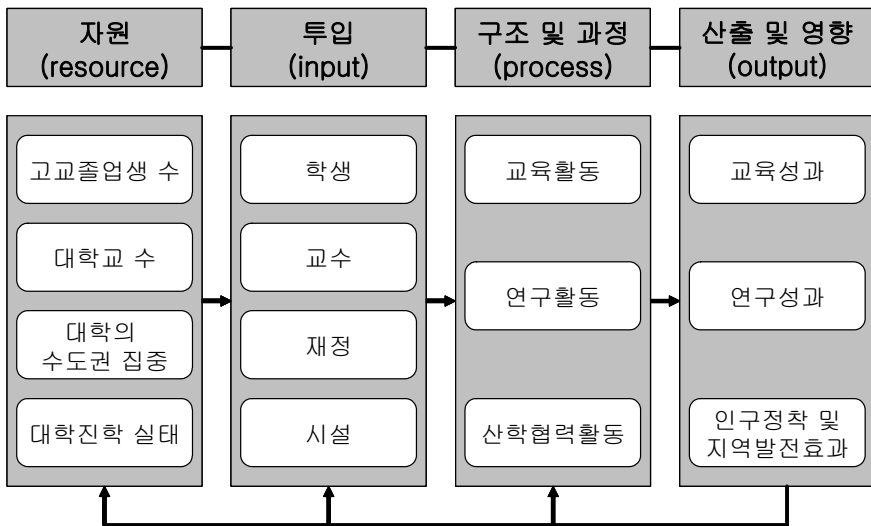
대학이 국가나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으로는 세대간 효과(intergeneration effect)까지 발생하여 이를 모두 포괄하여 분석할 수는 없다. 오늘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 개념 규정이나 연구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학문의 성격에 따라, 또 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학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대학의 기능(교육, 연구, 봉사) 및 활동, 지역발전의 개념(지역성장 + 사회 구조변화)을 기준으로 유형화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네 가지 접근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소비활동 기능과 지역발전의 지역성장과 구조변화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역할과 효과를 유형분석(category analysis)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공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적 자본적 접근', 산학협동과 지역혁신체계, 테크노폴리스 등의 지역산업적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학의 '첨단 주체적 접근', 대학의 지역주민고용과 대학구성원의 소비활동 등에 따른 지역경제효과를 분석하는 '경제 주체적 접근', 마지막으로 최근 대두된 지방대학의 침체나 육성정책 등을 대학교육발전 측면에서 강조하는 '교육정책적 접근'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학과 지역발전 간의 관계를 어느 한쪽에 치우쳐 접근하고 있어 부분적·개괄적·추상적 접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부분적·개괄적·추상적 접근을 탈피하여 종합적·분석적·실증적으로 접근하고 기존의 입장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이 다양한 자원(resource), 투입(input)과 상호작용과정을 거쳐 여러 산출(output)을 내놓는 복합체라는 점에 착안하여 체계분석(system analysis)을 활용한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분석의 틀



이 모형에 따르면 자원요소(고교졸업생 수, 대학교 수, 대학의 수도권집중도, 대학진학실태), 투입요소(학생, 교수, 시설, 재원 등)와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동 활동에 따라 교육성과, 연구성과, 인구정착 및 지역발전효과 등 여러 가지 산출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국가 및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대학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의 결과는 자원, 투입, 구조와 과정 요소에 다시 환류되는 누적적인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 수행의 주된 목적이다.

제3장 우리나라 대학의 공간적 수급변화와 진학행태 분석

지난 30년(1970년~2002년) 간의 대학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를 보면 대학교수는 71개교(전문대 포함 136교)에서 163개교(전문대 포함 322교)로 2.3배 증가하였고 대학생 수는 146천명에서 1,771천명으로 12.1배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대학생 수의 증가는 동기간 중의 인구증가율 1.4배를 10배 이상 상회하고 있어 그동안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기회의 팽창에 따른 고급 인력의 양성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지만 지방대학의 침체 등 오늘의 대학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대학생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1980년에는 72 : 28로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었다. 하지만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내 대학 신설과 정원 규제, 1994년 대학 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 준칙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대학 설립과 정원이 급증하면서 2002년 현재 39 : 61로 비중이 역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지방 우수학생의 서울 유입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지방대학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시대별 대학의 입지패턴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인근지역으로부터 경부축을 따라 신설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 서울과 가까운 충남지역에 많은 대학이 입지하였다. 또한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충남 서해안지역

등에도 대학이 많이 신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출신 고교생의 지역별 대학진학 행태를 살펴보면 전국 각 시·도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의 비중은 시·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13.7%의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체 시·도에 진학한 비율은 평균 70.1%로 지방대학이 지역학생에게 진학기회의 제공으로 외지진학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근거리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학생의 지방대학 진학행태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근거리에 입지한 강원대나 충주대, 충북대의 경우에는 수도권 학생의 비중이 각각 35.1%, 21.1%, 18.6%로 높은 반면, 원거리에 입지한 부산대, 창원대 등은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학생의 지방대학 진학행태는 거리에 민감하여 주로 수도권에 근접한 충청권이나 강원권 등의 대학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당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은 입학생 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고교생의 진학지역 및 대학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진학지역의 선호도, 지원대학 선택시 우선적인 고려사항, 수도권 및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진학 학생의 지역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 조사결과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고,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동일 시·도에 있는 지방대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우수학생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지방대학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고교생들에게 대학 선택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취업 및 장래성(28.7%)', '합격가능성(25.4%)', '적성과 학과특성(19.1%)', '대학의 명성(11.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학생의 대다수는 적성과 학과 특성 보다는 취업 및 장래성, 합격가능성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고려하고 있다. 즉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대학 선택시 등록금

부담과 외지진학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은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비율은 각각 41%와 59%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 또는 장래성(31.3%)', '대학의 지명도(25.3%)', '다양한 사회문화적 혜택의 향유(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고교졸업생들이 학문적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지방의 고급 일자리 부족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방 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성적(29.1%)', '지리적 근접성(26.3%)', '경제적 이점(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만한 성적이 되지 않거나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인 이유 등 소극적 차원에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지방대학의 지역연계 실태 및 지역발전효과 분석

우리나라의 지방대학들은 인적자원(입학생, 교수), 시설, 재원 등 투입요소(input)의 양과 질이 취약하고 지방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기능과 지방대학 육성정책 등 과정(process)이 미흡하여 지방대학의 산출물(output)인 졸업생과 연구 성과물의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을 내생적 원인과 외생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생적 원인으로는 수도권-지방 불균형과 서울 선호 풍조, 적령인구 감소와 대학입학정원의 확대, 경제력 취약 및 고급일자리 부족, 종합적인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내생적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학과신설 및 정원 확대(대학 구조조정 미흡), 교육과정 및 내용의 부실, 대학 운영체제의 불합리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기원인으로 말미암아 지방대학들은 많은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대학 처·실장들을 대상으로 지방대학의 당면과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대학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입학생 충원문

제(34.5%),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22.4%)',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13.3%)', '재정악화와 경영난 가중(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많은 지방대학들이 입학생 미충원 문제로 재정 악화와 경영난에 봉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 처·실장들은 지방대학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성장(30.6%)',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입학정원의 팽창으로 인한 수급불균형(21.2%)',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지원미흡(16.2%)',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차별(14.3%)'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체, 주요기관, 금융 등의 인프라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 수급균형을 위한 대학입학정원의 감축, 지방대학 육성정책, 지방대생 우대 정책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공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32.6%)', 둘째, '지역정보 및 두뇌은행(data bank & think tank)으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것(16.6%)', 셋째, '지역학생에게 교육기회를 공급하여 외지 진학에 따른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14.4%)' 등이다. 이를 대학기능과 지역발전에 관한 네 가지 유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지방대학 처·실장들은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교육기능, 연구기능, 봉사기능, 대학의 소비활동 등의 순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국가와 지역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의 대학 신증설과 정원 규제 이외에는 이렇다할만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거의 없었다.

지방대학 육성정책으로는 우선 교육부에 의해 추진된 지방특성화 공대 육성사업(1978-1993년), 일부 지방 국립대 공과대학에 대한 집중육성사업(1994-1998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994-1998), Brain Korea사업(1999년 이후), 지방대학 육성 사업(2002-2006년) 등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의 과학 재단을 중심으로 한 각종 목적 연구사업 지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및 우수 연구센터(SRC) 등의 설립, 국가지정연구실 지정·지원이 있었다. 산자부는 대학 내 지역혁신센터(TIC), 창업보육센터(TBI), 테크노파크 사업과 함께 산업기술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등 산학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왔다. 그 밖에 중소기업청, 농림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종합적·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처별로 산발적·단기적으로 추진되어 정책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교육정책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방대학 정책은 수도권내 대학 신설과 학생증원 억제,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장려 등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차원의 소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마저 다양한 이유와 편법에 의해 수도권내 대학 증원을 허용해 줄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역 산업인력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내실화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지방대학 육성대책은 미흡하였다.

또한 교육정책이 자주 바뀔때 따라 지방대학 정책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했고 대학지원 재정의 부족과 함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조정 등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해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대학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의 해외 지방대학 교육개혁 정책과 국내외 성공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지방대학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대학통합합과 구조조정’, 둘째,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연계 강화’, 셋째, ‘대학의 연합화와 전략적 제휴’, 넷째, ‘대학의 특성화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다섯째, ‘대학평가제도의 강화와 선택적 집중 지원’ 등의 시책이 필요하다.

제6장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이 장에서는 지방고교생과 대학 처·실장들이 생각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주로 다루고 있다. 지방고교생들에게 정부의 지방 대학 육성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다(46.4%)”와 “전혀 모르겠다(26.3%)”는 응답이 전체의 약 72.7%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한편 대학 처·실장들의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못하고 있음(46.8%)’과 ‘매우 못하고 있음(11.3%)’의 부정적 평가가 전체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잘하고 있음(5.9%)’과 ‘아주 잘 하고 있음(0.5%)’의 긍정적 평가는 6.4%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일선대학으로부터 매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앞으로 지방대학이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 대학 처·실장들은 조금 개선되거나 현재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효과적인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지방고교생들은 ‘지방인재할당제(21.3%)’,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17.5%)’, ‘지방대학의 교육 및 시설 개선(17.3%)’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대학 처·실장들은 ‘지방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22.8%)’, ‘지방대학 졸업생과 입학생에 대한 우대조치(18.0%)’, ‘지방대학의 학과 통폐합 등 자체 구조조정 및 특성화(17.4%)’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 대학 구성원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고교생들은 ‘취업여건 개선(23.0%)’, ‘지방대학의 특성화(13.4%)’, ‘좋은 시설과 교수진(12.8%)’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학 처·실장들은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정책(23.9%)’, ‘대학입학정원의 감축(14.2%)’, ‘지방대학의 특성화 정책(11.2%)’, ‘대학의 통폐합 및 인수합병정책(10.4%)’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고교생들에게 인재할당제 등 졸업생 우대조치,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지방대학 진학 의향이 상승하기는 했으나, 수능 및 내신 상위권 학생일수록 그 효과는 떨어져 우수학생의 유출을 막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처·실장들에게는 지방대학 구조조정 방안과 우대전략 대안, 그리고 대학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설문하였다. 우선 구조조정 전략으로는 ‘대학 내부의 학과 통폐합 및 구조조정(32.8%)’, ‘대학의 기능별 분담체제 구축(25.5%)’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지방대학 우대조치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적 우대조치(50.5%)’,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우대조치(36.8%)’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선호하는 대학협력체제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53.8%)’, ‘지역산업체와의 협력체제(28.6%)’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견하기 위해 최근 자주 제시되고 있는 10가지의 정책대안에 대해 대학 처·실장들에게 찬반여부, 시행의 난이도, 지역발전효과의 측면에서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지역인재 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제7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제7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시스템모형을 통해 나타난 지방대학의 문제와 원인을 재정리하였다. 그리고 난뒤 국내외 대학육성정책 사례와 지방육성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원,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및 영향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모형을 통해 파악된 지방대학의 주요 당면 문제는 총 17개 유형이다. 학생 측면의 입학생 확보난과 우수한 학생의 수도권 유출, 교수 측면의 교수의 양적 부족과 우수한 교수의 확보난, 재정측면의 지방대학 재정 확보난, 시설측면의 지방대 시설의 낙후문제, 교육기능 측면에서의 백화점식 학과 난립, 교육과정의 현장성 부족, 연구역진 열악과 활동 미흡과 산학협력체제 미구축, 지역사회와의 연계 미흡, 지방대

경쟁력 약화, 지방대생 취업난, 지방대 교수연구실적 저조, 지방대생 외지 취업, 지방대학에 대한 지역관심 저하, 수도권·지방 격차 심화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지방대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둘째,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 우대정책의 강구, 셋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추진, 넷째,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다섯째, 실효성 있고 일관된 합리적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실행 등 총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분권·분산·분업 정책에 의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방대학 우대 조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지방대학의 우수교수 및 학생 유치 지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밀착형 대학 육성이 그것이다.

실천과제로서 제시된 여섯 가지 중 지방대학관련 과제가 다섯 가지이고, 한 가지는 지방분권·분산·분업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달성과 이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이다. 자립형 지방화가 달성된다면 나머지 지방대학과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제8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이 자립형 지방화의 구심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그 시발점으로 우선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을 활성화하며, 지역의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산업발전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결과 인재가 지방에 정착하게 되며, 이는 다시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인식하에서 우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하고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및 효과라는 시스템 모형을 설정하여 파악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현재 지방대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입학생 충원문제, 졸업생의 취업난,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지방대학 재정난, 교육 및 연구여건 낙후, 지역과 산업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방대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둘째,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 우대정책의 강구, 셋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추진, 넷째,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다섯째, 실효성 있고 일관된 합리적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실행 등 총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서 지방분권·분산·분업 정책에 의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 등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통하여 인재가 지방에 정착하고 지방대학이 발전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혁신계정 중에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은 거의 없고, 부처별로 추진하던 기존사업들이 지역혁신계정으로 묶였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역혁신계정 중 신규 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지방대학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지역이 발전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차 례

| | |
|--|----------|
| 발 간 사 | i |
| 서 문 | iii |
| 요 약 | v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1) 연구의 배경 | 1 |
| 2) 연구의 필요성 | 3 |
| 3) 연구의 목적 | 3 |
| 2. 연구의 범위 | 4 |
| 3. 연구의 방법 | 4 |
| 4. 주요 연구내용 | 5 |
| 제2장 지방대학과 지방발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9 |
| 1. 개념정립 | 9 |
| 1) 지방대학의 개념과 기능 | 9 |
| 2) 지역발전의 개념 | 10 |
| 3)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 10 |
| 2. 지방대학과 지역발전(국가균형발전)의 관계 | 11 |

| | |
|--|----|
| 1) 지방대학의 교육활동과 지역발전(인적자본적 접근) | 13 |
| 2) 지방대학의 연구활동과 지역발전(기술혁신 주체적 접근) | 15 |
| 3) 지방대학의 봉사활동과 지역발전(사회문화적 접근) | 18 |
| 4) 지방대학의 경제활동과 지역발전(소비주체적 접근) | 20 |
| 5)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 21 |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틀 설정 | 22 |
|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2 |
| 2) 연구의 틀 설정 | 26 |

제3장 우리나라 대학의 공간적 수급 변화와 진학행태 분석

| | |
|---------------------------------|----|
| 1. 대학의 현황과 증가추이 분석 | 29 |
| 2. 수도권-지방 대학분포 실태 및 변화 분석 | 32 |
| 1) 양적 분포 현황과 변화 | 32 |
| 2) 질적 현황 | 34 |
| 3. 지역별 대학분포 실태 및 변화 분석 | 34 |
| 1) 시·도별 대학 분포 변화 분석 | 34 |
| 2) 시·군별 대학 및 대학생 분포 변화 분석 | 37 |
| 4. 대학 진학자의 지역별 진학실태 분석 | 41 |
| 1) 지방출신 고교생의 지역별 대학 진학실태 | 41 |
| 2) 지방대학생의 출신지역별 분포 | 43 |
| 5. 지방고교생의 진학 지역 및 대학 결정요인 | 44 |
| 1) 진학지역의 선호도 | 45 |
| 2) 지원대학 선택시 우선적 고려 사항 | 46 |
| 3) 수도권 대학 진학 이유 | 48 |
| 4) 지방대학 진학 이유 | 50 |

제4장 지방대학의 지역연계 실태 및 지역발전효과 분석

| | |
|--------------------------------|----|
| 1. 시스템 모형을 통한 지방대학의 실태분석 | 53 |
| 1) 투입의 실태와 문제점 | 54 |

| | |
|---------------------------------------|----|
| 2) 구조 및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 69 |
| 3) 산출 및 영향의 실태와 문제점 | 76 |
| 2. 지방대학 침체와 위기의 원인 분석 | 82 |
| 1) 내·외생적 원인 분석 | 82 |
| 2) 지방대학 처·실장 조사를 통한 문제발생의 원인 분석 | 92 |
| 3.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효과 분석 | 94 |

제5장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시사점 97

| | |
|-------------------------------------|-----|
| 1.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 분석 | 97 |
| 1)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 98 |
| 2) 교육인적자원부 이외 관련부처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 101 |
| 3)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지방대학 정책 | 104 |
| 4)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평가 | 105 |
| 2. 외국의 지역발전 관련 대학육성 정책 | 107 |
| 1) 일본대학의 교육개혁 | 107 |
| 2) 중국대학의 교육개혁 | 114 |
| 3) 유럽 각국 대학의 교육개혁 | 119 |
| 4) 미국 대학의 교육 개혁 | 123 |
| 3. 국내외 대학 산학협력 성공사례 | 125 |
| 1)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 성공사례 | 125 |
| 2) 해외대학 산학협력 성공사례 | 131 |
| 4.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사례의 시사점 | 137 |
| 1) 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 | 137 |
| 2)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연계 강화 | 138 |
| 3) 대학의 연합화와 전략적 제휴 | 139 |
| 4) 대학의 특성화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 | 139 |
| 5) 대학평가제도의 강화와 선택 집중 지원 | 140 |

제6장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143

| | |
|------------------------------------|-----|
| 1. 조사 분석 개요 | 143 |
| 1) 지방고교 졸업생 설문조사 개요 | 143 |
| 2) 지방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개요 | 144 |
| 2. 우리나라 지방대학 발전 전망 및 육성정책 분석 | 145 |
| 1)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발전전망 | 145 |
| 2) 지방대학 육성정책 방향 | 151 |
| 3) 지방대학 육성정책 대안의 효과 | 159 |
| 3.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종합 평가 분석 | 166 |

제7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173

| | |
|---|-----|
| 1. 지방대학 육성 기본 방향의 모색 | 173 |
| 1) 당면문제와 원인 분석 | 174 |
| 2) 지방대학 육성 기본방향 | 175 |
| 2.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효과 분석 | 176 |
| 3. 지방대학 육성 과제와 방안 | 179 |
| 1) 지방 분권·분산·분업정책에 의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 | 179 |
| 2)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지방대학 우대 조치 | 180 |
| 3)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 182 |
| 4) 지방대학의 우수학생 및 교수 유치 지원 | 183 |
| 5)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촉진 | 184 |
| 6)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대학의 육성 | 186 |

제8장 요약 및 결론 189

| | |
|---------------|-----|
| 참 고 문 헌 | 193 |
| SUMMARY | 201 |
| 부 록 | 205 |

표 차 례

| | |
|---|----|
| <표 2-1> 대학기능과 지역발전의 유형 | 12 |
| <표 2-2> 국가 및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의 역할 | 16 |
| <표 2-3> 선행연구 검토 | 23 |
| <표 2-4> 분석항목 및 지표 | 28 |
| <표 3-1> 연도별 대학지표의 변화 추이 | 31 |
| <표 3-2>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현황 | 32 |
| <표 3-3> 수도권-지방의 대학 분포 변화 | 33 |
| <표 3-4> 중앙일보 대학평가 Top-10 대학(2003) | 34 |
| <표 3-5> 연도별·시도별 대학교와 대학생수 변화 추이 | 37 |
| <표 3-6> 고교 졸업생의 시·도별 대학진학 분포 현황(2003) | 41 |
| <표 3-7> 각 지방대학별 신입생 출신지역 현황 | 44 |
| <표 3-8> 수능등급별 진학 희망대학의 소재지 | 45 |
| <표 3-9> 내신등급별 진학 희망대학의 소재지 | 46 |
| <표 3-10> 지원대학 선택시 고려사항(수능등급별) | 47 |
| <표 3-11>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학교별) | 48 |
| <표 3-12>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수능등급별) | 49 |
| <표 3-13>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수능등급별) | 50 |
| <표 4-1> 전국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 대비 미충원 현황 | 54 |
| <표 4-2> 대학 미충원을 분포도 | 55 |

| | |
|---|----|
| <표 4-3> 시·도별 대학입학정원의 미충원을 | 55 |
| <표 4-4> 수능성적 4%(1등급)이내 학생의 수도권대학 입학자 수(2003년) | 56 |
| <표 4-5>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지역별 분포 | 57 |
| <표 4-6>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 | 57 |
| <표 4-7> 수도권-지방 대학의 교수확보를 비교 | 58 |
| <표 4-8> 전임교원 연구비 수주 금액 | 58 |
| <표 4-9> 부설연구소 연구비 지원 현황(2002년) | 59 |
| <표 4-10> 교육인적자원부내 위원회별 교수참여 현황(2002년) | 60 |
| <표 4-11> 전임교원 100대 기업 사외이사 활동 현황(2002년) | 60 |
| <표 4-12> 고등교육재정 규모 국제비교 | 61 |
| <표 4-13>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규모와 추이 | 62 |
| <표 4-14> 설립별, 소재지별 대학당 국고보조금 현황 | 63 |
| <표 4-15> 최근 5년간 누적 국고보조금 총액 상위 10개 사립대학 | 63 |
| <표 4-16>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대학발전기금 모금 실적 비교 | 64 |
| <표 4-17> 최근 5년간 누적 기부금 상위 10개 대학 | 65 |
| <표 4-18> 연도별 지방대생 제적자수 현황 | 66 |
| <표 4-19> 편제정원대비 재학생 비율 분포 | 67 |
| <표 4-20> 편입학자의 출신대학 소재지별 현황(2003) | 67 |
| <표 4-21> 한국과 미국 대학의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 68 |
| <표 4-22> 수도권-지방 대학의 시설비교 | 69 |
| <표 4-23> 수도권-지방대학의 학과개설 및 입학정원 비교 | 70 |
| <표 4-24> 4년제 대학의 전공분야별 학생 비율의 국제비교(2002) | 71 |
| <표 4-25> 수도권-지방대학의 학술연구구성비 지원 비교 | 72 |
| <표 4-26>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지원(2002) | 73 |
| <표 4-27> 정부 R&D 예산의 분포 | 73 |
| <표 4-28> 아산시 소재 대학의 산학협동의 방법별 경험 | 74 |
| <표 4-29> IMD의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 부분에 대한 평가(2003년) | 76 |
| <표 4-30> CEO가 바라본 우리나라의 인적자원부문 경쟁력 | 77 |
| <표 4-31>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 78 |
| <표 4-32> 지역별 취업률 | 79 |
| <표 4-33> 지역별 대학 졸업자의 100대기업 취업률 현황(2003. 2) | 79 |

| | |
|--|-----|
| <표 4-34> 지역별 고등고시 합격자 비율(2003) | 80 |
| <표 4-35>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지와 출신지 비교 | 80 |
| <표 4-36> 중앙일보 평가 연구부문 상위 10개 대학 | 81 |
| <표 4-37> 수도권 기능 집중도 | 82 |
| <표 4-38> 진학희망 대학의 소재지 | 85 |
| <표 4-39> 고교졸업(예정)자 대비 대학입학정원 추이 | 86 |
| <표 4-40> 입학정원 증가 추이 | 86 |
| <표 4-41> 입학정원 증가 대학 수 | 87 |
| <표 4-42> 지역별 증원 및 충원률 현황 | 88 |
| <표 4-43> 지방의 경제력 취약 및 고급일자리 부족 | 89 |
| <표 4-44> 권역별 지방대학의 당면문제 | 93 |
| <표 4-45> 지방대학 문제의 주된 원인 | 94 |
| <표 4-46>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지방대학의 역할 | 95 |
| | |
| <표 5-1> 주요 지방대학 지원 사업 | 99 |
| <표 5-2> 주요 대학의 사업별 지원분야 현황 | 100 |
| <표 5-3> 주요 항목별 재정지원과 지방대 재정지원 | 101 |
| <표 5-4> 부처별 산학연계정책 추진사업 | 102 |
| <표 5-5> 교육부 이외 기타부처의 대학지원 사업과 추이 | 103 |
| <표 5-6> 수도권 대학규제시책 변화 | 104 |
| <표 5-7> 일본 국립대 독립법인화 주요 내용 | 109 |
| <표 5-8> 일본 국립대학 재편·통합 현황 | 111 |
| <표 5-9> 일본의 대학 연합 추진 현황 | 112 |
| <표 5-10> 중국의 연도별 대학 합병 현황(1992-2002) | 117 |
| <표 5-11> 국내 대학 통합 사례 | 138 |
| | |
| <표 6-1> 학생설문조사 개요 | 144 |
| <표 6-2>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개요 | 145 |
| <표 6-3>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학교별) | 146 |
| <표 6-4> 지방대학 발전 전망(수능등급별) | 147 |
| <표 6-5>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 148 |

| | |
|---|-----|
| <표 6-6>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 150 |
| <표 6-7> 향후 지방대학에 대한 전망 | 151 |
| <표 6-8> 효과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수능등급별) | 152 |
| <표 6-9> 고교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발전방안(전체) | 153 |
| <표 6-10>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156 |
| <표 6-11> 지방대학 처·실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 | 158 |
| <표 6-12> 유리한 조건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수능등급별) | 160 |
| <표 6-13> 장학금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수능등급별) | 161 |
| <표 6-14> 지방대학 구조조정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 | 162 |
| <표 6-15> 지방대학 우대조치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 | 164 |
| <표 6-16>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협력체제 | 165 |
| <표 6-17>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전체) | 166 |
| <표 6-18>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권역별) | 168 |
| <표 6-19>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대학 특성별) | 169 |
| <표 6-20>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대학 규모별) | 170 |
| | |
| <표 7-1> 문제 유형별 지방대학 정책의 효과 분석 | 178 |
| | |
| <부표 1-1-1> 수도권과 지방간 중추기능의 중력지수 비교 | 205 |
| <부표 1-3-1> 설립별 소재지별 지역별 대학 분포 | 205 |
| <부표 1-3-2> 시군별 인구 10,000명당 대학생수 현황 | 206 |
| <부표 1-3-3> 시군별 대학교 수 현황 | 207 |
| <부표 1-4-1> 상위 20개 대학 학술연구비 총액 | 208 |
| <부표 1-4-2> 부설연구소 연구비 지원 현황 | 209 |
| <부표 1-4-3> 대학지원사업 예산의 지방대 배분 | 210 |
| <부표 1-4-4>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자 및 취업률 추이 | 211 |
| <부표 1-4-5>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률 추이 | 211 |
| <부표 1-4-6> 2001년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직종별 취업현황 | 212 |
| <부표 1-4-7> 전남대학교 졸업생 중 취업자의 취업지 분포(2001년) | 212 |
| <부표 1-4-8> 수도권 순이동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2002년) | 213 |
| <부표 1-5-1> 통합 협의·검토 중인 대학 | 214 |

| | |
|--|-----|
| <부표 1-5-2> 중국의 주요 합병 대학(‘211공정’ 대학을 중심으로) | 215 |
| <부표 1-5-3> 영국대학의 통합 현황 | 216 |
| <부표 1-5-4> 호주의 대학교육 개혁에 따른 대학통합 현황(1990.8) | 217 |
| <부표 1-5-5>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 218 |
| | |
| <부표 2-1>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시행령 제24조) | 220 |
| | |
| <부표 3-1> 응답학생의 계열 분포 현황 | 225 |
| <부표 3-2> 응답학생의 수능등급 분포 현황 | 225 |
| <부표 3-3> 응답학생의 내신등급 분포 현황 | 226 |
| <부표 3-4> 진학 희망 대학의 소재지(학교별) | 226 |
| <부표 3-5> 수능등급별 진학 희망 대학의 소재지 | 227 |
| <부표 3-6> 내신등급별 진학 희망대학의 소재지 | 227 |
| <부표 3-7> 지원대학 선택시 고려사항(학교별) | 228 |
| <부표 3-8> 지원대학 선택시 고려사항(수능등급별) | 228 |
| <부표 3-9> 지원대학 선택시 고려사항(내신등급별) | 229 |
| <부표 3-10>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학교별) | 229 |
| <부표 3-11>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수능등급별) | 230 |
| <부표 3-12>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내신등급별) | 230 |
| <부표 3-13>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학교별) | 231 |
| <부표 3-14>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수능등급별) | 231 |
| <부표 3-15>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내신등급별) | 232 |
| <부표 3-16> 수도권 대학 진학시 거처 | 232 |
| <부표 3-17>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수능등급별) | 233 |
| <부표 3-18>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내신등급별) | 233 |
| <부표 3-19> 지방대학 발전 전망(학교별) | 234 |
| <부표 3-20> 지방대학 발전 전망(수능등급별) | 234 |
| <부표 3-21> 지방대학 발전 전망(내신등급별) | 235 |
| <부표 3-22> 효과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수능등급별) | 235 |
| <부표 3-23> 효과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내신등급별) | 236 |
| <부표 3-24> 졸업생에게 유리한 조건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학교별) .. | 236 |

| | |
|---|-----|
| <부표 3-25> 장학금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학교별) | 237 |
| <부표 3-26> 장학금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수능등급별) | 237 |
| <부표 3-27> 장학금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내신등급별) | 238 |
| <부표 3-28> 고교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발전방안(수능등급) | 239 |
| <부표 3-29> 고교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발전방안(내신등급) | 240 |
| | |
| <부표 4-1> 권역별 대학특성별 분포 | 241 |
| <부표 4-2> 권역별 대학규모별 분포 | 241 |
| <부표 4-3> 대학특성별 대학규모별 분포 | 242 |
| <부표 4-4> 권역별 지방대학의 당면문제 | 242 |
| <부표 4-5> 지방대학 문제의 주된 원인(권역별) | 243 |

그림 차례

| | |
|---|-----|
| <그림 1-1> 연구흐름도 | 8 |
| <그림 2-1> 지역혁신체계구축(RIS)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전략 | 18 |
| <그림 2-2> 분석의 틀 | 27 |
| <그림 3-1> 그림으로 본 30년간의 변화 모습 | 30 |
| <그림 3-2> 시도별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2002년) | 36 |
| <그림 3-3> 시·군별 대학수 분포 변화 | 39 |
| <그림 3-4> 시군별 인구 만 명당 대학생수 분포 변화 | 40 |
| <그림 3-5> 2003년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도권 진학비율 | 42 |
| <그림 4-1>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불만족 | 71 |
| <그림 4-2>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 비교 | 83 |
| <그림 4-3> 수도권 유입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 84 |
| <그림 5-1> 중국 북경 및 칭화 대학의 첨단기업 소유 현황 | 118 |
| <그림 5-2> 캘리포니아주 대학간 합병구도 | 125 |
| <그림 5-3> 실리콘 벨리의 인재 공급체계 | 132 |

1

서론

이 장은 본 연구의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장의 주요 초점은 세방화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리는데 있다. 아울러 이후 연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의 범위와 방법, 장별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흐름 등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국가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날로 심화 확대되어 국민 분열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황을 보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2%, 국가공공기관의 84.1%, 100대기업 본사의 92%, 제조업체의 56.4%, 대학의 40.5%가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중추 기능의 지배력을 나타내는 중력지수(국가공공기관과 500대 기업본사 기준)가 전국을 100으로 했을 때 수도권이 98.8로 나타나 수도권의 블랙홀적 슈퍼모노(super-mono)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부표1-1-1> 참조).

또한 주요대학의 6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수도권대학 입학생의 48.8%가 지방학생에 의해 충원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수능 성적 우수자(5%이내 학생)의 80%이상이 서울에 진학하여 지방대학은 정원 미달 사태(대학입학 정원 미충원율: 경북 26.7%, 전남 27.4%, 전북 29% 강원 21.9%)와 우수학생 확보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더하여 취업난과 연구 및 교육 여건의 열악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날로 쇠퇴되어 이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과밀과 과소 현상 등 국토공간 활용의 여러 비효율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의 대학, 산업, 문화 발전의 자생력을 약화시켜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 분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21세기는 지역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소위 世方化(glocalization)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 역시 종래의 자본, 노동력, 자원 등에 좌우되던 산업사회에서 창의적 지식에 의해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함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이에 부응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지난 산업 사회에서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과밀지역의 집중 억제 관리와 낙후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성장 거점 개발 등을 통한 물적 생산 기반 조성책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 지식이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러한 하드웨어(hardware)적 물적 접근책 보다는 산·학·연·관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소프트웨어(software)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지방 대학의 육성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참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방 분권, 지방 분산, 지방 분업 등 삼분 정책의 추진과 함께 지방대학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주체 중의 하나로 육성하는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비롯한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 모델의 추진과 함께 지방대학을 중심축으로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네트워크화한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여 내발적 자립형지방화를 이루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대학의 육성 → 지역혁신의 활성화 → 지역산업의 발전 → 지방과 수도권 격차 해소 → 인재의 지방 정착 →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지방대학을 매개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당면과제인 국가 불균형 발전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 연구의 필요성

지방대학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로서, 또한 참여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종래의 교육 및 연구 기능 이외에 새로운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한 지방대학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방대학에 관한 연구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의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당위론적 논의와 첨단산업육성과 테크노파크 등 산업정책적 접근이 대부분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지역정책적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학문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대학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지방대학 침체와 지역 불균형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사례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육성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토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나아가 관련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를 주 대상으로 하고 비교 대상으로 지역과 지방 대학간의 연계관계가 비교적 성공적인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지방대학은 수도권 이외에 입지한 고등교육기관(전문대,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사이버 및 방송통신대학)중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을 구비한 일반 4년제 대학교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발전은 지역의 양적 성장(growth)과 질적 변화(structural change)를 뜻하는 것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과 같은 물리적 성장과 사회 문화의 질적 변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대학의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도 이런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이란 지방과 수도권간의 상생적 균형발전을 의미하며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는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충족을 통한 통합적(교정적) 균형과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으로 대별될 수 있는바(국가균형발전 위원회 2003), 본 연구에서의 균형발전의 의미는 후자에 한정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겸하고 있다. 우선 문헌조사에서는 이론조사를 위해 국내외 지방대학 및 지역발전 관련문헌을 조사하고, 해외사례는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 교육개혁을 경험한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통계자료는 교육통계연보의 원자료를 가공하여 활용하였고 지방대학의 지역연계실태와 지

역발전효과에 관한 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등의 기관제공 자료와 국회 국정감사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기존 국내의 선행연구와 지원기관 자료 등 문헌자료는 지방대학 침체와 위기의 원인 등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 정책을 평가·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통계자료는 ArcVie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학의 전국적·지역적 분포를 지도화 하는데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지방대학 처·실장과 지방대학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지방대학 처·실장 조사는 전국 100여 개 지방대학의 350여 명의 처·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대학 당면문제, 지방대학 문제의 발생원인,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지방대학 구조조정 전략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고교졸업생 대학진학행태 조사는 강원, 충청, 호남, 영남의 4개 권역을 대표하는 각 1개 고등학교를 선정한 뒤 2004년 2월에 졸업하는 고3 수험생 800명(4개 학교×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지원대학 선택사항, 지원대학 선택시 중요한 이유,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지방대학 발전방안 등이었다. 이 조사에서 지방의 전통 명문학교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높은 응답률과 내신 및 수능성적의 고른 분포를 두고 볼 때 분석결과의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뒤 도표화하여 제시하였다.

4.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1> 참조). 우선 지방대학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고 지방대학과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관계 및 지방대학의 지

역발전 효과를 검토하였다. 특히 지방대학과 지역발전(국가균형발전)과의 관계에서는 지방대학의 교육활동(인적자본적 접근), 연구활동(기술혁신주체적 접근), 봉사활동(사회문화적 접근), 경제활동(소비주체적 접근)의 네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의 공간적 수급변화와 진학행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의 현황과 증가추이, 수도권과 지방간 대학분포의 차이 및 추이와 지역별 대학분포 실태 및 변화를 검토한 뒤 대학진학자의 지역별 진학실태와 지방고교생의 진학행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각종 자료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학분포의 차이를 밝히고 지방고교생들의 진학 희망대학, 대학 진학시 고려사항, 수도권대학 진학 이유 등 진학행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셋째,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지역연계 실태와 위기원인 및 지역발전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시스템모형을 통해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및 영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지방대학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난 뒤 지방대학의 침체와 위기 원인을 내·외생적인 요인과 지방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지역발전효과가 어떤 부문에서 크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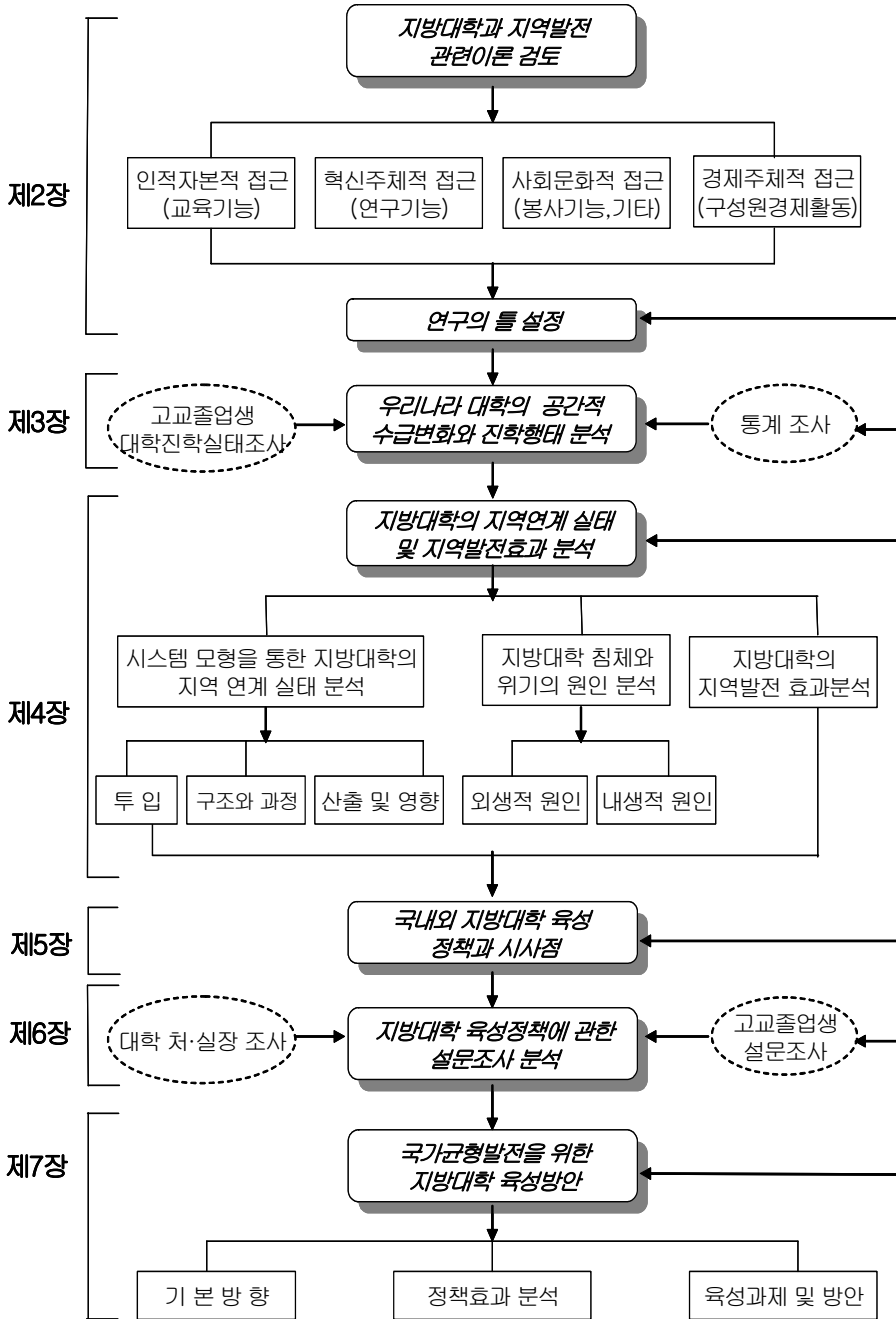
넷째,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검토한 뒤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기타부처 정책, 지역균형발전관련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지방대학정책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 해외의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총 7개의 국내외 성공사례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지방고교졸업생 및 대학 처·실장에 대해 실시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발전전망에 대한 고교졸업생과 대학 처·실장의 평가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방향과 대안에 대한 고교졸업생과 대학 처·실장의 설문결과를 세부적으로 제시한 뒤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고교졸업생의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하

기 위한 인센티브와 10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대안에 대한 대학 처·실장들의 평가 내용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시스템모형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방대학의 당면문제와 원인을 분석한 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후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및 효과 등 3개 영역의 17개 문제에 대한 5개 전략의 20개 정책수단으로 나눠 각 문제별로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난 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으로 삼분 정책에 의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 우수학생 및 교수 유치지원, 대학 구조조정, 지역밀착형 대학 육성 등의 6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2

지방대학과 지방발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 장에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지방대학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고 지방대학과 국가균형발전전략과의 관계 및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효과를 검토한 뒤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특히 지방대학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대학의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경제활동 등의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1. 개념정립

1) 지방대학의 개념과 기능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지방대학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목 중 지방대학에서 '지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지방은 과거 수도권에 대응되는 정태적·의존적·수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역동적·자립적·능동적 개념의 지역주체로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신개념을 선도하는 지역의 주체로서 지방대학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으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로 대별된다(고등교육법 제2조).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학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육성이라는 연구목적에 부응하여 일반대학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대학의 기능도 교육, 연구, 봉사의 3대 기능으로 한정한다.

2) 지역발전의 개념

‘지역발전’이란 국가나 지역마다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개념도 정치, 사회, 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지역발전이라는 개념은 지역의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사회 구조 변화를 동반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지역발전은 지역의 양적 성장(growth)과 질적 변화(structural change)를 뜻하는 것으로서 경제개발과 같은 물리적 성장과 사회나 문화의 바람직한 변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임승달 1989). 또한 해당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부분의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 복지 증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은 지역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주도의 하향식 개발보다는 토착적 지역운동(grass-roots movement)에 초점을 둔 지역자조(local self-reliance)의 주민 중심적-상향식 개발전략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중앙 정부의 역할보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지방정부는 주민집단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김종후 2000).

지역발전의 진정한 의미는 인재를 외부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키우고 자금을 끌여 들여 지역의 문화와 정신을 전승시켜서 지역의 자존심,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서찬수 2002).

3)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이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첫째, ‘국민적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이란 국민 개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교육과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영토적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공간상의 모든 지역을 각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국토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주권적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내 모든 지역이나 자치단체가 경제적, 행정적, 교육적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과 주민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관할 지방정부가 잠재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로서 사실상 국토, 국민 및 주권적 차원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대학과 지역발전(국가균형발전)의 관계

대학이 국가나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으로는 세대간 효과(intergeneration effect)까지 발생하여 이를 모두 포괄하여 분석할 수는 없다(임승달 1989). 오늘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 개념 규정이나 연구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다만 대학이 지역에 다양한 효과를 주는 다산출기관(multi-production firm)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데만 합의를 보고 있다(강무섭 1984).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연구 접근방법에서도 전술하였듯이 학문의 성격에 따라, 또 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학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대학의 기능(교육, 연구, 봉사) 및 활동, 지역발전의 개념(지역성장 + 사회 구조변화)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대학기능과 지역발전의 유형

| 지방대학 지역발전 | 대학의 기능 | | | 대학의 소비활동 (경제주체적 접근) |
|----------------------------------|----------------------------------|-----------------------------------|--|---|
| | 교육 기능 (인적자본적 접근) | 연구 기능 (혁신주체적 접근) | 봉사 기능 (사회문화적접근) | |
| 지역성장 (growth) | 인적자본공급기능 고등교육기회제공 지역가치형성기능 | 지역연구개발기능- 신산업 창출기능 지역기술혁신기능 | 학교시설지역개방 자문봉사활동기능 | 직접소득:고용창출효과 간접소득:소비활동효과 유발소득:상승연쇄효과 |
| 사회구조변화 (structural change) | - | - | 지역문화창달기능 지역사회혁신기능 지역사회통합기능 사회이동기능 | - |

대학의 기능은 오랫동안 학술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와 이를 전수하는 ‘교육’을 양대 기능으로 하여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대학의 공공에 대한 ‘봉사’ 기능도 대학의 중요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에 부차적으로 대학의 경제 주체로서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소비지출이라는 지역경제 기능을 첨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발전’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앞에서 전술하였듯 양적 측면의 지역 성장(growth)과 질적 측면의 사회구조변화(structural change)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소비활동 기능과 지역발전의 지역성장과 구조변화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역할과 효과를 유형분석(category analysis)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지방대학의 교육활동과 지역발전(인적자본적 접근)

교육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근자에 대두된 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고대의 플라톤(Platon)도 그의 저서 「공화국」에서 국가가 번영하려면 국민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지식기반사회를 맞은 21세기 현대에도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중에서 대학은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국민의 교육열에 기반한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에 있었음이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도 밝혀지고 있다(임승달 1989).

대학에 대한 인적자본(human capital) 접근은 대학교육이 우리 인간에 축적되어 있는 질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생산성 증대와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기업이나 지역,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GNP)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교육수준과 개인 및 지역발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Harbisio & Meyers 1964).

지방대학이 교육기능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주는 역할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인적자본 공급기능으로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교육, 공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즉, 지역에 필요한 고급인력과 숙련기술자를 양성·공급하여 지역 생산성과 지역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여 지역 산업의 특화발전에 기여하며, 우수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산업 입지를 촉진시킨다.

둘째, 지방대학은 지역학생에게 교육기회를 공급하여 외지 진학에 따른 하숙비 등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지방대학의 입지는 지역에 고등교육기회를 촉진시켜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그 지역 대학 진학자의 유출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며, 외지 진학에 따른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활동을 통한 인적 자본 형성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방)대학이 대학소재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대학 입학생의 출신지가 어디이며 졸업 후에 어디로 취직하느냐에 따라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대학의 입지는 그 지역의 대학진학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은 노동시장의 공급자로서 지역노동력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대학의 질적 격차가 크지 않은 독일 등의 경우 고졸자의 대학진학 행태는 출신 고교(고향) 인접 대학으로 진학하는 '붙박이' 경향이 현저하다. 대학교육기회의 지역적 불균등이 지역별 대학 진학을 차이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독일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신설 대학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대학 계획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질적 격차가 현저하고 수능성적 순에 따른 진학행태가 일반화되어 대학의 입지가 독일 등과 같이 그 지역 졸업 고교생이 인근 대학으로 진학하는 붙박이 경향이 크지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방 우수 고교생의 서울 진학과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 취업으로 인하여 대학교육이 지방의 두뇌유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고급 인적 자원의 유출, 즉 두뇌의 유출은 유입지역의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유출지역의 발전을 침체시켜서 지역격차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Horiba & Kirkpatrick 1979, 임정덕·장영덕 1997, 서찬수 2002 재인용).

따라서 지방대학의 인적 자본적 측면에서의 지역발전효과는 이론적으로 지방대학이 그 지역의 두뇌유출을 촉진하느냐 또는 억제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지방대학이 지역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공급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그 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한다면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학 졸업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취업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대학은 지역 출신의 젊은이들에게 대학교육을 통해 '과도한 자질'을 획득시켜 오히려 두뇌유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교육기회가 적었던 지역에 대학이 신설됨으로서 대학 진학률은 뚜렷이 신장되었지만 과도한 자질획득의 부정적 영향으로 대학 졸업생의 유출이 크게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Rolfes 등 1990, 박영한 등 2001 재인용). 따라서 지방대학의 교육활동, 즉 인적 자본적 기능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방대학과 지역의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구체적이고도 미시적인 분석이 요청되며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이와 같은 지방대학 학생의 지역 정착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지방대학의 연구활동과 지역발전(기술혁신 주체적 접근)

지방 대학의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연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 지식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대학의 이러한 연구기능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미에서도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대학들은 등록금 이외의 자체소득원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창업을 유도하고 기업에게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신기술을 이전해 주는 산학 연구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과거 대학이 소비주체로서의 경제활동만을 추진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생산주체로서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상호관련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의 연구기능이 지역경제의 핵심주체로 대두되고 있으며 산학협동과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의 배태적 역할(seeding effect)이나 확산적 역할을 분석하는 첨단기술 연구 주체적 접근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의 관심은 Project Team → Techno Park → Incubator Company → Off Company로 연결되는 산학협동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테크노폴리스 형성, 지역혁신체계의 주체로서의 역할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체계에서의 대학의 역할은 <표 2-2>와 같다(이대식 2000, 서찬수 2002 재인용).

<표 2-2> 국가 및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의 역할

| 구 분 | 대학의 역할 |
|---------|--|
| 연구시스템 | -과학적 하부구조의 유지 -과학영역에서의 잠재력 유지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 및 학제간 연구촉진 자극 -과학적 표준의 유지 |
| 교육시스템 | -미래세대의 과학자 생산 -교육 및 연구방법의 교육 -기업, 정부, 지자체, 시민 등 지역사회의 재교육 평생교육 |
| 경제사회시스템 | -미래혁신에 필요한 기초역할 수행 -공공정책 영역에서 혁신 기여 및 자본활동 -산업, 공동체, 정부를 위한 응용연구 수행 -지역경제성장의 견인 |
| 문화시스템 | -지식의 진보 -개인, 공동체, 국가의 자각(self-awareness) 촉진 -국가(지방)정체성 확인: 국가(지방)문화와 전통해석 -지역문화의 선도 |

자료 : OECD(1981), 이대식(2000), 서찬수(2002)에서 재인용.

지방대학은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과 경제시스템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기술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이 지역발전에 주는 역할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은 산학협동과 지역혁신체계의 배태적 역할(seeding effect)과 확산적 역할(spread effect)을 하는 중심지로서 지역의 신산업과 고용을 창출하고 부단한 지역혁신기능으로 자생적 지역발전을 유도한다. 즉, 대학의 연구를 통한 기술 잠재력은 산학 협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분사적 창업(spin-off)형태의 혁신적 기업의 창업 등으로 나타나 지역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혁신 체제를 통한 신산업의 창출은 지역 고용기회의 증대를 가져와 자생적 지방화를 유도하게 된다.

둘째, 지방대학은 지역의 정책과제를 교육과 연구과정에 포함시키고 지역의 정보 및 두뇌은행(data bank & think tank)으로의 가치형성기능을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즉, 각종 연구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공급으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견인차로써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산업을 진흥시키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지방대학의 지역발전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로 현재 선진제국에서는 대학을 지역발전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대학과 지역간의 연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미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방 대학이 전통적인 사회교육 및 봉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이재웅 1999). 그러나 대학의 산학협력과 연구가 중시되는 최근에는 대학과 기업체들 간의 기술이전문제가 강조되고 대학의 교수 및 연구활동과 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체계를 지역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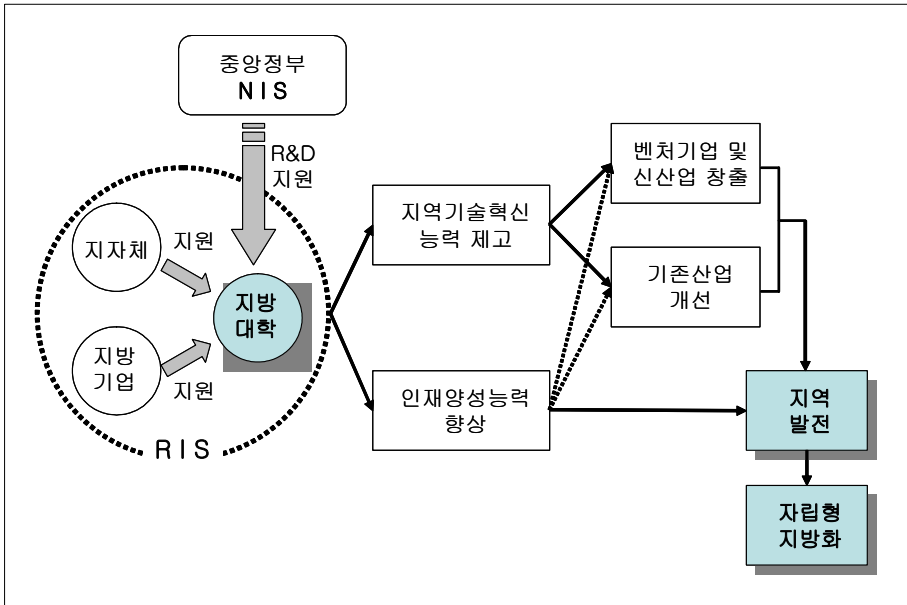
일본에서도 '지학연휴'(地學連携)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과 지역을 산업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결속시키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을 지역사회의 학습장이자 경제발전센터의 하나로 활용하려는 문화확대 노력이다.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위시하여 세계 각 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참여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구축(RIS)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즉,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기업, 시민단체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고 벤처기업 및 신산업을 창출하며 기존 산업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며 지방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지역산업에 투입됨으로서 인구의 지방정착과 함께 자생적 지방화를 이루

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대학의 육성 → 지역혁신의 활성화 → 지역산업의 발전 →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 → 인재의 지방정착 →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지방대학을 매개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당면 과제인 국가 불균형 발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림 2-1> 지역혁신체계구축(RIS)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전략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3) 지방대학의 봉사활동과 지역발전(사회문화적 접근)

지방대학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발전엔 미치는 사회·문화적 기능과 효과는 보는 관점과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나 교육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기능으로는 문화전승(transmission of culture)기능을 들 수 있다. 교육은 인간을 사

회화시키고 과거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는 역할을 하며 지방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등을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지역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둘째, 사회문화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사회혁신기능을 들 수 있다. 지방대학은 평생교육 등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지식 태도를 습득시켜 사회변화를 촉진하고 학교구성원의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며 대학입지에 따른 외부와의 교류증대로 지역사회가 개방화되어 사회혁신을 일으키도록 한다.

셋째, 사회의 여러 이질적 요소들이 모순과 갈등없이 조화를 이루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사회통합 및 통제기능(social integration and control)을 들 수 있다. 교육받은 인력은 주민의 정치의식구조를 변화시켜 공동체 의식과 발전지향적 의식을 함양시키고 사회규범을 준수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인력의 선발, 분류, 배치 등을 통해서 충족시켜주는 사회충원기능을 들 수 있다. 이 기능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 중 가장 현실적인 기능으로서 교육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각 개인을 적절히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의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지역성장과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대학은 사람의 수직적 이동(vertical mobility)과 수평적 이동(horizontal mobility)을 촉진하는 사회이동 촉진기능을 가진다. '수직적 이동'이란 상하 지위 내지 계층의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은 이러한 지위의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 '수평적 이동'이란 지위나 계층의 변화가 없는 지역간 또는 직종간 이동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이동이 많은, 소위 인구이동의 선별성(selectivity)이 나타나게 된다.

여섯째, 지방대학의 각종 시설(병원, 도서관, 운동장, 문화관 등)을 지역민에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역주민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통하여 지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4) 지방대학의 경제활동과 지역발전(소비주체적 접근)

대학은 기업, 정부와 같이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활동함으로써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지방대학은 지역주민을 고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오고, 대학교수들을 정주하게 함으로써 지역고용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서점 등 대학 구성원들의 생활과 소비생활에 대응하는 각종 서비스 업체가 생겨나게 되어 파생적으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지방대학의 지역소득효과는 크게 직접소득효과와 간접소득효과 및 유발소득효과로 대별된다. 우선 '직접소득효과'는 대학에 고용된 사람에게 지불되는 인건비 등의 소득효과를 말하는데 지방대학은 지역주민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에게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소득효과를 제공한다. '간접소득효과'는 대학 구성원들의 각종 소비활동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창출효과를 말하는데 외지진학생 및 교직원과 대학당국의 지역사회에서의 소비지출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증대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발소득효과'는 소비활동의 지출-생산-분배의 누적적 과정을 통하여 승수적으로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학이 그 소재 지역에 유발하는 고용, 소득, 지출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고(Voigt 1996), 각 대학을 사례로 대학당국과 대학 구성원들의 구매력이 지역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는 주로 대학의 건축부문에의 투자, 대학당국이 행하는 각종 구매와 관련된 현금지출, 대학 종사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재학생들의 지출 등이 지역에 얼마나 잔류하고 순환되는가 아니면 외부로 유출되는가를 승수효과 등을 통해 분석되었다(Giese 등 19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는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다만 안동대학을 사례로 대학의 입지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박영한 1995), 강릉대학을 대상으로 지방대학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임승달 1989)

등이 있을 뿐이다.

대학과 지역에 관한 우리나라 특유의 연구성과로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인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분교가 급속히 설립되면서, 이것이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논의한 일련의 논문이 있다(유은수 1985, 권영섭 1992).

5)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대학이 지역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 대학간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기도 한다.

첫째, 대학생으로 인하여 생산활동과 관련이 적은 유흥, 오락시설이 많아지고 소비풍조가 만연되며 이로 인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둘째, 교통이 혼잡하고 도시가 복잡해져서 지방도시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정적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

셋째, 지방대학과 관련해서 의식수준이 높아진 교육받은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오히려 지역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에 대학졸업생들의 역량에 걸 맞는 취업기회가 없으면 졸업 후 대학을 졸업한 지역의 젊은 인재가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지방대학이 지역출신의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과도한 자질획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졸업 후 이들이 지역을 떠나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방대학과 지역의 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미시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육성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지인이 많아져 지역사회에 대한 향토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인심이 나빠질 염려가 있다. 다섯째, 자유분방한 젊은 대학생들로 인해 전통적

윤리관이 파괴되고 성적 문란행위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여섯째, 대학이 기숙사를 완비하고 대규모 소비조합 등을 운영하여 하나의 자충적인 조직으로 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 참여가 부진한 경우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이질감이 조성, 심화될 수 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틀 설정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동향

대학 또는 교육이 국가 혹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 교육학, 사회학, 지역개발학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그동안 얼마간의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대학의 육성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그동안 지방대학에 관한 연구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의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당위론적 논의와 첨단산업육성과 테크노파크 등 산업정책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최근 대학과 지역과의 관련 연구를 보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대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공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적자본적 접근, 둘째, 산학협동과 지역혁신체계, 테크노폴리스 등의 지역산업적 측면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학의 첨단 주체적 접근, 셋째 대학의 지역주민고용과 대학구성원의 소비활동 등에 따른 지역경제효과를 분석하는 경제 주체적인 접근, 마지막으로 최근 대두된 지방대학의 침체나 육성정책 등을 대학교육발전 측면에서 강조하는 교육정책적 접근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표 2-3> 참조).

<표 2-3> 선행연구 검토

| 인적 자본적 접근 | | | |
|----------------------|---|---|---|
| 구분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연구내용 |
| 임정덕 장영재 (1997) | 한국경제의 성장기에 우수 두뇌 유출 현상이 완화되었는지, 또는 심화되었는지 분석 | 부산지역 고3 우수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성향을 설문조사함 | 우수두뇌의 유출과 지역격차 문제를 교육제도, 특히 입시제도의 개선과도 관련을 가지고 고려되어야 함 |
| 권상철 (2001) | 지역적 불공평한 개발 또는 지역적 손실이란 측면에서 인적 자원의 이동과 그 함의를 고찰함 | 수도권의 집중도,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속성 등을 분석함 |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젊은 경제활동 인구층이며 대학교 이상,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지역간 인구 이동은 수도권지역으로의 두뇌 유출을 포함하고 있음 |
| 첨단기술연구 주제적 접근 | | | |
| 구분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연구내용 |
| 구자문 (2003) | 한국의 테크노폴리스 사업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제시 | 세계적인 경험들, 이론적인 원리, 한국 테크노폴리스의 평가, 정책적 함의로 구성 | 한국의 테크노폴리스 내지 테크노파크의 취약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음 |
| 홍형득 (2003) | 삼중나선구조모형을 기반으로 산업대학의 역할모형을 제시 | 산학연계현황에 관한 실증자료는 기존의 2차 자료를 활용하고, 대학과 산업계 전문가들과 인터뷰 및 관련자들과의 회의 등의 방법으로 연구자료 수집 | 우리나라 산학연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적 모형으로서 기술기업가적 대학 구축을 통한 산업대학의 역할모형을 제시 |
| 권영섭 허은영 (2000) | 대구와 구미 지역전략 산업(섬유 및 전자산업)에서의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제시 | 이론연구, 설문조사, 기관방문 인터뷰 조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대구 섬유산업과 구미 전자산업의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 최근 서구의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구미 지역혁신체계의 분석. 대구·구미 지역전략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고 강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제시 |
| 이성근 (2000) | 대학도시로서 경산의 개발과정,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수행과정, 바람직한 지역의 개발정책 등을 분석 | 경산시를 사례로, 대학도시의 성장과정과 지역혁신사업의 전개과정, 그리고 혁신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조사·연구 | 경산대학도시는 지역대학들의 다양한 혁신사업으로 인하여 현재는 첨단산업의 창업·보육과 상품화의 혁신거점으로 발전 |

(표 계속)

| 경제 주체적 접근 | | | |
|-------------------------------|---|---|---|
| 구분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연구내용 |
| 임승달 (1989) |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역소득효과에 중점을 두고 분석방법은 Darance 의 소득창출모형을 활용 | 지방대학의 지역발전효과를 강릉대학을 사례로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으로 대별하여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 |
| 조정근 외 (2002) |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지역대학의 역할 | 강릉대학교를 대상으로 내부평가모형과 외부평가모형을 비교분석하고, 횡단면분석과 부분적으로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동태적 비교분석도 같이 행함 | 강릉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지역주민의 인식, 사회문화적 영향, 산업정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지역대학 지원 필요성과 지역대학의 과제를 도출 |
| 교육정책 및 기타 접근 | | | |
| 구분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연구내용 |
| 주철안 (2000) |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지방대학의 위기 실태와 주요 원인, 지방대학의 육성 전략을 검토 | 투입(학생의 미충원율, 우수 학생의 진학 비율 등)과 산출 실태(졸업생의 취업률, 국가고시 합격률, 대학원 진학률 등)를 검토 | 지방대학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지방대학 위기의 주요원인 4가지를 설명하고, 지방대학의 육성전략으로서 육성의 기본방향(6가지)과 육성방안 |
| 지방대학육성 대책위 원희 (2000) | 지방대학의 육성방안을 마련 |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상을 파악하고, 지방대학 육성 관련 정책(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이외 관련부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지방대학 정책)을 분석 | 지방대학의 위기의 실상을 5가지로 파악하고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마련 |
| 표시열 (2000) | 대학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지방소재 대학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생존 내지 발전 전략을 모색하며 정책 대안 제시 | 지방대학과 지방분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특성화 방안 등의 정책 대안 제시 | 지방소재 대학들에 대한 특성화, 조직의 개방성과 효율성의 제고, 일정영역에서의 우대조치의 실시, 지방소재 대학간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및 주민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전략 제시 |

(2)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중 인적 자본적 접근이나 경제 주체적 접근 또는 첨단 주체적 접근은 모두 대학이 지역발전에 주는 여러 역할 중 일부분에만 치중되어 종합성이 미흡하고 정책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특히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 산학협력, 테크노폴리스 등에 관련된 연구는 산업정책적 측면의 접근으로 교육정책적 고려가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열악한 연구 여건으로는 본 접근의 전제가 되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화산업을 선도하여 지역혁신기능의 주축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정책적 접근도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대학이 갖는 지역발전이라는 요소가 고려되지 않고 대학발전적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접근되어 연구성과의 한계가 있으며 지방대학 관련연구 대부분이 객관적·체계적·구체적·종합적이지 못하여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관련된 문제복합체적(problematique) 성격의 지방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이와 같은 부분적·개괄적·추상적 접근을 탈피하여 종합적·분석적·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지방대학의 실태와 육성방안을 기존의 교육정책적, 산업정책적, 지역정책적 입장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기존연구의 구체적 차별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유형분석(category analysis)을 통하여 종합화하고자 한다. 둘째, 지방대학의 공간적 입지 변화를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하여 지방대학 입지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진학자의 공간적 진학행태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고, 고교생 진학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인적자본적 측면에서의 지역발전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지방대학 침체실태를 투입-과정-산출-효과에 이르는 체제분석(system analysis) 모형을 통하여 객관적,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지방대학 CEO 등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현성·효과성 등으로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틀 설정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대학과 지역발전의 상호작용과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분석의 틀이 필요하며, 대학이 자원(resource)의 차이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투입(input)과 상호작용과정(process)을 거쳐 여러 산출(output)을 내놓는 복합체라는 측면에서 체계분석(system analysis)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원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고교졸업생 수, 대학교 수,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행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원요소는 원천적인 측면에서 투입요소에 영향을 줌으로써 구조와 과정을 거쳐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의 투입요소로는 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학생과 교수, 재정과 시설을 들 수 있으며, 대학이 입지한 지역의 제반여건과 대학정책 등의 환경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투입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입요소는 대학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활동이라는 상호작용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내용과 질 정도에 따라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의 교육활동은 대학의 가장 기본적 역할로,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재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길러 사회에 배출하는 것으로 지방대학의 교육과정, 학과편성, 교육내용에 따라 성과가 상이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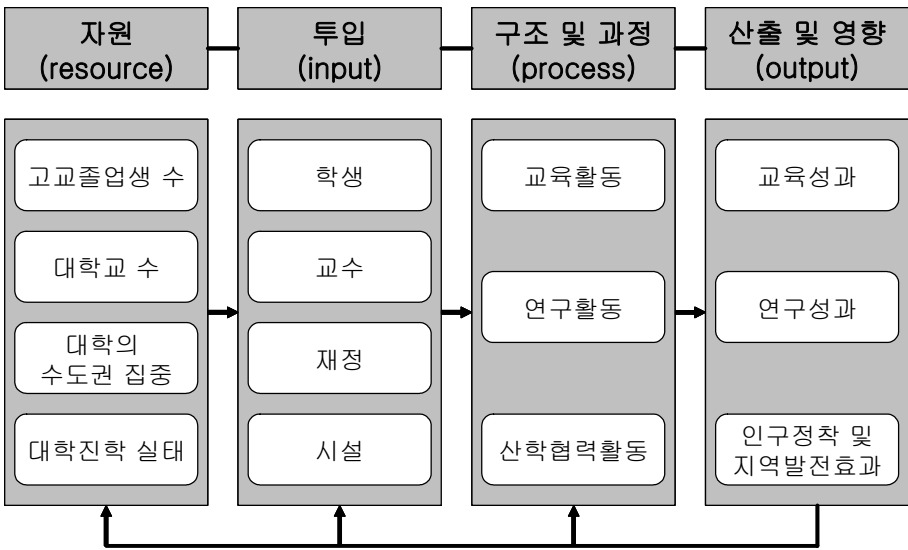
대학의 연구활동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그 중요도가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대학의 연구기능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공급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창업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혁신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대학의 연구활동의 양적·질적 수준에 따라 지역발전이 좌우된다.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은 최근 지방화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데, 이는 대학이 연구활동, 혹은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체와 연계를 맺음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요소와 투입요소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활동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성과, 연구실적, 인구정착 및 지역발전효과 등 산출(output)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다시 국가 및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대학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의 결과는 자원, 투입, 구조 및 과정요소에 다시 환류되어 누적적인 순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음의 <그림 2-2>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표는 <표 2-4>와 같다.

<그림 2-2> 분석의 틀



<표 2-4> 분석항목 및 지표

| 구분 | 항목 | | 지표 | |
|--|---------------|------------------------|--|---|
| 제3장 대학 수급 변화와 진학 행태 분석 | 자원 | • 대학수급의 시간적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만 명당 대학생수 교수당 대학생수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입학정원 | |
| | | • 수도권-지방 대학의 분포와 변화 | -양적분포 | • 수도권-지방대학 분포변화자료 |
| | | | -질적분포 | • 대학평가 Top10대학의 수도권 집중도 |
| | | • 지역별 대학수급 실태와 변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별 연도별 인구 만 명당 대학생수 시군별 연도별 대학교수 시군별 연도별 대학생수 |
| | | • 대학진학생의 공간적 행태분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대학진학생의 진학지역분포 (시도교육청 조사) 주요대학 신입생의 출신지 분포 지방고교생의 진학희망대학 소재지 |
| 제4장 지방 대학의 지역 연계 실태와 위기의 원인 및 지역 발전 효과 분석 | 학생 | • 양적문제 | • 지역별 입학생 미충원율 | |
| | | • 질적문제 | • 수능1등급 지방학생 수도권 집중도 | |
| | 교수 | • 교수확보미흡 (양적문제) | • 수도권-지방의 대학교수 확보율(교수당 학생수) | |
| | | • 지방교수 차별로 인한 우수교수 확보난 | • 수도권-지방권 대학교수 정부위원회 및 사외이사 위촉비율, 연구비수주액 | |
| | 재정 | • 대학 국고보조금 열악 | • 우리나라 GDP대비 대학예산의 국제비교 | |
| | | • 지방대학 재정지원 격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지방권 대학당 국고보조비 비교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누적 상위10개대학분포 | |
| | | • 기부금 발전기금 격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지방권 대학의 대학당 기부금 비교 최근 5년간 누적기부금 상위 10개대학 분포 | |
| | | • 자퇴생 증가로 인한 등록금 수익감소 | • 연도별 지방대학 자퇴생 및 수도권편입학생수 | |
| | 시설 | • 양적, 질적 낙후 | • 한국과 미국의 대학당 연구기자재 비교 | |
| | | • 수도권-지방대 격차 | • 수도권-지방권 대학 학생당 교지면적, 시설면적, 도서관 장서수 | |
| | 구조 및 과정 | 교육 활동 | • 학과의 난립 (특성화미흡) | • 수도권-지방대학의 학교당 학과수, 학과당 입학정원 |
| | | | • 사회수요와 괴리된 인력양성구조 | • 전공분야별 학생비율 국제비교 |
| | | | • 교과과정의 현장성 부족 | • 우리나라 CEO의 대학교육 불만도 |
| | 연구 활동 | • 연구활동 미흡 | • 수도권-지방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실적 | |
| | | • 산학협력활동 미흡 | • 지방대학 산학협력 방법별 경험비율 (사례연구자료) | |
| 산출 및 영향 | 교육성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D 평가 졸업생 취업률 CEO의 우리나라 인적자원부문 경쟁력 설문조사 | |
| | 연구실적 | | • 중앙일보 대학연구평가자료(SCI등) | |
| | 인구정착 및 지역발전효과 | | •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지방대학의 역할 | |

3

우리나라 대학의 공간적 수급 변화와
진학행태 분석

이 장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배경에 이어 우리나라 대학의 공간적 수급변화와 진학행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대학의 현황과 증가추이, 수도권과 지방간 대학분포의 차이 및 추이와 지역별 대학분포 실태 및 변화를 검토한 뒤 대학진학자의 지역별 진학 실태와 지방고교생의 진학행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각종 자료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학분포의 차이를 밝히고 지방고교생들의 진학 희망대학, 대학 진학시 고려사항, 수도권대학 진학 이유 등 진학행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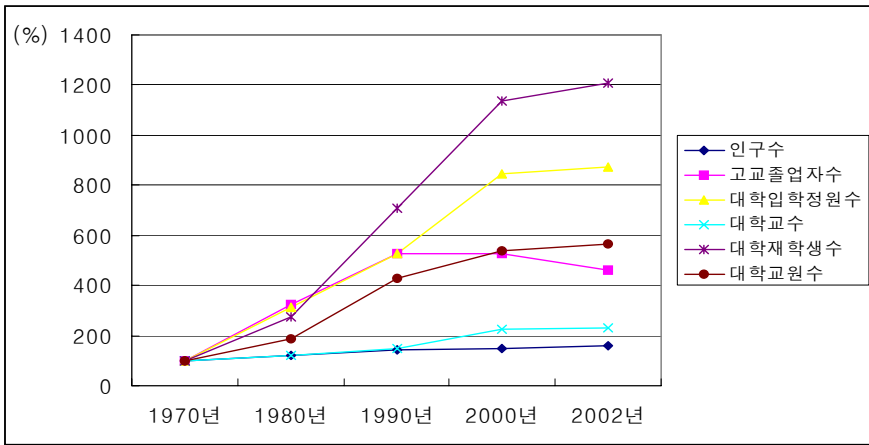
1. 대학의 현황과 증가추이 분석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은 322개교에 재학생은 2,735천명으로 인구 만명당 564명에 이른다. 이를 좀 더 세분하면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은 총 198개교에 재학생수가 1,772 천명이고 전문대학은 159개교에 963천명이며 4년제 대학에서 일반대학은 163개교, 교육대학 11개교, 산업대학 19개교, 기술대학 1개교, 방송통신대학 1개교, 각종학교 3개교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설립주체별로 보면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26개교에 재학생 수는 387,299명이고, 사립대학은 137개교에 1,387,439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78.1%를 차지하여 사립대학이 대학교육의 주류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난 30년(1970년~2002년) 간의 대학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를 보면 <표 3-1>와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수는 71개교(전문대 포함 136교)

에서 163개교(전문대 포함 322교)로 2.3배 증가한 반면 대학생 수는 146천명에서 1,771천명으로 12.1배가 급증하여 동기간 중의 인구증가율 1.4배를 10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대학교육 기회의 팽창에 따른 고급 인력의 양성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지만 지방대학의 침체 등 오늘의 대학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림 3-1> 그림으로 본 30년간의 변화 모습¹⁾



자료: 통계청(www.nso.go.kr),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고교졸업자수, 대학입학정원).

인구 만명당 전문대학생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는 1970년 58명에서 2002년 564명으로 9.7배 급증하였다. 스위스경영개발원(IMD 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국가 중 3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30여 년간(1970-2002)의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고교졸업자는 4.6배로 점증한 반면 대학(전문대 포함) 입학정원은 동기간 중 12.7배로 급증하여 고교졸업생당 대학입학정원은 0.3명에서 0.9명으로 대학입학 경쟁율도 크게 완화되었다. 대학교원수는 지난 30여 년간 전문대를 포함하여 10,270명에서 56,333명으로

1) 인구수의 단위는 백명을 기준으로 함.

5.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원당 학생수는 23명에서 62명으로 오히려 크게 악화되어 교수확보율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학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3-1> 연도별 대학지표의 변화 추이

| 구 분 | 1970(A) | 1980 | 1990 | 2000 | 2002(B) | 증가지수 (B/A) |
|-------------------------------|----------------------|----------------------|--------------------------|--------------------------|--------------------------|----------------|
| 인 구 수(C) | 30,882,386 | 37,436,315 | 43,410,899 | 46,136,101 | 48,517,871 | 1.6 |
| 고교 졸업자수(D) | 145,062 | 467,388 | 761,922 | 764,712 | 670,713 | 4.6 |
| 대학입학정원(E) (전문대포함) | 37,190 (48,550) | 116,700 (201,155) | 196,550 (327,070) | 314,410 (608,585) | 324,309 (617,483) | 8.7 (12.7) |
| 대학교 수 (전문대포함) | 71 (136) | 85 (213) | 107 (224) | 161 (319) | 163 (322) | 2.3 (2.4) |
| 대학 재학생수(F) (전문대포함) | 146,414 (179,897) | 402,979 (568,030) | 1,040,166 (1,363,991) | 1,665,398 (2,578,671) | 1,771,738 (2,734,867) | 12.1 (15.2) |
| 대학 교원수(G) (전문대포함) | 7,779 (10,270) | 14,458 (19,946) | 33,340 (40,722) | 41,943 (53,650) | 44,177 (56,333) | 5.7 (5.5) |
| 고교졸업생당 대학입학정원 (E/D) | 0.3 (0.3) | 0.2 (0.4) | 0.3 (0.4) | 0.4 (0.8) | 0.5 (0.9) | 1.7 (3.0) |
| 인구인명당 대학생수(F/C) (전문대포함) | 47 (58) | 108 (152) | 240 (314) | 361 (559) | 365 (564) | 7.8 (9.7) |
| 교원수당 대학생수(F/G) (전문대포함) | 19 (23) | 28 (39) | 31 (41) | 40 (61) | 40 (62) | 2.1 (2.7) |

자료: 통계청(www.nso.go.kr), 교육통계연보(고교졸업자수, 대학입학정원)

주: ① 분교는 전체수에 포함하지 않음.

② 교원수는 재직 교원수임(휴직자, 임시교사 포함). 시간강사,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는 제외하였음.

③ 인구수는 '인구총조사' 이고, 2002년은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임.

④ 고교졸업생당 입학정원수는 반올림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수도권-지방 대학분포 실태 및 변화 분석

1) 양적 분포 현황과 변화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2003년 현재 97개교로 전체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재적생수는 73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60.7%에 이르러 지방의 인구비중 57.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대학생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1980년에는 72 : 28로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내 대학의 신설과 정원이 규제되고 1994년부터 대학 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 준칙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지방의 대학설립과 정원이 급증하면서 그 비중은 역전되어 2002년 현재는 39 : 61로 지방대학의 비중이 높게 되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부표 1-3-1> 참조).

<표 3-2>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현황

(단위 : 교, 명)

| 대학급별 | 학 교 수('03) | | 재 학 생 수('02) | | 교 원 수('02) | |
|------|---------------|-----|---------------------|-----------|------------------|--------|
| | 지방(비율) | 전국 | 지방(비율) | 전국 | 지방(비율) | 전국 |
| 계 | 234 (65.5) | 357 | 1,240,151 (61.3) | 1,964,566 | 37,002 (62.1) | 59,597 |
| 대 학 | 103 (60.9) | 169 | 738,581 (60.7) | 1,217,312 | 26,408 (59.8) | 44,177 |
| 산업대학 | 16 (84.2) | 19 | 96,402 (82.0) | 117,558 | 2,110 (83.0) | 2,543 |
| 교육대학 | 9 (81.8) | 11 | 16,859 (74.4) | 22,647 | 561 (77.8) | 721 |
| 전문대학 | 106 (67.1) | 158 | 388,309 (64.0) | 607,049 | 7,943 (65.3) | 12,156 |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지난 32년간(1970-2002)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의 변화를 보면 수도권은 1.2명에서 3.0명으로 2.6배 증가한 반면, 지방은 0.2명에서 4.3명으로 20.9배로 급증하였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 증가율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대비 서울시 대학생비중은 1970년 66.9%(97,916명)에서 24.8%(438,986명)로 크게 감소한 반면 수도권내 경기·인천 지역은 2.3%(3,396명)에서 13.5%(239,538명)로 크게 증가하여 수도권 대학정원 규제가 서울이외 수도권지역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경기도에서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대학신설이 제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교에서 28개로 무려 14배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신학교 등이 종합대학으로 편법을 통해 대부분 승격되었기 때문이다.

<표 3-3> 수도권-지방의 대학 분포 변화

| 구 분 | | 1970 | | 1980 | | 1990 | | 2002 | |
|-----------------|-------|---------|-------|---------|-------|-----------|-------|-----------|-------|
| | | | % | | % | | % | | % |
| 인구수 (천명) | 서울 | 5,433 | 17.6 | 8,364 | 22.3 | 10,612 | 24.4 | 10,280 | 21.2 |
| | 경기·인천 | 3,297 | 10.7 | 4,934 | 13.3 | 7,974 | 18.5 | 12,596 | 26.0 |
| | 수도권 | 8,730 | 28.3 | 13,298 | 35.6 | 18,586 | 42.9 | 22,876 | 47.2 |
| | 지방 | 22,152 | 71.7 | 24,138 | 64.4 | 24,824 | 57.1 | 25,641 | 52.8 |
| | 전국 | 30,882 | 100.0 | 37,436 | 100.0 | 43,410 | 100.0 | 48,517 | 100.0 |
| 대학교 수 (개) | 서울 | 38 | 53.5 | 37 | 43.5 | 34 | 31.8 | 38 | 23.3 |
| | 경기·인천 | 2 | 2.8 | 5 | 5.9 | 15 | 14.0 | 28 | 17.2 |
| | 수도권 | 40 | 56.3 | 42 | 49.4 | 49 | 45.8 | 66 | 40.5 |
| | 지방 | 31 | 43.7 | 43 | 50.6 | 58 | 54.2 | 97 | 59.5 |
| | 전국 | 71 | 100.0 | 85 | 100.0 | 107 | 100.0 | 163 | 100.0 |
| 대학생 수 (명) | 서울 | 97,916 | 66.9 | 172,155 | 42.7 | 288,642 | 27.7 | 438,986 | 24.8 |
| | 경기·인천 | 3,396 | 2.3 | 23,829 | 5.9 | 142,822 | 13.8 | 239,538 | 13.5 |
| | 수도권 | 101,312 | 69.2 | 195,984 | 48.6 | 431,464 | 41.5 | 678,524 | 38.3 |
| | 지방 | 45,103 | 30.8 | 236,995 | 51.4 | 608,702 | 58.5 | 1,093,214 | 61.7 |
| | 전국 | 146,414 | 100.0 | 402,979 | 100.0 | 1,040,166 | 100.0 | 1,771,738 | 100.0 |

자료 : 통계청(www.nso.go.kr).

2) 질적 현황

우리나라는 최근 수도권 대학 신설과 입학정원 증가가 규제되어 대학의 수도권 양적 집중도는 완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학들이 수도권에 밀집하여 우수학생의 서울 유입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지방대학 침체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양적으로는 대학이 지방에 비해서 그 비중이 높지 않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대부분의 명문대학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중앙일보 대학평가 Top-10 대학(2003)

| 순위 | 종합 순위 | 평판도 순위 |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 |
|----|----------|---------|-------------|
| 1 | 포항공대 | 고려대 | 고려대 |
| 2 | 한국과학기술원 | 서울대 | 서울대 |
| 3 | 서울대 | 연세대 | 연세대 |
| 4 | 연세대 | 서강대 | 서강대 |
| 5 | 고려대 | 성균관대 | 성균관대 |
| 6 | 성균관대 | 한양대 | 한양대 |
| 7 | 서강대, 한양대 | 포항공대 | 부산대 |
| 8 | | 한국외국어대 | 경북대 |
| 9 | 이화여대 | 부산대 | 중앙대 |
| 10 | 부산대, 한림대 | 한국과학기술원 | 포항공대 |

주 : 음영부분은 지방대학을 나타냄.

자료 : 중앙일보 홈페이지(www.joins.com) 대학평가, 2003.

3. 지역별 대학분포 실태 및 변화 분석

1) 시·도별 대학 분포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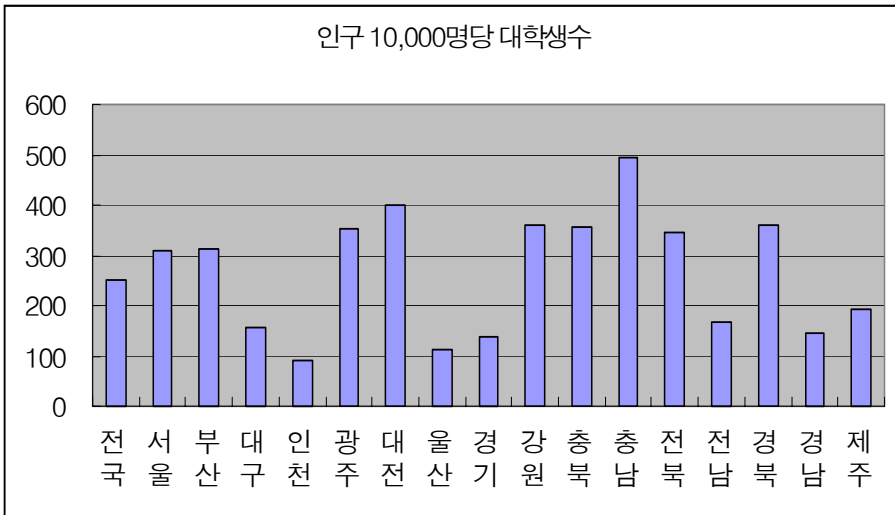
대학의 가장 이상적인 지역분포는 인구의 지역 분포에 비례하여 대학이 입지하고 학생들은 인근의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시설은 정주생활권 계획에서 인구 30만명 정도의 대생활권에 1개교를 배치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각 대학의 입지와 취학권을 파악하여 대학권역(hochschulregion)을 획정하고 대학의 입지망을 구축하기도 한다(박영한 외 2001).

우리나라 16개 시·도별 인구당 대학입학정원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설정한 연구의 틀 중 자원요소의 불균등한 분포를 함의하고 있는바 여러 사회경제적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인구 만 명당 대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충청남도로 496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인천광역시의 91명으로 그 격차가 5배 이상이 되고 있다²⁾. 특히, 울산과 인천광역시가 인구에 비하여 대학이 적어 지역내 대학 유치가 숙원이 되고 있다. 대학의 지역별 분포는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내 대학입지가 제약됨에 따라 통근·통학이 가능한 충청권 등 수도권 인근지역에 많은 대학이 신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교통문제의 광역화 등 여러 비효율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대별로 지역별 대학의 증가 추세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1970년대에서 1980년대는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이 두드러지며, 1980년대에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에서 큰 폭의 대학증가가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대학의 교외화와 함께 충북, 충남, 전남, 전북에서 대학이 크게 증가하였다. 대구지역의 경우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대학 확장의 어려움으로 대구 근교인 경북지역으로 대학이 이전되어 대구시내에서는 대학 및 대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2) 시도별 인구 10,000명당 대학생수를 살펴보면, 충남(496명), 대전(399명), 경북(391명), 강원(360명), 충북(355명), 광주(354명), 전북(347명), 부산(312명), 서울(308명), 제주(192명), 대구(158명), 경남(145명), 경기(138명), 울산(112명), 인천(91명)임.

<그림 3-2> 시도별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2002년)



지난 30여 년간 시도별 대학 및 대학생 증가추이를 보면,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인천 지역이 지난 30년간(1970-2002) 대학생수가 3,396명에서 239,538명으로 무려 70배가량 급증하였고, 다음은 대전·충남지역 61배, 울산·경남 59배, 강원 40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학교수도 동기간 중 경기·인천지역이 14배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은 전남·광주 5.7배, 대전·충남 4.8배, 대구·경북 3.6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내 대학신설과 증원이 제약되는 가운데에서도 경기지역에 이렇게 가장 많은 대학이 신설되고 대학입학정원이 늘어난 것은 수도권정비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신학교 등의 형태나 야간 학생충원 등의 편법을 동원하였기 때문으로 실제 수도권정비법상의 대학 규제가 실패했음을 뜻한다 (<부록 2> 참조).

<표 3-5> 연도별 · 시도별 대학교와 대학생수 변화 추이

| 구 분 | | 1970(A) | 1980 | 1990 | 2002(B) | 증가지수 (B/A) | |
|-------------|-------|-------------|-------------|-------------|----------------|----------------|-----------|
| 수 도 권 | 서울 | 97,916(38) | 172,155(37) | 288,642(34) | 438,986(38) | 4.5(1) | |
| | 경기·인천 | 3,396(2) | 23,829(5) | 142,822(15) | 239,538(28) | 70.5(14) | |
| | 소 계 | 101,312(40) | 195,984(42) | 431,464(49) | 678,524(66) | 6.7(1.7) | |
| 지 방 | 충청권 | 대전·충남 | 3,708(4) | 22,977(5) | 87,459(9) | 225,033(19) | 60.7(4.8) |
| | | 충북 | 2,305(3) | 15,202(3) | 46,086(4) | 79,838(8) | 34.6(2.7) |
| | | 소 계 | 6,013(7) | 38,179(8) | 133,545(13) | 304,871(27) | 50.7(3.9) |
| | 호남권 | 광주·전남 | 7,366(3) | 26,540(4) | 71,228(9) | 121,264(17) | 16.5(5.7) |
| | | 전북 | 4,513(3) | 24,565(5) | 65,174(5) | 100,929(8) | 22.4(2.7) |
| | | 소 계 | 11,879(6) | 51,105(9) | 136,402(14) | 222,193(25) | 18.7(4.2) |
| | 영남권 | 대구·경북 | 11,938(5) | 47,175(7) | 127,511(11) | 211,827(18) | 17.7(3.6) |
| | | 울산·경남 | 1,452(3) | 17,316(4) | 54,270(4) | 86,053(6) | 59.3(2) |
| | | 부산 | 10,931(5) | 34,771(9) | 102,449(10) | 169,004(11) | 15.5(2.2) |
| | | 소 계 | 24,321(13) | 99,262(20) | 284,230(25) | 466,884(35) | 19.2(2.7) |
| | 기 타 | 강원 | 2,084(4) | 15,040(5) | 44,863(5) | 83,121(8) | 39.9(2) |
| | | 제주 | 805(1) | 3,409(1) | 9,662(1) | 16,145(2) | 20.1(0.5) |
| | | 소 계 | 2,889(5) | 18,449(6) | 54,525(6) | 99,266(10) | 34.4(2) |
| | 합 계 | | 146,414(71) | 402,979(85) | 1,040,166(107) | 1,771,738(163) | 12.1(2.3) |

주: ()안은 4년제 대학교수를 말하며, 동등과정의 각종학교(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는 불포함.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 시·군별 대학 및 대학생 분포 변화 분석

대학은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 간접 시설로 각 지방의 시군에서는 대학 유치에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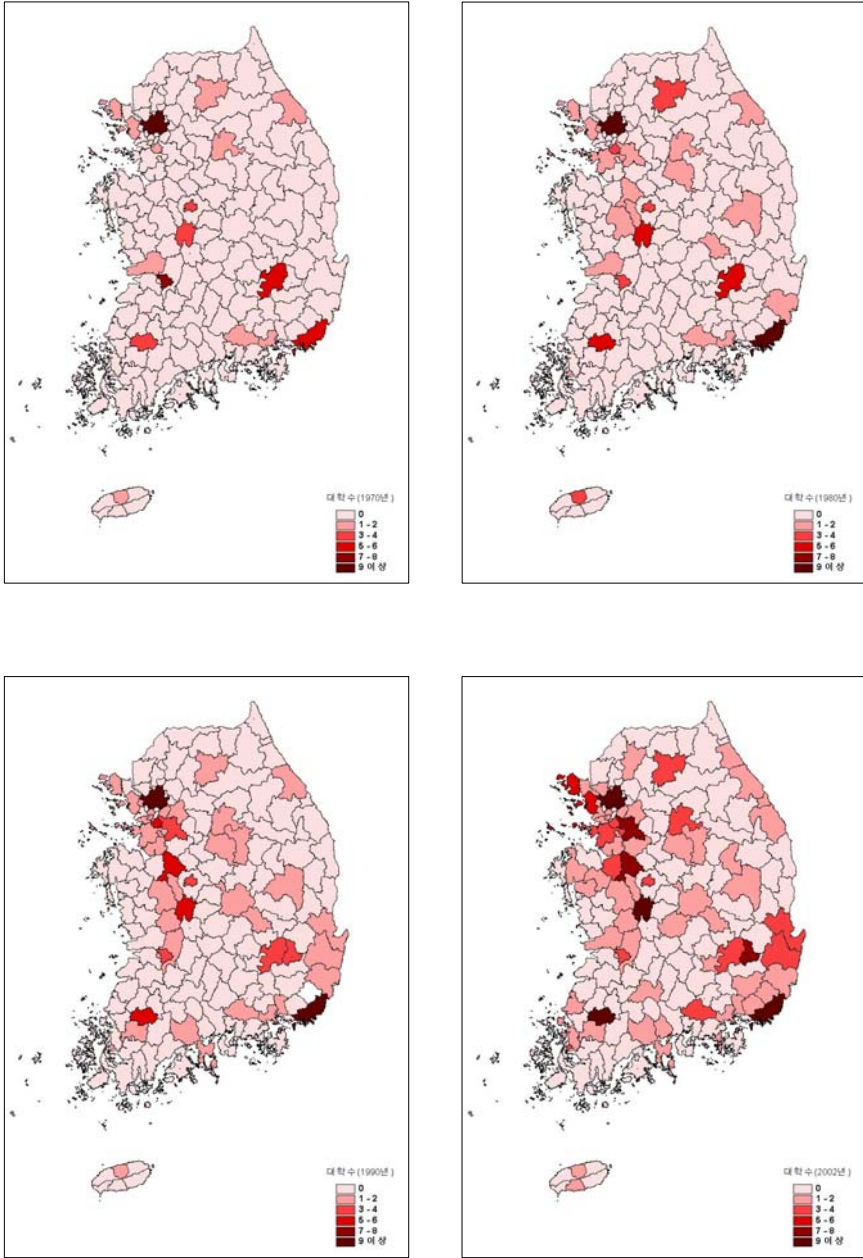
시·군에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이 입지하고 있다.

최근 30여 년간의 시·군별 4년제 대학과 대학생의 분포 변화를 보면 <그림 3-3>, <그림 3-4>와 같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1-3-2>, <부표 1-3-3> 참조). 1980년에는 전국 182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만 4년제 대학이 입지하였다. 당시, 인구 만 명당 대학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경산시로 1,075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익산시가 1,037명, 청주시가 625명이었으며, 대학생 인구밀도가 300명 이상인 시·군은 182개 시·군 중 총 10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는 전국 211개 시·군 중 48개 시·군에 대학이 입지하였다. 대학교가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천안시로 5개 대학교가 입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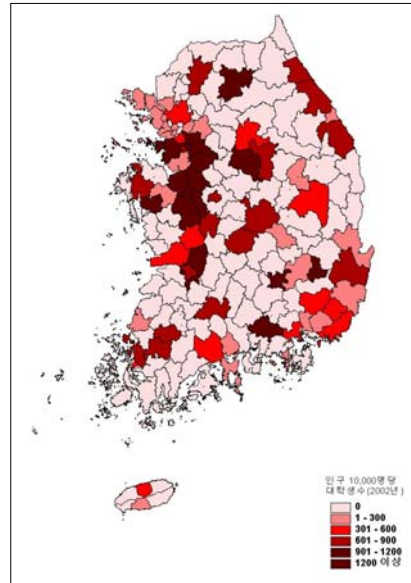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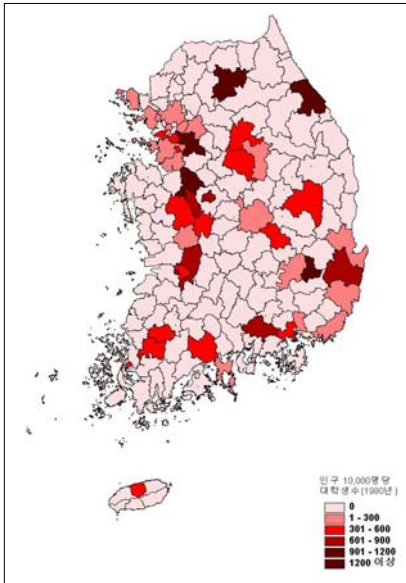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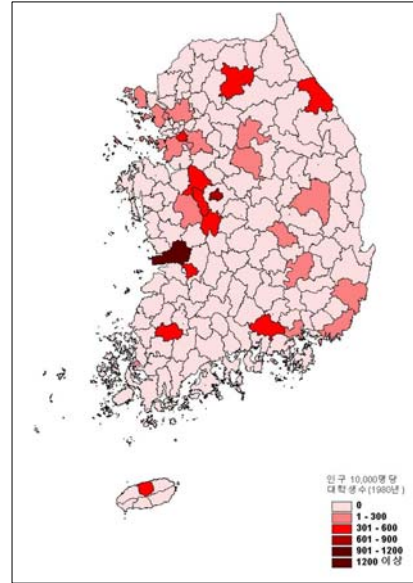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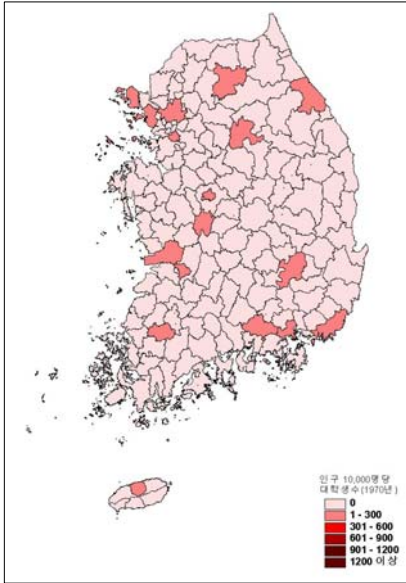
2000년에는 인구 만 명당 대학생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경산시로 6,074명이었고, 1000명이 넘는 시·군은 춘천시, 천안시, 용인시였으며, 300명 이상 시군은 25개 시군이였다. 2002년 현재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경북 경산시로 4,299명이고 그 밖에 1000명 이상 되는 지역은 전남 완주군(1,525명), 아산시(1,466명), 안성시 (1,451명), 공주시 (1,162명), 용인시 (1,093명), 춘천시, 충주시, 연기군 등 8개 시·군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시대별 입지패턴은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외 인근지역으로부터 경부축을 따라 신설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 서울과 가까운 충남지역에 많은 대학이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충남 서해안지역 등에도 대학이 신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 시·군별 대학수 분포 변화



<그림 3-4> 시군별 인구 만 명당 대학생수 분포 변화



4. 대학 진학자의 지역별 진학실태 분석

1) 지방출신 고교생의 지역별 대학 진학실태

지방대학의 지역발전효과는 지방 고교졸업자가 어디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각 시·도 교육청에 의뢰하여 시·도내 대학 진학자의 진학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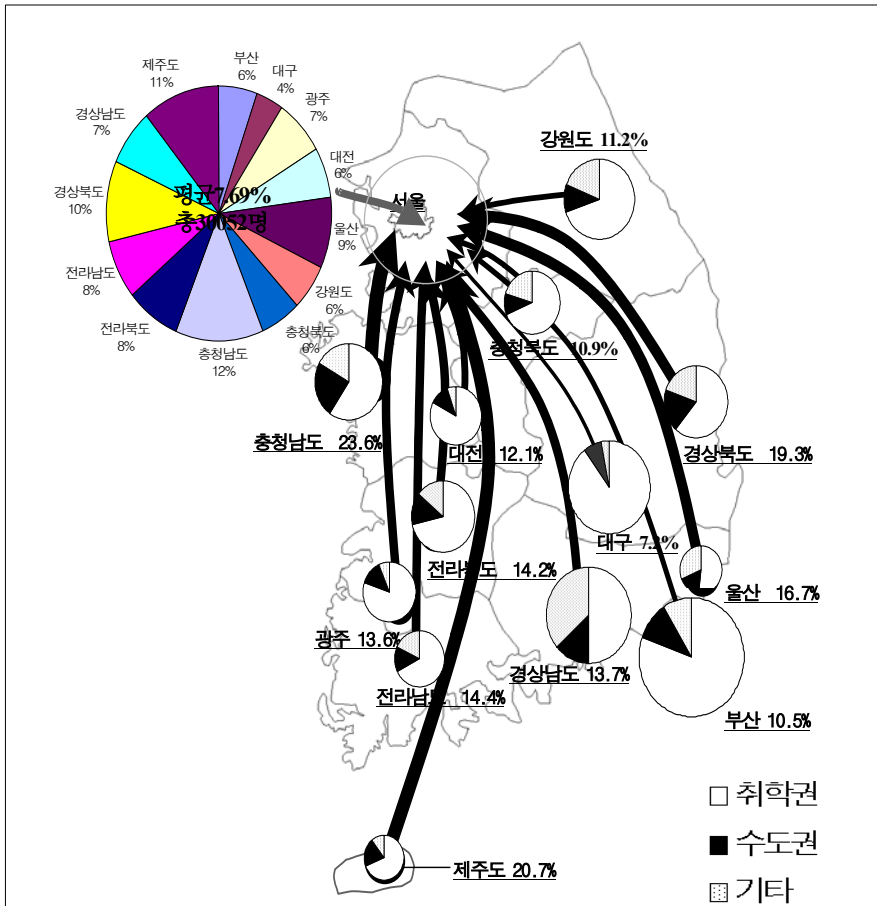
<표 3-6> 고교 졸업생의 시·도별 대학진학 분포 현황(2003)

| 지역 | | 취학권 | | 수도권 | | 기타 | | 합계 | | 비고 |
|--------|-------|---------|-------|--------|-------|--------|-------|---------|-------|------|
| |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
| 충청권 | 대전광역시 | 10,894 | 82.4 | 1,598 | 12.1 | 725 | 5.5 | 13,217 | 100.0 | 충남포함 |
| | 충북도 | 10,047 | 68.9 | 1,597 | 10.9 | 2,949 | 20.2 | 14,593 | 100.0 | |
| | 충청남도 | 9,881 | 59.4 | 3,939 | 23.6 | 2,823 | 17.0 | 16,643 | 100.0 | 대전포함 |
| 호남권 | 광주광역시 | 11,202 | 80.0 | 1,900 | 13.6 | 891 | 6.4 | 13,993 | 100.0 | |
| | 전라북도 | 12,946 | 71.5 | 2,566 | 14.2 | 2,586 | 14.3 | 18,098 | 100.0 | |
| | 전라남도 | 10,263 | 67.5 | 2,193 | 14.4 | 2,751 | 18.1 | 15,207 | 100.0 | 광주포함 |
| 영남권 | 부산광역시 | 26,130 | 80.5 | 3,405 | 10.5 | 2,934 | 9.0 | 32,469 | 100.0 | 포항포함 |
| | 대구광역시 | 18,405 | 89.7 | 1,476 | 7.2 | 634 | 3.1 | 20,515 | 100.0 | 경북포함 |
| | 울산광역시 | 5,012 | 52.0 | 1,610 | 16.7 | 3,014 | 31.3 | 9,636 | 100.0 | 경남포함 |
| | 경상북도 | 12,070 | 61.0 | 3,823 | 19.3 | 3,899 | 19.7 | 19,792 | 100.0 | 대구포함 |
| | 경상남도 | 11,428 | 50.0 | 3,137 | 13.7 | 8,306 | 36.3 | 22,871 | 100.0 | 울산포함 |
| 강원·제주권 | 강원도 | 12,852 | 69.8 | 2,071 | 11.2 | 3,486 | 19.0 | 18,409 | 100.0 | |
| | 제주도 | 2,449 | 68.8 | 737 | 20.7 | 375 | 10.5 | 3,561 | 100.0 | |
| 합계 | | 153,579 | 70.1 | 30,052 | 13.7 | 35,373 | 16.2 | 219,004 | 100.0 | |

자료: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

전국 각 시·도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의 비중은 시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3.7%의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중 수도권으로의 학생유출 비중이 가장 높은 시·도는 충청남도로, 전체 학생의 23.6%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제주도 20.7%, 경상북도 19.3%, 울산광역시 16.7%, 전라남도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2003년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도권 진학비율



주: 상세한 수치는 <표 3-7> 참조.

자료: 각 시·도 교육청.

한편 자체 시·도에 진학한 비율은 평균 70.1%로 지방대학이 지역학생에게 진학기회의 제공으로 외지진학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근거리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지역(시·도)에 가장 많이 진학한 시·도는 대구광역시로 89.7%이고, 그 밖에는 부산, 광주, 대전광역시 등의 광역시 지역으로서 80%이상이 자체 시·도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들 대도시는 비교적 지방대학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경남도와 울산광역시는 자체시도에 50%내외만 진학하고 부산 등 인근 지역으로 많이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대학의 양적·질적 분포에 따라 자체 지역내 진학률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지방대학생의 출신지역별 분포

지방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조사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역별(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2개교씩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신입생의 출신지역을 조사하였다. 사례 지방대학 신입생 중 평균 12.4%가 수도권 학생으로 나타나 지방고교생의 수도권 대학진학비중 13.7%와 대등소이 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진학행태는 지방의 성적우수생을 중심으로 한 13% 내외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수도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학생이 지방으로 유출되어 하숙비 등 여러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대학 신입생의 지역별 분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근거리에 입지한 강원대학이나 충주대학, 충북대학은 수도권 학생의 비중이 각각 35.1%, 21.1%, 18.6%로 높은 반면, 원거리에 입지한 부산대, 창원대 등은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학생의 근거리 진학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학생의 지방대학 진학행태는 거리에 민감하여 주로 수도권

에 근접한 충청권이나 강원권 등의 대학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대학은 비교적 입학생 부족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각 지방대학별 신입생 출신지역 현황

(단위 : 명, %)

| 시·도별 | 강원권 | | 충청권 | | 호남권 | | 영남권 | | 합계 |
|------------|------------------|------------------|------------------|------------------|------------------|------------------|------------------|------------------|-------------------|
| | 강원대 | 강릉대 | 충북대 | 충주대 | 전북대 | 군산대 | 부산대 | 창원대 | |
| 수도권 | 1,261 (35.1) | 322 (18.1) | 683 (18.6) | 403 (21.1) | 119 (2.7) | 203 (8.9) | 25 (0.5) | 13 (0.6) | 3,029 (12.4) |
| 자체 시·도내 | 2,092 (58.3) | 1,301 (73.1) | 2,102 (57.1) | 1,307 (68.5) | 3,710 (83.1) | 1,646 (72.2) | 3,499 (77.0) | 1,910 (87.1) | 17,567 (71.9) |
| 기타 시·도 | 235 (6.6) | 156 (8.8) | 894 (24.3) | 199 (10.4) | 635 (14.2) | 430 (18.9) | 1,020 (22.5) | 270 (12.3) | 3,839 (15.7) |
| 합계 | 3,588 (100.0) | 1,779 (100.0) | 3,679 (100.0) | 1,909 (100.0) | 4,464 (100.0) | 2,279 (100.0) | 4,544 (100.0) | 2,193 (100.0) | 24,435 (100.0) |

주 : ()안은 구성비 자료 : 각 대학의 신입생 출신지역 분포 조사 자료(2003).

5. 지방고교생의 진학 지역 및 대학 결정요인³⁾

앞서 지방고교생들의 수도권대학 진학, 지방대학생들의 출신지역 분포로 거시적인 진학행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방고교생들의 미시적인 진학 지역·대학 요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방고교생의 진학행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3)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행태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관하여 설문조사하였음. 이를 위해 먼저 전국을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의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 고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선정하여 각 200명씩 총 800명을 설문조사하였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내용은 내신등급, 수능등급에 따른 지방대학 선호도 및 선택이유임. 조사대상 학교는 각 지역의 명문고를 중심으로 강원권에서는 강릉고, 충청권에서는 청주고, 전라권에서는 광주일고, 그리고 경상권에서는 경북고를 조사 대상학교로 임의 선정한 뒤 무작위로 각 학교별로 200명씩을 추출하여 총 800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1) 진학지역의 선호도

진학 학생의 지역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기타수도권, 자체 통학권, 기타권으로 나눠 진학 희망 지역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상학교 학생의 진학 지역선호도는 자체시도 43.8%, 서울 33.9%, 경기·인천 5.8%, 기타 타시도 11.5% 등의 순으로 전체응답 지방학생의 40%가량이 수도권대학을 선호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를 수능등급별로 보면 1등급 72.0%, 2등급 66.7%, 3등급 34.2% 4등급 21.4% 5등급 12.1%, 6등급 5.9%가 서울소재 대학을 희망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고, 반대로 6등급 74.5%, 5등급 69.8%, 2등급 17.3%, 1등급 16.0%가 동일시도 지방대학을 선호하여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지방대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지방의 우수학생은 대부분 수도권대학을 선호하여 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함으로써 지방대학침체의 요인이 된다.

<표 3-8> 수능등급별 진학 희망대학의 소재지

| 수능 등급 | 진학 희망대학의 소재지 | | | | | | 무응답 | 계 |
|----------|--------------|-----------|-----------|----------|----------|---------|--------|------------|
| | 서울 | 경기, 인천 | 동일 시도 | 기타 시도 | 전문 대학 | 기타 | | |
| 1등급 | 54(72.0) | - | 12(16.0) | 5(6.7) | 1(1.3) | 3(4.0) | - | 75(100.0) |
| 2등급 | 54(66.7) | 5(6.2) | 14(17.3) | 6(7.4) | 1(1.2) | 1(1.2) | - | 81(100.0) |
| 3등급 | 50(34.2) | 12(8.2) | 61(41.8) | 17(11.6) | 2(1.4) | 3(2.1) | 1(0.7) | 146(100.0) |
| 4등급 | 24(21.4) | 11(9.8) | 53(47.3) | 17(15.2) | 4(3.6) | 2(1.8) | 1(0.9) | 112(100.0) |
| 5등급 | 14(12.1) | 3(2.6) | 81(69.8) | 12(10.3) | 4(3.4) | 2(1.7) | - | 116(100.0) |
| 6등급 | 3(5.9) | 1(2.0) | 38(74.5) | 7(13.7) | 2(3.9) | - | - | 51(100.0) |
| 7등급 이하 | 1(9.0) | 1(9.0) | 6(54.5) | 2(18.1) | 1(9.0) | - | - | 11(100.0) |
| 무응답 | 33(34.7) | 7(7.4) | 36(37.9) | 13(13.7) | 4(4.2) | 1(1.1) | 1(1.1) | 95(100.0) |
| 전체 | 233(33.9) | 40(5.8) | 301(43.8) | 79(11.5) | 19(2.8) | 12(1.7) | 3(0.4) | 687(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88.428$, $p=0.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한편 내신등급에 따른 희망 1순위 대학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수능등급과 마찬가지로 상위권에 있는 학생일수록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하위권 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동일 시도에 있는 지방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표 3-9> 내신등급별 진학 희망대학의 소재지

| 내신 등급 | 무응답 | 진학 희망대학의 소재지 | | | | | | 계 |
|----------|--------|--------------|-----------|-----------|----------|----------|---------|------------|
| | | 서울 | 경기, 인천 | 동일 시도 | 기타 시도 | 전문 대학 | 기타 | |
| 1등급 | 1(1.9) | 32(59.3) | 2(3.7) | 13(24.1) | 2(3.7) | 1(1.9) | 3(5.6) | 54(100.0) |
| 2등급 | - | 26(60.5) | - | 12(27.9) | 3(7.0) | 1(2.3) | 1(2.3) | 43(100.0) |
| 3등급 | 1(1.4) | 20(28.2) | 5(7.0) | 35(49.3) | 9(12.7) | 1(1.4) | - | 71(100.0) |
| 4등급 | - | 10(16.1) | 3(4.8) | 36(58.1) | 11(17.7) | 1(1.6) | 1(1.6) | 62(100.0) |
| 5등급 | - | 8(17.0) | - | 34(72.3) | 1(2.1) | 3(6.4) | 1(2.1) | 47(100.0) |
| 6등급 | - | 2(11.1) | - | 11(61.1) | 3(16.7) | 1(5.6) | 1(5.6) | 18(100.0) |
| 7등급 | - | - | 1(6.3) | 13(81.3) | 1(6.3) | 1(6.3) | - | 16(100.0) |
| 8등급 | - | 1(14.3) | 1(14.3) | 3(42.9) | 1(14.3) | 1(14.3) | - | 7(100.0) |
| 무응답 | 1(0.3) | 134(36.3) | 28(7.6) | 144(39.0) | 48(13.0) | 9(2.4) | 5(1.4) | 369(100.0) |
| 전체 | 3(0.4) | 233(33.9) | 40(5.8) | 301(43.8) | 79(11.5) | 19(2.8) | 12(1.7) | 687(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08.721$, $p=.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2) 지원대학 선택시 우선적 고려 사항

지방고교생의 지원대학 선택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취업 및 장래성(28.7%)”, “합격가능성(25.4%)”, “적성과 학과특성(19.1%)”, “대학의 명성(11.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응답학생의 대다수는 적성과 학과 특성 보다는 취업 및 장래성, 합격가능성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수능등급별로 살펴보면 중상

위권 1등급~4등급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취업, 장래성”, “합격 가능성”, “적성, 학과특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30.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지원대학 선택시 고려사항(수능등급별)

| 수능 등급 | 합격 가능성 | 대학의 명성 | 지리적 근접성 | 취업 또는 장래성 | 경제적 사정 | 적성과 학과 특성 | 교육 환경 | 대학 소재지 특성 | 기타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35 (23.3) | 24 (16.0) | 2 (1.3) | 46 (30.7) | 4 (2.7) | 30 (20.0) | 7 (4.7) | 1 (0.7) | - | 1 (0.7) | 150 (100.0) |
| 2등급 | 33 (20.4) | 28 (17.3) | 2 (1.2) | 54 (33.3) | 8 (4.9) | 28 (17.3) | 5 (3.1) | 1 (0.6) | - | 3 (1.9) | 162 (100.0) |
| 3등급 | 76 (26.0) | 32 (11.0) | 10 (3.4) | 84 (28.8) | 19 (6.5) | 55 (18.8) | 9 (3.1) | 3 (1.0) | 1 (0.3) | 3 (1.0) | 292 (100.0) |
| 4등급 | 49 (21.9) | 20 (8.9) | 5 (2.2) | 73 (32.6) | 18 (8.0) | 44 (19.6) | 9 (4.0) | 3 (1.3) | 1 (0.4) | 2 (0.9) | 224 (100.0) |
| 5등급 이하 | 109 (30.6) | 23 (6.5) | 29 (8.1) | 94 (26.4) | 26 (7.3) | 68 (19.1) | 4 (1.1) | 1 (0.3) | 1 (0.3) | 1 (0.3) | 356 (100.0) |
| 무응답 | 47 (24.7) | 30 (15.8) | 13 (6.8) | 43 (22.6) | 10 (5.3) | 38 (20.0) | 5 (2.6) | 2 (1.1) | - | 2 (1.1) | 190 (100.0) |
| 전체 | 349 (25.4) | 157 (11.4) | 61 (4.4) | 394 (28.7) | 85 (6.2) | 263 (19.1) | 39 (2.8) | 11 (0.8) | 3 (0.2) | 12 (0.9) | 1,374 (100.0) |

주: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93.064$, $p=.048$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결과는 수능성적이 낮아 대학진학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대학에 합격하고 보자는 심리가 큰 결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등급의 학생들은 대학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보다는 대학 졸업 후의 취업가능성과 장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환경(2.8%)이나 지리적 접근성(4.4%), 등록금 등 경제적 사정(6.2%)은 상대적으로 지원대학 선택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녀의 감소로 과거와는 달리 지원 대학 선택시 등록금과 외지진학에 따른 사교육비는 부차적임을 알 수 있다.

3) 수도권 대학 진학 이유

(1) 학교별

응답학생 중 수도권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전체의 41.0%에 달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 또는 장래성(31.3%)”, “대학의 지명도(25.3%)”, “다양한 사회문화적 혜택의 향유(23.3%)”, “우수한 교육환경(10.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대학의 선택이유가 교육환경이 우수해서라기보다는 “취업 또는 장래성”, “대학의 지명도”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고교졸업생들이 학문적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취업난 등 지방의 고급일자리 부족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표 3-11>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학교별)

| 구분 | 수도권 대학 진학 이유 | | | | | | 무응답 | 계 |
|------|---------------|---------------|--------------|---------------|-------------|------------|-------------|----------------|
| | 대학의 지명도 | 취업 또는 장래성 | 우수한 교육환경 | 다양한 사회문화 혜택 | 지방에 남기 싫어서 | 기타 | | |
| 청주고 | 19 (26.4) | 20 (27.8) | 6 (8.3) | 20 (27.8) | 7 (9.7) | - | - | 72 (100.0) |
| 광주일고 | 32 (28.1) | 34 (29.8) | 11 (9.6) | 28 (24.6) | 8 (7.0) | 1 (0.9) | - | 114 (100.0) |
| 경북고 | 26 (24.5) | 42 (39.6) | 13 (12.3) | 12 (11.3) | 9 (8.5) | 1 (0.9) | 3 (2.8) | 106 (100.0) |
| 강릉고 | 66 (24.1) | 81 (29.6) | 29 (10.6) | 72 (26.3) | 16 (5.8) | 2 (0.7) | 8 (2.9) | 274 (100.0) |
| 전체 | 143 (25.3) | 177 (31.3) | 59 (10.4) | 132 (23.3) | 40 (7.1) | 4 (0.7) | 11 (1.9) | 566 (100.0) |

주 : 복수 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20.157$, $p=.324$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이를 지역(학교)별로 보면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중소도시인 청주와 강릉의 경우는 서울의 “다양한 사회 문화혜택”이 “대학의 지명도”등 보다도 수도권 선호이유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인 대구의 경우는 “다양한 사회 문화혜택”이 “우수한 교육환경”보다도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도시 학생의 경우 사회 문화시설과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수도권 대학진학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2) 수능등급별

수능등급별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1~3등급의 상위권 학생들은 “취업, 장래성”, “대학의 지명도”, “사회문화적 혜택”의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4등급 이하의 중하위권 학생들은 “사회문화적 혜택”, “취업, 장래성”, “대학의 지명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12>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수능등급별)

| 수능 등급 | 대학의 지명도 | 취업 또는 장래성 | 우수한 교육환경 | 다양한 사회문화 혜택 | 지방에 남기 싫어서 | 기타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27 (25.0) | 40 (37.0) | 14 (13.0) | 19 (17.6) | 6 (5.6) | - | 2 (1.9) | 108 (100.0) |
| 2등급 | 34 (28.3) | 40 (33.3) | 10 (8.3) | 29 (24.2) | 5 (4.2) | - | 2 (1.7) | 120 (100.0) |
| 3등급 | 32 (24.6) | 37 (28.5) | 10 (7.7) | 33 (25.4) | 15 (11.5) | 1 (0.8) | 2 (1.5) | 130 (100.0) |
| 4등급 | 12 (16.7) | 20 (27.8) | 11 (15.3) | 24 (33.3) | 3 (4.2) | 1 (1.4) | 1 (1.4) | 72 (100.0) |
| 5등급 이하 | 13 (25.0) | 14 (26.9) | 6 (11.5) | 14 (26.9) | 3 (5.8) | - | 2 (3.8) | 52 (100.0) |
| 무응답 | 25 (29.8) | 26 (31.0) | 8 (9.5) | 13 (15.5) | 8 (9.5) | 2 (2.4) | 2 (2.4) | 84 (100.0) |
| 합계 | 143 (25.3) | 177 (31.3) | 59 (10.4) | 132 (23.3) | 40 (7.1) | 4 (0.7) | 11 (1.9) | 566 (100.0) |

주: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35.537$, $p=.749$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결과는 상위 등급학생은 학업 성취에 관심이 큰 반면 중하위 등급 학생은 학업보다는 수도권 사회·문화적 매력에 더 심취하기 때문에 분석되며 수도권의 각종 사회 문화적 혜택이 수도권 진학수요 집중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지방대학 진학 이유

응답학생 중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전체의 59.0%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방 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29.1%)”, “지리적 근접성(26.3%)”, “경제적 이점(21.1%)”, “취업가능성(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방 대학이 교육 환경이 우수하거나 취업가능성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만한 성적이 되지 않거나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인 이유 등 소극적 차원에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수능등급별)

| 수능 등급 | 지리적 근접성 | 성적 | 경제적 이점 | 취업이 잘되는 학과가 있어서 | 장래성 | 대학의 평판 | 교육 시설과 교수진 | 기타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7 (16.7) | 5 (11.9) | 7 (16.7) | 10 (23.8) | 9 (21.4) | 2 (4.8) | 2 (4.8) | - | - | 42 (100.0) |
| 2등급 | 5 (11.9) | 8 (19.0) | 9 (21.4) | 8 (19.0) | 8 (19.0) | - | 1 (2.4) | 1 (2.4) | 2 (4.8) | 42 (100.0) |
| 3등급 | 37 (22.3) | 37 (22.3) | 44 (26.5) | 23 (13.9) | 14 (8.4) | 5 (3.0) | 1 (0.6) | 3 (1.8) | 2 (1.2) | 166 (100.0) |
| 4등급 | 36 (23.7) | 41 (27.0) | 35 (23.0) | 14 (9.2) | 12 (7.9) | 8 (5.3) | 2 (1.3) | 2 (1.3) | 2 (1.3) | 152 (100.0) |
| 5등급 이하 | 95 (31.3) | 108 (35.5) | 57 (18.8) | 7 (2.3) | 25 (8.2) | 9 (3.0) | 2 (0.7) | 1 (0.3) | - | 304 (100.0) |
| 무응답 | 33 (31.1) | 37 (34.9) | 19 (17.9) | 7 (6.6) | 5 (4.7) | 2 (1.9) | 3 (2.8) | - | - | 106 (100.0) |
| 합계 | 213 (26.2) | 236 (29.1) | 171 (21.1) | 69 (8.5) | 73 (9.0) | 26 (3.2) | 11 (1.4) | 7 (0.9) | 6 (0.7) | 812 (100.0) |

주: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18.147$, $p=0.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수능등급에 따른 지방대학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각 등급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1등급 학생들은 “취업이 잘되는 학과가 있어서”(23.8%), “장래발전성”(21.4%)의 순이고, 2등급 학생들은 “경제적 이점”(21.4%), “취업이 잘되는 학과가 있어서”, “장래발전성”, “성적(각 19.0%)”의 순이며, 4등급이하 중하위권 학생들은 “성적”,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이점”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 의대, 한의대, 약학계열 등 취업이 잘되는 과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굳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중하위권 학생들은 성적이나 경제적 이점 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지방대학의 지역연계 실태 및
지역발전효과 분석

이장은 제3장의 우리나라 대학의 공간적 수급변화와 지방고교생의 진학행태 분석에 이어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지역연계 실태와 위기원인 및 지역발전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스템모형을 통해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및 영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지방대학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난 뒤 지방대학의 침체와 위기 원인을 내·외생적인 요인과 지방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다. 또한 지방대학의 지역발전효과가 어떤 부문에서 크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한다.

1. 시스템 모형을 통한 지방대학의 실태분석

앞의 제2장에서 보았듯이 지방대학과 지역발전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21세기 지방의 시대, 지식기반경제의 시대를 맞아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은 인적자원(입학생, 교수), 시설, 재원 등 투입요소(input)의 양과 질이 취약하고 지방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기능과 지방대학의 육성 정책 등 과정(process)이 미흡하여 지방대학의 산출물(output)인 졸업생과 연구 성과물의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지방학생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지역발전에 지방대학이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대학의 침체가 가속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침체와 위기실태를 이와 같은 체계분석(system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투입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대학의 투입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학생과 교수, 시설, 재원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양적·질적 상태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과 지역발전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투입요소를 기존자료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학생

① 입학정원의 미충원 : 양적 문제

지방대학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최근 학령인구감소와 대학급증 등으로 입학정원의 양적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2001~2003년)간 4년제 대학의 모집인원 대비 미충원율을 보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에서 9.3%로 크게 악화되었다. 그리고 2003년 현재 수도권 대학의 미충원율은 1.23%(서울 0.7%)에 불과하나,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은 13.2%로 수도권 대학에 비하여 10.7배나 높게 나타나고, 우리나라 전체 미충원 인원(35,682명)의 95.7%(34,163명)를 지방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표 4-1> 전국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 대비 미충원 현황

| 구분 | 지역 | 01학년도 | | | 02학년도 | | | 03학년도 | | |
|-------------|-----|---------|-------|------|---------|--------|------|---------|--------|-------|
| | | 모집인원 | 미충원 | 비율 | 모집인원 | 미충원 | 비율 | 모집인원 | 미충원 | 비율 |
| 국 공 립 | 수도권 | 13,582 | 230 | 1.69 | 13,088 | 506 | 3.87 | 13,396 | 412 | 3.08 |
| | 지방 | 73,240 | 748 | 1.02 | 71,483 | 3,001 | 4.20 | 76,474 | 3,529 | 4.61 |
| | 소계 | 86,822 | 978 | 1.13 | 84,571 | 3,507 | 4.15 | 89,870 | 3,941 | 4.39 |
| 사 립 | 수도권 | 105,202 | 451 | 0.43 | 111,556 | 1,389 | 1.25 | 109,536 | 1,106 | 1.01 |
| | 지방 | 168,977 | 4,286 | 2.57 | 169,453 | 15,075 | 8.90 | 183,364 | 30,634 | 16.71 |
| | 소계 | 272,179 | 4,737 | 1.74 | 281,009 | 16,464 | 5.86 | 292,900 | 31,740 | 10.84 |
| 합 계 | 수도권 | 118,784 | 681 | 0.57 | 124,644 | 1,895 | 1.52 | 122,932 | 1,518 | 1.23 |
| | 지방 | 240,217 | 5,034 | 2.10 | 240,936 | 18,076 | 7.50 | 259,838 | 34,163 | 13.15 |
| | 소계 | 359,001 | 5,715 | 1.59 | 365,580 | 19,971 | 5.46 | 382,770 | 35,681 | 9.32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국감제출자료(실혼의원 홈페이지, 2003).

이를 대학별로 보면 지방대학의 학생 미충원 상태는 더욱 심각한데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356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중에서 67개 대학이 정원의 1/3도 못 채우고 있고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만도 26개교에 이르러 많은 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표 4-2> 참조).

<표 4-2> 대학 미충원을 분포도

(단위 : 학교수, %)

| 미충원을 분포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대학수 |
|---------|---------|---------|----------|-----------|----------|-----|
| 전문대학 | 1 (0.6) | 5 (3.2) | 10 (6.4) | 16 (20.2) | 11 (7.1) | 156 |
| 4년제 대학 | - | 4 (2.0) | 6 (3.0) | 3 (1.5) | 11 (5.5) | 199 |
| 계 | 1 (0.3) | 9 (2.5) | 16 (4.5) | 19 (5.3) | 22 (6.2) | 356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2003).

이를 다시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방대학일수록 미충원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1999년 미충원률은 전국적으로 5.0%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9.3%로 증가하였으며, 지방대학의 경우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예컨대 2002년 현재 서울소재 대학의 미충원율은 평균 0.8%인데 비해 전북 26.3%, 전남 25.4%, 광주 23.6%로 나타나 호남지역 대학의 미충원율은 매우 극심한 상태이다. 한편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의 미충원율은 10% 미만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제주(21.2%), 강원(15.8%), 경북(15.7%), 경남(14.0%) 등의 지역대학일수록 미충원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4-3> 시·도별 대학입학정원의 미충원율

| 구분 | 수도권 | | | | 지방대학 | | | | | | | | | | | | | | 합계 |
|------|-----|-----|-----|-----|------|------|-----|-----|------|------|-----|-----|------|------|------|------|------|------|-----|
| | 서울 | 인천 | 경기 | 소계 | 부산 | 광주 | 대전 | 울산 | 대구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 소계 | |
| 2002 | 0.8 | 2.5 | 1.9 | 1.2 | 2.7 | 23.6 | 6.8 | 1.7 | 10.5 | 15.8 | 6.4 | 9.1 | 25.4 | 26.3 | 14.0 | 15.7 | 21.2 | 13.2 | 9.3 |
| 1999 | 2.1 | 2.0 | 2.4 | - | 2.7 | 6.5 | 4.8 | 4.0 | 1.3 | 5.1 | 4.6 | 3.2 | 21.3 | 9.5 | 4.7 | 5.1 | 16.8 | - | 5.0 |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2003).

② 지방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 질적 문제

지방대학의 양적인 입학정원 확보 난과 함께 지방의 우수학생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질적인 면에서 지방대학의 발전 잠재력이 크게 쇠퇴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수능성적 상위 4%(1등급) 이내 우수학생의 진학행태를 보면 이들의 68.8%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대학 진학자 중 이들 우수학생의 비중은 2.2%로 수도권대학의 1/5수준에 불과하다(<표 4-4> 참조).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우수 입학자(5천여 명)의 대부분도 의과계열학과(의대, 치대, 한의대)나 지방 특수목적대(과학기술대, 포항공대) 입학생으로 나타나 실제 지방대학 일반학과에는 우수학생이 미미하여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4-4> 수능성적 4%(1등급)이내 학생의 수도권대학 입학자 수(2003년)

| 구 분 | 2003년 전체 대학입학자(A) | 수능성적 4%이내 입학자(B) | 비율 (B/A) | 수도권/지방 대비 |
|-----|-------------------|--------------------|----------|-----------|
| 수도권 | 104,818 | 10,933 | 10.4 | 68.8 |
| 지 방 | 230,343 | 4,954 | 2.2 | 31.2 |
| 합 계 | 335,161 | 15,887 (26,222) | 4.7 | 100 |

주: ()내는 수능성적 4%이내 학생 총 인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3).

과거에는 서울의 중위권 사립대학에 비해 지방 국립대학에 우수학생이 더 많이 진학했으나 현재는 대학의 교수진이나 교육환경보다 서울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을 선택·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지역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고교생의 73.2%, 학부모의 80.8%가 수도권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지방고교생의 진학행태조사에도 수능등급이 높을수록 수도권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능등급별 희망대학소재지는 수능1등급 72.0%, 2등급 66.7%, 3등급 34.2%의 순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선호하였다(<부표 4-6> 참조).

한편,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구 학생생활연구소) '신입생특성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지역은 서울출신 38.5%, 기타 수도권 지역 12.7%, 비수도권 출신 48.8%로 나타났으며, 서울대 진학자 중 읍면지역 출신자는 4.1%에 불과하여 대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 또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표 4-5>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지역별 분포

| 구 분 | 인원수(%) | 서울 | 지방 광역시 | 수도권 (인천, 수원, 의정부 등) | 도시지역 | 읍면이하 | 국외 |
|-----|-------------|------------|-----------|---------------------------|-----------|-----------|----------|
| 전 체 | 3331(100.0) | 1281(38.5) | 758(22.8) | 424(12.7) | 640(19.2) | 138 (4.1) | 90 (2.7) |
| 남 | 2033(100.0) | 730(35.9) | 499(24.5) | 239(11.8) | 441(21.7) | 84 (4.1) | 40 (2.0) |
| 녀 | 1274(100.0) | 539(42.3) | 256(20.1) | 182(14.3) | 194(15.2) | 53 (4.2) | 50 (3.9) |

자료 : 국회 국감제출자료 (설훈 의원 홈페이지, 2002) 재인용.

(2) 교수

① 교수 확보율의 미흡: 양적 문제

대학이 교육과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확보율은 2001년 기준 법정정원 대비 58.7% 수준이고(강병운 2003),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0.8명으로 OECD 평균 14.7명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는 2002년 현재 교수1인당 학생수가 41.3명으로 서울 소재 대학 동비율 34.9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격차는 지방대학 교육·연구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4-6>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

| 구 분 | OECD평균 | 한국 | 미국 |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 일본 | 스웨덴 |
|---------------|--------|-------|-------|-------|-------|------|-------|------|
| 교원 1인당 학생수 | 14.7명 | 40.8명 | 13.5명 | 17.6명 | 18.3명 | 9.8명 | 11.4명 | 9.3명 |

자료: 교육통계연보(2003), OECD 교육지표(2002).

<표 4-7> 수도권-지방 대학의 교수확보율 비교

| 구 분 | 대학수 | 대학생수 | 교원수 | 교수당학생수 |
|-----|-----|-----------|--------|--------|
| 서울 | 38 | 445,169 | 12,764 | 34.9 |
| 수도권 | 66 | 689,490 | 18,155 | 38.0 |
| 지방 | 103 | 1,119,049 | 27,117 | 41.3 |
| 계 | 169 | 1,808,539 | 45,272 | 39.9 |

주: 분교수는 전체 대학교수에 불포함.
 자료: 교육통계연보(2003).

② 우수 교원확보의 어려움 : 질적 문제

대학의 경쟁력은 우수학생과 함께 우수교수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역시 수도권을 선호하고, 사회적 평가 역시 수도권대학 교수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이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대학 교수는 연구비, 각종 위원회 등 여러 면에서 수도권 대학 교수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수업시수, 보수수준, 정주여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하여 지방대학은 우수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구비 수주액을 보면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 대학은 1개교 평균 147억 원인 반면 지방대학은 이의 1/3수준인 4천 8백만 원에 불과하고 학술 연구비 총액으로도 상위5개교가 모두 수도권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부표 1-4-1> 참조).

<표 4-8> 전임교원 연구비 수주 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조사대상 대학 수 | 2001년 | | 2002년 | |
|-----|-----------|-----------|--------|-----------|--------|
| | | 수주금액 | 1교당 평균 | 수주금액 | 1교당 평균 |
| 수도권 | 62 | 731,043 | 11,791 | 913,831 | 14,739 |
| 지방 | 118 | 497,763 | 4,218 | 572,167 | 4,848 |
| 합 계 | 180 | 1,228,806 | 6,827 | 1,485,998 | 8,256 |

주: 대학·산업대학 대상.
 자료: 이재정 의원 국정감사 자료(2003) 보완 작성.

또한 대학 부설연구소의 수와 이에 대한 연구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부설연구소의 비중은 수도권 63.5%로 지방보다 월등하고, 전임연구원의 수도 수도권 57.6%, 지방 42.4%로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훨씬 넘고 있으며 외부연구비 현황도 수도권이 66.5%로 지방의 약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비중 40:60에 비하여 수도권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며 여기에 민간 산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연구비를 더하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는 더욱 크다(<부표 1-4-2> 참조).

<표 4-9> 부설연구소 연구비 지원 현황(2002년)

(단위 : 개, 명, 천만 원)

| 구 분 | 부설연구소 비중 | 전임연구원 비중 | 외부연구비 | 대학교비중 |
|-----|-------------|---------------|----------------|-------------|
| 수도권 | 499(63.5%) | 1,198(57.6%) | 26,730(66.5%) | 66(40.5%) |
| 지방 | 287(36.5%) | 883(42.4%) | 13,447(33.5%) | 97(59.5%) |
| 계 | 786(100.0%) | 2,081(100.0%) | 40,177(100.0%) | 163(100.0%) |

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1-4-2> 참조.

자료: 이재정 의원 국정감사 자료(2003) 보완 작성.

한편 지방대학교수는 정부부처의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사회활동기회도 수도권 교수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밖에 책임수업시수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열악하여 우수교원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일례로 교육인적자원부내 각종위원회별 교수참여 현황을 보면 지방대 교수가 전체의 30.2%에 불과하여 지방대 교수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반증하고 있다(<표 4-10> 참조).

또한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 비중도 지방대학의 전임교원 비율이 전체의 63.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비율은 19.3%에 불과하여 수도권과 지방대학 교수간 격차가 극심함을 재확인 할 수 있다(<표 4-11> 참조).

<표 4-10> 교육인적자원부내 위원회별 교수참여 현황(2002년)

| 연번 | 위원회명 | 교수 현황 | 지방대 교수현황 | 연번 | 위원회명 | 교수 현황 | 지방대 교수현황 |
|-----|---|----------|-------------|-----|--------------|----------|-------------|
| 1 | 중앙과학교육심의회 | 3 | 1 | 12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 3 | 2 |
| 2 | 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 13 | 7 | 13 | 사내대학설치 심사위원회 | - | - |
| 3 |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 | 2 | 1 | 14 | 원격대학설치 심사위원회 | 5 | 1 |
| 4 | 교과용도서심의회 | - | - | 15 | 시도교육분쟁 조정위원회 | 2 | - |
| 5 | 교원자격검정위원회 | - | - | 16 | 직업교육훈련정책 심의회 | - | - |
| 6 | 국비유학자문위원회 | 8 | 2 | 17 | 중앙교원지위향상 심의회 | - | - |
| 7 | 사료수집보존협의회 | - | - | 18 | 학교보건위원회 | 2 | - |
| 8 | 기술대학설립심사 평가위원회 | - | - | 19 | 국사편찬위원회 | 11 | 1 |
| 9 | 교육과정심의회 | - | - | 20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1 | - |
| 10 | 중앙산업교육심의회 | - | - | 21 | 중앙영재교육 진흥위원회 | 3 | 1 |
| 11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 - | - | 22 | 인적자원개발회의 | - | - |
| 소 계 | | 26 | 11 | 소 계 | | 27 | 5 |
| 계 | 전체교수현황 : 53명, 지방대교수현황 : 16명 (전체대비 30.18%) | | | | | | |

자료: 이재정 의원 국정감사 자료(2003) 보완 작성.

<표 4-11> 전임교원 100대 기업 사외이사 활동 현황(2002년)

| 구 분 | 전임 교원수 | 사외이사 활동 교원수 | 비율(%) |
|-----|----------------|----------------|-------|
| 수도권 | 17,062 (36.2%) | 42 (80.7%) | 0.25 |
| 지 방 | 30,096 (63.8%) | 10 (19.3%) | 0.03 |
| 합 계 | 47,158 (100%) | 52 (100%) | 0.11 |

주: 대학·산업대학 대상

자료: 이재정 의원 국정감사 자료(2003) 보완 작성.

(3) 재정

① 취약한 정부의 지방 대학 재정지원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갖게 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4-12> 고등교육재정 규모 국제비교

| 구 분 | OECD 평 균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캐나다 | 독일 | 프랑스 |
|---------------------|-------------|--------|--------|-------|-------|--------|-------|-------|
|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 1.06 | 0.49a) | 1.07 | 0.83 | 0.43 | 1.53 | 0.97 | 1.01 |
| 1인당 연간교육비 (US\$) | 11,720 | 6,356 | 19,802 | 9,699 | 9,871 | 14,579 | 9,481 | 7,226 |

주 : 통계치는 1998년 기준이며 a)는 2003년 예산기준임.

자료: OECD(2001), Education at Glance; 이재정 의원 국정감사 자료(2003)에서 재인용.

위의 <표 4-1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GDP대비 대학교육재정규모는 0.49%로 OECD국가 평균 1.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03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총재정규모는 2조 7천억 원(약 21억 달러)인데 이는 미국 하버드대학 1개교의 수준(21억 달러)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교육 관련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8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총예산은 GDP대비 4%내외이고, 특히 그 중에서 대학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총예산의 12%내외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대학 교육재정은 대부분이 국립대학 운영비로 지원되고, 특히 사립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총운영비의 4.5% 정도에 불과하여 미국 16.1%, 영국 55.9%, 일본 12.1%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유현숙 2001).

<표 4-13>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규모와 추이

(단위: 억원, %)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교육인적자원부총예산 | 128,990 | 156,528 | 181,710 | 174,861 | 179,029 | 197,255 | 200,188 |
| (GDP대비,%) | (3.4%) | (3.7%) | (4.0%) | (3.9%) | (3.7%) | (3.8%) | - |
| 초중등교육예산 | 109,714 | 131,976 | 154,586 | 147,893 | 151,740 | 169,177 | 170,970 |
| (교육인적자원부예산대비,%) | (85.1%) | (84.3%) | (85.1%) | (84.6%) | (84.8%) | (85.8%) | (85.4%) |
| 대학교육예산 | - | - | 20,743 | 19,771 | 22,004 | 24,097 | 25,210 |
| (교육인적자원부예산대비,%) | - | - | (11.4%) | (11.3%) | (12.3%) | (12.2%) | (12.6%) |

주: 1. 모든 금액들은 일반예산뿐 아니라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들도 합산.

2. 대학교육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중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을 각각 취합한 후 그들을 더한 것으로 계산.

자료: 원자료는 기획예산처, 예산개요 각년도를 이용하여 계산, 유현숙(2001)에서 재인용.

② 수도권-지방 대학 재정지원의 격차

지방대학의 경우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전체의 대학재정 지원금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대학에 비하여 국고지원액도 크게 못 미쳐 더욱 대학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과 대도시권 지방대학 및 비대도시권 지방대학의 최근 5년간 국고지원 실적을 보면 우선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들은 대학당 평균 377억 원 ~ 424억 원을 지급받은 반면, 비대도시권 소재 지방국립대학들은 120억 원 ~ 152억 원을 지원받아 적게는 2.8배에서 많게는 3.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998-2001년간 비대도시권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의 국고보조금 격차가 4.7-6.4배에 이르렀으나 2002년도에는 2.2배로 크게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현재 사립대학 중 제일 많이 받는 비대도시권 지방대학의 국고보조금이 9억여 원에 불과하다.

<표 4-14> 설립별, 소재지별 대학당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배수)

| 구분 | 1998년 | | 1999년 | | 2000년 | | 2001년 | | 2002년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국립 | 수도권 | 42,378,148 | 2.9 | 40,776,012 | 3.4 | 37,730,312 | 3.0 | 40,569,175 | 2.8 | 41,932,588 | 2.8 |
| | 지방(시) | 2,179,565 | 1.4 | 2,135,508 | 1.7 | 2,213,989 | 1.7 | 2,621,218 | 1.7 | 2,689,255 | 1.7 |
| | 지방(군) | 14,742,546 | 1.0 | 12,040,361 | 1.0 | 12,463,779 | 1.0 | 14,239,964 | 1.0 | 15,178,534 | 1.0 |
| 사립 | 수도권 | 33,927 | 5.0 | 49,250 | 6.4 | 44,290 | 5.1 | 48,723 | 4.7 | 41,005 | 2.2 |
| | 지방(시) | 28,615 | 3.9 | 34,042 | 4.1 | 32,075 | 3.6 | 37,258 | 3.6 | 40,767 | 2.1 |
| | 지방(군) | 7,339 | 1.0 | 38,615 | 1.0 | 45,164 | 1.0 | 49,220 | 1.0 | 90,542 | 1.0 |

주: ① 금액은 1개교 평균을 말함.

② 비율은 지방(군) 소재 대학을 기준으로 잡아 산출한 것임.

③ 분교 설치 대학은 본교 소재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설훈 의원, 2003).

<표 4-15> 최근 5년간 누적 국고보조금 총액 상위 10개 사립대학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대학명 | 총액 | 비율 |
|------------|------|-----------|-------|
| 수도권 | 한양대 | 125,124 | 8.6 |
| 수도권 | 고려대 | 74,431 | 5.1 |
| 수도권 | 연세대 | 64,667 | 4.4 |
| 수도권 | 성균관대 | 46,832 | 3.2 |
| 수도권 | 경희대 | 41,616 | 2.9 |
| 수도권 | 인하대 | 37,329 | 2.6 |
| 수도권 | 이화여대 | 35,997 | 2.5 |
| 수도권 | 국민대 | 35,291 | 2.4 |
| 수도권 | 중앙대 | 32,921 | 2.3 |
| 지방(시) | 조선대 | 31,210 | 2.1 |
| 소계(10위 대학) | | 525,419 | 36.1 |
| 총액 | | 1,454,101 | 100.0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설훈 의원, 2003).

그리고 최근 5년간(1997~2003) 사립대학의 누적 국고보조금 총액 상위 10개 대학을 보면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위의 조선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대학(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인하대, 이화여대, 국민대, 중앙대, 조선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10개 대학에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총액의 36%인 5,254억 원을 지원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국고지원이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수도권-지방 대학 기부금 및 대학발전기금의 격차

대학재정은 국고보조금, 재학생수, 등록금 등과 함께 기부금 등 대학발전기금이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기업이나 독지가의 기부금에 의해 충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대학의 발전기금모금이 크지 않으며 특히 지방대학은 그 실적이 더욱 미미하다.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기부금 모금 실적을 보면 국고보조금 보다 그 편차가 더욱 크다. 2002년 1년간 수도권 대학당 평균 기부금액은 6,070백만 원으로 지방대학 1,522백만 원의 4배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대학 중에서도 학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기부금이 집중하여 대학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유발되고 수도권 대학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4-16>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대학발전기금 모금 실적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학교수 | 2001년 | | 2002년 | |
|-------|-----|---------|--------|---------|--------|
| | | 기부금액 | 1교당 평균 | 기부금액 | 1교당 평균 |
| 수도권대학 | 62 | 313,425 | 5,055 | 376,354 | 6,070 |
| 지방대학 | 118 | 115,947 | 983 | 179,559 | 1,522 |
| 계 | 180 | 429,372 | 2,386 | 555,913 | 3,088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3).

기부금 모집 상위 10개 사립대학의 기부금 총액은 1조7,585억 원으로 전체 3조 5,193억 원의 절반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대학은 포항공대, 울산대, 영남대 등 3개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수도권 대학들이다(<표 4-17> 참조).

<표 4-17> 최근 5년간 누적 기부금 상위 10개 대학

(단위 : 천원, %)

| 국립 | | | | 사립 | | | |
|-----------|-------|-------------|-------|-----------|------|---------------|-------|
| 구분 | 대학명 | 총액 | 비율 | 구분 | 대학명 | 총액 | 비율 |
| 수도권 | 서울대 | 63,882,207 | 33.8 | 수도권 | 연세대 | 351,888,957 | 10.0 |
| 지방(시) | 강원대 | 27,923,759 | 14.8 | 수도권 | 고려대 | 296,009,608 | 8.4 |
| 지방(시) | 부산대 | 20,475,359 | 10.8 | 지방(시) | 포항공대 | 286,605,203 | 8.1 |
| 지방(시) | 한국해양대 | 13,979,633 | 7.4 | 수도권 | 한양대 | 172,431,948 | 4.9 |
| 지방(시) | 전북대 | 10,550,259 | 5.6 | 수도권 | 성균관대 | 151,388,281 | 4.3 |
| 지방(시) | 전남대 | 8,157,352 | 4.3 | 지방(시) | 울산대 | 115,538,939 | 3.3 |
| 지방(시) | 충남대 | 6,994,778 | 3.7 | 수도권 | 인하대 | 109,235,799 | 3.1 |
| 지방(시) | 제주대 | 6,132,483 | 3.2 | 수도권 | 경희대 | 98,660,698 | 2.8 |
| 지방(시) | 경북대 | 5,612,228 | 3.0 | 지방(시) | 영남대 | 95,055,812 | 2.7 |
| 지방(시) | 여수대 | 2,715,433 | 1.4 | 수도권 | 이화여대 | 81,729,038 | 2.3 |
| 소계(10위대학) | | 166,423,491 | 88.0 | 소계(10위대학) | | 1,758,544,283 | 50.0 |
| 총액 | | 189,180,660 | 100.0 | 총액 | | 3,519,258,576 | 100.0 |

자료: 이재정 의원 국정감사 자료(2003) 보완 작성.

이와 같은 국고 지원비와 대학 기부금의 수도권 편중은 대학 정원미달과 재학생 중도이탈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 결과 교육, 연구시설의 불비와 교육의 질적 낙후를 초래하여 지방대학의 침체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주요 재원의 수입이 특정 대학과 특정지역에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학간 균형 발전이나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기부자들이 기부 대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부금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지역간·대학간 형평을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지방대학 재학생의 중도이탈로 인한 재정악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69%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휴학, 자퇴 등 재학생수 감소로 재정악화가 가중되어 대학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대학운영에 있어서 등록금 의존율이 거의 절대적이다. 2000년 현재 편재정원 대비 지방대학의 재학생 비율이 87.5%로 수도권대학의 100.1%에 비해 낮고 11개 대학은 50%에도 이르지 못해 일부 지방사립대학은 도산 직전에 처해 있다. 2003년 현재 지방대학의 미등록·미복학자 및 자퇴생 등 자발적 동원의 의한 제적생은 5만여 명이 넘고 있으며 전문대 15개교, 4년제 대학 12개교는 편재정원 대비 재학생수가 50%에도 이르지 못해 거의 도산 직전에 처해 있다.

<표 4-18> 연도별 지방대생 제적자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 재학생수 | 자발적 제적생 | | | 기타 | 계 |
|-------|-----------|-----------|--------|--------|-------|---------------|
| | | 미등록 및 미복학 | 자퇴 | 소계 | | |
| 2000년 | 1,012,270 | 19,066 | 19,204 | 38,173 | 2,685 | 41,038 (4.1%) |
| 2001년 | 1,059,963 | 20,395 | 22,283 | 42,678 | 3,579 | 46,257 (4.4%) |
| 2002년 | 1,093,214 | 22,586 | 26,248 | 48,734 | 3,997 | 52,734 (4.8%)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설훈 의원, 2003).

이와 같이 지방대학의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은 지방대학 재학생의 재수현상과 함께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비중이 전체의 40~60%로 높기 때문이다. 대학교육협회의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 편입생 중 지방대학 출신자는 매년 5~6천 명 정도로 전체의 40~60%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2003년의 경우 지방대학의 입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손실액은 전문대학이 약 2,000억 원, 4년제 대학이 약 2,100억 원으로 총 4,000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 편입 등 지방대학 재학생의 중도이탈자까지 포함하면 지방대학의 재정 결손액은 막대한 규모로 지방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이현청 2003).

<표 4-19> 편재정원대비 재학생 비율 분포

| 총원률 | 전문대학 | | | | 대학교 | | | |
|----------|------|----|-----|----|-----|----|-----|----|
| | 국공립 | | 사립 | | 국공립 | | 사립 | |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10~20% | - | - | - | - | - | - | - | 1 |
| 20~30% | - | - | - | 2 | - | - | - | 3 |
| 30~40% | - | - | - | 2 | - | - | - | 3 |
| 40~50% | - | - | - | 11 | - | - | - | 5 |
| 50~60% | - | 2 | - | 9 | - | - | - | 5 |
| 60~70% | - | - | - | 12 | - | - | - | 5 |
| 70~80% | - | 2 | - | 11 | - | 1 | - | 6 |
| 80~90% | - | 1 | - | 9 | - | - | 2 | 11 |
| 90~100% | 2 | 2 | 3 | 12 | 1 | 3 | 3 | 22 |
| 100~110% | - | 3 | 13 | 11 | 3 | 18 | 50 | 27 |
| 110~120% | - | 1 | 13 | 5 | - | - | 5 | 2 |
| 120% ↑ | 2 | - | 19 | 8 | 1 | - | 1 | 1 |
| 소계 | 4 | 11 | 48 | 92 | 5 | 22 | 61 | 91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3).

⑤ 수도권 편입학으로 인한 지방대학 결원 발생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자를 보면 2003년의 경우 전체 인원의 39.2%가 지방대학 출신자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0> 편입학자의 출신대학 소재지별 현황(2003)

(단위: 명, %)

| 구 분 | 모집인원 | 수도권대학 출신자 | 지방대학 출신자 |
|-----|------------------|-------------------|-------------------|
| 수도권 | 14,514 (100%) | 8,822 (60.8%) | 5,692 (39.2%) |
| 지 방 | 26,702 (100%) | 2,590 (9.7%) | 24,112 (90.3%) |
| 전 체 | 41,216 (100%) | 11,412 (27.7%) | 29,804 (72.3%) |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3).

편입학자의 출신대학 소재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자들은 지방대학 출신자가 5,692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반해, 지방대학으로의 편입학자들은 90.3%가 지방대학 출신자로 편입 경향도 지방대학생들이 수도권의 대학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체 편입생의 분포는 수도권 대학 출신자가 27.7%, 지방대학 출신자가 72.3%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대학 출신의 학생들이 편입을 더욱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시설

대학교육과 연구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대학의 시설확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대학 재정의 미흡 등으로 외국 대학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연구기자재와 대학장서수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4-21>은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의 연구기자재 보유현황을 비교한 결과인데 미국대학의 경우 대학당 연구기자재 평균금액은 196억 원으로 우리나라 35억 원의 5배 이상이고, 대학당 실험실습 장비종류도 194종으로 우리나라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의 낙후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21> 한국과 미국 대학의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 구 분 | 대학수 | 장비종수 | 보유금액 | 대학당 평균 장비종수 | 대학당 평균금액 | 장비당 평균금액 |
|----------|-----|--------|------------|-------------|----------|----------|
| 한국(1999) | 181 | 9,803 | 6,285억원 | 54 | 35억원 | 6,400만원 |
| 미국(1993) | 318 | 61,684 | 6조 2,550억원 | 194 | 196억원 | 1억원 |

자료 : NSF(1993), 환율적용 : 1\$ = 1,000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2000)

한편 2003년 현재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시설현황은 다음의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대학 학생1인당 교육시설 면적은 9.4㎡로 수도권대학 8.7㎡ 보다 다소 양호하나, 연구시설 면적은 0.7㎡로 수도권 대학 1.0㎡보다 열악하다. 또한 학생1인당 장서수도 지방대학(44권)이 수도권 대학(54권)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수도권-지방 대학의 시설비교

(단위 : 개, 천명, 천㎡, 천권)

| 구 분 | 서울 | 수도권 | 지방 | 계 |
|-----------------|--------|---------|---------|---------|
| 대학수(A) | 38 | 66 | 103 | 169 |
| 학생수(B) | 445 | 689 | 1,119 | 1,809 |
| 학교부지 면적(C) | 46,764 | 272,040 | 221,193 | 493,233 |
| 학교교육기본시설 면적(D) | 3,298 | 6,024 | 10,487 | 16,511 |
| 연구시설 면적(E) | 596 | 695 | 788 | 1,483 |
| 도서관 장서수(F) | 25,301 | 37,359 | 49,676 | 87,035 |
| 학생당 부지면적(C/B) | 105 | 395 | 198 | 273 |
| 학생당 시설면적(D/B) | 7.4 | 8.7 | 9.4 | 9.1 |
| 학생당 연구시설면적(E/B) | 1.3 | 1.0 | 0.7 | 0.8 |
| 학생당 장서수(F/B) | 59 | 54 | 44 | 48 |

주: ① 분교수는 전체 대학교수에 불포함.

② 도서관 장서수 자료는 2002.1-2002.12에 해당하며, 동양서와 서양서를 합한 것임.

자료: 교육통계연보(2003).

2) 구조 및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1) 교육활동

① 학과의 난립과 특성화 미흡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의 대학당 평균 학과수는 56개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이 백화점식으로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대학의 대학당 평균 학과수는 61개로 수도권대학 49개(서울소재대학 55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당 모집정원도 평균 34인에 불과하여 학과가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과의 백화점식 난립은 대학특성화 미흡으로 나타나고 교육의 질 저하와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모집단위의 광역화와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강력 유도하고 있는 학부제의 경우도 1

학년 모집 때 명목상으로는 운영될 뿐, 이를 전공운영의 특성화로 유도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경우, 전공학과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이나 수요에 부응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적어, 졸업 후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으로써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표 4-23> 수도권-지방대학의 학과개설 및 입학정원 비교

| 구분 | 대학수(A) | 학과수(B) | 입학정원수 (C) | 학교당 학과수 (B/A) | 학교당 입학정원 (C/A) | 학과당 입학정원 (C/B) |
|-----|--------|--------|-----------|------------------|-------------------|-------------------|
| 서울 | 38 | 2,098 | 73,260 | 55 | 1,928 | 34.9 |
| 수도권 | 66 | 3,251 | 114,926 | 49 | 1,741 | 35.4 |
| 지방 | 103 | 6,291 | 212,114 | 61 | 2,059 | 33.7 |
| 계 | 169 | 9,542 | 327,040 | 56 | 1,935 | 34.3 |

주: 분교수는 전체 대학교수에 불포함.

자료: 교육통계연보(2003).

② 사회적 요구와 괴리된 대학의 인력양성 구조(공급자위주의 교육체계)

우리나라 대학의 인력양성구조는 사회수요와 전공학과가 불일치하여 특정분야는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데 반하여 대부분의 학과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2002년 12월 전경련이 기업체 임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산업계 수요에 부응한 학제개편을 들고 있다(이현청 2003).

그동안 대학의 학과 편제는 공급자 위주의 사고로 인력을 양성한 결과 산업계 수요와 괴리되어 IT, BT 등 핵심기술분야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반면, 인문·예술·농학·기초과학 등은 공급과잉으로 청년 실업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의 <표 4-24>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공분야별 비율을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한 것으로 소위 「취업난 속의 구인난」의 실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학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표 4-24> 4년제 대학의 전공분야별 학생 비율의 국제비교(2002)

| 구분 | 교육 | 인문 예술 | 사회 과학, 경영, 법학 | 서비스 계열 | 공학, 제조 및 건축 | 농학 | 보건 및 복지 | 생명 과학 | 자연 과학 | 수학 및 통계학 | 컴퓨터 과학 | 기타 |
|---------|------|-------|---------------|--------|-------------|-----|---------|-------|-------|----------|--------|-----|
| 한국 | 5.6 | 20.9 | 22.8 | 2.5 | 27.4 | 3.2 | 6.6 | 2.1 | 4.4 | 2.1 | 2.4 | - |
| OECD 평균 | 13.2 | 12.6 | 33.5 | 2.5 | 13.2 | 2.3 | 11.5 | 3.1 | 3.0 | 1.1 | 3.1 | 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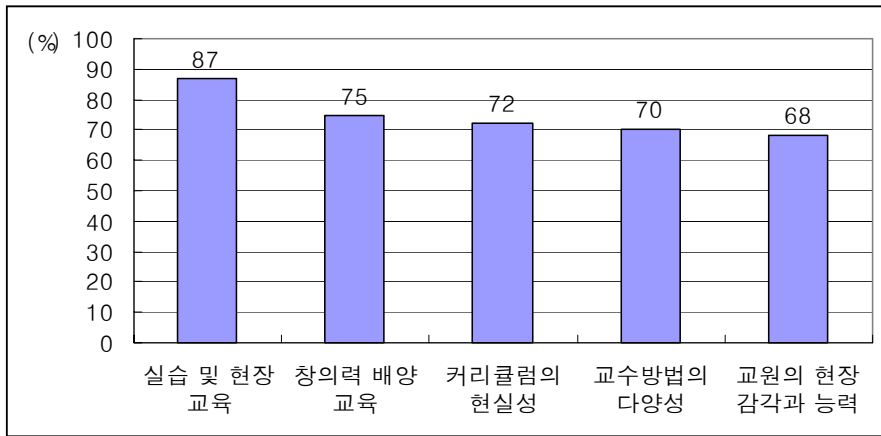
자료 : OECD(2002), OECD교육지표 2002, 이현청(2003)에서 재인용

③ 교육과정의 현장성 부족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교육문제 중 하나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불일치하여(skill mismatch) 취업난 속의 구인난, 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⁴⁾.

그동안 대학은 산업계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보다는 이론 위주의 공급자 중심형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대학 졸업자에 대한 산업계의 추가 인력개발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산업계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1>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불만족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참여정부의 新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

4) 경북대가 최근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주)만도와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만도트랙’을 시행하는 것은 연구비 지원과 공동프로젝트 연구 등 기존 산학프로그램의 틀을 뛰어넘어 기업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대학이 교육하는 맞춤형 인재육성의 최초 사례임.

앞의 <그림 4-1>은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불만족을 나타낸 것으로 대학에 대한 기업의 불만족도는 실습 및 현장교육미흡(87%), 창의력 배양교육 부족(75%), 커리큘럼의 현실성 부족(7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만은 기업이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원인이 되어 대학졸업생의 취업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대기업 경력직 채용비중이 1997년 35%에서 2002년 74%로 급증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연계형 맞춤형교육이 필요하며, 현장실습학점제 및 인턴십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2) 연구 활동 : 산학 협동

① 지방대학의 연구여건 열악에 따른 연구활동 침체

지방대학은 연구기자재 부족, 연구 보조인력 미비, 연구비의 부족 등으로 연구활동이 침체되어 있다. 일례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학술 연구비 지원실적을 보면,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1인당 연구비가 수도권 대학은 524만원인 반면 지방대학은 250만원으로 2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표 4-25> 수도권-지방대학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비교

(연구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 1999 | | 2000 | | 2001 | | 2002 | |
|-------------|--------|--------|--------|--------|--------|--------|--------|--------|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교수수(A) | 17,204 | 24,739 | 17,473 | 25,836 | 17,769 | 26,408 | 18,155 | 27,117 |
| 과제수(B) | 1,220 | 1,218 | 1,172 | 1,172 | 1,499 | 1,650 | 1,796 | 1,626 |
| 연구비(C) | 25,960 | 24,332 | 31,150 | 28,740 | 69,562 | 47,350 | 95,195 | 67,811 |
| 과제당연구비(C/B) | 21 | 20 | 27 | 25 | 46 | 29 | 53 | 42 |
| 교수당연구비(C/A) | 1.50 | 0.98 | 1.78 | 1.11 | 3.91 | 1.79 | 5.24 | 2.50 |
| 교수당과제수(B/A) | 0.07 | 0.04 | 0.06 | 0.04 | 0.08 | 0.06 | 0.09 | 0.05 |

주: 연구비는 순수하게 연구과제에만 지원한 금액이며, 간접연구비용은 제외함.

자료: 교육통계연보(2000~2003).

또한 2002년 학술 연구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수연구자 지원 사업, 기초학문지원, 대학원 연구력 강화 등에서 수도권(국공립+사립)대학에 56.8%, 사립대학 중에서는 수도권에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표 4-26>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지원(2002)

(단위: 백만원)

| 구분 | 학술연구조성사업 | | | | | | | |
|-------|----------|-------------------|-------------------|-------------------|-------------------|------------------|------------------|------------------|
| | 소계 | 우수 연구자 지원 | 공동연구 과제지원 | 기초학문 지원 | 보호학문 지원 | 지방대학 육성과제 | 대학원 연구력 강화 | |
| 전체 대학 | 수도권 | 98,533 (56.8%) | 13,823 (55.7%) | 18,186 (50.2%) | 55,227 (59.3%) | 2,170 (43.8%) | 121 (3.6%) | 9,006 (82.2%) |
| | 지방 | 74,900 (43.%) | 11,006 (44.3%) | 18,041 (49.8%) | 37,928 (40.7%) | 2,786 (56.2%) | 3,188 (96.4%) | 1,952 (17.8%) |
| 사립 대학 | 수도권 | 83,287 (71.7%) | 11,552 (70.2%) | 16,575 (71.9%) | 44,395 (73.1%) | 1,638 (47.9%) | 121 (8.0%) | 9,006 (82.2%) |
| | 지방 | 32,839 (28.3%) | 4,913 (29.8%) | 6,491 (28.1%) | 16,312 (26.9%) | 1,783 (52.1%) | 1,388 (92.0%) | 1,952 (17.8%) |

자료 : 김진영 외(2003), 지방대학의 경영진단과 재정지원 방안.

한편 2002년 우리나라의 총 R&D 예산 가운데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17.5%인 7,920억 원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지방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는 3,807억 원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표 4-27> 정부 R&D 예산의 분포

| 정부 R&D 예산 | 대학 지원예산 | 비 중 |
|-----------|----------------------|-------------|
| 45,276억원 | 전체 7,920억원 (17.5%) | 17.5 (100%) |
| | 수도권대학 (123개) 4,113억원 | 9.1 (52%) |
| | 지방 대학 (234개) 3,807억원 | 8.4 (48%) |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1),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② 산학협동 미흡

산학협동은 산업체와 교육 및 연구기관이 상호관심을 가진 문제나 쟁점을 협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서 산학협동의 유형으로는 연구개발, 기술 이전, 장비의 공동이용, 인력의 교류, 산업체 인력의 훈련, 학생들의 산업체 실습 그리고 산업체의 학교배출인력의 흡수 등과 같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은 산학협력이 여러 가지 제약 여건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대학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아산시 소재 대학을 사례로 최근 3년간의 산학협동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42%만이 산학협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산시 지역내의 산학협력 경험은 더욱 낮은 11.3%에 불과하며, 경험의 내용도 대부분 졸업생 취업알선, 공동관심사 논의 등 초보적인 수준의 산학협력이다(윤주명 1996).

<표 4-28> 아산시 소재 대학의 산학협동의 방법별 경험

| 산학협동의 방법 | 경험 없음 | 경험있음 | | | | | |
|--------------------|----------|----------|---------|---------|----------|----------|----------|
| | | 기타 지역(A) | 아산시 (B) | 양지역 (C) | A+C | B+C | 계(A+B+C) |
| 연구용역 수주 | 21(40.4) | 26(50.5) | 3(5.8) | 2(3.8) | 28(54.3) | 5(9.6) | 31(50.6) |
| 기업과 공동연구개발 | 27(51.9) | 23(44.2) | - | 2(3.8) | 25(48.1) | 2(3.8) | 25(48.1) |
| 첨단기업 창업지원 | 41(78.8) | 8(15.4) | 3(5.8) | - | 8(15.4) | 3(5.8) | 11(21.2) |
| 특허의 대여 | 47(90.4) | 5(9.6) | - | - | 5(9.6) | 0(0.0) | 5(9.6) |
| 기술 및 경영자문 | 23(44.2) | 22(42.3) | 4(7.7) | 3(5.8) | 25(48.1) | 7(13.5) | 29(55.8) |
| 기업 관리자 및 기술 인력의 훈련 | 41(78.8) | 7(13.5) | 4(7.7) | - | 7(13.5) | 4(7.7) | 11(21.2) |
| 공동관심사의 논의 | 18(34.6) | 23(44.2) | 7(13.5) | 4(7.7) | 27(51.9) | 11(21.2) | 34(65.4) |
| 연구시설 공동이용 | 30(57.7) | 17(32.7) | 5(9.6) | - | 17(32.7) | 5(9.6) | 22(42.3) |
| 학생들의 인근기업체 실습 | 32(61.5) | 13(25.0) | 6(11.5) | 1(1.9) | 14(26.9) | 7(13.5) | 20(38.5) |
| 졸업생 취업알선 | 17(32.7) | 20(28.5) | 9(17.3) | 6(11.5) | 26(50.0) | 15(28.8) | 35(67.3) |
| 평균 | (57.1) | (31.6) | (7.9) | (3.6) | (35.1) | (11.3) | (42.0) |

주: 1. A는 기타지역만 경험이 있는 경우, B는 아산시에만 경험이 있는 경우, C는 양지역 모두에 경험이 있는 경우임.

2. A+B+C는 산학협동의 경험이 있는 경우, A+C는 기타지역에서 산학협동의 경험이 있는 경우, B+C는 아산시지역에서 산학협동의 경험이 있는 경우임.

자료: 윤주명(1996).

지방대학의 산학협동 제약요인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이 산학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하부구조가 미흡하다. 즉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연구보조인력, 연구실험기자재, 교수의 시간적 여유, 학술정보지 구입지원, 행정절차 등의 간소화(전담기구)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대학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지방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지원 보조인력 부족이 산학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교수책임 수업시수가 10시간이 넘고(서울권 대학 6시간), 산학협력 실적이 교수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산학협력의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을 매개하고 산학협력에 따른 여러 부수업무를 처리할 전담기구가 없어 산학협력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학연계 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산학연계의 성과는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므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 산업체와 지방대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상호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계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방대학과 산업체의 매개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연구용역도 서울중심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지방에 산학연계를 할 만한 기업체가 거의 없고, 지방대학에도 산학연구 기반이 취약하여 제약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체가 수도권과 일부 공업단지에 밀집되어 있고 지방의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대학의 산학협동 연구역량이 미흡하여 연구결과의 상업화·산업화가 어려우므로 산학협력이 침체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으나 아직 실적은 미미하다. 2003년 9월에 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대학의 연구개발결과를 신속히 사업화하고, 학생에게 현장실습과 창업준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 회계와 별도의 독립법인격인 「산학협력단」 과 학교기업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대학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3) 산출 및 영향의 실태와 문제점

(1) 교육산출

① 낮은 지방대학 교육경쟁력

우리나라 지방대학교육은 앞에서 보았듯이 학생, 교수, 재원, 시설 등 투입요소(input)와 교육, 연구, 봉사 등 여러 활동과정(process)이 부실하여 그 산출물인 졸업생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외국대학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의 자료(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인구 2천만 이상 30개국 중 15위에 랭크되어 있고 고등교육 이수율은 3위이나,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경쟁력은 조사대상국 30개국 중 28위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9> IMD의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 부분에 대한 평가(2003년)

| 평가항목 | 순위 |
|---------------------------|-----|
| 교육체계가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한 정도 | 21위 |
|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한 정도 | 28위 |
| 총교육비 지출액(GNP 대비) | 21위 |
| 초등학교 - 교사비율(교사1인당 학생수) | 26위 |
| 중등학생 - 교사비율(교사1인당 학생수) | 24위 |
| 중고등학교 취학율 | 5위 |
| 고등교육 수학율(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 3위 |
| 대학교육의 경제적 경쟁력 지원 정도 | 28위 |

자료: <http://www.02.imd.ch/wcy>.

그리고 우리나라 전경련에서 우리나라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적자원부분의 경쟁력 수준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개발수준은 선진국의 46%수준이고 대학교육시스템은 40%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영어 구사능력은 27%, 기초학문 및 전문성은 33%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4-30> 참조).

<표 4-30> CEO가 바라본 우리나라의 인적자원부문 경쟁력

| 분야 | 항 목 | 최고 국가 | 2위 국가 | 3위 국가 | 한국의 수준(%) |
|----------|---------------|-------|-------|-------|-----------|
| 교육 시스템 | 전체 교육시스템 | 미국 | 독일 | 영국 | 52 |
| | 대학교육 시스템 | 미국 | 프랑스 | 독일 | 40 |
| | 커리큘럼의 효율성 | 미국 | 독일 | 핀란드 | 35 |
| | CEO 육성 교육기관 | 미국 | 스위스 | 영국 | 35 |
| 인력수급 시스템 | 인문계 인력 공급구조 | 미국 | 독일 | 영국 | 60 |
| | 이공계 인력 공급구조 | 독일 | 미국 | 프랑스 | 42 |
| | 여성인력 활용도 | 핀란드 | 미국 | 스웨덴 | 28 |
| | 숙련근로자 조달 용이성 | 독일 | 미국 | 일본 | 72 |
| 국민적 마인드 | 국민의 경제 마인드 | 미국 | 싱가폴 | 일본 | 73 |
| | 사회가치의 경쟁력 기여도 | 미국 | 싱가폴 | 독일 | 55 |
| | 성숙한 시민의식 | 싱가폴 | 독일 | 일본 | 48 |
| | 노동자의 노동윤리 | 일본 | 독일 | 싱가폴 | 42 |
| 인적자원 능력 | 영어 구사능력 | 싱가폴 | 네덜란드 | 독일 | 27 |
| | 제2외국어 구사능력 | 독일 | 네덜란드 | 싱가폴 | 20 |
| | 기초학문 및 전문성 | 미국 | 독일 | 프랑스 | 33 |
| | 두뇌유출입 정도 | 미국 | 일본 | 독일 | 42 |
| | 인적자원의 풍부성 | 중국 | 미국 | 독일 | 87 |
| 인적자원 총괄 | | 미국 | 독일 | 싱가폴 | 46 |

자료 : 전국경제연합회(2002), CEO가 본 한국의 국가경쟁력.

②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지방대학으로의 진학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지방 대학생의 취업률이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1965년 이후 대졸자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1960년대 중반에는 취업률이 4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해방 이후 60년대 초까지 대학교육이 급격히 팽창한 반면, 사회적 수요는 대졸자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부표 1-4-4> 참조).

따라서 대졸 고급인력의 초과공급과 그로 인한 실업률의 상승은 결국 정부에 의해 대학 증원이 억제되면서 1970년대에는 취업률이 70%대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대학의 인력공급 증가가 고도 경제성장기에 고등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와 상응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 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취업률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초에 도입된 졸업정원제와 그로 인한 대학 진학자의 급격한 팽창은 1980년대 중반이후 이들이 졸업하면서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인력규모가 일시에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들 신규 대졸자의 취업률은 70%대에서 50%대로 급락하였다.

급격한 공급확대에 따른 이러한 현상은 졸업정원제 세대의 배출이 지속된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대졸자의 취업률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최악의 취업난이 발생하였다. 1996년 63.3%, 1997년 61.8%이었던 취업률이 외환위기와 함께 1998년 50.5%, 1999년 51.3%로 급락했다가 2000년 56.0%, 2001년 54.3%, 2002년 59.0%, 2003년 56.9%로 미미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4-31>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단위 : %)

| 년 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수도권 대학 | 71.5 | 67.6 | 54.5 | 54.1 | 60.3 | 60.0 | 60.5 | 63.0 |
| 지방 대학 | 58.0 | 58.1 | 50.5 | 51.3 | 56.0 | 54.3 | 59.0 | 56.9 |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4-3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졸자의 취업률에 있어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03년 현재 서울 61.9%, 인천 65.9%, 경기 61.3% 등 수도권대학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광주 45.9%, 전남 52.0%를 비롯하여 전북 43.3%, 경북 56.5%, 대구 56.0% 등 지방대학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이들 대학졸업생의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다(<표 4-32> 참조).

<표 4-32> 지역별 취업률

| 지역 | 수도권 | | | 지방대학 | | | | | | | | | | | 전체 | | |
|---------|------|------|------|------|------|------|------|------|------|------|------|------|------|------|------|------|------|
|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광주 | 대전 | 울산 | 대구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 경북 | 제주 |
| 취업률 (%) | 61.9 | 65.9 | 61.3 | 62.6 | 45.9 | 61.7 | 59.3 | 56.0 | 57.1 | 69.5 | 58.1 | 52.0 | 43.3 | 60.4 | 56.5 | 57.1 | 59.2 |

자료: 교육통계연보(2003).

2003년 현재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56.9%로 수도권내 졸업자의 취업률 63.0%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100대 기업의 취업 현황을 보면 수도권대학은 9.9%인데 비해 지방대학은 4.8%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표 4-33> 참조). 또한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졸사원 입사자 중 지방대학 출신자는 삼성전자 22.1%, SK 15.9%, 대우상사(재직자) 15.6%에 불과하여 대기업으로 갈수록 더욱 지방대학생의 취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대학육성대책 위원회, 2000).

<표 4-33> 지역별 대학 졸업자의 100대기업 취업률 현황(2003. 2)

(단위 : 명)

| 구 분 | | 인문사회 계열 | 자연과학 계열 | 공학계열 | 예체능 계열 | 의학계열 | 계 |
|-----|--------|------------|------------|--------|-----------|-------|---------|
| 수도권 | 졸업자 | 37,968 | 11,518 | 24,902 | 9,336 | 1,993 | 85,717 |
| | 취업대상자 | 31,924 | 8,581 | 19,833 | 7,320 | 1,755 | 69,413 |
| | 취업자 | 2,677 | 686 | 3,042 | 421 | 39 | 6,865 |
| | 취업률(%) | 8.4 | 8.0 | 15.3 | 5.8 | 2.2 | 9.9 |
| 지방 | 졸업자 | 62,611 | 29,188 | 48,745 | 14,077 | 5,010 | 159,631 |
| | 취업대상자 | 57,076 | 24,912 | 42,607 | 11,815 | 4,783 | 141,193 |
| | 취업자 | 2,756 | 902 | 2,376 | 771 | 8 | 6,813 |
| | 취업률(%) | 4.8 | 3.6 | 5.6 | 6.5 | 0.2 | 4.8 |
| 전체 | 졸업자 | 100,579 | 40,706 | 73,647 | 23,413 | 7,003 | 245,288 |
| | 취업대상자 | 89,000 | 33,493 | 62,440 | 19,135 | 6,538 | 210,606 |
| | 취업자 | 5,433 | 1,588 | 5,418 | 1,192 | 47 | 13,687 |
| | 취업률(%) | 6.1 | 4.7 | 8.7 | 6.2 | 0.7 | 6.5 |

주 : 1. 취업대상자는 상급학교 진학, 유학, 군 입대 등을 제외한 순수 취업대상자를 말함
 2. 취업률은 취업대상자중 취업자수 비율을 정함
 3. 원자료에서 수정사항(수도권 졸업자, 지방 취업자, 인문사회계열 취업자, 의학계열 졸업자)
 자료 : 이만희(2003).

한편, 2001~2003년까지 최근 3년간 5급 고시 합격자 비율은 서울 85.6%, 경인 1.7%, 지방 12.7%로 졸업생 비중 26.9%, 16.2%, 56.9%에 비해 서울합격자 비중이 크게 높게 나타나 정부부문의 고급인력 공급에서의 수도권 독점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방대학생의 경쟁력이 낮고 정보가 적으며 그밖에 지방대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표 4-34> 지역별 고등고시 합격자 비율(2003)

| 구분 | 지방대 출신 학생 비율 | | | 최근 3년간 5급고시 합격자 비율 | | |
|-------|--------------|------|------|--------------------|-----|------|
| | 서울 | 경인 | 지방 | 서울 | 경인 | 지방 |
| 비율(%) | 26.9 | 16.2 | 56.9 | 85.6 | 1.7 | 12.7 |

자료: 서울신문(2004.2.6).

한편 지방대생은 지방에 대학졸업생에게 걸맞는 고급일자리가 부족하여 지방 대학 졸업 후 오히려 서울로 취업을 위해 이동하게 됨으로서 지방대학이 두뇌유출의 요인을 제공하여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남대학의 경우 입학생은 서울 출신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나 서울취업자는 전체의 29.9%에 이르러 많은 학생이 서울로 취업을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1-4-5>, <부표 1-4-6>, <부표 1-4-7> 참조).

<표 4-35>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지와 출신지 비교

(단위 : %)

| 구분 | 광주 | 전남 | 전북 |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 대전 충청 | 부산 대구 경상 | 제주 | 계 |
|-----------------------------|------|------|-----|------|----------------|----------|----------------|-----|-------|
| 1997년 입학생의 출신지 (N=1,748) | 69.1 | 24.2 | 3.4 | 1.4 | 0.8 | 0.5 | 0.4 | 0.2 | 100.0 |
| 2001년 졸업생의 취업지 (N=1,035) | 48.8 | 8.9 | 1.3 | 29.9 | 8.4 | 1.9 | 0.8 | - | 100.0 |

자료: 안영진(2001).

(2) 연구실적

연구 활동은 교수들의 학문적·이론적 연구인 학술연구와 산학협력 등의 실용 연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수들의 연구 활동은 최근 BK 사업 등으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외국대학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수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편수가 미국의 1개 대학 수준에 불과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는 실험·실습기자재의 부족, 대학원생 등 연구보조원의 불비, 연구비 부족 등으로 연구실적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에 나타난 각 대학 연구실적 평가에 의하면, <표 4-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 연구부문 상위 10개교 중 지방대학은 특수목적으로 설립·지원되는 포항공대와 한국과학기술원 이외에는 한 개의 대학도 없으며, 과학기술부문의 SCI 게재 논문수에서는 상위 10개교 중 부산대(9위), 경북대(10위) 2개교가 포함되어 있고, 인문사회 SSCI, A&H 게재 논문수 상위 10개교 중에는 한림대(5위)가 포함되어 있을 뿐 모두 수도권대학이 독차지하고 있다.

<표 4-36> 중앙일보 평가 연구부문 상위 10개 대학

| 순위 | 교수 연구 부문 | 과학기술 교수당 SCI 게재 수(편) | 인문사회 교수당 SSCI, A&H 게재수(편) | 지적재산권 등록현황(총점) |
|----|----------|----------------------|-----------------------------|---------------------|
| 1 | 포항공대 | 포항공대(3.10) | 한국과학기술원(0.284) | 한국과학기술원(870) |
| 2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2.87) | 포항공대(0.190) | 포항공대(313) |
| 3 | 서울대 | 서울대(2.23) | 세종대(0.066) | 고려대(150) |
| 4 | 연세대 | 서강대(1.71) | 서울대(0.060) | 인하대(148) |
| 5 | 고려대 | 한양대(1.08) | 연세대(0.055) | 서울대(65) |
| | | | 한림대(0.055) | |
| 6 | 성균관대 | 연세대(1.03) | | 한양대(46) |
| 7 | 서강대 | 고려대(0.96) | 고려대(0.053) | 연세대(45) |
| 8 | 한양대 | 성균관대(0.92) | 한양대(0.040) | 경상대(38) |
| 9 | 인하대 | 부산대(0.85) | 이화여대(0.036) 한국항공대(0.036) | 선문대(35) |
| 10 | 이화여대 | 경북대(0.80) | | 서강대(25) 성균관대(25) |
| | | 세종대(0.80) | | |
| | | 인하대(0.80) | | |

주 : 1. 지적재산권 등록현황은 2002년 집계치(특허 5점, 실용신안 3점, 의장 2점, 상표 1점).

2.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지방대학을 나타냄.

자료 : 중앙일보 홈페이지(www.join.com) 대학평가.

2. 지방대학 침체와 위기의 원인 분석

1) 내·외생적 원인 분석

(1) 외생적 원인

① 수도권-지방 불균형과 서울 선호 풍조

지방대학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서울 지향적 가치관 속에 중앙집권적 구조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방은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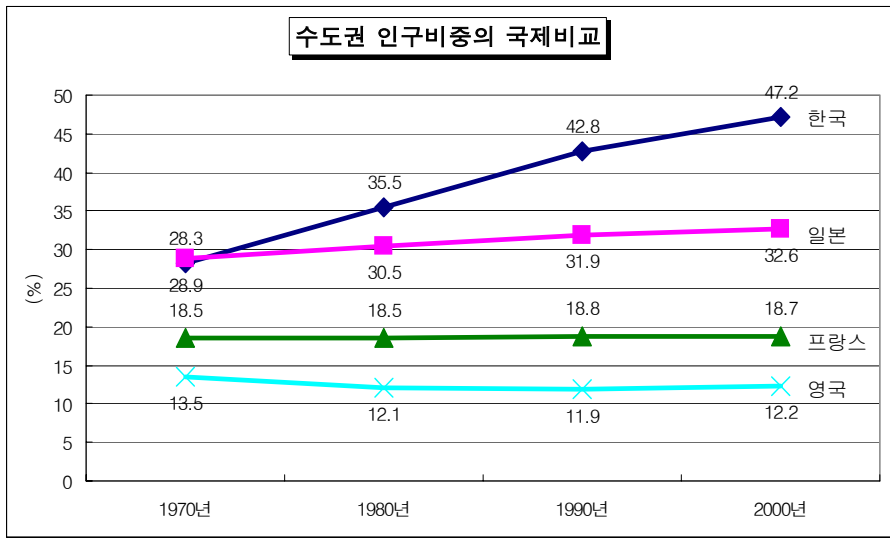
<표 4-37> 수도권 기능 집중도

| 구분 | | 전국 (A) | 수도권 (B) | 서울 (C) | 집중도 | |
|--------------------------|--------------------|-----------|------------|-----------|-------|-------|
| | | | | | B/A | C/A |
| 국토면적(02) | (km ²) | 99,585 | 11,719 | 606 | 11.8% | 0.6% |
| 인구(02) | (천인) | 48,518 | 22,877 | 10,281 | 47.2% | 21.2% |
| 산업(02) | 취업(천인) | 22,001 | 10,199 | 4,611 | 46.4% | 21% |
| | 지역생산(10억) | 485,435 | 231,920 | 98,897 | 47.8% | 20.4% |
| 제조업(01) | 사업체 | 105,873 | 59,755 | 19,396 | 56.4% | 18.3% |
| | 종업원(천인) | 2,648 | 1,220 | 276 | 46.1% | 10.4% |
| 서비스업(01) | 사업체 | 796,184 | 363,778 | 184,820 | 45.7% | 23.2% |
| | 종업원(천인) | 4,235 | 2,144 | 1,238 | 50.6% | 29.2% |
| 대학교(03) | 학교수 | 163 | 66 | 38 | 40.5% | 23.3% |
| | 학생수(천인) | 1,808 | 689 | 445 | 38.1% | 24.6% |
| 의료기관(01) | | 43,677 | 19,890 | 11,460 | 45.5% | 26.2% |
| 금융(02) | 예금(10억) | 512,419 | 349,370 | 359,355 | 68.2% | 50.6% |
| | 대출(10억) | 471,684 | 311,115 | 209,579 | 66.0% | 44.4% |
| 차량수(02) | (천대) | 13,949 | 6,484 | 2,691 | 46.5% | 19.3% |
| 공공청사(03) | 소계 | 370 | 291 | 198 | 78.6% | 53.5% |
| | 중앙행정기관 | 55 | 46 | 31 | 83.6% | 56.4% |
| | 소속기관 | 113 | 90 | 47 | 79.6% | 41.6% |
| | 정부투자기관 | 21 | 20 | 13 | 95.2% | 61.9% |
| | 정부출연기관 | 106 | 82 | 61 | 77.4% | 57.5% |
| | 정부출자기업 | 25 | 15 | 12 | 60.0% | 48.0% |
| | 개별공공법인 | 50 | 38 | 34 | 76.0% | 68.0% |
| 인구밀도(인/km ²) | | 487 | 1,952 | 16,965 | | |

자료: 국토연구원(2003).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7%가 몰려있고 중앙행정 기관 84%, 100대기업 본사 92%, 사무관리직 취업자와 제조업체의 57%, 조세수입의 70%, 금융거래의 67%, 20대 명문대학의 65%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전 국토의 0.6%에 불과한 서울시에는 인구의 21.2%, 취업자의 21.0%, 금융예금의 50.6%, 공공청사의 53.5%가 밀집하여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이 지적한대로 “서울은 단순히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가 되었고 이른바 서울 공화국, 지방 식민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 및 기능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2>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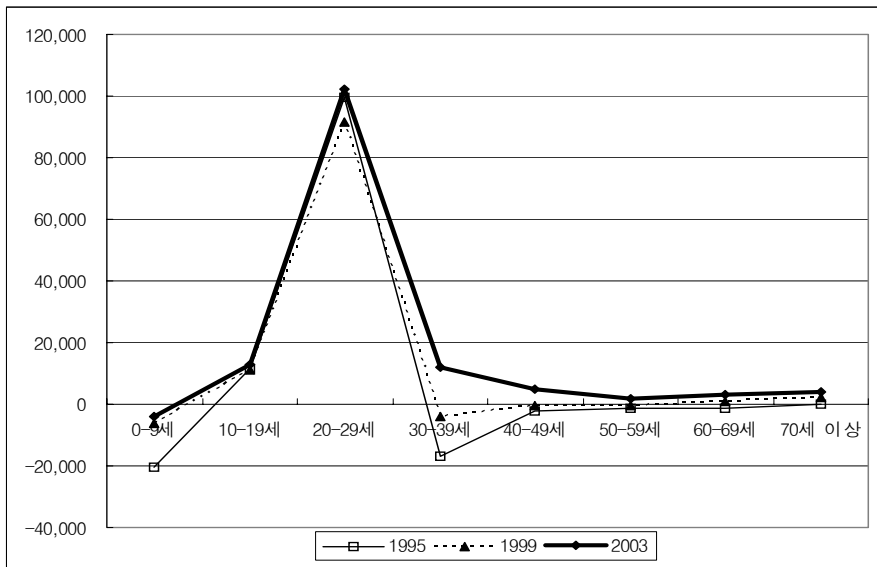
주 : 1. 동경권은 동경 및 인근 7개현을, 파리권은 파리 및 일드 프랑스지역을, 런던권은 광역대도시권(Greater London)을 의미
 2. 파리권은, 1968, 1982, 1990, 1999년 인구를, 런던권은 1971, 1981, 1991, 2001년의 인구를 1970, 1980, 1990, 2000년 인구에 가름하여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2000년 47.2%는 2002년 자료로 표시
 자료 : 각국의 통계청 DB;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국가균형발전관련 통계자료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수도권과 외국 수도권과의 인구 집중도를 비교하면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수도권은 47.2%인 반면 동경권 32.6%, 파리권 18.7%, 런던권 12.2%로 집중도가 낮다. 최근 30년간(1970-2000) 집중도도 우리는 28.3%에서 47.2%로 급증한 반면 외국의 수도권은 안정화 추세에 있어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의 또 다른 문제는 인구의 총량적 집중도 문제지만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대부분의 인구가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층이라는 점이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소위 인구 이동의 선별성을 보여 더욱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4-3> 참조).

2002년 수도권 유입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의 56.4%가 20대로서 취업과 진학을 목적으로 대부분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진학 선호도조사에서도 고등학생의 73.2%와 학부모의 80.8%가 서울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여 수도권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1-4-8> 참조).

<그림 4-3> 수도권 유입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주: 자세한 수치는 <부표 1-9> 참조
 자료: 통계청(www.nso.go.kr) 인구 순이동 자료(2003).

그리고 앞의 지방고교생의 수도권 대학 선호 사유에서 보았듯이 지방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호 이유는 수도권 기능 집중으로 인한 취업기회와 사회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진학희망 대학의 소재지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 | |
|---------|------|-------|-----|-------|
| | 고등학생 | | 학부모 | |
| 서울(수도권) | 684 | 73.2 | 716 | 80.8 |
| 지방 | 226 | 24.2 | 161 | 18.2 |
| 무응답 | 25 | 2.7 | 9 | 1.0 |
| 계 | 935 | 100.0 | 886 | 100.0 |

자료: 정책희·이만희·조미영(1999).

② 적령인구 감소와 대학입학 정원의 확대

지방대학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학 입학 학령인구는 최근 인구 증가율의 감소로 크게 줄어드는 반면 1994년과 1996년부터 각각 시행된 대학정원 자율화와 대학준칙제도의 도입으로 대학과 대학정원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 입학 학령인구(고교졸업자)와 대학입학정원의 변화추세를 보면 1970년에는 고교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의 3배에 이르고 1990년도만 해도 2배가 넘어 지방대학이라 하더라도 입학생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2003년부터는 오히려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 보다 많은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대학 정원 자율화 조치가 도입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8년간의 대학정원 수급실적을 보면 고교졸업생 38,792명이 감소했는데 비해 대학입학정원은 156,845명이 늘어나 오늘날 지방대학 입학정원 확보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표 4-39> 참조).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정원은 계속 증가하여, 최근 7년간 무려 5만 1,121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공립대(지방국립대 포함)의 입학정원이 7,961명, 수도권 사립대 입학정원이 12,376명이 늘어난 것에 비해 4배 이상 되는

수치이며, 전체 증원 규모의 7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방 사립대학들이 과다한 정원 확대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표 4-40> 참조).

<표 4-39> 고교졸업(예정)자 대비 대학입학정원 추이

| 년 도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3 | 2005 |
|------------|---------|---------|---------|---------|---------|---------|---------|---------|---------|
| 대학입학정원(A) | 46,300 | 57,950 | 205,875 | 278,783 | 350,413 | 505,833 | 657,728 | 662,678 | 662,678 |
| 고교(예정)자(B) | 145,062 | 263,369 | 467,388 | 642,354 | 761,922 | 671,614 | 664,712 | 632,822 | 613,921 |
| 대학정원/졸업자 | 3.00 | 4.54 | 2.27 | 2.30 | 2.17 | 1.32 | 1.01 | 0.95 | 0.92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1).

<표 4-40> 입학정원 증가 추이

(단위 : 명, %)

| 구분 | 국공립대 | | 수도권 사립대 | | 지방 사립대 | | 합계 | |
|-------|--------|-------|---------|--------|---------|--------|---------|--------|
| | 입학정원 | 증원 | 입학정원 | 증원 | 입학정원 | 증원 | 입학정원 | 증원 |
| 1996년 | 73,730 | - | 95,925 | - | 121,120 | - | 290,775 | - |
| 1997년 | 77,435 | 3,705 | 98,175 | 2,250 | 134,470 | 13,350 | 310,080 | 19,305 |
| 1998년 | 78,945 | 1,510 | 106,775 | 8,600 | 150,135 | 15,665 | 335,855 | 25,775 |
| 1999년 | 80,635 | 1,690 | 107,715 | 940 | 153,905 | 3,770 | 342,255 | 6,400 |
| 2000년 | 80,584 | -51 | 107,631 | -84 | 159,848 | 5,943 | 348,063 | 5,808 |
| 2001년 | 80,952 | 368 | 107,085 | -546 | 162,163 | 2,315 | 350,200 | 2,137 |
| 2002년 | 82,008 | 1,056 | 108,171 | 1,086 | 168,575 | 6,412 | 358,754 | 8,554 |
| 2003년 | 81,691 | -317 | 108,301 | 130 | 172,241 | 3,666 | 362,233 | 3,479 |
| 계 | | 7,961 | | 12,376 | | 51,121 | | 71,458 |
| 비율 | | 11.1 | | 17.3 | | 71.5 | | 100.0 |

주: 분석대상 151개대 - 국공립대(일반대 25교, 산업대 8교), 사립대(일반대 109교, 산업대9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3).

최근 5년간 정원이 확대된 대학수를 살펴보아도, 지방 사립대학이 과다하게 정원을 늘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정원이 늘어난 총 246개 대학 중에서 국공립대학 64개교(26.0%), 수도권 사립대학은 55개교(22.4%)인데 반해, 지방 사립대학은 전체의 51.6%에 달하는 12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41> 참조).

정원의 무리한 확대가 지방대 신입생 충원률을 낮추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지방 학생들의 유입으로 충원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2002년 정원이 무려 1,070명이나 늘어 충원률이 전년 99.1%에서 97.8%로 낮아졌지만 2003년에는 2002년에 늘어난 정원을 모두 채워 충원률이 100%를 넘어섰다. 이는 결국 지방대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통계를 보아도, 정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충원률은 2000년 97.8%에서 01년 98.4%, 2002년 94.5%, 2003년 94.5%로 차츰 낮아지고 있다. 전국 평균은 아직까지 90% 이상의 충원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남, 광주, 전북, 경북, 경남 지역 등은 충원률이 80%대로 낮아져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표 4-41> 입학정원 증가 대학 수

(단위 : 대학수, %)

| 구 분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계 | 비율 |
|---------|-----|-------|-------|-------|-------|-------|-----|-------|
| 국공립대 | 일반대 | 15 | 0 | 1 | 11 | 10 | 37 | 15.0 |
| | 산업대 | 6 | 5 | 6 | 4 | 6 | 27 | 11.0 |
| | 계 | 21 | 5 | 7 | 15 | 16 | 64 | 26.0 |
| 수도권 사립대 | 일반대 | 27 | 2 | 0 | 19 | 5 | 53 | 21.5 |
| | 산업대 | 1 | 0 | 0 | 1 | 0 | 2 | 0.8 |
| | 계 | 28 | 2 | 0 | 20 | 5 | 55 | 22.4 |
| 지방 사립대 | 일반대 | 31 | 22 | 21 | 27 | 14 | 115 | 46.7 |
| | 산업대 | 5 | 3 | 1 | 0 | 3 | 12 | 4.9 |
| | 계 | 36 | 25 | 22 | 27 | 17 | 127 | 51.6 |
| 합계 | 일반대 | 73 | 24 | 22 | 57 | 29 | 205 | 83.3 |
| | 산업대 | 12 | 8 | 7 | 5 | 9 | 41 | 16.7 |
| | 계 | 85 | 32 | 29 | 62 | 38 | 246 | 100.0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3).

<표 4-42> 지역별 증원 및 총원률 현황

(단위 : 명, %)

| 지역명 | 2000년 | |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
| | 증원 | 총원률 | 증원 | 총원률 | 증원 | 총원률 | 증원 | 총원률 |
| 강원 | 0 | 98.1 | 585 | 99.0 | 905 | 92.8 | 290 | 89.4 |
| 경기 | 12 | 99.3 | -27 | 99.1 | 1,070 | 97.8 | 40 | 106.4 |
| 인천 | 0 | 99.1 | 0 | 99.6 | 30 | 97.7 | 40 | 99.6 |
| 경남 | 670 | 98.5 | -60 | 99.3 | 210 | 94.5 | 1,845 | 89.9 |
| 부산 | 1,605 | 99.5 | 491 | 98.6 | 625 | 97.3 | 40 | 99.3 |
| 경북 | 650 | 95.4 | 330 | 96.8 | 750 | 89.5 | 460 | 89.5 |
| 대구 | -50 | 99.7 | -43 | 99.6 | -27 | 97.4 | -30 | 94.7 |
| 서울 | 109 | 99.4 | -437 | 99.6 | -283 | 98.8 | 30 | 97.2 |
| 전남 | 0 | 80.7 | -275 | 90.5 | 230 | 79.9 | -10 | 81.8 |
| 광주 | 100 | 98.0 | -50 | 98.8 | 690 | 90.0 | 375 | 83.7 |
| 전북 | 230 | 96.3 | 0 | 96.9 | 30 | 86.0 | -10 | 80.2 |
| 제주 | 0 | 94.0 | 0 | 95.9 | 0 | 86.4 | 10 | 87.9 |
| 충남 | 195 | 98.9 | 2,000 | 99.0 | 2,325 | 96.0 | 603 | 98.3 |
| 대전 | 245 | 98.9 | 8 | 98.7 | 347 | 95.8 | 120 | 97.1 |
| 충북 | -35 | 98.9 | 50 | 99.0 | 1,620 | 94.9 | -442 | 95.3 |
| 합계 | 3,731 | 97.8 | 2,572 | 98.4 | 8,522 | 94.5 | 3,361 | 94.5 |

주: 분석대상; 151개대 - (국공립대(일반대 25교, 산업대 8교), 사립대(일반대 109교, 산업대9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3).

③ 경제력 취약 및 고급 일자리 부족

지방에는 88.3%의 면적에 52.9%의 인구가 거주하고 50% 이상의 사업체와 지역내 총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40%에 못 미치고 예금액은 32%에 불과하는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하다. 대학의 분포나 사업체 일자리는 50%를 상회하지만 벤처기업, 연구소, 정부기관 등 소위 고급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고급일자리 수도권 집중과 경제력 집중은 수도권 대학의 선호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것이 다시 수도권 인구 집중의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43> 지방의 경제력 취약 및 고급일자리 부족

| 구분 | 전국 | | | 집중도(%) | | |
|----------------------|--------------------|------------|------------|------------|---------|------|
| | 수도권(A) | 지방(B) | 계(C) | 수도권(A/C) | 지방(B/C) | |
| 면적(km ²) | 11,719.37 | 87,865.83 | 99,585.20 | 11.8 | 88.2 | |
| 인구(명) | 22,876,672 | 25,641,199 | 48,517,871 | 47.2 | 52.8 | |
| 경제력 | 지방세(백만원) | 18,992,126 | 12,591,422 | 31,583,548 | 60.2 | 39.8 |
| | 지역내총생산(GRDP)(10억원) | 277,618.0 | 303,898.0 | 581,516.0 | 47.7 | 52.3 |
| | 예금액(10억원) | 349,370.3 | 163,049.1 | 512,419.4 | 68.2 | 31.8 |
| | 사업체수(개) | 1,429,546 | 1,702,417 | 3,131,963 | 45.6 | 54.4 |
| 일자리 | 종사자수(명) | 7,249,289 | 7,359,033 | 14,608,322 | 49.6 | 50.4 |
| | 기업 | 114,055 | 88,040 | 202,095 | 56.4 | 43.6 |
| | 벤처기업 | 5,656 | 2,301 | 7,957 | 71.1 | 28.9 |
| | 연구소 | 2,113 | 1,339 | 3,452 | 61.2 | 38.8 |
| | 대학 | 66 | 97 | 163 | 40.5 | 59.5 |
| | 정부기관 | 95 | 18 | 113 | 84.1 | 15.9 |

주: 1. 국토면적에서 1995년부터 6·25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경기, 강원)의 미복구 토지는 제외하였음.

2.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말함.

3. 정부기관, 기업, 연구소는 2000년 기준; 벤처기업은 2003년 9월 기준; 나머지 2002년 기준.

4. 지역내총생산 - 국방부문 및 수입세가 제외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www.nso.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중소기업청(www.smba.go.kr).

④ 종합적 지방대학 육성정책 부족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국가와 지역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외의 대학 신증설과 정원의 규제 이외에는 이렇다할 지역정책차원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없었거나 대체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정책이 종합적·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처별 산발적·단기적으로 추진되어 정책간 연계성과 효과성이 부족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범정부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둘째, 대학육성을 위한 계획이 주로 중앙정부 주도로 교육정책차원에서 이루어

어져,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고 중앙·지방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지방대학 정책은 수도권내 대학 신설과 학생증원 억제,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장려 등 수도권 인구집중 장치 차원의 소극적 정책을 추진하였고, 지역 산업인력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내실화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지방대학 육성대책은 미흡하였다. 그리고 수도권내 대학의 신설이나 정원 규제 정책도 각종 논리와 편법에 의해 수도권내 대학 증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서울 이외지역으로의 분교설치 정책도 서울의 통학·통근 인구의 증가를 유발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넷째, 교육정책이 자주 바뀔때 따라 지방대학 정책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했고, 평가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대학의 자구노력 유도정책이 미흡하였다. '90년대 중반에 들어 평가에 근거한 재정 차별 지원 방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재원이 미약하고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여 구조조정 등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해내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대학간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대학간 경쟁이 떨어지고,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이 대학의 위상을 실제로 파악할 수가 없어 지방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부족하였다. 대학의 평가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대학 종합평가와 중앙일보사가 시행하는 대학평가가 있으나 그 내용과 방법이 정착되어 있지 못하여 신뢰할 수 있는 대학 평가기관의 설립과 객관적 평가 그리고 이의 공개를 통한 대학간 경쟁의 유도가 필요하다.

(2) 내생적 요인

① 무분별한 학과신설 및 정원확대(대학 구조조정 미흡)

현재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 스스로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지역별 입학진학 가능 학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하여 지방대학 부실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대학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이 백화점식 학과 신설로 대학이 경쟁력과 특성화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세계 유래없는 대학 진학열로 대학입학정원이 진학 수요에 크게 못 미쳐 대학 입학정원 확충에 급급하였던 결과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부실 사립대학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② 교육과정 및 내용의 부실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내적 문제로는 대학의 교과과정과 인력 양성구조가 사회 수요와 불일치하고(job mismatch),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불일치하는(skill mismatch) 점이다. 이에 따라 특정분야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취업난이 가중되고 취업 후에도 실용성이 없어 재교육이 필요하므로 많은 기업체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지역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특성화되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학과가 난립되고 교수 중심 과목으로 설정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교육 내용 역시 실험 및 실습 시설 등의 부족으로 미흡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실용성이 낮다. 따라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통폐합을 비롯한 구조조정과 함께 교과 과정의 현장화 등 대학 내부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③ 대학 운영체제의 불합리

대학의 발전은 그 운영체제와 운영책임자인 총학장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대부분이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사립대학으로 재정이 빈약하고 부실하다. 총학장의 선임도 능력보다는 연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여 대학경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1991년부터 교수직선제에 의해서 총장이 선출되고 있지만 총

장선거가 학연, 지연 등의 파벌과 향응, 보직 약속 등 불합리한 요소로 이루어지고 사전 선거운동, 흑색선전, 금품 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가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선거와는 달리 법적으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부작용을 낳고 대학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부조리와 파벌 조성은 지방대학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지방대학 처·실장 조사를 통한 문제발생의 원인 분석⁵⁾

(1) 지방대학 CEO 조사를 통해 살펴본 지방대학 당면문제

지방대학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입학생 충원문제(34.5%)',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22.4%)',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13.3%)', '재정악화와 경영난 가중(12.4%)', '지방학생의 중도이탈 급증(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입학생 충원문제'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지방대학의 입학생 정원미달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인기학과와 존폐 위기와 지방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문제로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유출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학생중도이탈', '교육 및 연구여건 낙후', '지역산업과 연계부족', '사회적 편견에 따른 사기저하' 등의 문제들도 한 자리 안팎의 비중이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들이다.

권역별로 지방대학의 당면문제를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전체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입학생 충원문제', '졸업생의 취업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지방대학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로서, 또한 참여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종래의 교육 연구 기능 이외에 새로운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부응한 지방대학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본 연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 110여개의 지방대학 처·실장 3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대학의 당면문제, 지방대학 문제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음.

<표 4-44> 권역별 지방대학의 당면문제

| 순위 | 구분 | 충청권 | 호남권 | 영남권 | 강원· 제주권 | 무응답 | 합계 |
|----|-----------------------|----------|-----------|-----------|------------|---------|------------|
| 1 | 입학생 총원 문제 | 98(34.8) | 103(35.8) | 130(31.9) | 50(43.9) | 4(16.7) | 385(34.5) |
| 2 | 졸업생의 취업난 | 66(23.4) | 66(22.9) | 94(23.0) | 17(14.9) | 7(29.2) | 250(22.4) |
| 3 | 우수학생 수도권 유출 | 43(15.2) | 33(11.5) | 57(14.0) | 12(10.5) | 3(12.5) | 148(13.3) |
| 4 | 재정악화와 경영난 가중 | 28(9.9) | 28(9.7) | 59(14.5) | 14(12.3) | 9(37.5) | 138(12.4) |
| 5 | 학생중도이탈 (수도권 편입) | 18(6.4) | 20(6.9) | 20(4.9) | 11(9.6) | - | 69(6.2) |
| 6 | 교육 및 연구여건 낙후 | 7(2.5) | 7(2.4) | 21(5.1) | 3(2.6) | - | 38(3.4) |
| 7 | 지역산업과 연계부족 | 11(3.9) | 17(5.9) | 6(1.5) | 2(1.8) | 1(4.2) | 37(3.3) |
| 8 | 사기저하 | 7(2.5) | 9(3.1) | 13(3.2) | - | - | 29(2.6) |
| 9 | 교수 양적 부족, 우수교원 확보난 | 4(1.4) | 2(0.7) | 7(1.7) | 4(3.5) | - | 17(1.5) |
| 10 | 기 타 | - | 3(1.0) | 1(0.2) | 1(0.9) | - | 5(0.5) |
| | 합계 | 282(100) | 288(100) | 408(100) | 114(100) | 24(100) | 1,116(100) |

주: 첫째 3점, 둘째 2점, 셋째 1점을 각각 곱한 점수임, 복수응답 처리.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2) 지방대학 CEO조사를 통한 지방대학 문제 발생원인 분석

지방대학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 성장(30.6%)’,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입학정원의 팽창으로 인한 수급불균형(21.2%)’,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지원미흡(16.2%)’,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 차별(14.3%)’, ‘수도권 선호사상(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 성장’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산업체, 주요 기관, 금융 등의 인프라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에 대한 고려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령인구감소와 대학입학정원의 팽창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균형을 위한 대학입학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보인다. 그리고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지원미흡,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차별' 문제 또한 이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45> 지방대학 문제의 주된 원인

| 순위 | 구 분 | 충청권 | 호남권 | 영남권 | 강원· 제주권 | 무응답 | 합계 |
|----|-------------|----------|----------|-----------|------------|---------|------------|
| 1 | 수도권 불균형 성장 | 80(28.4) | 88(30.6) | 126(30.9) | 40(35.1) | 8(33.3) | 342(30.6) |
| 2 | 대학정원 수급불균형 | 62(22.0) | 52(18.1) | 88(21.6) | 31(27.2) | 4(16.7) | 237(21.2) |
| 3 | 정부정책의 지원 미흡 | 41(14.5) | 44(15.3) | 70(17.2) | 21(18.4) | 5(20.8) | 181(16.2) |
| 4 | 취업차별 | 46(16.3) | 41(14.2) | 64(15.7) | 8(7.0) | 1(4.2) | 160(14.3) |
| 5 | 수도권 선호사상 | 37(13.1) | 43(14.9) | 34(8.3) | 4(3.5) | 2(8.3) | 120(10.8) |
| 6 | 공급자 중시 교육체계 | 8(2.8) | 13(4.5) | 10(2.5) | 5(4.4) | 3(12.5) | 39(3.4) |
| 7 | 지역사회의 관심부족 | 5(1.8) | 6(2.1) | 7(1.7) | 2(1.8) | - | 20(1.8) |
| 8 | 대학 자구노력 부족 | 2(0.7) | - | 9(2.2) | - | - | 11(1.0) |
| 9 | 교수의 역량 미흡 | 1(0.4) | - | - | 2(1.8) | 1(4.2) | 4(0.4) |
| 10 | 기타 | - | 1(0.3) | - | 1(0.9) | - | 2(0.2) |
| | 합계 | 282(100) | 288(100) | 408(100) | 114(100) | 24(100) | 1,116(100) |

주: 첫째 3점, 둘째 2점, 셋째 1점을 각각 곱한 점수임, 복수응답 처리.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권역별로도 전국의 경향과 거의 비슷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사회 전반의 수도권 선호사상(13.1%, 14.9%)' 원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효과 분석⁶⁾

지방대학이 당면한 문제도 많지만 이론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발전

6) 대학 처·실장 지방대학 발전방안 설문조사 개요는 <부록 5>를 참조하기 바람.

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 측면도 매우 다양하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학생처장, 기획실장, 교무처장을 대상으로 지방대학의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에 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46>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지방대학의 역할

| 구분 |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지방대학의 역할 | | | | |
|--------|----------------------|------------------|----------------|----------------|---------------------|
| | 인적자본 공급 | 외지진학의 사교육비 절감 | 지역정보 및 두뇌은행 | 기술개발과 신산업창출 | 지역의사회 문화활동 촉진 |
| 충청권 | 79(28.0) | 37(13.1) | 41(14.5) | 36(12.8) | 51(18.1) |
| 호남권 | 91(31.6) | 51(17.7) | 48(16.7) | 31(10.8) | 34(11.8) |
| 영남권 | 143(35.0) | 67(16.4) | 70(17.2) | 53(13.0) | 34(8.3) |
| 강원·제주권 | 42(36.8) | 6(5.3) | 20(17.5) | 10(8.8) | 23(20.2) |
| 무응답 | 9(37.5) | - | 6(25.0) | 4(16.7) | 3(12.5) |
| 합계 | 364(32.6) | 161(14.4) | 185(16.6) | 134(12.0) | 145(13.0) |

| 구분 |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지방대학의 역할 | | | | 합계 |
|--------|----------------------|-------------------|----------------|----------------|-----------|
| | 지역경제 활성화 | 취업기회창출, 지역소득증대 | 대학구성원의 봉사활동 | 가치관과 의식구조혁신 | |
| 충청권 | 9(3.2) | 5(1.8) | 20(7.1) | 4(1.4) | 282(100) |
| 호남권 | 11(3.8) | 5(1.7) | 14(4.9) | 3(1.0) | 288(100) |
| 영남권 | 12(2.9) | 12(2.9) | 13(3.2) | 4(1.0) | 408(100) |
| 강원·제주권 | 6(0.9) | 1(0.9) | 6(5.3) | - | 114(100) |
| 무응답 | - | - | 2(8.3) | - | 24(100) |
| 합계 | 38(3.4) | 23(2.1) | 55(4.9) | 11(1.0) | 1116(100) |

주: 첫째 3점, 둘째 2점, 셋째 1점을 각각 곱한 점수임, 복수응답 처리.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지방대학 처·실장들은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첫째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공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32.6%)', 둘째는 '지역정보 및 두뇌은행(data bank & think tank)으로서 지역발전 선도하는 것

이며(16.6%)', 셋째는 '지역학생에게 교육기회를 공급하여 외지 진학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하는 것(14.4%)'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는 지방대학시설의 지역사회 개방과 평생교육 등으로 지역의 사회·문화 활동을 촉진(13.0%)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공급으로 신산업창출과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며 (12.0%) 그 밖에 대학구성원의 지역봉사 활동(4.8%)과 소비활동(3.4%)에 의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제2장에서 분석한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소비 기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면 현재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효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적자본 공급'(32.6%)과 지역학생의 외지 진학 억제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14.4%) 등의 교육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정보 및 두뇌은행'의 역할(16.6%)과 새로운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12.0%) 등의 지방대학의 연구 기능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의 지역사회 개방(13.0%) 및 대학 구성원의 사회 봉사활동의 봉사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구성원의 소비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5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시사점

제4장의 지방대학의 지역연계 실태와 위기원인 및 지역발전효과 분석에 이어 제5장에서는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검토한 뒤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기타부처 정책, 지역균형발전관련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대학정책을 평가한다. 그리고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 외국의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총 7개의 국내외 성공사례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국가와 지역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대학 신증설과 정원 규제 이외에는 이렇다 할만한 지역정책차원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종합적·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처별로 산발적·단기적으로 추진되어 정책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교육정책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방대학 정책은 수도권내 대학 신설과 학생증원 억제,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장려 등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차원의 소극적 방안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 지역 산업인력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내실화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지방대학 육성대책은 미흡하였다. 그리고 수도권내 대학의 신설 및

정원의 규제 정책도 다양한 이유와 편법에 의해 수도권내 대학 증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서울 이외지역으로의 분교설치 정책도 서울의 통학·통근 인구의 증가만 유발시키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이 자주 바뀜에 따라 지방대학 정책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했고 대학 지원재정의 부족과 함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조정 등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해내지 못하였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한 주요 지방대학 육성사업은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8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대학 특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었다.

우선 교육부의 지방대학육성정책은 1978년부터 시작된 지방의 특성화 공대육성사업(1978-1993)에 이어 1994년부터는 국책공대육성사업(1994-1998)으로 일부 지방 국립대학의 공과대학에 대한 집중육성사업이 있었고, 이외는 별도로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994-1998)과 지방대학 육성사업(2002-2006)이 추진되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9년부터 BK(Brain Korea)사업을 통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두뇌인력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 공과계열 학생들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1998년 IMF 체제하에서는 국립대학 통폐합과 특수독립법인화 등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다가 이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 후 국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2000년부터 지방 국립대학의 발전계획과 내부혁신 실적을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의 지원 정책으로 변경되어 2003년까지 시행되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대학육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인식되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학연관이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내발적 지역 발전을 이루는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표 5-1> 주요 지방대학 지원 사업

| 사업명 | 지원기간 | 지원목적 | 총지원액 | 지원현황 |
|----------------|---------|-----------------------------|---------------|---|
| 특성화 공대 육성 | '78~'94 | 주요 거점대학을 특성화 공대로 육성 | - | 부산대(기계공학), 경북대(전기/전자), 전북대(화학공학), 충남대(공업교육) |
| 국책지원 공대 | '94~'98 | 권역별 우수공대 특성화 | 2,000억 원 | 경북(경북, 영남대), 경남(부산, 창원대), 충청(충남, 충북대), 전라(전남, 전북대) |
| 지방대학 특성화 | '94~'98 | 분야별 특성화대학 집중 육성 | 780억 원 | 국제/공학/기초/인문/기타 등 5개 분야 28개교 |
| BK21 (지역대학) | '99~'05 |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내실화 | 3,208억 원 (예정) | 38개 대학 42개 BK사업단(주관 13, 참여 29)선정·지원 |
| 공·사립대학 특성화 | '99~'05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특성화노력 적극 유도 | '03년 1,150억 원 | 156개교 일반지원 및 30개교 선별지원 ※ 수도권 대학 포함 |
| 국립대학 발전계획 추진 | '00~계속 | 국립대학 특성화 기반 조성 및 발전계획 추진 | '03년 400억 원 | 43개 대학에 일반지원 및 13개('01), 24개('02) 대학 집중 지원 ※ 수도권 대학 포함 |
| 지방대학 육성사업 | '02~'06 | 지방대 특성화를 통한 자생역량 강화 | '03년 500억 원 | '02년 43개 대학 선정·지원 |
| 전문대학 다양화·특성화 | '97~계속 |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직업교육 지원 | '03년 1,656억 원 | 전문대학 특성화 180개 프로그램 선정·지원 이외 기타 4개 개별사업 ※ 수도권 대학 포함 |
|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지원 | '03~계속 | 우수 이공계생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무이자 융자 | '03년 309억 원 | 장학금 240억원(7,212명) 무이자융자 69억원 ※ 수도권 대학 포함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3).

또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대학에 대한 지방정부나 국가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 특화 클러스터(cluster)의 조성 등 지역과 지방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되었던 각종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첫째는 교육부에서 추진된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상호 연계되지 못하여 그동안 지방대학육성에 큰 기여

를 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그동안 각 지방대학의 사업별 지원분야를 보면 <표 5-2>분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대의 경우 특성화 공대 사업분야는 화학공학, 국책공대 지원사업은 자동차 공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영상산업, BK 사업은 전자정보로 사업별로 특성화분야가 서로 다르게 선정되어 사업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표 5-2> 주요 대학의 사업별 지원분야 현황

| 대 학 | 특성화 공대 육성 | 국책지원 공대 | 지방대학 특성화 | BK21(지역대학) |
|-----|-----------|---------|----------|------------|
| 부산대 | 기계공학 | 기계 | 국제인력 양성 | 자동차/정보통신 |
| 경북대 | 전기/전자공학 | 전기/전자 | - | 정보기술 |
| 충남대 | 공업교육 | 신소재 | 기초과학 | 정보기술 |
| 전북대 | 화학공학 | 자동차 | 영상산업 | 전자정보 |
| 전남대 | - | 자동차 | - | 수송기계 |
| 영남대 | - | 기계/소재 | 기초과학실험교육 | 기계산업 |
| 충북대 | - | 반도체/정보 | 의료·생명공학 | 정보기술 |
| 창원대 | - | 메카트로닉스 | - | 기계산업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3).

둘째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금액이 미미하고 제한적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01-2003)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관련예산의 지방대 배분실적은 <표 5-3>과 같다. 2003년 현재 대학예산 총 2조 6,946억원 중 지방대학 지원금은 1조 8,648억원으로 전체의 69.2%에 이르고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인 1조 3,044억원이 지방 국립대학의 인건비, 시설비 등 직접지원비로 할당되고 지방사립대에 지원된 예산은 3,246억원으로 실제적인 지원 규모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셋째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방대학정책이 구호에 그칠 뿐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를 추진할 적극적 의지도 미흡하여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IMF 이후에 추진되었던 국립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학부제,

그리고 BK21 사업 등이 당초 의도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기득권층이나 구성원의 반대로 중도 변질되어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정책도 지방대학의 연구역량과 지역산업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태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지방대학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 등과 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여 지역혁신기능을 담당하고 고용을 창출할 새로운 기술과 창업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표 5-3> 주요 항목별 재정지원과 지방대 재정지원

(단위: 억원)

| 구 분 | | 2001예산 | | 2002예산 | | 2003예산 | |
|--------|--------------|--------------------|-------------------|--------------------|-------------------|--------------------|-------------------|
| | | 총규모 | 지방대 | 총규모 | 지방대 | 총규모 | 지방대 |
| 전체 | | 21,852 (100.0%) | 15,731 (72.0%) | 25,629 (100.0%) | 17,894 (69.8%) | 26,946 (100.0%) | 18,648 (69.2%) |
| 합계 | | 21,852 (100.0%) | 15,731 (72.0%) | 25,629 (100.0%) | 17,894 (69.8%) | 26,946 (100.0%) | 18,648 (69.2%) |
| 직접지원예산 | 총 계 (국립대) | 14,081 | 11,292 | 15,355 | 12,370 | 16,206 | 13,044 |
| | 인건비 | 8,213 | 6,741 | 9,256 | 7,573 | 10,387 | 8,452 |
| | 주요사업비 | 4,078 | 3,262 | 4,385 | 3,530 | 4,153 | 3,389 |
| | 기본사업비 | 1,790 | 1,289 | 1,714 | 1,267 | 1,666 | 1,203 |
| 간접지원예산 | 총 계 | 7,021 | 4,439 | 10,274 | 5,524 | 10,740 | 5,604 |
| | 국립대 | 2,898 | 1,935 | 3,916 | 2,358 | 3,916 | 2,358 |
| | 사립대 및 기타 | 4,123 (18.9%) | 2,504 (11.5%) | 6,358 (24.8%) | 3,166 (12.4%) | 6,824 (25.3) | 3,246 (12.0%)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 교육인적자원부 이외 관련부처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정부부처에서도 그동안 대학의 연구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였다. 2000년 현재 전체적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대학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약 70%인 2.4조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나머지 0.9조원은

여타 부처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유현숙 외, 2001). 각 부처의 대학관련 사업은 대략 <표 5-4>와 같고, 그 지원내용을 보면 <표 5-5>과 같다.

<표 5-4> 부처별 산학연계정책 추진사업

| 부처 | 연구개발사업 | 기반조성 | | | | 부수적 지원체제 | | 기타 |
|-----------|---------------------------------|-----------------------------|---------------------------|-------------------|-------------------|------------------|-------------------|-----------------|
| | | 인력양성 | 공동연구 기반구축 | 종합연구 단지조성 | 정보 교류 | 창업 지원 | 기술지원 | |
| 과학 기술부 | 선도기술 개발사업 핵심전략 연구개발사업 | - | SRC,ERC RRC | 과학산업 단지 | - | 신기술 창업 지원단 | - | - |
| 산업 자원부 | 산업기술 개발사업 에너지지원기술 개발사업 | 산업기술 대학, 기술인력 양성사업 | 공동연구 기반구축 사업 TIC | 테크노파 크 사업 | 신기술 복덕방 | TBI | 대학산업 기술 지원단 | 테크노 마트 |
| 정보 통신부 |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 | 정보통신 인력양성 사업 | - | 미디어벨 리 조성사업 | - | TBI | - | 사이버 기술 시장 |
| 중소 기업청 |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사업 | - | 지역 컨소시움 | - | 기술협력 /교류사 업 | TBI | 현장중심 기술지도 | |
| 건설 교통부 | 산학연공동 연구사업 | - | - | 과학산업 단지조성 | - | - | - | - |

자료: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0).

과학기술부에서는 그동안 과학재단을 중심으로 한 각종 목적 연구사업 지원과 함께 대학내에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우수연구센터(SRC) 등 연구센터를 설립 하여 공동연구 기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핵심전략, 선도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국가지정연구실을 지정·지원하여 왔다. 산자부에서는 대학내 지역기술혁신센 터(TIC), 창업보육센터(TBI), 테크노파크 사업과 함께 산업기술대학을 설립·운 영하는 등 산학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왔다. 그밖 에 중소기업청, 농림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대학에 대한 여러 가 지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표 5-5> 교육부 이외 기타부처의 대학지원 사업과 추이

(단위: 억원)

| 부처 | 사업명 | 예 산 | | | | | | | |
|-----|------------------|------------|--------------|--------------|--------------|--------------|--------------|--------------|----------------|
| | | 95이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합계 |
| 과기부 | 목적기초연구 | 1,627 | 354 | 405 | 399 | 500 | 705 | 847 | 4,837 |
| | 우수연구센터 | 1,058 | 353 | 429 | 416 | 437 | 443 | 599 | 13,409 |
| | 지역협력연구센터 | 15 | 52 | 70 | 100 | 165 | 185 | 235 | 27,640 |
| | 특성화장려연구 | 29 | 20 | 36 | 38 | 72 | 80 | 80 | 55,635 |
| | 국가지정연구실 | - | - | - | - | - | 732 | 1,018 | 113,020 |
| 산자부 | 공통핵심기술개발 | 3,291 | 686 | 801 | 861 | 860 | 860 | 1,135 | 8,494 |
| | 테크노파크 | - | - | - | 300 | 150 | 150 | 300 | 900 |
| | 신기술창업보육(TBI) | 15 | 20 | 25 | 70 | 200 | 240 | 288 | 19,646 |
|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 10 | 40 | 50 | 50 | 190 | 200 | 280 | 40,112 |
| 정통부 | 선도기반기술개발 | | | | 59 | 35 | 20 | | 114 |
| | 정보통신 우수시범학교지원 | | | 88 | 195 | 200 | 184 | 63 | 730 |
| | 대학연구센터 | | | | | 84 | 100 | 130 | 2,002 |
| | 대학기초연구지원 | 46 | 46 | 46 | 46 | 59 | 50 | 40 | 333 |
| 노동부 | 취업유망분야훈련 | - | - | - | - | - | 150 (30) | | 30 |
| 보건부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 94 (54) | 177 (106) | 276 (178) | 358 (187) | 339 (180) | 395 (211) | | 1,639 (916) |
| | 선도기술 의료공학기술개발 | 34 (19) | 86 (51) | 150 (91) | 150 (69) | 140 (63) | | | 3,838 (293) |
| | 농림부 | 농림기술개발 | 770 | 385 | 510 | 385 (165) | 330 (215) | 315 (285) | 382 |
| 중기청 | 창업보육센터 | | | | 89 | 600 | 495 | 292 | 1,476 |
| | 기술이전센터 | - | - | - | - | - | 2 | 11 | 2,965 |
| | 기술지도대학 | - | - | - | - | | 15 | 30 | 45 |
| |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 110 | 70 | 81 | 101 | 130 | 225 | 350 | 1,067 |
| | 합 계 | 7,044 | 2,183 | 2,810 | 3,145 | 4,140 | 5,212 | 6,080 | |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이외 다른 부처의 지방대학지원 실태를 보면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장기비전 하에 부처별 정책이 조정·운영되지 않은 채 정부 각 부처별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육성을 위한 계획이 주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

어져, 중앙·지방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지방대학에 지원이 특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

3)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지방대학 정책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지방대학정책으로는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 법에 의한 수도권 대학입지 및 정원규제정책과 1989년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 단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상의 관련정책 등이 있다. 먼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은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년 초기에는 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하였다. 1985년에는 규제대상을 고교에서 대학(야간대학 제외)으로 완화하고 1992년에는 소규모 대학은 규제에서 제외하였으며 1998년에는 첨단분야의 증원은 허용하는 등 여러 예외조항과 편법을 통하여 수도권에는 대학과 대학입학정원이 증가하여 그 효과가 반감되었다.

<표 5-6> 수도권 대학규제시책 변화

| 연도 | 규제내용 |
|---------|---|
| 1983.10 | ·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신·증설 및 정원규제 |
| 1985.10 | · 규제대상을 대학으로 한정(야간대학 제외) - 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 1989.12 | · 방송통신대학을 규제대상에서 제외 |
| 1992.12 | · 입학정원 50인 이내 소규모 대학의 신설허용 |
| 1994.4 | · 입학정원 총량규제 도입 |
| 1998.10 | · 총량규제대상에 야간대학 포함 · 첨단분야 소규모대학 입학정원 확대(50명에서 100명으로)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등 첨단분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학) |

자료: 박헌주·이환성(1997) 참조 재작성.

특히 수도권에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신학교를 설립한 후 이를 대학으로 승격받는 편법으로 20여개의 대학이 증가하였으며 대학입학정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수도권의 대학입지규제시책에 따라 서울 이외 지역으로 분교가 다수 입지하였으나, 수도권의 통근통학인구의 유발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수도권정비법상의 대학규제정책과 그 문제점을 부록에 상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부록 2> 참조).

한편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1989년),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에서도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국민의 정부 수립 후 2000년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의 제정과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이를 추진하지 못하였고, 부처간 이견으로 정부입법화 되지 못하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책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창업 등을 통한 자생적 지방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의 연구역량과 지역의 여건이 이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실효를 얻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지역혁신체계를 이루는 연구소, 지역 NGO 등과 지역의 정책당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한 특화산업 선정과 재원 배분 역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역별 안배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원 지원 방식도 지방정부가 일정부분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하고 많은 부분이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시·도 당국의 지역안배적 정치적 논리에 의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4)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평가

대학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의 대학 신증설과 정원의 규제 이외에는 이렇다할만한 지역정책차원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방정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지방대학이 지향

하여야 할 큰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발전계획이 없이 단편적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크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는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교육정책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하향적(top-down) 지원방식보다는 지역실정과 발전목표에 부응한 지역 중심의 상향적(bottom-up) 방식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지방대학 정책은 수도권내 대학신설과 학생증원 억제,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장려 등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차원의 소극적 방안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역 산업인력 및 인재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내실화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지방대학 육성대책은 미흡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내의 대학의 신설이나 정원의 규제정책도 다양한 이유와 편법에 의해 수도권 내 대학 증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서울 이외 지역으로의 분교설치 정책도 서울의 통학·통근 인구의 증가만 유발시키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지방분산, 분권, 분업의 종합적인 지방화 전략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구조의 개편 측면에서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이 자주 바뀔에 따라 지방대학 정책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했다. 사업별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소수 대학의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과 이를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였으나, 예산규모가 적어 지원 대상 분야가 한정되고 지속적이지 못하여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대학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유도해내지 못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 지방대학 재정지원정책은 그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단편적인 재정지원사업을 분산 시행하여, 사업간 중복 또는 대학의 역량이 분산되었

으며, 각 사업별로 대학의 신청분야가 달라짐에 따라 중장기적인 대학의 특성화 유도가 미흡했다.

여섯째,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창업 등을 통한 자생적 지방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의 연구역량과 지역의 여건이 이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실효를 얻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2. 외국의 지역발전 관련 대학육성 정책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의 명문대학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새롭게 등장한 학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기존의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등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미국의 대학들, 대학간 통합과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는 일본의 대학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영국의 대학들, 대학별로 학문 전문화를 기하고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이동하는 프랑스의 산교육, 학문과 현실과의 접점을 찾아 산학협동으로 꽃을 피워 미래를 준비하는 중국의 대학 등 세계 대학들의 개혁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일본대학의 교육개혁

일본은 우리나라와 학제나 교육여건이 비슷하여 이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대학개혁은 2001년 3월 총리직속으로 교육개혁국민회의를 출범시키고 2001년 4월 당시 도야마(遠山純子) 문부상의 「대학의 구조개혁에 관한 지침」(일명 도야마 플랜)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도야마플랜 3대지침은 첫째, 국립대학의 통합·재편, 둘째, 세계적 톱수준의 30개 대학 육성(「톱30」 정

책), 셋째, 국립대학에 민간적 발상의 경영기법도입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 국립대학의 통폐합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고 「톱 30」 정책은 관계자들의 반발에 의해 「21세기 COE」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특색있는 대학교육 지원프로그램과 산학협력프로그램 등으로 이어져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 있는 대학의 집중육성정책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민간적 경영기법도입을 위한 국립대학의 책임운영기관화(독립법인화)는 2004년부터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다.

일본의 대학정책을 ①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책임운영기관화), ②대학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③21세기 연구거점(COE)프로그램, ④특색있는 대학교육 지원프로그램, ⑤산학협동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립대학 독립법인화

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는 국가의 보호에 안주해 온 국립대에서 기업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화되면 국가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면서 재량권은 늘어난다. 그러나 교직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서 각 대학이 채용하는 직원으로 바뀌는 등 여러 혁신적 변화가 있다. 일본 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는 1996년 11월 일본의 하시모토(橋本龍太郎)내각에 의해 발족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행정의 감량화·효율화를 위해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계속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립대학에도 “적자생존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 독립법인화제도는 ‘국립대학 법인법(안)’이 2003년 6월 통과되어 200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표 5-7>과 같다.

첫째, 국가행정조직의 일부였던 국립대학을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여 정부로부터의 예산 및 조직 규제를 대폭 축소하였고 대학운명을 대학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학운영에 민간적 발상의 매니지먼트(management) 기법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즉 민간기업과 같이 최고 경영기구로 “임원회의”제

를 도입하고, 경영협의회를 두어 대학 전체적 관점에서 대학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외 인사를 경영협의회와 학장추천심사회의에 참여시켜 대학운영의 외부개방화를 도모하였다.

넷째, 교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법인체의 비공무원형 체제로 전환함과 함께 능력과 실적에 의한 탄력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즉 국립대학의 급여체제를 능력과 실적에 의한 급여체제로 전환하고 겸직규제를 폐지하여 산학제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사무직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임명권이 대학 총장에게 주어져, 효과적인 조직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대학의 교육연구실적을 제3자 기관에 의해 평가하여 그 결과에 의해 대학을 지원하고 평가내용을 공표하여 국립대학에 명실상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표 5-7> 일본 국립대 독립법인화 주요 내용

| 항 목 | 내 용 |
|-----------|---|
| 교직원신분 | 국가공무원자격 상실. 각 대학이 채용. 대신 교직원은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 등 겸직 가능 |
| 총장권한 | 대폭강화. 임원회의를 두어 대학의 사업계획이나 예산 심의. 그러나 경영과 교육 양면에 최종 책임. 경영은 '운영협의회', 교육은 '평의회'를 설치, 지도를 받음. 임원회의와 운영협의회에는 외부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 재정운용 | 국가에서 받는 교부금은 지금처럼 받지만 사용처는 대학이 결정. 대학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장기융자 받는 것도 가능.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도 가능. 남은 예산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도 자기 수입으로 처리 |
| 조직개편 | 교직원 수, 학생정원, 학과의 설치 및 폐지, 부속학교나 기관의 독립여부도 결정가능. 외국인 총장도 초빙가능 |
| 등록금 | 국가가 정한 일정한 틀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 가능 |
| 목표설정 및 평가 | 대학은 6년 단위의 중기목표와 계획을 만들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외부기관인 '국립대학평가위원회'(가칭)에 제출.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목표달성 여부와 연구수준 등을 평가하고 국가는 이에 근거해 교부금의 액수를 증감 |
| 시행목표 | 2003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2004년부터 일제히 시행 |

자료: 김원섭·김소희(2002).

여섯째, 대학법인 이사회에 민간인 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교과과정 개편이 교수진 맘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민간경영의 이점을 대학운영에도 적극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함께 현행 국립대학의 공동이용기관을 「대학 합동이용기관법인」으로 재편하였다. 즉, 대학을 평가하고 학위수여를 심사하는 「대학평가, 학위수여기구」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의 정비와 재무경영의 개선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재무경영센터」, 그리고 다양한 교육미디어를 개발·보급·활용의 촉진을 위한 「미디어 교육개발센터」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기술지원체제의 효율화와 사무처리의 원활화 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운영은 주로 경영 측면을 심의·결정하는 외부인이 포함된 「경영 협의회」와 교수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로 교학 측면을 심의하는 「교육연구평의회」로 구성하여 기능별로 의사결정구조를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와 유사한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구성원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2) 대학 통폐합과 구조개혁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되자, 대학생존과 발전 차원에서 대학 통폐합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학령인구(18세 인구)는 1966년 149만명에서 2002년 150만명으로 점증했으나, 4년제 대학은 1965년 317개에서 686개로 급증하였고, 전문대를 포함하면 1,227개로 과잉공급 상태가 되어 현재 많은 지방대학이 우리나라와 같이 입학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대학 통폐합은 2001년 6월, 문부과학성의 “대학(국립대학) 구조조정 방침”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는 첫째, 국립대학을 국제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인재대국 및 과학기술 창출국을 지향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국립대학법인화 등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교육 연구 충실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003년 9월 현재, 일본의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 현황을 보면, 단기대학을 포함한 101개 국립대학 중 80%가 대학 M&A를 검토하여 그 중 36개 대학이 현재 실제 통합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山口和孝 2002; <부표 1-5-1> 참조). 그리하여 국립대학 99개 중 35%가 대학 M&A를 추진하고 있고, 2002년 4개교, 2003년 21개교가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되었다.

<표 5-8> 일본 국립대학 재편·통합 현황

| 재편·통합현황 | 기존 대학 명칭 | 새 대학 명칭 |
|------------------------|--------------------------------------|------------------------|
| 2002년 10월 통합 확정 2건 | 야마나시대학 + 야마나시의과대학 (山梨大學 + 山梨醫科大學) | 야마나시대학 山梨大學 (山梨學) |
| | 쓰쿠바대학 + 도서관정보대학 (筑波大學 + 圖書館情報大學) | 쓰쿠바대학 筑波大學 (筑城學) |
| 2003년 10월 통합 확정 10건 | 도쿄상선대학 + 도쿄수산대학 (東京商船大學 + 東京水産大學) | 도쿄해양대학 東京海洋大學 (東京都) |
| | 후쿠이대학 + 후쿠이의과대학 (福井大學 + 福井醫科大學) | 후쿠이대학 福井大學 (福井縣) |
| | 고베대학 + 고베상선대학 (新戶大學 + 新戶商船大學) | 고베대학 新戶大學 (兵庫縣) |
| | 시마네대학 + 시마네의과대학 (島根大學 + 島根醫科大學) | 시마네대학 島根大學 (島根縣) |
| | 카가와대학 + 카가와 의과대학 (香川大學 + 香川醫科大學) | 카가와대학 香川大學 (香川縣) |
| | 고치대학 + 고치의과대학 (高知大學 + 高知醫科大學) | 고치대학 高知大學 (高知縣) |
| | 큐슈대학 + 큐슈예술공과대학 (九州大學 + 九州藝術工科大学) | 큐슈대학 九州大學 (福岡縣) |
| | 사가대학 + 사가의과대학 (依寶大學 + 住寶醫科大學) | 사가대학 住賢大學 (住賢縣) |
| | 오이타대학 + 오이타의과대학 (大分大學 + 大分醫科大學) | 오이타대학 大分大學 (大分縣) |
| | 미야자키대학 + 미야자키의과대학 (宮崎大學 + 宮崎醫科大學) | 미야자키대학 宮崎大學 (宮崎縣) |

자료: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416/020.html>.

일본대학 통합의 특징은 첫째, 동일 지역 내 학문 영역상 유사한 대학 간에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의과대학을 비롯한 단과대학 성격의 대학은 종합대학으로 흡수·통합되고 있다. 셋째, 학부간 중복이 적고 재정적으로 보완관계에 있어 우선 갈등이 적은 분야부터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 각 대학이 독립적으로 대학을 유지하면서 타 대학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으로 5개 지역에서

연합·제휴 형식의 M&A가 <표 5-9>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9> 일본의 대학 연합 추진 현황

| 연합·연합상황 | 연합 대상 대학 | 해당지역 |
|-----------------------|---|---------------------|
| 6개 단과대학 홋카이도(北海島) | 홋카이도교육대학(北海島教育大學) 무로란공업대학(室蘭工業大學) 오타루상과대학(小樽商科大學) 오비히로축산대학(帶廣畜産大學) 아사히가와외과대학(旭川醫科大學) 기타미공업대학(北見工業大學) | 北海島縣 |
| 3개 대학 北東北 | 히로사키대학(弘前大學) 이와테대학(岩手大學) 아키타대학(秋田大學) | 青森縣 +岩手縣 +秋田縣 |
| 4개 대학 연합 | 도쿄의·치과대학(東京醫科齒科大學) 도쿄외국어대학(東京外國語大學) 도쿄공업대학(東京工業大學) 히도츠바시대학(一橋大學) | 東京都 |
| 국립대학 연합 호쿠리쿠(北陸)地區 | 토야마대학(富山大學) 토야마의·약대학(富山醫科藥科大學) 타카오카단기대학(高岡大學) 가나자와대학(金澤大學) 호쿠리쿠과학기술대학원대학 (北陸先端科學技術大學院大學) 후쿠이대학(福井大學) 후쿠이의과대학(福井醫科大學) | 富山縣 +石川縣 +福井縣 |
| 국립대학 협의회 시코쿠(四國) | 도쿠시마대학(德島大學) 나루토교육대학(鳴門教育大學) 카가와대학(香川大學) 카가와외과대학(香川醫科大學) 애희메대학(愛媛大學) 고치대학(高知大學) 고치의과대학(高知醫科大學) | 德島縣+香川縣 愛媛縣+高知縣 |

자료: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416/020.html>.

한편, 일본의 사립대학은 2002년 현재 전체의 76%인 512개가 있다. 오사카 국제대학이 2002년 동일법인에 속하는 3개 대학을 통폐합하여 종합대학으로 설립 되었으며, 2003년 릿시칸대학(立志館大學)이 도산하여 구레대학(呉大學)으로 흡수되었다.

(3) 21세기 연구거점(COB) 프로그램

21세기 COB 프로그램은 21세기에 일본의 대학을 세계의 톱레벨로 육성하기 위해 2001년의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침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시행된 대학의 연구거점형성을 위한 대학 보조금제도이다.

학문분야 별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교육 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연구수준의 향상과 세계적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방식은 학문분야별로 응모를 받아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2002년에는 학문분야 10개 중 생명과학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응모를 받은 결과 163개 대학에서 464건 과제를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50개 대학 113건의 과제에 약 1,8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2003년에도 611건의 지원신청과제 중 133건에 약 3,34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특색있는 대학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학에 있어서 연구의 수월성도 필요하지만 교육의 질이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개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대학교육에 이바지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지원함으로써 이를 고등교육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교육목표 개설에 일정한 실적이 있거나 공공성(사회적 사명)이 있으며, 고등교육의 활성화, 교육방법의 개발, 교육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제와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5) 지역산학협동 프로그램 지원

국립대학은 지역의 역사·문화·경제·산업과 결합된 교육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대학은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지역현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사업은 국립대학과 지자체의 진

정한 파트너십의 확립과 대학이 지역공헌을 조직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공헌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2002년 약 100억원, 2003년 150억원이었고, 대략 대학당 3억원 내지 8억원이 지원되었다. 2002년에는 20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5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74개 지원대학 중 26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여기에 약 5,432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발전과 연계된 대학 육성사업으로, 지역 클러스터 창성 사업, 도시지역 산관학연 연계추진 사업, 지역공헌 특별지원사업 등이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산관학 연계체제 하에서 대학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연구인력이 집중된 대학을 신산업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10년 안에 전국에 「일본판 실리콘 밸리」를 10개로 창출하고 대학 특허취득을 현재 100건을 10년 후 1,500건으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 이공학부에 비즈니스 강좌를 설치하고 기업인을 교수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하여 기업가형 인재를 육성하며 기업과의 공동연구와 기업의 학내시설 이용 촉진, 공동연구센터의 기능강화 등으로 산학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2) 중국대학의 교육개혁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뒤에는 중국 대학들의 눈부신 발전이 한몫을 하고 있고, 중국대학들의 눈부신 발전의 바탕에는 정부의 과감한 육성정책과 아낌없는 투자가 있다.

중국의 대학은 종전에는 전부 국립대학이었으나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의 도입과 더불어 1993년부터 사립대학이 등장하였고, 중국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학개혁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

교수 봉급도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지급하는 등 철저한 능력급제로 연구하지 않는 교수들은 학교에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 소위 “211공정”과 대학합병으로 국가가 1백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0개 대학을 다시 선정해 세계일류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세계일류대학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3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약 1,26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밖에 텐진대, 난카이대, 정장대 등의 대학을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키우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약 840억원을 지원하였다.

중국의 대학육성정책은 크게 ①대학의 통합과 M&A, ②「211」공정, ③산학 연계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 통합·합병

중국에서는 1992년 이후 ‘一流大學 건설’과 ‘科教興國’을 목표로 한 고등교육 체제 구조조정 사업의 핵심 과제로 대학 합병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대학의 합병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100개 일류대학과 중점 학문분야를 육성한다’고 하는 일류대학 건설 프로젝트인 ‘211공정’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부표 1-5-2> 참조).

중국 대학합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주도의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대학도 발전차원에서 이에 적극 반응하고 있다. 중국 대학의 합병은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특성상 국·공립대학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 행정부와 위원회)와 省·市·自治區 등 상위 관리부문의 주도 하에 전국적 범위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개별 대학들에서도 합병을 통하여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중점지원 대상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대학간 합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둘째, 대학의 종합화를 강화하는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국

가가 된 후, 고등교육체제 구조조정이 기존의 종합대학을 공업·농업·의약·사범 등의 단과대학으로 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은 기존의 단과 중심 대학들을 종합대학에 흡수 통합하여 거대 종합대학을 건설하거나 동일 지역의 종합대학을 합병하는 등 대학의 종합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중국대학통합은 중점 대학 중심의 집중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대학의 합병은 '211공정'과 '985공정'에 의하여 선정된 중점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학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토대로 일부 중점 대학을 '중국 일류대학 → 아시아 일류대학 →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전시키려는 점진적·장기적 목표를 갖고 대학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 다양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고등교육 이수율(2002년 현재 고등교육 순수 입학률이 15%,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률은 83.5%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정원의 대폭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증편과 신설 등 양적 성장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의 가중을 막기 위하여 기존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 즉, 기존 국·공립 대학의 대대적인 합병과 구조개혁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사립대학(民辦大學)을 적극 권장하고,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中外合作大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고등교육체제는 기존의 국·공립 대학 위주의 단일·폐쇄 구조를 탈피하여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중외합작대학 등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다양화·개방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2003년 7월 1일 현재 중국에는 모두 1,517개의 대학(전문대학 포함, 사립대학 제외)이 있다. 1992년 이후 연도별 합병 현황을 살펴보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총 733개의 대학을 288개로 통합하여 평균 2.55개의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되었는데, 연도별 합병상황은 <표 5-10>과 같다.

<표 5-10> 중국의 연도별 대학 합병 현황(1992-2002)

| 구 분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계 |
|-----|------|------|------|------|------|------|------|------|------|------|------|-----|
| 합병전 | 54 | 22 | 29 | 51 | 46 | 41 | 78 | 72 | 221 | 50 | 69 | 733 |
| 합병후 | 20 | 9 | 11 | 21 | 17 | 16 | 29 | 28 | 85 | 23 | 29 | 288 |

자료: 서정화 외(2003).

(2) 「211」 공정

1993년 중국은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요강》이라는 교육 청사진을 제정, 발표했는데, 이는 “211공정” 계획을 실시하는 일이었다. 이 계획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국가가 2010년까지 100여 개 정도의 중점 대학과 학과를 육성하여, 세계 선진 대학 수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211공정”은 제9차 5개년 계획(1995~2000년)에 98개 대학교와 602개 중점학과가 “211공정”으로 선정되었고 2002년까지 총 약 2조 5,76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중국의 211공정은 지금까지 다양한 성과를 얻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1공정”의 실시는 대학 교육 발전에 새로운 생기와 동력을 불어넣었다. 지방대학과 지방정부 등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육성 혹은 합병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211공정”에 선택되기 위해서 대학의 체제와 교육 발전 여건을 개선하였다.

둘째로 “211공정”은 학과간 경쟁을 촉발하여 중국 전체적인 대학 교육수준의 향상을 가져왔고 대학의 능력을 제고하였다.

셋째로 “211공정”은 중국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가속화시켰다. 2001년까지 “211공정”에 들어온 학교에서 양성한 박사, 석사, 본과생의 비율이 전국 대학교의 각각 84%, 69%, 32%를 차지하고 있다.

(3) 중국의 산학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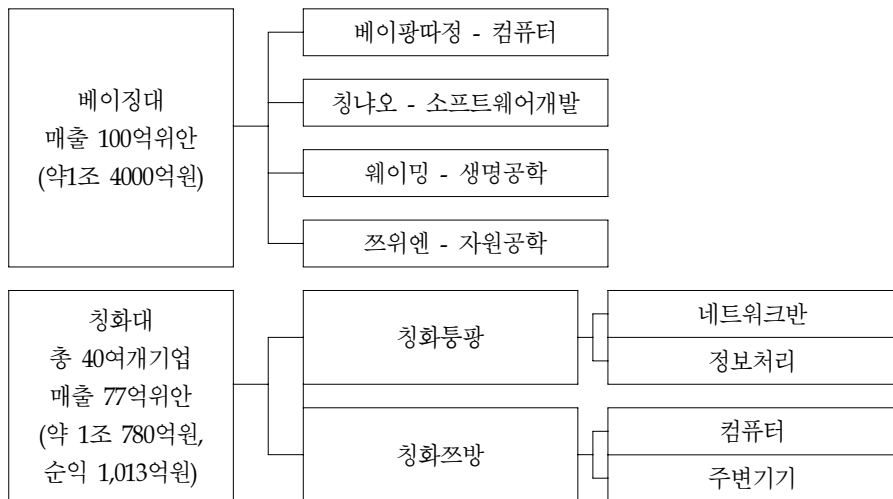
1995년부터 추진된 이른바 “211 공정”으로 불리는 중국대학의 변혁은 국제화·실용화·미래화를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의 고등 교육 개혁프로젝트의

시범대학이자 그 산물인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교육 시스템을 기존의 이론중심에서 탈피, 경제발전과 학문을 실용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다.

중국의 MIT 대학이라 불리는 칭화대는 ‘칭화통광’이란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칭화대의 R&D 경영관리부서는 대학의 첨단기술과 외부의 기업 벤처캐피탈을 연계해 주고 있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인 베이징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바이오테크업체인 ‘베이팡따정’이라는 그룹도 팡정, 칭냐오, 웨이밍, 쑤위엔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소위 “재벌기업”이다.

<그림 5-1> 중국 북경 및 칭화 대학의 첨단기업 소유 현황



자료: 김원섭·김소희(2002).

중국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는 베이징 소재 중관춘에는 베이징대, 칭화대, 인민대와 벤처기업들이 모여 산합협동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칭화대에서는 지난 2001년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환경 등 각종 첨단산업을 운영해 총 77억 위안(약 1조 780억)의 매출을 기록했고, 베이징대는 총 100억 위안(약 1조 4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3) 유럽 각국 대학의 교육개혁

(1) 영국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8년 “교육은 우리가 마련하는 최고의 경제 정책”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영국정부의 요청으로 “론 디어링(Ron Dearing)”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21세기를 내다보는 영국의 야심적인 고등교육개혁이 제시되어 있다.

영국은 1995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고용부를 통합하여 「교육고용부 (DFEE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를 설립함으로써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였다. 즉, 영국은 국민의 고용가능성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실용적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 통합을 단행하고, 종래 “Education for Character/Cultivation”으로 표현되어 온 인성교육 중심의 전통에서 기술훈련 위주의 새로운 직업교육 문화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

영국은 1980년대에 대학평가제를 도입하고 학교경쟁체제로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500년이라는 뿌리 깊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영국 대학들은 가시적인 제도개혁을 추구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완고한 분위기로 인해 급격한 변화보다는 특정부문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혁을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다. 그 중요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 통합

영국에서의 대학개혁 동향을 보면, 1970년대 중반부터 통합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1975년도에 South Wales and Monmouthshire School of Mines 와 Glamorgan College of Education이 통합되어 글래모건 대학(Univ. of Glamorgan)이 만들어진 이후 10여개 대학이 통합되었다(<부표 1-5-3> 참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를 중심으로 대학 통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및 협력기금(The Restructuring and Collaboration Fund)”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기금은 1997~1998년도에 1,000만 파운드(약 2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이후 2000년도까지 추가적으로 1,500만 파운드(약 3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대학 특성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대학구조조정이나 외부자금유치 등을 통해 재정압박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이라는 전통적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이 전세계적인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학교는 대형강의와 "튜터리얼"의 이분화된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학부 교육을 제공하는 임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튜터리얼'이란 학부생 한 두명이 대학원생 "튜터"(tutor)를 배정받아서 대형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된 공부를 하는 일종의 "개인지도" 수업이다. 한편 사회과학 전문대학으로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런던정경대(LSE)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ELSE(Enterprise LSE)로서 이 공계 학과들이 산학협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듯 ELSE는 사회과학적 지식을 원천으로 기업이나 국가가 요구하는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이윤창출과 학교명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③ 산학협동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영국의 대학들도 산학협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적극적인 산학협동을 위해 대학 부지에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여 그동안 약세를 보여 온 IT-BT등의 첨단응용과학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도 최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혁특위를 가동해 기구 축소 및 교육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교직원 개편 등과 같은 과감한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첨단기술연마에 필요한 온라인 연구센터와 "오스카"라는 이름의 메인 프레임컴퓨터를 중심으로 전산센터를 개설하였다. 또한 학내 연구결과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부설회사인 아이시스 이노베이션 등 4개 회사도 설립하였다.

(2) 프랑스

프랑스 대학의 특징은 대학평준화가 이루어져 지방대학이 활성화되고 대학간 교류제휴가 활발한 것이다. 거기에다가 1998년에는 유럽의 대학교육을 통합하는 “유럽대학” 계획이 프랑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클로드 알레그르에 의해 제창되었고, 여기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가담하여 실현을 보고 있다. 프랑스 주요 대학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학평준화와 교류제휴의 일반화

프랑스 대학은 한국의 종합대학과는 달리 한 대학이 백화점식으로 모든 학과와 단과 대학을 망라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 모든 학위가 전공별로 전문화 된 대신 대학간 격차, 대도시와 지방대학의 차별도 거의 없다.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도 여러 개의 대학이 있지만 학과가 중복 개설된 경우는 없다.

프랑스에서는 학문적 경험 축적을 위해, 또는 연구주제에 따라 대학을 옮기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더 나은 연구 환경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따라 활발하게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프랑스 대학이 일류대, 이류대, 삼류대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이같이 활발한 학문 교류 때문이다.

프랑스는 1968년에 제정된 에드가 포르법에 의해 소르본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적 전통을 현실 학문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대학을 재편하였다. 이에 따라 소르본 대학의 일부와 파리경법대학이 결합하여 파리 1대학, 소르본 대학 일부와 파리법학학교가 결합하여 파리 2대학, 소르본 대학의 인문학적 전통과 파리 동방학교가 결합하여 파리 3대학, 소르본 대학의 인문학적인 전통을 그대로 고수한 파리 4대학 등으로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현재 대학간 교류와 제휴는 유럽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유럽의 대학교육을 통합하는 “유럽대학” 계획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이미 유럽의 3,000개 대학 중 약 200군데가 이 제도를 찬성, 국경 없는 학점의 인정안을 채택하고 있다.

② 프랑스 U3M (Universit du 3 Millnaire)

프랑스에서는 1999년 12월 산학협동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를 목표로 지방정부와 기업, 연구소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을 혁신하기 위한 [U3M](2000~2006)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의 하나로, 대학과 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방을 특성화하여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각종 시설을 개선하고 지방대의 역량을 강화하며 유럽 통합 이후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프랑스의 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킬 기반을 조성하였다. 대학과 기업의 신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공·민영 연구소, 대기업간의 협력 관계를 이끌 22개의 '국립 기술연구센터' 설치를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연구 중심지를 선정하여 연구 다극 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bottom-up 방식에 의하여 각 지역별로 특정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지방의 특성화를 추진하며 비용은 중앙정부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국가-지역계획계약: CPER)를 마련하였다. 현재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의 관건은 지방대와 기업, 연구소, 지자체 사이의 정보 네트워크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계획은 2000~2006년간 약 450억 프랑(정부 270억 프랑, 지방 180억 프랑: 약 4조5천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2007~2015년까지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의 협력 연구체제의 중심역할을 맡게 될 국립기술연구센터(CNRT)를 22개 설립할 계획이다.

③ 산학협력과 대학의 신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1999년 교수의 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 진흥법"을 제정하여 연구원이나 교수가 기업창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연구원의 창업수가 연간 1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신생 신기술 기업을 위하여 대학의 연구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육성적 편의시설 제도와 벤처 캐피탈 모금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29개의 육성적 편의시설이 설치되었고 7개의 벤처 창업펀드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법조항들은 대학들로 하여금 산업과 상업활동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정부는 대학부문이 국가혁신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연방교육연구부(BMBF)에 의하여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실천수단의 하나로서 목표 지향적인 산·학·연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독지역에 “혁신지역 (Inno Regio)”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을 통해 비교적 낙후된 동독지역의 과학기술능력의 향상, 과학기술의 산업계로의 이전 강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연구, 과학기술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0년도의 경우 30억 마르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는 동독지역의 과학기술능력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공헌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계속 이어져 최근에는 “혁신적 지역성장거점 (Innovativer regionaler Wachstumskerne)”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4) 미국 대학의 교육 개혁

미국의 많은 대학들도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 대학들의 힘든 구조조정의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의 주요 대학개혁 전략은 조직의 축소운영, 프로그램의 합병 또는 폐지, 인적자원의 감원, 그리고 새로운 대학 관리기법의 도입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대학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1) 기업형 연구중심대학

미국 명문대학의 최근 대학발전 노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형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체제전환이다. 즉, 그 동안 ‘상아탑’의 울타리 내에서 연구와 교육에 치중하던 대학들이 과감하게 외부 기업들과 연계, 연구성과들을 상업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선두주자는 실리콘밸리의 중심대학인 스탠포드대로서 학내에 설치된 OCL(기술특허관리소)과 CIS(통합시스템센터)라는 핵심기관을 통해 미국형 산학협동의 모델을 창조해가고 있다. OCL은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성과가 시장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특허를 관리하며 CIS는 교수들이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산업체로부터 충분한 연구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양자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밀접한 산학협동으로 스탠포드대는 풍부한 대학운영기금을 확보하고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이중효과”를 내면서, 세계 최고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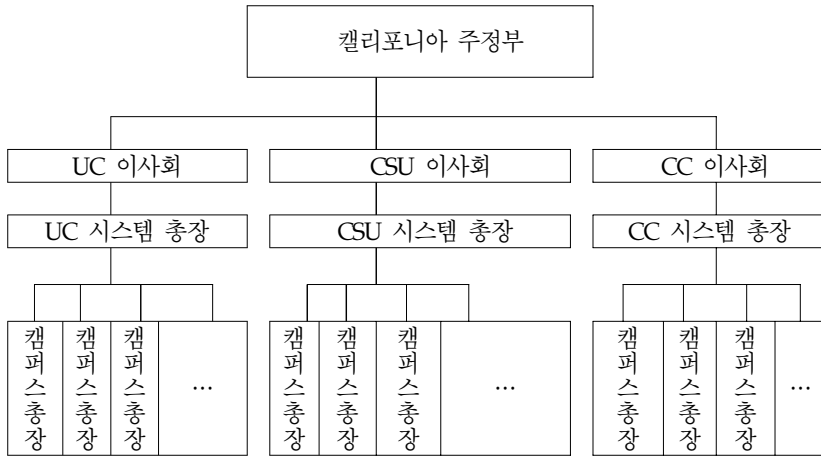
(2) 대학연합체제

미국과 유럽, 일본의 대학들도 자신을 과감히 버리며 생존의 해법을 찾고 있다. 이들 대학이 찾은 대안은 “연합대학체제”구축으로 이는 각 대학이 고유한 특성을 잃지 않으며 교수 인건비 절감과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연합”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대학연합체제 구축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주의 대학간 연합체제를 보면 캘리포니아대 시스템(UC), 캘리포니아주립대시스템(CSU), 개방대학 시스템(CC) 등 세 가지 형태의 연합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학간 합병구도를 예를 들면 다음의 <그림 5-2>와 같다.

미국의 사립대인 햄프셔, 마운트홀요크, 스미스, 암허스트칼리지와 메사추세츠 주립대가 컨소시엄을 구성,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 특징은 특히 교수공용 임용제(joint appointment)를 도입, 순환강의 부전공제 시행, 교차등록(cross registration) 허용, 4500개의 공동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5-2> 캘리포니아주 대학간 합병구도



자료: 김원섭·김소희(2002).

3. 국내의 대학 산학협력 성공사례

1)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 성공사례

(1) 한국산업기술대학 산학협력 성공사례⁷⁾

①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성공요인

1998년에 개교한 산업기술대학은 산업공단 인근에 1개씩의 공과대학을 만들어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 핀란드의 모델을 벤치마킹, 정부가 개교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설립되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주변에 시화, 반월, 남동공단 등 중소기업 1만개가 입주해 있는 최적의 산학협력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으며, 산업현장의 강의실화, 학교를 기업 연구실로 개

7)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3)을 참조함.

방하고 기업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고가의 첨단 연구기자재를 갖추고 현장중심교육과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가족회사제도”운영, “프로젝트실습 학습제”실시 등 특성화된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조기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지난 2000년부터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를 기본 틀로 하는 독특한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기술대와 산업체간 기술·경영지도 및 공동연구 등의 기술교류와 교수-학생의 현장연수, 실험·실습장비와 기자재 상호활용 등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산학협력체이다.

또한 가족회사 현장실습 결과에 의한 학점취득을 의무화한 “프로젝트 실습 학습제”를 실시하고, 산업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이 방학을 이용, 산학협력을 맺은 기업현장에서 현장 실습한 결과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24학점). 그 외 총장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현장 경험과 학문적 이론으로 무장한 우수한 교수진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② 한국산업기술대학 자체 산학협력 사례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매칭 펀드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50%, 지자체 25%, 참여기업 25%로 구성된 컨소시엄방식으로 운영된다. 산기대는 2003년도에 총 15개 공동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 운영

이는 대학 전공교수 및 학생들이 일정기간 기업현장에서 기술·경영 애로요인

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즉,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기술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것으로 1일 지도에 15만원이 드는 비용은 정부가 70%, 지도업체가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산기대 등은 총 55과제(1개사 1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산기대가 23개, 경기공대가 17개, 안산공대가 15개로 나타났다.

□ 기술인력 양성교육

이는 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현장 적응력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도모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및 실험실습비 등을 중소기업청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기업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산기대 등은 총 54개 과정에 약 2,300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한 바 있다.

□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신기술보유 예비창업자에게 연구공간 제공 및 담임 지도 교수제 등을 통한 기술·경영지원으로, 창업보육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기대는 대학학과의 특성과 연계된 특화기술기업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기업 20개사(5개 졸업)가 있다.

□ 대학보유 기자재 개방

대학보유 고가의 기자재를 기업체에 개방·활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등 구입부담 경감 및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산기대는 90여 개의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 기자재를 개방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28개사(175회, 496시간)가 이용하였다.

□ 졸업생 산업체 취업 지원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을 실시,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결과, 2003년 현재 취업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 가족회사제도 운영

이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기술·경영·법률 등의 자문, 실험·실습 장비의 이용 등 전담 교수제를 통하여 총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산기대 1,190개사가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회사 현장 실습 결과에 의한 학점취득을 의무화한 “프로젝트실습 학습제” 실시로 효율성을 제고하려 노력하고 있다.

③ 산기대와 산업단지공단의 산학협력 추진

실무중심의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및 성공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e-비즈니스 인력양성교육(세미나)을 개최하였다. 전통기업의 e-비즈니스 경영 접목·도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교류, 공동연구는 물론 산학협력을 통한 실천대안 마련을 위해 e-비즈니스 경영·과학연구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산기대와의 산학협약에 의거 입주기업체 근로학생에 대하여는 산업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기대 및 산단공, KOTRA와 공동으로 2001년부터 사이버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입주기업체 CEO에게 경영 및 산업단지관련 정보를 e-mail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대고객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데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정책·경영·법령, 경제분석, 뉴스레터 등이다.

(2) 한동대학 산학협력 성공사례⁸⁾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성공사례 중 또 다른 하나는 한동대학교를 들 수 있다. 이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 실시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4회 선정(96년, 97년, 98년,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실시 지방대학 육성 사업 우수대학에 2년

8) 한동대학교 홈페이지(www.ha-c.kr)에서 참조함.

연속(2002년, 2003년)으로 선정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대학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의 탁월성

많은 대학들이 학부제와 다전공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한동대학교의 무전공, 무학과 입학제도는 기존의 대학 개혁을 뛰어 넘는 혁신적인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계열에 상관없이 전공과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도록 하고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전공에 대해 심도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그와 동시에, 인접학문에 대한 연관적인 지식의 습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대학에서는 모든 학부들은 연계성 있는 전공들이 하나의 군으로 묶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광역군에서 학생들은 2개 이상의 학과를 전공으로 택하는 복수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은 전공에 상관없이 반드시 12학점 이상의 전산관련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졸업요건으로는 전산인증 자격증 취득 또는 전산부전공을 요구하고 있어 졸업한 학생이라면 학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수준 이상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고 있어 취업시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기숙사에는 학생 1인당 1LAN이 설치되어 있어 기숙사내에서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PC가 없는 학생을 위해 각 호관별 공용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PC가 설치되어 있고,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입생 및 해외학생은 전원 입주가 가능하다.

국제화 시대에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입학한 학생들은 수요자인 기업, 대학원, 기타 기관의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교내외의 모든 자원을 활용한 정규 및 비정규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다. 예컨대 동북아 지역통합 전문가 과정(국제어문학부), 재무금융 전문가 과정(경영경제학부), Smart/Mobile Computing 전문가 과정(산업정보디자인학부+전산전자공학부+경영경제학부) 등이 그 것이다.

그리고 LG전자와의 산·학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산학협력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지털 TV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본격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 결과 한동대학교는 전체 졸업생 중 취업률이 약 80%(최근 3년간)에 이르고 있다. 단순히 취업률이 높다는 것보다 어떤 곳에 취업하느냐가 중요한데 졸업생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IBM 등 대기업에 대거 취업하고 있으며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국내 서울대, 포항공대, KAIST, ICU 등과 해외 우수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는 등 그 효과가 매우 크다.

□ 국제화 교육

199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남미, 일본, 중등 등 총 43개국 해외학생 및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정원의 30% 수준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국제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차별화, 실무화로서 외국인 학생 및 교수들(외국인 교수 비율 전교수의 30% 이상)과 생활속에서 직접 접촉하며 생활영어를 배우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1, 2학년 동안 12학점의 영어회화 및 영어토론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다. 3, 4학년 교과과정의 경우에는 전공강의의 30% 이상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고,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TOEFL 500점(국제어문학부 520점), TEPS 500점(국제어문학부 600점), 또는 TOEIC 600점(국제어문학부 65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GEEE’란 미국 IIE(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가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우수의 대학들이 주축이 되어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대학 등 90여개의 대학들이 참여, 상호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각국의 산업시스템을 연구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GEEE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학하고 있는 한동대학의 등록금으로 교환 대상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동대학교는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GEEE 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은 국제변호사 양성을 위한 3년 과정의 미국식 로스쿨인

데 아시아 최초로 설립되었고, 미국로스쿨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완전 영어로 강의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법률도서관을 설립하였는데 영미법을 비롯한 국제법, 미국연방판례집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인 2만 여권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2) 해외대학 산학협력 성공사례⁹⁾

(1) 미국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실리콘밸리 지역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주변의 10여개 도시로, 25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컴퓨터·통신·반도체, 인터넷, 바이오 등 하이테크기업들이 9,000여개 입주해 있다. 이 지역의 지역총생산은 2,050 달러로 한국 GDP 4,200억 달러의 절반 수준(2001년)에 이르며,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의 30% 이상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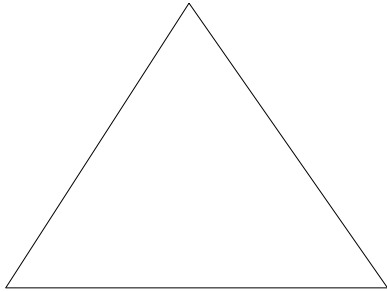
이러한 실리콘 벨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50년대 스탠포드대 공과대학의 터먼(Fred Terman)교수가 우수한 졸업생들이 동부지역 유출로 지역과 대학의 발전이 정체되는 것을 우려하여 졸업생들의 벤처 창업을 독려하면서 HP 등의 벤처기업이 창업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벤처기업들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기업연계구조가 형성되어 반도체산업과 컴퓨터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무선랜, 바이오, 나노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으며, 대학·연구소, 대기업, 벤처기업 및 전문서비스 공급자들이 밀집된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대학은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공급하면서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탠포드, 버클리, 산호세 주립대학, 산타클라라 대학 등 4개 주요 대학이 첨단기술과 인력을 공급하였고, 이러한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평가실험과 실제 생산 및 운영을 담

9) 해외 성공사례는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3), 최은옥(2004), 홍성범(2001), Michal E. Porter(2001)를 주로 참조함.

당할 인력들을 공급하는 단과대학들도 함께 존재하였다. 각 대학 그룹의 지역발전 역할을 도표로 나타내면 앞의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실리콘 벨리의 인재 공급체계



고급 기술자: 스탠포드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
중급 기술자: 산타클라라 대학,
산호세 주립대학
초급 기술자 : 7개의 단과대학

자료: 가네마키 나오후미 著(신충우 譯), 실리콘벨리 파워, 1995; 삼성경제연구소, 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 2002에서 재인용.

또한, 대학은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정보를 교류하였다. 공학, 물리,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능력을 보유한 스탠포드 대학이 실리콘벨리의 경제·산업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스탠포드 대학의 창업관련 과목은 2001년 현재 30여개로, 이러한 과목들은 공과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교수들은 상업계의 동향과 현장감 있는 기술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창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실리콘벨리에 소재한 기업의 직원들은 파트타임 학생의 자격으로 스탠포드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대학내 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학에서 생산된 각종 지적재산권을 구매하여 해당 분야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모하는 인터넷 경제는 이 지역에도 변화가 찾아와 2000년 이후 침체되어 IT산업 절정기의 총매출액에 비해 18%가량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28개의 기업이 파산하고 19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지만 실리콘벨리는 다시 다음 파도를 기다리며 준비 중에 있다.

(2) 미국의 샌디에고(San Diego)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 있는 우리나라 경상남도 크기의 인구 280만을 가진 도시로 보스턴, 실리콘밸리와 함께 미국의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히고 있다. 이 지역은 지역총생산(GRP) 성장률이 5.1%(2002년)로 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천여 건 이상의 바이오 특허가 출원되고, FDA의 최종 임상 단계에 있는 의약품이 45개(2002년말 기준)일 정도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지역은 80년대 이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학(UCSD)으로부터 출발한 벤처기업들을 바탕으로 발전하였고, 현재도 이러한 기업들이 이 지역 내 바이오 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샌디에고 대학의 애트킨슨 총장은 기업과 지방정부를 설득하여 CONNECT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산·학·관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UCSD를 연구 및 산학협력 측면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였다.

샌디에고 지역의 발전과정에서는 샌디에고대학을 비롯한 지역 내 대학이 기술 혁신과 창업을 선도하였다. 한 예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약개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샌디에고대학의 오브라이언 교수가 대학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경장애 치료용 신약을 개발하고 샌디에고대학 연계프로그램(USCD CONNECT Program)을 통해 지역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이후 오브라이언 교수의 개인 네트워크와 샌디에고 바이오기업 협회를 통해 제품 판매 및 기술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시장을 개척하였다.

(3) 영국 캠브리지(Cambridge)

런던의 북쪽 80km 지점에 소재하고 있는 캠브리지 지역 내의 캠브리지 지구(면적 16만평)에 형성된 사이언스 파크는 캠브리지 대학과 인접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연구개발시설과 저렴한 부지 제공이 가능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입지 여건으로 캠브리지 지역의 경제발전을 주도하였다. 인근에 캠브리지 트리니티 대학(Cambridge Trinity college), 해리엇 & 와트 대학(Harriot &

Watt college)등의 유명 대학들이 대학촌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컴퓨터 하드/소프트웨어, 과학장비, 전자산업, 그리고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발전은 1969년 캠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위원회가 대학 주변에 과학에 기초한 산업의 확장을 건의하는 「Science Park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1971년 이후 캠브리지시가 이 계획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첨단 산업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캠브리지 대학 주변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약 16,500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1999년 이후에 영국 정부는 기술 지원을 산·학 연계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여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등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대학은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형성과 지역 첨단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1970년대 캠브리지 지역에 신생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캠브리지 대학의 역할이 매우 컸다. 당시 창업자 가운데 17%가 대학출신의 교수, 연구자, 졸업생 등이었다.

캠브리지 지역에서는 밀접한 산학협력체제(joint venture)가 구성되었다. 창업한 벤처 기업의 고용자 가운데 30%이상이 과학자나 엔지니어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지방의 연구 기관과 연계를 맺고 있다. 특히 그 중의 90%는 대학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진흥 분위기, 트리니티 칼리지 등 유명대학의 소재 등이 당시 영국 내 CAD, Software등 첨단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와 맞물려 지역의 성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핀란드 울루(Oulu)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울루시와 10개의 자치구로 구성된 지역으로 약 2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82년 북유럽 최초의 사이언스파크가 설립되었고 지역 전체가 하이테크 분야의 거대한 복합 기업체를 이루고 있다. 1999년 8월에는 세계 최초로 도시 자체를 '울루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라는 이름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바도 있다.

이 지역은 핀란드 국내 총생산의 4%, 전체 R&D 투자비의 약 30%, 국가 수출액의 2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국가의 상징이자 핵인 노키아 이동전화부문 연구소 등 2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에 4,500명 이상의 IT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대학과 연구소가 입주하면서 하이테크 분야에 본격 진출하였다.

1958년에 올루대학(Oulu University)이 설립되었고, 1974년에 핀란드 기술연구센터(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의 한 unit가 개설되었다. 1982년 올루 사이언스파크가 형성되면서 IT관련 혁신이 가속되었고, 올루시 의회와 지역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테크노폴리스를 설립하여 첨단분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2000년대 들어 이 지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Vision 2006」을 마련하고, 올루를 유럽 북부지역의 연구, 지식, 물류 분야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발전에 있어 대학은 선도기술 개발을 통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 교육과 정보 공유를 위한 통로 기능을 해 왔다. 올루 대학은 대학 내에 다양한 연구소를 설치하여 향후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도기술 개발에 주력하였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의 접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IT, BT, 환경 분야에 집중)하였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IT관련 과정을 보조하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올루 대학의 Infotech Oulu Lecture Series, Intensive Courses를 들 수 있다. 특히 올루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 교육 프로그램인 AGORA는 학습개발에 관심있는 인력들에게 열린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현장인력들의 능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중국의 중관촌(中關村)

중국의 중관촌은 북경시 서북부의 해정구(海澱區)를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 지역이며 중국 첨단산업발전의 3대 거점 중 하나로 R&D 중심의 두뇌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 소프트웨어, 인터넷, IT 관련 R&D기능이 탁월한 「중국의 실리콘 벨리」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북경대학, 칭화대학을 비롯한 70개의 명문대와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일본의 후지쓰, 캐논, 도시바, 중국의 최정상 IT기업인 연상(聯想)과 방정(方正), 화위(華爲) 등이 집적해 있다. 이 지역의 공업생산액이 북경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초과하며, 기업들의 매출액도 95년 21억 위안(약 3천 2백 55억 원)에서 2002년 2백 90억 위안(약 4조 5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용으로 수입된 전자기기나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모여들었다. 특히 1988년 중관촌 지구를 중심으로 중국 최초로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인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 시험지구」가 지정되면서 중관촌이 실질적으로 탄생하였고, 이 지역의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 체제의 개혁이 현재의 중관촌을 만든 계기로 작용하였다.

1985년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의 대가로 대학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인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학이 보유한 과학기술 자원에 대하여 비용과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술의 상업화가 시도되었다. 이 정책은 중국의 연구 개발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와 대학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동시에 첨단산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존재로 부상하게 되었다.

대학은 대학기업을 통해 첨단 기술 인력 공급 및 첨단산업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대학 소속 기업들은 대학이 보유한 지적 자원과 일정한 고정자산 및 자금을 이용해 신상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은 대학에 안정적인 연구 실용화기지를 제공해 주고,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어 대학과 대학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4. 국내의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사례의 시사점

1) 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

대학의 통합과 M&A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통합을 통한 대학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2003년 1월 4년제 릿시칸대가 학생 부족으로 사실상 폐교한 것을 시작으로 ‘대학 도산’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10월엔 국립대인 야마나시대와 야마나시 의과대, 쓰쿠바대와 도서관정보대 등이 통합되었다. 또한 11개 국립대가 4개로 합칠 것을 협의 중이어서 전체 99개 국립대 중 35%가 통합바람을 타고 있고, 사립대 역시 법인 간 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표 1-5-1> 참조).

중국에서도 대학 합병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기 위한 몸집 불리기나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98년 저장대, 항저우대, 저장농업대, 저장의과대가 합병해 이뤄진 저장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 후 중국 최대 종합대로서 발돋움한 것은 물론 대학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고, 최근엔 광저우의 중산대와 중산의대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서 1992년 556개에 달했던 고등교육기관이 2000년 232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통합을 통해 수는 줄었지만 교육의 질이나 학교 경영의 효율성 등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가 1996년부터 합병을 추진하는 대학에 구조조정기금을 지원하는 등 합병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근거리 지역이나 유사한 기능을 지닌 기술단과대학이 합병해 규모가 큰 새로운 전문대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학생 부족으로 교육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기업처럼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대전에 있는 국립충남대는 2004년 1학기를 목표로 공업계 국립 전문대인 천안공업대와 통합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에 있는 국립경상대와 창원대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한 바 있다.

<표 5-11> 국내 대학 통합 사례

| 구분 | 시기 | 통합 대학 | 통합 후 대학명 |
|-----|------|---------------|----------|
| 사립대 | 1997 | 경희대 + 경희호텔전문대 | 경희대 |
| | 1999 | 부산가톨릭대 + 지산대 | 부산가톨릭대 |
| | 1999 | 경희대 + 경희간호대 | 경희대 |
| | 2002 | 영산대 + 성심외국어대 | 영산대 |
| 국립대 | 1998 | 공주대 + 예산농업전문대 | 공주대 |
| | 1995 | 경상대 + 통영수산전문대 | 경상대 |
| | 1996 | 부산수산대 + 부산공업대 | 부경대 |
| | 2001 | 공주대 + 공주문화대 | 공주대 |

자료: 중앙일보(www.joongang.co.kr), 2003. 11. 10.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경대를 비롯해서 대학의 통합사례가 있고 현재에도 논의가 무성하지만 재정 등의 여러 제약요인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와 같은 대학구조기금을 마련하여 획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연계 강화

실리콘밸리의 메카인 스탠퍼드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에서는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의 상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산학협력 사업이 일반화되어 있다.

무엇보다 산학협동의 성공사례로는 중국을 들 수 있다. 지난 2001년 베이징대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첨단 산업으로 1조 6,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중국

의 칭화대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정보시스템으로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근 일본에서도 산학협동을 통한 신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기업연합체 '아스카'가 출범했고 산·학·관 공동프로젝트인 "MIRAI"나 "HACLA"도 가동 중에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산학관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한 U3S 프로젝트 그리고 독일의 혁신지역(Inno Regio) 등 각국의 창의적 지식이 국가와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산학협력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에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대학의 연합화와 전략적 제휴

미국의 주립대학은 연합대학 체제로 되어 있고, 프랑스나 독일 등은 국립대학 체제로 대학간 질적 차이도 크지 않아 인근대학에서 수강하는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1987년부터 국경없는 취업과 경제활동 보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대학간 학생교환 프로그램인 ERASMUS 프로그램을 EU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EU 15개국을 비롯해 24개국에서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대학의 연합화가 최근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의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국립대학의 연합체제 구축 논의가 활발하다.

4) 대학의 특성화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이를 집중 육성시켜야 한다. 최근 일본의 21세기 연구거점대학 프로그램, 중국의 '211공정'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 대학은 설립취지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몇 개의 주력 학과를 집중 육성하고, 이를 위해 서로 중복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학부는 과감히 떼어내고 있다. 예컨대 명문의 견인차 역할의 사례를 보면 엘프리드대(세라믹 공학), 워싱턴대(임학), UC샌디에고(해양학), 콜로라도 스킵 오브 마인스(지질 광산학), 노스웨스턴(마케팅 분야), 뱀슨 칼리지(기업가 정신) 등이 있다. 직장인의 대학으로 유명한 피닉스대에는 회계학, 정보처리, 경영학 등 직업현장에서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 학과가 운영되고 있어 현재 6만 2천 명으로 확고한 미국내 최대 대학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 77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오리건주 포클랜드의 LEWIS & CLARK 대학은 1996·1997·1998년 3년 연속 환경법 강좌 최우수 법과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환경법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약진하고 있다. 현재 제네스 위스(환경법 프로그램), 수천 맨더버그(환경범죄) 등을 비롯하여 개설된 환경법 강좌수만 42개에 달하고 있으며 해양오염법 분야의 마이클 클랩(해양오염) 등 교수진은 명실공히 미국내 1인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조씨대와 도시사대는 국제화의 선두주자로서 조씨대 전체 교수 525명 중 101명이 외국 국적 교수이고, 전체 1만여 명 재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이 5%를 상회하고 있다. 대학원 진학 희망생을 위한 외국인 학생 1년 코스가 개발 설치, 운영 중에 있다.

5) 대학평가제도의 강화와 선택 집중 지원

선진 각국은 대학의 객관적 평가와 공개를 통하여 학생들의 합리적 선택권을 도와주고 이에 따라 집중지원해 줌으로서 대학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시행된 국립대학의 책임운영기관화와 함께 대학의 교육연구실적을 별도 설립된 제3자 기관에 의해 평가하여 그 결과에 의해 대학을 지원하고 평가내용을 공표하여 국립대학에 명실상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즉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함께 대학을 평가하고 학위수여를 심사하는 「대학평

가, 학위수여기구」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의 정비와 재무경영의 개선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재무경영센터」, 그리고 다양한 교육미디어를 개발·보급·활용의 촉진을 위한 「미디어 교육개발센터」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였다. 미국에서도 대학의 순위를 월스트리지 등 매스컴과 각종 매체가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고 있고 대부분 국가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선택 집중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 종합평가를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여부 등 개괄적 평가로 대학의 순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대학 평가를 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대학이 공정성 시비 등으로 참여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된 자료 역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신력이 미흡하다. 따라서 대학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며 대학의 정보가 일반에게 제대로 공개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6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앞장의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검토에 이어 제6장에서는 지방고교졸업생 및 대학 처·실장에 대해 실시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고교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와 지방대학 처·실장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난 뒤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발전전망에 대한 고교졸업생과 대학처·실장의 평가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방향과 대안에 대한 고교졸업생과 대학처·실장의 설문결과를 세부적으로 제시한 뒤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제시한다. 특히 고교졸업생의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10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대안에 대한 대학 처·실장들의 평가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조사 분석 개요

1) 지방고교 졸업생 설문조사 개요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행태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을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의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 고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지원대학의 소재지와 지원시 우선고려사항, 수도권 및 지방대학 선택 이유,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지방대학 발전 전망, 효율적인 지방 대학 육성방안, 각종 인센티브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 등 학생들이 생각하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각 지역의 명문고를 중심으로 강원권에서는 강릉고, 충청권에서는 청주고, 전라권에서는 광주일고, 그리고 경상권에서는 경북고를 조사 대상학교로 임의 선정한 뒤 무작위로 각 학교별로 200명씩을 추출하여 총 800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수능시험 성적이 공개된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3 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회수율은 총 769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96.1%를 기록하였다(유효표본회수율 85.9%).

응답회수 학생의 계열별 분포는 자연계 61.8%, 인문계 29.8%, 예체능계 0.7%로 자연계 비중이 높았으며 수능 등급별로 1등급 10.3%, 2등급 11.6%, 3등급 21.5%, 4등급 15.9%, 5등급 17.1%, 6등급 7.3%, 7등급 이하 1.9%, 무응답 14.8%로 나타났다(조사대상자의 상세한 사항은 부록 3 참조).

<표 6-1> 학생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조사기간 | 표본 학생수 | 응답 학생수 | 회수율 |
|---|----------------|--------|----------------|------------------|
| 4개 권역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고교졸업예정자 800명 | 12. 8 - 12. 27 | 800명 | 769명 (687명) | 96.1% (85.9%) |

주 : ()은 유효설문.

2) 지방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개요

지방대학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로서, 또한 참여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

전의 핵심 축으로서 종래의 교육·연구 기능 이외에 새로운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부응한 지방대학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본 연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 110여개의 지방대학 처·실장 3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전국 110여개 4년제 지방대학의 처·실장을 대상으로 지방대학 당면문제, 지방대학 문제의 발생원인,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지방대학 구조조정 전략 등에 관하여 심층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4주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총 110개 대학 350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94개 대학 186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53.1%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표 6-2>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조사기간 | 표본 수 | 응답 수 | 회수율 |
|-----------------------------|------------------------|------|------|-------|
| 전국 110여개 지방대학 350명의 처·실장 | 2004. 3. 10 ~ 4. 10 | 350 | 186 | 53.1% |

전체 응답한 설문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영남권(36.6%)’, ‘호남권(36.6%)’, ‘충청권(25.3%)’, ‘강원·제주권(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특성별로 살펴보면 ‘일반사립대학(60.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국립대학(21.4%)’, ‘산업대학 및 기타대학(16.1%)’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대학규모별로 보면 ‘5천~1만 명 미만(34.4%)’, ‘5천명 미만(29.6%)’, ‘1만~1만5천명 미만(17.2%)’, ‘2만 명 이상(10.8%)’, ‘1만5천~2만 명 미만(5.4%)’의 순이었다(상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2. 우리나라 지방대학 발전 전망 및 육성정책 분석

1)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발전전망

(1) 고교생 의견 분석

①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다(46.4%)”와 “전혀 모르겠다(26.3)”는 부정적 응답이 전체의 약 72.7%로 나타나 응답학생의 약 3/4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이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학교는 광주일고(33.2%), 경북고(32.6%), 청주고(28.7%), 강릉고(13.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학교간에는 인지도 측면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수능등급과 내신등급과는 무관하고 지역별 차이만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진학생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그동안 정책의 변화가 심하였고 홍보가 미흡하였으며 정책내용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3>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학교별)

| 구분 |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 | | | 무응답 | 계 |
|------|-------------------|---------------|---------------|---------------|------------|----------------|
| | 잘 알고 있음 | 조금 알고 있음 | 잘 모름 | 전혀 모름 | | |
| 청주고 | 4 (2.2) | 49 (26.5) | 85 (45.9) | 47 (25.4) | - | 185 (100.0) |
| 광주일고 | 10 (6.3) | 43 (26.9) | 80 (50.0) | 27 (16.9) | - | 160 (100.0) |
| 경북고 | 11 (6.4) | 45 (26.2) | 83 (48.3) | 33 (19.2) | - | 172 (100.0) |
| 강릉고 | 2 (1.2) | 21 (12.4) | 71 (41.8) | 74 (43.5) | 2 (1.2) | 170 (100.0) |
| 전체 | 27 (3.9) | 158 (23.0) | 319 (46.4) | 181 (26.3) | 2 (0.3) | 687 (100.0) |

주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56.111$, $p=.000$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② 향후 지방대학 발전 전망

현재 참여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의욕적으로 펴고 있다. 이런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고교 대학 진학생에 대한 향후 지방대학 발전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지방대학이 '향후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과 '조금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55.1%로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학생비율 14.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지방 교교졸업생들은 지방대학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수능 등급과 내신 등급별로 보면 내신 등급간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수능등급에 있어서는 수능등급이 낮은 학생일수록 지방대학 발전 전망에 대한 응답이 낙관적이었다.

<표 6-4> 지방대학 발전 전망(수능등급별)

| 수능 등급 | 크게 발전 | 조금 발전 | 현상 유지 | 조금 나빠짐 | 크게 나빠짐 | 합계 |
|-----------|--------------|---------------|---------------|--------------|-------------|----------------|
| 1등급 | 2 (2.7) | 35 (46.7) | 18 (24.0) | 12 (16.0) | 8 (10.7) | 75 (100.0) |
| 2등급 | 4 (4.9) | 41 (50.6) | 23 (28.4) | 9 (11.1) | 4 (4.9) | 81 (100.0) |
| 3등급 | 12 (8.2) | 65 (44.5) | 48 (32.9) | 12 (8.2) | 9 (6.2) | 146 (100.0) |
| 4등급 | 4 (3.6) | 64 (57.1) | 31 (27.7) | 12 (10.7) | 1 (0.9) | 112 (100.0) |
| 5등급 이하 | 11 (6.2) | 98 (55.1) | 52 (29.2) | 12 (6.7) | 5 (2.8) | 178 (100.0) |
| 무응답 | 10 (10.5) | 32 (33.7) | 40 (42.1) | 5 (5.3) | 8 (8.4) | 95 (100.0) |
| 합계 | 43 (6.3) | 335 (48.8) | 212 (30.9) | 62 (9.0) | 35 (5.1) | 687 (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56.032$ $p=0.005$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결과는 하위등급의 학생일수록 성적 등의 이유로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사실을 두고 볼 때 그들이 진학하는 학교가 향후 발전할 것이며 또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내포된 결과로 이해된다.

(2) 처 · 실장 의견분석

①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학의 실질적인 운영자라 할 수 있는 대학관계자의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밝혀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대학 처 · 실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표 6-5>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 구분 |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 | | | | 합계 |
|-----------|-----------------------|---------|----------|----------|-----------|------------|
| | 매우 잘하고 있음 | 잘하고 있음 | 그저 그러함 | 못하고 있음 | 매우 못하고 있음 | |
| 충청권 | - | 2(4.3) | 15(31.9) | 26(55.3) | 4(8.5) | 47(100.0) |
| 호남권 | - | 3(6.3) | 18(37.5) | 24(50.0) | 3(6.3) | 48(100.0) |
| 영남권 | 1(1.5) | 6(8.8) | 28(41.2) | 23(33.8) | 10(14.7) | 68(100.0) |
| 강원 · 제주권 | - | - | 4(21.2) | 11(57.9) | 4(21.1) | 19(100.0) |
| 일반국립대학 | - | 3(7.5) | 16(40.0) | 16(40.0) | 5(12.5) | 40(100.0) |
| 일반사립대학 | 1(0.9) | 8(7.1) | 36(32.1) | 52(46.4) | 15(13.4) | 112(100.0) |
| 산업 · 기타대학 | - | - | 13(43.3) | 16(53.3) | 1(3.3) | 30(100.0) |
| 5천명 미만 | - | 4(7.3) | 17(30.9) | 28(50.9) | 6(10.9) | 55(100.0) |
| 5천~1만명미만 | 1(1.6) | 2(3.1) | 28(43.8) | 25(39.1) | 8(12.5) | 64(100.0) |
| 1만명 이상 | - | 5(7.9) | 20(31.7) | 31(49.2) | 7(11.1) | 63(100.0) |
| 합계 | 1(0.5) | 11(6.0) | 65(35.7) | 84(46.2) | 21(11.5) | 182(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지역구분: $\chi^2=15.003$, $p=.524$; 대학특성: $\chi^2=8.332$, $p=.759$; 대학규모: $\chi^2=7.840$, $p=.798$)
 자료: 대학 처 · 실장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못하고 있음(46.8%)'과 '매우 못하고 있음(11.3%)'의 부정적 평가가 전체의 58.1%인 반면 '잘하고 있음'(5.9%)과 '아주 잘 하고 있음'(0.5%)의 긍정적 평가는 6.4%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일선대학으로부터 매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경향과 같이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강원·제주권에서의 부정적 평가가 7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충청권(63.8%)과 호남권(56.3%)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10.3%를 차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대학특성별로는 사립대학(59.8%)이 국립대학(52.5%)과 산업·기타대학(56.6%)보다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규모별로는 5천명 미만(61.8%), 그 다음으로는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 5천~1만 명 미만 대학의 순으로 나타나 소규모 대학이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각종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가 34.6%(매우 불공정 2.2%)로 공정하다는 평가 25.4%(매우 공정함 0.5%)보다 월등히 높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에서는 ‘비교적 공정하다’는 의견이 전체 33.9%로 나타나 교육부 평가에 대한 불신비중이 가장 높은 충청권의 동비율 17.4%보다 거의 2배에 달했다.

설립주체별로는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불신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은 대학이 큰 대학 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표 6-6>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 구분 |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견해 | | | | | 합계 |
|----------|----------------------------|------------|-----------|------------|------------------|------------|
| | 매우 공정함 | 비교적 공정함 | 그저 그러함 | 공정하지 않음 | 전혀 공정하지 않음 | |
| 충청권 | - | 8(17.4) | 19(41.3) | 19(41.3) | - | 46(100.0) |
| 호남권 | - | 12(25.0) | 21(43.8) | 14(29.2) | 1(2.1) | 48(100.0) |
| 영남권 | 1(1.5) | 22(32.4) | 24(35.3) | 19(27.9) | 2(2.9) | 68(100.0) |
| 강원·제주권 | - | 4(21.1) | 8(42.1) | 6(31.6) | 1(5.3) | 19(100.0) |
| 일반국립대학 | 1(2.5) | 9(22.5) | 14(35.0) | 15(37.5) | 1(2.5) | 40(100.0) |
| 일반사립대학 | - | 26(23.4) | 46(41.4) | 36(32.4) | 3(2.7) | 111(100.0) |
| 산업·기타대학 | - | 11(36.7) | 12(40.0) | 7(23.3) | - | 30(100.0) |
| 5천명 미만 | - | 11(20.0) | 20(36.4) | 22(40.0) | 2(3.6) | 55(100.0) |
| 5천~1만명미만 | 1(1.6) | 16(25.0) | 27(42.2) | 20(31.3) | - | 64(100.0) |
| 1만명 이상 | - | 19(30.6) | 25(40.3) | 16(25.8) | 2(3.2) | 62(100.0) |
| 합계 | 1(0.5) | 46(25.4) | 72(39.8) | 58(32.0) | 4(2.2) | 181(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지역구분: $\chi^2=9.329$, $p=.899$; 대학특성: $\chi^2=8.323$, $p=.759$; 대학규모: $\chi^2=8.242$, $p=.766$)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③ 향후 지방대학에 대한 전망

참여정부에서는 현재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지방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보다 조금 개선(43.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수준 유지(30.8)’가 그 다음을 차지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반대로 향후 지방대학의 상황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보다 조금 악화’, ‘현재보다 크게 악화’라는 의견도 전체 22.7%를 차지하여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방대학들도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을 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권에서는 ‘현재보다 조금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권은 ‘현재수준 유지’의 비중이 전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7> 향후 지방대학에 대한 전망

| 구분 | 향후 지방대학에 대한 전망 | | | | | 합계 | 평균 |
|--------|----------------|-----------|----------|-----------|-----------|------------|-----|
| | 현재보다 크게개선 | 현재보다 조금개선 | 현재수준 유지 | 현재보다 조금악화 | 현재보다 크게악화 | | |
| 충청권 | 2(4.3) | 16(34.0) | 17(36.2) | 5(10.6) | 7(14.9) | 47(100.0) | 3.0 |
| 호남권 | 2(4.2) | 20(41.7) | 12(25.0) | 10(20.8) | 4(8.3) | 48(100.0) | 3.1 |
| 영남권 | 2(3.0) | 32(47.8) | 20(29.9) | 9(13.4) | 4(6.0) | 68(100.0) | 3.2 |
| 강원·제주권 | - | 10(52.6) | 6(31.6) | 3(15.8) | - | 19(100.0) | 3.4 |
| 무응답 | - | 2(50.0) | 2(50.0) | - | - | 4(100.0) | 3.5 |
| 합계 | 6(3.2) | 80(43.2) | 57(30.8) | 27(14.6) | 15(8.1) | 186(100.0) | 3.2 |

주: 1. 평균점수는 5점 척도 평균을 의미.

2.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1.557$, $p=.774$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2) 지방대학 육성정책 방향

(1) 고교생 의견 분석

① 가장 효과적인 지방대학 육성 정책

지방대학 육성정책에는 여러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대학 진학 고교생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교 졸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지방대학 육성정책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 지방인재할당제 (지방공무원 및 회사 취업 시 지방대학 출신자 우대제)
- ㉡ 국비 장학금 지급 (일정 수준이상 지방대학 진학자)
- ㉢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시설 개선
- ㉣ 우수 교수의 확보
- ㉤ 기숙사 및 학생 복지시설 확충
- ㉥ 지방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

- ㉔ 지방대학 특성화와 집중육성
- ㉕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격차 해소
- ㉖ 기 타

설문조사 결과 대학 진학생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첫째가 지방인재할당제(21.3%), 둘째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17.5%), 셋째 지방대학의 교육 및 시설 개선(17.3%)이고 그밖에 지방대 특성화 및 집중육성(11.3%), 국비장학금 지원(10.3%), 우수교수진 확보(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능 등급별로 보면 <표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서의 수도권 대학 진학사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진학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취업 문제이고 지방과 수도권간의 격차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표 6-8> 효과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수능등급별)

| 구분 | 지방 인재 할당제 | 국비 장학금 지급 | 교육, 연구 시설 개선 | 우수 교수 확보 | 복지 시설 확충 | 지방 국립대 집중 육성 | 지방대 특성화 | 수도권 지역의 격차 해소 | 기타 | 합계 |
|-----------|-----------------|-----------------|-----------------------|----------------|----------------|-----------------------|---------------|------------------------|------------|------------------|
| 1등급 | 32 (21.5) | 15 (10.1) | 30 (20.1) | 18 (12.1) | 2 (1.3) | 11 (7.4) | 17 (11.4) | 24 (16.4) | - | 149 (100.0) |
| 2등급 | 34 (21.0) | 18 (11.1) | 23 (14.2) | 15 (9.3) | 4 (2.5) | 13 (8.0) | 22 (13.6) | 32 (19.8) | 1 (0.6) | 162 (100.0) |
| 3등급 | 67 (22.9) | 26 (8.9) | 48 (16.4) | 32 (11.0) | 9 (3.1) | 26 (8.9) | 29 (9.9) | 53 (18.2) | 2 (0.7) | 292 (100.0) |
| 4등급 | 48 (21.4) | 18 (8.0) | 40 (17.9) | 20 (8.6) | 11 (4.9) | 18 (8.0) | 24 (10.7) | 45 (20.1) | - | 224 (100.0) |
| 5등급 이하 | 70 (19.7) | 44 (12.4) | 59 (16.6) | 30 (8.4) | 20 (5.6) | 33 (9.3) | 45 (12.6) | 55 (15.4) | - | 356 (100.0) |
| 무응답 | 42 (22.2) | 21 (11.1) | 38 (20.1) | 17 (9.0) | 6 (3.2) | 16 (8.5) | 18 (9.5) | 31 (16.4) | - | 189 (100.0) |
| 합계 | 293 (21.4) | 142 (10.3) | 238 (17.3) | 132 (9.6) | 52 (3.8) | 117 (8.5) | 155 (11.3) | 240 (17.5) | 3 (0.2) | 1,372 (100.0) |

주: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45.029$ p=.965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② 고교생이 생각하는 지방대학 발전 방안

한편 고교졸업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취업여건 개선”(23.0%), “지방대학의 특성화”(13.4%), “대학의 좋은 시설과 교수진”(12.8%),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12.5%), “지방대의 인식개혁”(9.8%), “국가의 적극적 지원”(9.8%), “장학금 혜택”(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9> 참조).

<표 6-9> 고교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발전방안(전체)

(단위 : 명, %)

| 지방대학 발전방안 | 응답수 | 백분율 |
|---|-----|-------|
| ① 취업 여건 개선(지역인재활당제 실시, 산학협력 추진, 기업체의 지방대 기피현상 극복, 지방대의 적극홍보 등) | 70 | 23.0 |
| ② 지방대의 특성화(특성 및 경쟁력있는 학과 개발, 지방대의 인재 육성 노력 등) | 41 | 13.4 |
| ③ 대학의 좋은 시설과 교수진 확보(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연구시설 확충, 실력있는 교수진 확보 등) | 39 | 12.8 |
| ④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경제적 격차 완화, 대학을 포함한 지방의 종합 발전 필요 등) | 38 | 12.5 |
| ⑤ 지방대에 대한 인식 개혁(지방대에 대한 편견 극복 노력, 지방대의 인 지도 향상 노력 등) | 30 | 9.8 |
| ⑥ 국가의 지원(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 등) | 30 | 9.8 |
| ⑦ 장학금 혜택(유학·성적 등에 대한 장학금 부여, 지방대 등록금 인하 등) | 21 | 6.9 |
| ⑧ 대학 평준화(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학점 교류 인정 등) | 12 | 3.9 |
| ⑨ 수도 이전(수도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 등) | 12 | 3.9 |
| ⑩ 국가의 구조 및 정책 개편(국가 구조의 전면 개편과 교육 정책의 개편 등) | 5 | 1.6 |
| ⑪ 발전 가능성 없음 | 4 | 1.3 |
| ⑫ 대학을 줄여 경쟁력 유도 | 2 | 0.7 |
| ⑬ 대학 재단의 안정성 | 1 | 0.3 |
| 합 계 | 305 | 100.0 |

자료: 지방고교졸업생 설문조사 결과.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지방대 출신학생들의 “취업여건 개선”으로서 지방대생들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술한 내용으로는 지역인재할당제 실시, 산학협력 추진, 기업체의 지방대 기피현상 극복, 지방대의 적극홍보 등의 내용이 있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대 특성화”로 특성 및 경쟁력 있는 학과 또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 비중은 특히 내신, 수능 상위권 학생들이 이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학의 좋은 시설과 교수진 확보” 방안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연구시설의 확충, 실력있는 교수진 확보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환경을 높이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의 해소”로 지방대학의 문제는 대학 자체의 문제수준을 넘어서 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기능의 수도권 일극집중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 흥미로운 응답으로 제시된 것은 지방대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과 대학을 평준화하자, 수도를 이전하자, 대학 수를 줄이자는 것 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은 발전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응답도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지방대학 발전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대생의 취업여건 개선, 지방대학의 특성화, 지방대학의 교육환경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 지방대에 대한 편견 탈피 및 인식 제고 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 처·실장 의견 분석

① 지방대학 육성 전략의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지방대학 문제는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문제복합체

적 성격으로 육성방안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분석된 지방대학의 문제와 원인 그리고 제5장에서 분석된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 정책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12개의 육성전략을 제시하고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지방대학 처·실장에게 설문하였다.

- ㉠ 지방대학의 학과 통폐합 등 자체 구조조정 및 특성화 전략
- ㉡ 지방대학 졸업생과 입학생에 대한 우대조치 전략(인재할당제 등)
- ㉢ 산·학·연 연계와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
- ㉣ 지방대학 통폐합 및 M&A 전략
- ㉤ 권역별 지방대학 연합(제휴)체제 구축 전략
- ㉬ 지방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 전략(지방대학지원법 제정 등)
- ㉭ 지방대학의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 전략
- ㉮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친화형 대학 육성 전략
- ㉯ 객관적인 대학평가제도 확립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전략
- ㊀ 수요자(학생, 산업체)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전략
- ㊁ 지방대학 교수에 대한 우대 전략
- ㊂ 지방대학의 국제화 전략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지방대학의 처·실장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 ‘지방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 전략(22.8%)’, 둘째, ‘지방대학 졸업생과 입학생에 대한 우대조치 전략(18.0%)’, 셋째, ‘지방대학의 학과 통폐합 등 자체 구조조정 및 특성화 전략(17.4%)’, 넷째, ‘산·학·연 연계와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12.5%)’, 다섯째,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친화형 대학 육성 전략(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 전략’이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최근 지방대학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입학생의 확보난과 중도 이탈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열악함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지원법 제정’ 등 지방대학 재정의 안정

적 지원책의 강구가 가장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표 6-10>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구분 |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 | | | | |
|----------|-----------------|------------|-----------|------------|---------|------------|--------------|
| | 자체 구조조정 | 지방대생 우대조치 | 지역혁신 체제구축 | M&A 전략 | 연합체제 구축 | 재정의 안정적 확보 | |
| 충청권 | 46(16.3) | 47(16.7) | 39(13.8) | 13(4.6) | 2(0.7) | 82(29.1) | |
| 호남권 | 53(18.4) | 55(19.1) | 26(9.0) | 21(7.3) | 7(2.4) | 48(16.7) | |
| 영남권 | 56(13.7) | 75(18.4) | 63(15.4) | 15(3.7) | 7(1.7) | 94(23.0) | |
| 강원·제주권 | 30(26.3) | 22(19.3) | 11(9.6) | 8(7.0) | 3(2.6) | 26(22.8) | |
| 일반국립대학 | 30(12.5) | 51(21.3) | 27(11.3) | 14(5.8) | 7(2.9) | 40(16.7) | |
| 일반사립대학 | 128(19.0) | 113(16.8) | 95(14.1) | 30(4.5) | 11(1.6) | 165(24.6) | |
| 산업·기타대학 | 29(16.1) | 36(20.0) | 17(9.4) | 14(7.8) | 1(0.6) | 39(21.7) | |
| 5천명 미만 | 68(20.6) | 49(14.8) | 37(11.2) | 16(4.8) | 5(1.5) | 67(20.3) | |
| 5천~1만명미만 | 54(14.1) | 74(19.3) | 50(13.0) | 24(6.3) | 7(1.8) | 93(24.2) | |
| 1만명 이상 | 65(17.2) | 77(20.4) | 52(13.8) | 18(4.8) | 7(1.9) | 84(22.2) | |
| 합계 | 187(17.1) | 200(18.3) | 139(12.7) | 58(5.3) | 19(1.7) | 244(22.3) | |
| 구분 |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 | | | | 합계 |
| | 교육환경 개선 | 지역친화형 대학육성 | 개관적인 대학평가 | 수요자중심 교육체제 | 교수우대 | 국제화 전략 | |
| 충청권 | 11(3.9) | 7(2.5) | 14(5.0) | 8(2.8) | 3(1.1) | - | 282(100.0) |
| 호남권 | 21(7.3) | 17(5.9) | 12(4.2) | 5(1.7) | 6(2.1) | 2(0.7) | 288(100.0) |
| 영남권 | 26(6.4) | 22(5.4) | 11(2.7) | - | 4(1.0) | 1(0.2) | 408(100.0) |
| 강원·제주권 | 6(5.3) | 1(0.9) | 3(2.6) | - | - | - | 114(100.0) |
| 일반국립대학 | 32(13.3) | 12(5.0) | 14(5.8) | 6(2.5) | 5(2.1) | 2(0.8) | 240(100.0) |
| 일반사립대학 | 19(2.8) | 42(6.3) | 27(4.0) | 32(4.8) | 6(0.9) | 4(0.6) | 672(100.0) |
| 산업·기타대학 | 12(6.7) | 10(5.6) | 10(5.6) | 2(1.1) | 2(1.1) | 8(4.4) | 180(100.0) |
| 5천명 미만 | 18(5.5) | 22(6.7) | 25(7.6) | 17(5.2) | 1(0.3) | 5(1.5) | 330(100.0) |
| 5천~1만명미만 | 30(7.8) | 20(5.2) | 3(0.8) | 18(4.7) | 6(1.6) | 4(1.0) | 384(100.0) |
| 1만명 이상 | 15(4.0) | 22(5.8) | 23(6.1) | 5(1.3) | 6(1.6) | 4(1.1) | 378(100.0) |
| 합계 | 63(5.8) | 64(5.9) | 51(4.7) | 40(3.7) | 13(1.2) | 13(1.2) | 1,092(100.0) |

주: 복수응답; 첫째 3점, 둘째 2점, 셋째 1점의 가중치 부여.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그 다음으로 지방대학 졸업생과 입학생에 대한 우대조치 전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대학생의 입학생 확보난과 취업난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와 앞의 고교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지방대생에 대한 인재할당제 등 지방대생에 대한 우대조치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 ‘자체 구조조정 및 특성화 전략’은 현재 백화점식으로 난립된 지방대학의 구조조정과 특성화가 지방대학 육성에 필수적임을 보여 주고 ‘산·학·연 연계와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친화형 대학 육성’의 기본방향들은 그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대학의 특정분야를 전문화시키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때 그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밖에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지방대학 육성 전략은 ‘지방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여건의 개선’, ‘지방대학 통폐합 전략’, ‘객관적인 평가제도 구축과 집중지원’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등으로 5%내외의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29.1%)과 영남권(23.0%)은 전체적인 경향과 같이 ‘재정의 안정적 확보 전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호남권은 ‘졸업생과 입학생에 대한 우대조치 전략(19.1%)’이, 강원·제주권은 ‘자체 구조조정 및 특성화 전략(26.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특성별로 살펴보면 일반국립대학에서는 ‘졸업생과 입학생에 대한 우대조치 전략(21.3%)’이, 일반사립대학(24.6%)과 산업·기타대학(21.7%)에서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 전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학특성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학규모별로는 5천명 이상의 대학은 전체적인 경향과 같이 ‘재정의 안정적 확보’, ‘졸업생과 입학생에 대한 우대조치 전략’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5천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대학에서는 ‘자체 구조조정 및 특성화 전략(20.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② 대학 처·실장이 생각하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

한편 지방대학의 처·실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해 주관식으로 설문한 결과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정책(23.9%)', '대학입학정원의 감축(14.2%)', '지방대학의 특성화 정책(11.2%)', '대학의 통폐합 및 인수합병정책(10.4%)',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9.7%)', '교수들의 연구지원(4.5%)', '대학자체의 구조조정(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11> 참조).

<표 6-11> 지방대학 처·실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

| 순위 | 지방대학 육성방안 | 비중 |
|----|---|------------|
| 1 |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정책 (비인기학과 지원육성, 지방사립대 중점지원, 사립대와 국립대의 공평한 지원정책) | 32(23.9) |
| 2 | 대학입학정원의 감축 (수도권대학 정원 감축) | 19(14.2) |
| 3 |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특성분야 육성, 학교별 특성화 정책 추진) | 15(11.2) |
| 4 | 대학의 통폐합 및 인수합병정책 (국립대학의 통폐합, 권역별 대학 통폐합, 사립대학과 교육대학의 통합, 선택과 집중, 대학수를 줄임) | 14(10.4) |
| 5 |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 (지역의 산업기반 확대, 지역인재 할당제,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 강화) | 13(9.7) |
| 6 | 지방대학 교수들의 연구지원(인건비 지원) | 6(4.5) |
| 7 | 대학자체의 구조조정(국립대학의 책임경영기관화) | 5(3.7) |
| 8 | 유사학과 통폐합(예를 들어, 사회대와 인문대 통합, 생활과학대학 개편) | 4(3.0) |
| 9 | 지방대학의 자율성 확대(창의적 교육을 위한 자율적 대학지표 작성) | 4(3.0) |
| 10 | 신설대학 인허가 억제 | 3(2.2) |
| 11 |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분담(지방 국립대는 기초학문 육성의 중심지, 사립대는 특성에 따른 응용학문분야 중심지로 발전) | 3(2.2) |
| 12 | 지방대의 선입견 전환을 위한 노력(서울선호의식 개조, 지방대학이 곧 지역대학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버림) | 3(2.2) |
| 13 |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해소(수도권의 인구, 산업, 금융 등의 분산) | 3(2.2) |
| 14 | 지역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급 | 2(1.5) |
| | 기 타 | 8(5.6) |
| | 합 계 | 134(100.0) |

주: 복수응답 처리.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 지방대학의 처·실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으로 이는 지방대학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인기학과 육성 지원, 지방 사립대 중점 지원, 사립대와 국립대의 공평한 지원 정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으로는 '대학입학정원의 감축'으로 이는 대학정원을 줄임으로써 대학의 경쟁력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수도권대학 정원의 감축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중요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으로는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정책'으로 그 지역의 특화된 분야를 반영하거나 이미 그 대학의 특성화된 학과를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대학과의 차별성을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안은 '대학의 통폐합 및 인수합병정책'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지역 1개의 국립대학으로 통폐합, 권역별 대학 통폐합,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통합, 선택과 집중의 평가를 통해서 대학수를 줄이자 등의 내용이 있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대답한 방안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로서 지역의 산업기반을 확대하여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을 강화하자, 지역인재 할당제를 실시하자는 등의 방법이 소개되었고 이 외에 많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제시되었다.

3) 지방대학 육성정책 대안의 효과

지방대학의 여러 정책 대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 지방 대학 정책 이슈에 대하여 실수요자인 대학 진학자(고교생)와 실제 대학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대학 처·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고교생 의견 분석

① 졸업생 인재할당제 등 인센티브 제공시 지방대 진학 의향

앞에서 고교생들이 가장 효과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이라고 응답한 인재할당제 등의 지방대학 인센티브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의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6%는 적극 고려하고 44.4%는 약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여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를 수능 등급별로 보면 '의향이 없다'가 1등급 34.7%, 2등급 21.0%인데 비해 3등급 8.7%, 4등급 7.1% 등으로 차이를 보여 전체적인 효과 면에서 볼 때 수능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에게는 지방대 졸업생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6-12> 유리한 조건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수능등급별)

| 구 분 | 적극 고려 | 약간 고려 | 의향 없음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13(17.3) | 36(48.0) | 26(34.7) | - | 75(100.0) |
| 2등급 | 19(23.5) | 45(55.6) | 17(21.0) | - | 81(100.0) |
| 3등급 | 69(47.3) | 65(44.5) | 12(8.2) | - | 146(100.0) |
| 4등급 | 46(41.1) | 57(50.9) | 8(7.1) | 1(0.9) | 112(100.0) |
| 5등급 이하 | 102(57.3) | 65(36.5) | 10(5.6) | 1(0.6) | 178(100.0) |
| 무응답 | 44(46.3) | 37(38.9) | 14(14.7) | - | 95(100.0) |
| 합계 | 293(42.6) | 305(44.4) | 87(12.7) | 2(0.3) | 687(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92.755$ p=.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② 장학금 지급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

지방대학 진학생에게 장학금 등 지급시 지방대학 진학의향은 전체의 27.1%가 적극 고려하고 50.7%는 약간 고려하고 나머지 12.8%는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인재 할당제 보다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수능등급별, 내신등급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표 6-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능등급과 내신등급이 상위권인 학생일수록 지방대학 진학

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효과는 떨어지고 중하위권의 학생일수록 “적극 고려하겠다”는 응답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6-13> 장학금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수능등급별)

| 수능등급 | 적극 고려 | 약간 고려 | 의향 없음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11(14.7) | 26(34.7) | 38(50.7) | - | 75(100.0) |
| 2등급 | 13(16.0) | 42(51.9) | 26(32.1) | - | 81(100.0) |
| 3등급 | 38(26.0) | 80(54.8) | 27(18.5) | 1(0.7) | 146(100.0) |
| 4등급 | 27(24.1) | 64(57.1) | 21(18.8) | - | 112(100.0) |
| 5등급 이하 | 74(41.6) | 89(50.0) | 13(7.3) | 2(1.1) | 178(100.0) |
| 무응답 | 23(24.2) | 47(49.5) | 25(26.3) | - | 95(100.0) |
| 합계 | 186(27.1) | 348(50.7) | 150(21.8) | 3(0.4) | 687(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07.816$ $p=.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2) 대학 처 · 실장의 의견분석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중요한 지방대학의 구조조정과 우대 전략 대안 그리고 대학 협력체제 구축의 여러 정책 대안 중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방대학의 학·처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대학 구조조정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난립되고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대학 내부의 학과 통폐합과 구조조정이나 지방대학간 통폐합 및 M&A, 그리고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책임운영기관화와 권역별 연합 대학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립대학과 국립대학간 또는 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 중심 등의 기능분담체제 구

측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대학 구조조정 대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설문한 결과 '대학 내부의 학과 통폐합 및 구조 조정(32.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우선 대학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이 다른 방안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의 기능별 분담체계 구축(25.5%)', '지방대학의 통폐합 및 M&A 추진(18.8%)', '권역별 연합(제휴)체제 구축(12.1%)', '국립대학의 책임기관화(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4> 지방대학 구조조정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

| 구분 | 지방대학 구조조정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 | | | | | 합계 |
|----------|---------------------------|----------|----------|----------|------------|------------|
| | 학과 통폐합 | 대학 통폐합 | 권역별 연합체제 | 기능별 분담체계 | 국립대학 책임기관화 | |
| 충청권 | 33(35.5) | 13(14.0) | 13(14.0) | 27(29.0) | 7(7.5) | 93(100.0) |
| 호남권 | 26(27.1) | 22(22.9) | 13(13.5) | 23(24.0) | 12(12.5) | 96(100.0) |
| 영남권 | 45(33.1) | 25(18.4) | 12(8.8) | 40(29.4) | 14(10.3) | 136(100.0) |
| 강원·제주권 | 15(39.5) | 9(23.7) | 6(15.8) | 3(7.9) | 5(13.2) | 38(100.0) |
| 일반국립대학 | 18(22.9) | 17(21.5) | 10(12.7) | 23(29.1) | 11(13.9) | 79(100.0) |
| 일반사립대학 | 83(37.1) | 39(17.4) | 23(10.3) | 55(24.6) | 24(10.7) | 224(100.0) |
| 산업·기타대학 | 19(31.7) | 12(20.0) | 11(18.3) | 15(25.0) | 3(5.0) | 60(100.0) |
| 5천명 미만 | 34(31.2) | 25(22.9) | 10(9.2) | 29(26.6) | 11(10.1) | 109(100.0) |
| 5천~1만명미만 | 42(32.8) | 21(16.4) | 23(18.0) | 35(27.3) | 7(5.5) | 128(100.0) |
| 1만명 이상 | 44(34.9) | 22(17.5) | 11(8.7) | 29(23.0) | 20(15.9) | 126(100.0) |
| 합계 | 119(32.8) | 69(19.0) | 44(12.1) | 93(25.6) | 38(10.5) | 363(100.0) |

주: 복수응답처리,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지역구분: $\chi^2=21.211$, $p=.171$; 대학특성: $\chi^2=24.244$, $p=.019$; 대학규모: $\chi^2=10.668$, $p=.558$).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권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대학 내부의 학과 통폐합 및 구조 조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학의 기능별 분담체계 구축 방안'은 충청권(29.0%), 호남권(24.0%), 영남권(29.4%)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지만 강원·제주권(7.9%)에

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특성별로는 일반국립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대학의 기능별 분담체계 구축(29.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반사립대학(37.1%)과 산업·기타대학(31.7%)은 ‘대학 내부의 학과 통폐합 및 구조조정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권역별 대학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대학규모별로는 큰 차이 없이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② 지방대학 우대조치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우대조치에는 교수, 입학생, 졸업생, 대학당국 등 지원 대상에 따라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대안 중에서 어디를 어떻게 우대하는 것이 지방대학 육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지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방대학 우대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적 우대조치(지방대학 육성법 등)(50.5%)’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현재 지방대학의 재정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대학 진학생인 고교생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우대조치(인재 할당제)(36.8%)’로 현재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에 대해 정책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지방대학 우수입학생에 대한 우대조치(국비장학금 지급, 병역특례 등)’도 9.3%를 차지하여 우수입학생 유치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재정적 우대’ 방안에서는 강원·제주권이 73.7%로 가장 높았고, ‘졸업생 우대’ 방안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전체적인 경향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학특성별로는 모든 대학에서 재정적 우대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립대학(45.0%)과 산업·기타대학(43.3%)에서는 일반사립대학(33.0%)에 비해 졸업생의 우대방안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규모별로도 전체적인 경향과 같게 나타났다.

<표 6-15> 지방대학 우대조치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

| 구분 | 지방대학 우대조치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 | | | | 합계 |
|----------|-----------------------|--------|-----------|----------|------------|
| | 재정적 우대 | 교수의 우대 | 우수입학생의 우대 | 졸업생의 우대 | |
| 충청권 | 24(51.1) | - | 5(10.6) | 18(38.3) | 47(100.0) |
| 호남권 | 25(52.1) | 1(2.1) | 3(6.3) | 19(39.6) | 48(100.0) |
| 영남권 | 34(50.0) | - | 8(11.8) | 26(38.2) | 68(100.0) |
| 강원·제주권 | 14(73.7) | - | 1(5.3) | 4(21.1) | 19(100.0) |
| 일반국립대학 | 19(47.5) | 1(2.5) | 2(5.0) | 18(45.0) | 40(100.0) |
| 일반사립대학 | 61(54.5) | - | 14(12.5) | 37(33.0) | 112(100.0) |
| 산업·기타대학 | 16(53.3) | - | 1(3.3) | 13(43.3) | 30(100.0) |
| 5천명 미만 | 30(54.5) | - | 6(10.9) | 19(34.5) | 55(100.0) |
| 5천~1만명미만 | 35(54.7) | - | 7(10.9) | 22(34.4) | 64(100.0) |
| 1만명 이상 | 31(49.2) | 1(1.6) | 4(6.3) | 27(42.9) | 63(100.0) |
| 합계 | 97(50.5) | 1(0.5) | 17(9.3) | 67(36.8) | 182(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지역구분: $\chi^2=8.233$, $p=.767$; 대학특성: $\chi^2=12.148$, $p=.205$;

대학규모: $\chi^2=7.410$, $p=.594$).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③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협력체제

지방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체와의 산학 협력, 지역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체제, 국내외 대학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협력체제의 구축 대안 중에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꼽은 것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53.8%)'로, 이는 지방대학과 지역과의 연계가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체제(28.6%)'로 최근의 지역 혁신체제 구축 등 산학 협력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대학간 교류 협력체제(13.2%)'와 '외국대학과의 협력(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지역산업체와의 협력체제'는 충청권(27.7%), 호남권(25.0%), 영남권(36.8%)에서, '국내대학간 교류 협력체제'는 강원·제주권(21.1%)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가 모든 대학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였다. 특히 5천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대학에서는 외국대학과의 국제협력체제(7.3%)가,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지방대학에서는 지역산업체와의 협력체제(41.3%)가 다른 규모의 대학들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6-16>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협력체제

| 구분 |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협력체제 | | | | 합계 |
|----------|--------------------|--------------|--------------------|---------------|------------|
| | 국내대학간 교류협력체제 | 지역산업체와의 협력체제 |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 외국대학과의 국제협력체제 | |
| 충청권 | 4(8.5) | 13(27.7) | 27(57.4) | 3(6.4) | 47(100.0) |
| 호남권 | 6(12.5) | 12(25.0) | 27(56.3) | 3(6.3) | 48(100.0) |
| 영남권 | 10(14.7) | 25(36.8) | 31(45.6) | 2(2.9) | 68(100.0) |
| 강원·제주권 | 4(21.1) | 2(10.5) | 13(68.4) | - | 19(100.0) |
| 일반국립대학 | 7(17.5) | 13(32.5) | 18(45.0) | 2(5.0) | 40(100.0) |
| 일반사립대학 | 13(11.6) | 31(27.7) | 64(57.1) | 4(3.6) | 112(100.0) |
| 산업·기타대학 | 4(13.3) | 7(23.3) | 17(56.7) | 2(6.7) | 30(100.0) |
| 5천명 미만 | 10(18.2) | 8(14.5) | 33(60.0) | 4(7.3) | 55(100.0) |
| 5천~1만명미만 | 7(10.9) | 17(26.6) | 38(59.4) | 2(3.1) | 64(100.0) |
| 1만명 이상 | 7(11.1) | 26(41.3) | 28(44.4) | 2(3.2) | 63(100.0) |
| 합계 | 24(13.2) | 52(28.6) | 98(53.8) | 8(4.4) | 182(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지역구분: $\chi^2=13.039$, $p=.366$; 대학특성: $\chi^2=3.737$, $p=.928$;

대학규모: $\chi^2=13.380$, $p=.146$).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3.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종합 평가 분석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여러 방안이 국내외적으로 시행 중에 있거나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 육성 방안은 시행의 용이도나 지역 발전 효과, 그리고 대학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따라 정책의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최근 지방대학 육성방안으로 자주 제시되는 10가지의 정책대안에 대하여 지방대학의 CEO라 할 수 있는 처·실장을 대상으로 대안의 찬반여부, 시행의 난이도 및 지역발전효과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는 <표6-17>과 같다.

<표 6-17>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전체)

| 지방대학 육성정책 | 평균점수 | | |
|---------------------------------------|--------------|--------------|--------------|
| | 찬반의견 | 난이도 | 발전효과 |
| 지방대학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 4.53 (1) | 2.90 (1) | 4.34 (1) |
| 지역인재 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 4.46 (2) | 2.82 (2) | 4.34 (1) |
|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육성 도모 | 4.07 (3) | 2.81 (3) | 3.77 (3) |
| 대학간 교류 및 제휴체계의 구축 | 4.06 (4) | 2.49 (6) | 3.66 (6) |
| 경쟁력 없는 학과의 통폐합 | 3.95 (5) | 2.21 (9) | 3.73 (4) |
| 교육과 연구경쟁력에 따라 기능을 특화 전문화하여 육성 | 3.90 (6) | 2.73 (4) | 3.65 (7) |
| 국립대학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경쟁체제 도입 | 3.88 (7) | 2.41 (7) | 3.47 (9) |
| 권역별 연합대학 체제구축(관내 국립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운영) | 3.80 (8) | 2.40 (8) | 3.44 (10) |
| 대학간 통폐합과 인수합병(M&A) 정책 | 3.75 (9) | 2.01 (10) | 3.68 (5) |
| 지방대학 지원정책에 대한 선 내부구조 조정, 후 정부지원 | 3.68 (10) | 2.52 (5) | 3.62 (8) |

주: 1. 평균점수는 5점 척도 평균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일수록 찬성도와 발전효과가 크고 용이도가 높은 정책을 나타냄.

2. ()안은 순위.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여러 지방대학 육성 대안 중에서 찬성 비율과 지방대학 발전효과, 그리고 시행 시 용이도가 가장 높은 대안은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대학 교부금으로 지원토록 하자는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설문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대학의 입학생 확보난과 재학생의 중도 이탈로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하고 특히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로 선호도와 지방대학 발전효과, 용이성의 모든 면에서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된 '지역인재 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처·실장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방대학의 취업난'이 지방대학 당면 과제 중 2순위를 차지한 것과 고교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취업난 해결'이 지방대학 육성방안 중 1순위를 차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세 번째로 지방대학 육성정책으로 양호한 대안은 현재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으로 찬반의견, 난이도, 발전효과 등의 모든 측면에서 3위로 평가되었다.

'국내외 대학간 교류 및 제휴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찬성비율측면에서는 4위로 높으나 지방대학 발전효과와 정책 도입의 난이도는 6위로 낮게 나타난 반면 '경쟁력 없는 학과의 과감한 통폐합 정책대안'은 지방대학 발전효과도 크고(4위), 정책선호도 역시 비교적 양호하나(5위) 시행의 용이도가 떨어져(9위) 실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 교육중심대학, 실무중심대학으로 기능 특화하여 육성하는 방안은 정책도입의 난이도는 비교적 용이하하나(4위) 지방대학 발전효과가 이에 못 미치는 것(7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책임운영기관화'는 도입의 난이도와 찬성비율로는 7위, 발전효과 측면에서는 9위로 조사되었다. 가장 반대 비율이 높은 것은 '선 내부구조조정, 후 정부지원 정책'이었으며 정책집행이 가장 어려운 정책은 '대학간 통폐합과 M&A 정책' 그리고 지방대학 발전효과가 가장 적은 것은 '권역별 연합대학 체제 구축'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사립대학이 주로 응답한 결과로 국립대학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18>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권역별)

| 육성 정책 | 충청권 | | | 호남권 | | | 영남권 | | | 강원·제주권 | | |
|----------|--------------|--------------|--------------|--------------|--------------|--------------|--------------|--------------|--------------|--------------|--------------|--------------|
| | 찬반 의견 | 난이도 | 발전 효과 | 찬반 의견 | 난이도 | 발전 효과 | 찬반 의견 | 난이도 | 발전 효과 | 찬반 의견 | 난이도 | 발전 효과 |
| 1 | 3.83 (6) | 2.38 (7) | 3.23 (9) | 3.81 (9) | 2.40 (6) | 3.40 (10) | 4.00 (6) | 2.37 (8) | 3.65 (8) | 3.79 (8) | 2.79 (5) | 3.63 (9) |
| 2 | 3.67 (9) | 2.52 (6) | 3.20 (10) | 4.06 (5) | 2.23 (8) | 3.62 (9) | 3.76 (10) | 2.41 (7) | 3.50 (10) | 4.05 (5) | 2.89 (3) | 3.95 (3) |
| 3 | 3.60 (10) | 2.04 (10) | 3.47 (8) | 3.90 (8) | 2.02 (10) | 3.92 (3) | 3.79 (8) | 1.95 (10) | 3.68 (6) | 4.00 (6) | 2.21 (10) | 3.89 (5) |
| 4 | 3.79 (7) | 2.38 (7) | 3.53 (6) | 4.02 (6) | 2.11 (9) | 3.87 (4) | 4.04 (4) | 2.19 (9) | 3.79 (4) | 4.00 (6) | 2.32 (9) | 3.84 (6) |
| 5 | 4.49 (1) | 2.83 (2) | 4.23 (2) | 4.59 (1) | 3.00 (1) | 4.43 (1) | 4.63 (1) | 2.97 (1) | 4.50 (1) | 4.32 (2) | 2.89 (3) | 4.16 (2) |
| 6 | 4.40 (2) | 2.81 (4) | 4.45 (1) | 4.49 (2) | 3.00 (1) | 4.30 (2) | 4.53 (2) | 2.75 (3) | 4.38 (2) | 4.47 (1) | 2.79 (5) | 4.21 (1) |
| 7 | 4.02 (3) | 2.91 (1) | 3.68 (4) | 4.09 (4) | 2.74 (4) | 3.81 (5) | 4.13 (3) | 2.79 (2) | 3.84 (3) | 4.32 (2) | 3.16 (1) | 3.95 (3) |
| 8 | 3.66 (8) | 2.64 (5) | 3.49 (7) | 3.66 (10) | 2.38 (7) | 3.70 (6) | 3.79 (8) | 2.44 (6) | 3.70 (5) | 3.42 (10) | 2.95 (2) | 3.68 (8) |
| 9 | 4.02 (3) | 2.32 (9) | 3.66 (5) | 4.15 (3) | 2.74 (4) | 3.70 (6) | 4.04 (4) | 2.53 (5) | 3.66 (7) | 4.21 (4) | 2.53 (8) | 3.74 (7) |
| 10 | 3.98 (5) | 2.83 (2) | 3.72 (3) | 3.91 (7) | 2.79 (3) | 3.64 (8) | 3.91 (7) | 2.63 (4) | 3.63 (9) | 3.68 (9) | 2.79 (5) | 3.53 (10) |

주: 1. 각 수치는 5점 척도 평균값이며, ()안은 순위를 나타냄.

2.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으며 이하 동일(1: 국립대학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경쟁체제 도입, 2: 권역별 연합대학 체제구축, 3: 대학간 통폐합과 인수합병 정책, 4: 경쟁력 없는 학과 통폐합, 5: 지방대학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6: 지역인재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7: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육성 도모, 8: 지방대학 지원정책에 대한 선 내부구조 조정, 후 정부지원, 9: 대학간 교류 및 제휴체계의 구축, 10: 교육과 연구경쟁력에 따라 기능을 특화 전문화하여 육성).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권역별 지방대학 정책대안의 설문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찬반의 견과 발전효과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정책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과 “지역인재 할당제나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였다.

<표 6-19>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대학 특성별)

| 육성 정책 | 일반국립대학 | | | 일반사립대학 | | | 산업·기타대학 | | |
|----------|--------------|--------------|--------------|--------------|--------------|--------------|--------------|--------------|--------------|
| | 찬반의견 | 난이도 | 발전효과 | 찬반의견 | 난이도 | 발전효과 | 찬반의견 | 난이도 | 발전효과 |
| 1 | 2.65 (10) | 1.98 (7) | 2.63 (10) | 4.29 (3) | 2.59 (7) | 3.77 (4) | 4.03 (7) | 2.42 (9) | 3.48 (10) |
| 2 | 3.44 (8) | 1.97 (8) | 3.08 (9) | 3.95 (8) | 2.61 (6) | 3.58 (10) | 4.00 (8) | 2.45 (8) | 3.74 (8) |
| 3 | 3.67 (6) | 1.85 (9) | 3.59 (7) | 3.78 (9) | 2.02 (10) | 3.68 (7) | 3.97 (9) | 2.26 (10) | 3.97 (3) |
| 4 | 3.70 (5) | 1.80 (10) | 3.70 (6) | 4.01 (7) | 2.31 (9) | 3.73 (5) | 4.17 (4) | 2.55 (7) | 3.90 (5) |
| 5 | 4.53 (2) | 2.90 (3) | 4.38 (2) | 4.55 (1) | 2.86 (3) | 4.38 (1) | 4.59 (1) | 3.24 (2) | 4.38 (1) |
| 6 | 4.58 (1) | 2.70 (4) | 4.50 (1) | 4.45 (2) | 2.85 (4) | 4.33 (2) | 4.47 (2) | 2.97 (3) | 4.27 (2) |
| 7 | 4.03 (4) | 3.33 (2) | 3.74 (3) | 4.11 (4) | 2.90 (2) | 3.80 (3) | 4.23 (3) | 2.90 (4) | 3.87 (6) |
| 8 | 3.60 (7) | 2.28 (6) | 3.73 (4) | 3.74 (10) | 2.57 (8) | 3.65 (8) | 3.60 (10) | 2.73 (6) | 3.50 (9) |
| 9 | 4.15 (3) | 3.43 (1) | 3.73 (4) | 4.06 (5) | 3.49 (1) | 3.63 (9) | 4.07 (5) | 3.47 (1) | 3.80 (7) |
| 10 | 3.38 (9) | 2.40 (5) | 3.28 (8) | 4.05 (5) | 2.82 (5) | 3.70 (6) | 4.07 (5) | 2.90 (4) | 3.93 (4) |

주: 1. 각 수치는 5점 척도 평균값이며, ()안은 순위를 나타냄.

2. 육성정책의 각 항목은 앞의 표 참조.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난이도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2점~3점대로 모든 정책이 보통이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강했는데, 호남권(3.00)과 영남권(2.97)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정책, 충청권(2.91)과 강원·제주권(3.16)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육성도모” 정책을 보통 정도의

난이도로 보고 있었다.

대학 특성별 지방대학 정책대안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찬반의견과 발전효과면에서는 일반국립대학(4.58, 4.50)에서는 “지역인재 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장려제”를 가장 찬성하고 발전효과 또한 큰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일반사립대학(4.55, 4.38)과 산업·기타대학(4.59, 4.38)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정책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난이도 면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대학간 교류 및 제휴체계의 구축” 정책을 가장 쉽게 보고 있어서 대학간의 교류와 협력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20>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대학 규모별)

| 육성 정책 | 5천명 미만 | | | 5천명~1만명 미만 | | | 1만명 이상 | | |
|----------|--------------|--------------|--------------|--------------|--------------|--------------|-------------|--------------|--------------|
| | 찬반의견 | 난이도 | 발전효과 | 찬반의견 | 난이도 | 발전효과 | 찬반의견 | 난이도 | 발전효과 |
| 1 | 4.09 (3) | 2.44 (8) | 3.60 (10) | 3.70 (9) | 2.45 (7) | 3.30 (10) | 3.89 (5) | 2.38 (7) | 3.54 (8) |
| 2 | 3.91 (8) | 2.61 (6) | 3.61 (9) | 3.92 (7) | 2.40 (8) | 3.51 (8) | 3.73 (8) | 2.34 (8) | 3.39 (10) |
| 3 | 3.85 (9) | 2.09 (10) | 3.70 (8) | 3.71 (8) | 1.92 (10) | 3.70 (4) | 3.81 (7) | 2.06 (9) | 3.73 (5) |
| 4 | 4.06 (5) | 2.44 (8) | 3.80 (4) | 3.97 (6) | 2.36 (9) | 3.67 (6) | 3.89 (5) | 1.92 (10) | 3.79 (4) |
| 5 | 4.48 (1) | 3.09 (1) | 4.31 (1) | 4.67 (1) | 2.97 (1) | 4.44 (2) | 4.48 (1) | 2.76 (2) | 4.37 (2) |
| 6 | 4.35 (2) | 3.09 (1) | 4.18 (2) | 4.61 (2) | 2.73 (2) | 4.45 (1) | 4.47 (2) | 2.71 (3) | 4.42 (1) |
| 7 | 4.09 (3) | 3.09 (1) | 3.75 (6) | 4.16 (3) | 2.65 (4) | 3.81 (3) | 4.08 (4) | 2.84 (1) | 3.84 (3) |
| 8 | 3.82 (10) | 2.73 (5) | 3.84 (3) | 3.58 (10) | 2.47 (6) | 3.45 (9) | 3.68 (9) | 2.42 (6) | 3.67 (6) |
| 9 | 4.02 (7) | 2.50 (7) | 3.74 (7) | 4.09 (4) | 2.48 (5) | 3.64 (7) | 4.13 (3) | 2.60 (4) | 3.66 (7) |
| 10 | 4.05 (6) | 3.04 (4) | 3.78 (5) | 4.00 (5) | 2.72 (3) | 3.69 (5) | 3.68 (9) | 2.50 (5) | 3.48 (9) |

주: 1. 각 수치는 5점 척도 평균값이며, ()안은 순위를 나타냄.

2. 육성정책의 각 항목은 앞의 표 참조.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대학 규모별 지방대학 정책대안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찬반의견과 발전효과면에서 1, 2위 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규모의 대학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과 “지역인재 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정책이 차지하였다.

난이도 면에서는 5천명 미만(각 3.09) 대학들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지역인재 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도모” 정책, 5천명~1만명 미만(2.97) 대학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정책, 1만명 이상(2.84) 대학에서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육성 도모” 정책이 높은 평균 점수를 차지하여 비교적 추진하기 쉬운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이 장에서는 제4장의 지방대학 위기관인분석, 제5장의 국내외 지방대학 육성정책 검토, 제6장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스템모형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지방대학의 당면문제와 원인을 분석한 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그 후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및 효과 등 3개 영역의 17개 문제에 대한 5개 전략의 20개 정책 수단으로 나눠 각 문제별로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으로 특별법 제정, 대학 구조조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 지역밀착형 대학 육성, 우수학생 및 교수 유치지원, 삼분 정책에 의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

1. 지방대학 육성 기본 방향의 모색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당면한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능한 의사가 병의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병명과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앞의 제3장에서 분석한 지방대학의 문제와 원인을 재정리하고 제5장의 국내외 대학육성정책과 제6장의 지방육성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본 방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적

정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당면문제과 원인 분석

지방대학이 당면한 문제를 체계분석(system analysis)을 통하여 투입요소(input), 구조와 과정(process), 그리고 산출(output) 및 효과(effect)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투입요소는 학생, 교수, 재정, 시설 등이 있는데 지방대학 문제로서는 ①학생 측면의 입학생 확보난과 우수학생 수도권 유출, ②교수 측면의 교수의 양적 부족과 우수교수 확보난, ③재정측면의 지방대학 재정 확보난, ④시설측면의 지방대 시설의 낙후 문제가 대두되었다.

한편 지방대학의 구조와 과정의 문제로서는 ①교육기능 측면에서의 백화점식 학과 난립, 교육과정의 현장성 부족, ②연구기능 측면에서의 연구여건 열악과 활동 미흡과 산학협력체 미구축, ③ 봉사측면에서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미흡 등이 당면과제로 나타났다. 산출 및 효과문제로서는 산출 측면에서의 지방대 경쟁력 약화, 지방대생 취업난, 지방대 교수연구실적 저조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영향 측면에서는 지방대생 외지 취업, 지방대학에 대한 지역관심 저하, 수도권·지방 격차 심화 등이 주요 당면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현재 지방대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대학 학·처장 설문조사 결과 ①입학생 충원문제, ②졸업생의 취업난, ③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④지방대학 재정난, ⑤교육 및 연구여건 낙후, ⑥지역과 산업과의 연계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지방대학의 문제가 야기된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 성장, ②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입학정원의 팽창(수급불균형), ③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지원 미흡, ④지방 대학졸업생에 대한 취업차별 ⑤ 사회 전반의 수도권 선호 사상, ⑥공급자중심의 교육체계(백화점식 학과개설과 교육내용의 현장성 부족 등), ⑦지역사회 및 지역산업체의 관심 부족, ⑧지방대학 자체의 자구노력 부족, ⑨지방대학 교수의 역량 미흡 등으로 외생적 정책

요인이 지방 대학 내부적 요인 보다 훨씬 크고 특히 교육외적인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지방대학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문제는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지방대학 육성 기본방향

이와 같은 지방대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외생적 방안과 내생적 방안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국내외 지방 대학 육성방안과 수요자인 대학 입학생(고교 졸업 예정자)과 지방 대학 행정 책임자인 처·실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대학 육성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47%에 이르고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지방대학을 비롯한 지방 침체의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와 ‘서울 제일주의’의 근원이 되는 수도 기능의 이전을 비롯한 지방 분산, 분권, 분업정책 등 교육외적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우대정책 추진

빈사상태에 있는 지방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우대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그 내용으로서는 지방대 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의 강구, 지방대생 우대조치(지역인재 할당제), 지방대 교수 우대조치 등을 포함한 지방대 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

(3)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오늘날과 같은 지방대학 위기와 침체의 원인은 지방대학 자체의 자구노력 부족과 정책의 미흡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구조조정 방안으로서는 학과 통폐합 및 특성화와 교

육과정의 혁신(현장화), 행정조직의 재구조화, 지방국립대학 책임운영기관화 등 대학 내부 구조조정과 지방대학의 통폐합(M&A), 권역별 지방대학 연합대학체제 구축, 대학간 제휴·교류체제 구축 등 대학간 구조조정 방안이 있을 수 있다.

(4)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지방대학은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발전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계관계가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이 지역발전(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밀착을 통해 지방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연계 강화와 지방정부의 지방대학 지원강화 방안 등 다양한 육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5) 실효성 있고 일관된 합리적인 지방대학 육성정책 실행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타율적, 상향적(Top-down), 임기응변적 시책과 나눠먹기식 지방대학 정책으로 지방대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으며 대학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의한 재원 배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일원화, 지방대학의 자율화, 객관적 평가제도에 의한 선택과 집중, 채찍과 당근이 확실한 정책의 일관성 등 지방대학 정책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2.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효과 분석

이상의 지방대학의 문제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정책 효과 측면에서 교차 분석하면 <표 7-1>과 같다. 즉, 지방대학의 문제를 제4장의 시스템분석을 토대로 투입 요소(input), 구조 및 과정(process), 산출 및 효과(output) 등 3개 영역, 17개 문제로 나타내고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제4장, 5장, 6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5개 기본전략, 21개 정책 수단으로 나눠 각 문제별 유효한 정책수단을 분석하였

는바 대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대학의 투입요소 중 가장 큰 문제점인 입학생 확보 난과 우수학생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통폐합 (M&A), 권역별 연합대학체제 구축, 대학간 제휴, 학과 통폐합 등 대학의 구조조정 정책수단과 지역인재 할당제 등의 지방대학생 우대조치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방 분산, 분권, 분업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백화점식의 학과를 대학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통폐합하거나 지역산업과 관련시켜 특성화하여 연합대학체제로 간다면 대학의 특성화가 가능하고 우수학생이 지역에 진학하고 일자리를 얻어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수의 양적 부족과 우수교수 확보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교수에 대한 각종 우대 조치와 함께 기존의 '서울제일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특단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가장 큰 문제인 지방대학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대 육성법 등의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의 구조와 과정의 문제 중 교육활동문제로서는 백화점식 학과의 난립, 교육과정의 현장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지방대학 연합대학체제 구축, 학과 통폐합 및 특성화 지방 국립대학 책임운영기관화 지방 대학기능 분담화 등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의 현장성 부족문제는 산학협동, 인턴제 등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하여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의 연구 활동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대학 교수에 대한 연구비 등의 우대제도와 함께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지역 봉사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지역사회와 고립된 채 섬과 같은 존재로 기능해 왔으나 향후에는 지역혁신체제의 중심, 지역연계강화의 중요 역할자로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산출 및 효과의 문제로서는 산출로서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지방대생 취업난, 지방대 교수 연구실적 저조, 영향으로서는 지방대생 외지 취업, 지방대학에 대한 지역의 관심 저하, 수도권 지방격차 심화를 들 수 있다.

<표 7-1> 문제 유형별 지방대학 정책의 효과 분석

| 지방대학 문제 지방대학 육성정책 | | 투입요소 문제 | | | | 구조 및 과정 문제 | | | | 산출 및 효과 문제 | | | | | | | |
|--------------------------|-----------------------|--------------|---------------|--------------------|----------------|----------------|---------------|-------------------|--------------------------------|------------------|-----------------------|------------------|---------------------|-----------------------------|----------------------------|-----------------------------|------------------------|
| | | 학생 | 교수 | 재정 | 시설 | 교육 | 연구 | 봉사 | 산출 | | | 영향 | | | | | |
| | | 인보학생 확보단기 | 우수학생 수보권유출 | 교수보조·과 우수교수확보단기 | 지방대학 재정확보단기 | 지방대학 수도권면면제 | 지방대시설 기후면제 | 백화점·점 학과 단기 | 교육과정 의 편안·과 활용·이 출 | 사회협 체제 미구축 | 지역사 회의 연계미 흡 | 지방대 경쟁력 약화 | 지방대 생 취업 률 | 지방대 교수 연구실 적 저조 | 지방대 생 유출 외지 취업 | 지방대 학에 대한 관심 저하 | 수도권 지방간 격차 심화 |
| 구조 조정 | 대학통폐합 M&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역별연합대학체 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과 통폐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과정 혁신(현 장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대학책임운영 기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간 제휴,교류 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대 우대조치 | 지방대 우대(재정 안정적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우대조치(인 재할당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교수우대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대육성법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연계 강화 | 산학연계체제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혁신체제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정부연계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 봉사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정책 합리화 | 기존 정책개선(중 합화·자율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 평가기구 설 립과 공개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택, 집중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도권 지방격차 해소 | 기능 분산(공공 기 관 이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 분권, 지방 분업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효과 큼, ○: 효과 중간, △: 효과 미약.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문제는 대학의 통폐합이나 M&A, 학과 통폐합·특성화, 지방 국립대학 책임운영기관화, 지방대생 우대조치(지역인재 할당제),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생 취업난은 교육과정혁신(현장화), 지방대생 우대조치(지역인재 할당제)가 비교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지방대생 외지 취업 문제는 거시적으로 지역내에 고급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산정책 추진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역의 관심 저하 문제는 지역의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관련주체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인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심화 문제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산, 분권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지방대학 육성 과제와 방안

1) 지방 분권·분산·분업정책에 의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

지방대학이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완화되어 지방소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되도록 해당지역의 대학에 진학하여 지역에서 취업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참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지방 분권, 분산, 분업의 삼분 정책과 함께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삼분 정책이 착실히 추진되고 지방대학 정책도 자립형 지방화에 기여하는 등 하향식 정책과 상향식 정책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도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상에 지방대학 육성 근거 규정과 재원이 마련되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방대학 발전의 새 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함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부응한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의 적

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2)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지방대학 우대 조치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핵심적 요인이며 현재와 같은 지방과 수도권간의 구조적 격차가 상존하는 한 시장기구에 의한 지방대학 육성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에 대한 적극적 차별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며 이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가칭)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나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은 현재로서는 지방대학의 위축을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질적인 중앙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을 살리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지고 나아가 나라가 무너진다는 인식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골자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는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지역 인재할당제의 도입이다.

지방대학의 취업문제는 앞의 고교생의 진행행태 조사와 대학 처실장의 지방대학의 당면과제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부각되었다. 지방에는 대학졸업자에게 상응하는 취업기회가 미흡하여 많은 지방대학졸업자가 서울로 유출되고 있으며 지방대학생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대기업 등의 취업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대학의 경우 입학생은 서울 출신이 1.4%에 불과하나 전체 졸업자의 29.9%가 서울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두뇌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고 최근 3년간 5급 고시합격자중 85.6%가 서울지역 출신대학으로 나타나 독점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방근무 5급 공무원 정원의 일정부문이나 기업의 지방 사무소에는 지방대학 출신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지역

인구 비례에 의한 인재 할당제의 도입에 대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제11조) 위배와 수도권 지역출신에 대한 역차별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국민통합,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생각하고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볼 때 법리적인 문제점은 적다고 판단된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교사 임용시험과 같이 사법시험, 의사시험 등의 각종 국가고시를 미국과 같이 시도별로 관장하게 하고 해당지역에서만 활동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지역 인재할당제의 도입과 함께 기업이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지방대학 인재 채용 장려제'를 도입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취업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대학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 설치이다. 현재 지방대학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앞의 지방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방대학의 재정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총 대학 재정 규모는 대략 GDP 대비 0.4%정도로 OECD 국가 평균 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재정도 대부분 국립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 지방대학은 더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 사립대학은 국고 지원이나 대학발전 기부금이 적어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의 입학생 미충원이 극심하고 재학생의 수도권 대학 편입이 가속되어 지방대학 학생수가 급감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교육 지원 예산 규모를 현재의 GDP 대비 0.43% 수준(2조 7천억 원)에서 OECD 평균수준인 1% 수준(약 5조 4천억 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지방대학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각종 지방대학 우대조치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다.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은 교육정책 차원에서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대

학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하향식 지원방식보다는 지역 실정과 발전목표에 부응한 지역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을 반영한 지원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지방대학을 우선 육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지방에서 고급인력은 대부분 대학에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데는 재원의 확보와 더불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투입, 구조와 과정 그리고 산출 및 효과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재원이 투입되고 규제가 완화된다고 지방대학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세계 각국도 국가가 대학을 지원하던 체제에서 점차 독립행정 법인화하여 대학이 독자적으로 살길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가고 있다. 예컨대, 대학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기업체를 경영하거나 학생, 연구원 또는 교수가 기업을 창업하도록 하고 겸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형 연구중심대학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대학들도 일차적으로는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대학과 관련된 규제를 해제하여 대학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컨대, 산학협력단을 활용한다든지, 대학의 연구결과물을 상업화할 수 있는 사이언스파크나 리서치 파크를 대학 내 조성하는 등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자립적 기반조성이 불가능한 대학들은 연합대학체제를 구축한다든지, 제휴 합병하던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립적 기반조성과 구조조정을 위하여 대학과 관련된 규제를 가능한 완화하고 구조조정기금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대학간 국고보조금, 학술연구조성비 등 대학지원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에 우선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대학들에 비해 국고보조금을 적게는 2.8배에서 많게는 3.4배까지 많이 지원받았다. 지방대학의 학생은 물론 교수들조차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편입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지방에 인재가 정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국고보조금, 학술연구조성비 등의 불균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실태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균형한 재원을 균형하게 바꾸고 지방대학이 독립행정법인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마다 만들어진 산학협력단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대학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4) 지방대학의 우수학생 및 교수 유치 지원

지방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우수학생과 교수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유출이며, 이는 지방대학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고급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에 대한 우수학생과 교수의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지방대학의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일정 성적이상의 우수학생이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경우는 국비 장학금이나 해외 연수 및 유학비용을 지원하고 병역특혜를 주며 지역별로 공동기숙사를 확충하여 지방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지방대학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기 전문 대학원을 권역별 “지역인구비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방대학에 우선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우수 교수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열악한 연구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대

학교수들에게 특별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와 주거기능이 겸비된 복합연구센터
를 건립하여 지방의 불편한 교육·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지방교수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5)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촉진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우대조치도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쟁력 없는 대학의 난립과 백화점식 대학구조로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
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바 그 실행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간 통폐합과 M&A를 통한 대학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대학의 난립과 정원 팽창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존립 위기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체제의 재구조화와 질적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의 하나로 현재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여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국립대학의 책임기관화로 국립대학에 적자생존의 자율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99개 국립대학 중 80%가 대학 M&A를 검토하였고 그 중 이미 4개 대학이 통합
(예: 아마나시대학, 쓰쿠바대학 등)되는데 이어 36개 대학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1992년 이후 고등교육체제 구조조정 사업의 핵심 과제로 대
학 합병이 강력히 추진되어 총 733개의 대학을 288개로 통합하여 대학의 경쟁력
을 크게 제고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사례와 같이 우선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정부
가 대학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사립대학의 경우
도 경쟁력 확보를 전제로 대학간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권역내 대학간 연합대학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형식은 연
합대학체계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과 같이 연합대학 총장이 연합대학 학사평의회(university board)와 협의
하에 각 지역의 캠퍼스를 총괄하고 각 캠퍼스에 책임자를 두어 공동운영하는 형

식이 될 수도 있다(강한 결속력). 반면 일본 도쿄의 5개 대학(히토쓰바시대학, 도쿄공업대학, 도쿄 외국어대학, 도쿄 의치과대학, 도쿄 예술대학)연합체제 구축사례와 같이 교양과정 공동운영, 편입학 상호허용, 일부 첨단분야 공동연구와 같은 형식(느슨한 결속력)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연합대학 체제가 구축되면 대학간 기능의 분담, 대학간 학과, 학부의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이 용이해지고 운영의 효율화를 이루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입학생 확보에 어려움이 가장 큰 광주·전남권의 5개 국립대학을 하나의 연합대학으로 운영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 지방대학 구조조정의 기폭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 또는 외국대학과의 제휴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간 공동학위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교수 및 학생과 학점의 교류 확대, 그리고 대학간 실험·실습시설 등 교육지원시설의 공동 활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하는 것으로 선진 외국에서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1987년부터 대학간 국경 없는 학생교환 프로그램인 ERASMUS를 EU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여 현재 24개국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유럽의 대학교육을 통합하는 “유럽대학” 계획을 프랑스가 제안하여 영국, 독일, 이태리 등 200여 대학이 이 제도에 찬성하여 국경 없는 학점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립대학간 학점교환 프로그램 및 외국대학과의 교류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이나 외국대학 등과 전략적 제휴를 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원 조정, 학위과정 설치 기준 등을 복수 학교를 중심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는 개별대학 자체의 특성화와 자율경영혁신 등 내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학 스스로가 경쟁력이 있는 학문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학과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특성화하고 대학의 기구와 정원 감축 등 운영구조를 합리적이고 효

울성 있게 재편하는 대학경영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학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적극적인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하지 않는 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이루기 어려우며 정원 축소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문제의 해결과 함께 퇴출대학의 정리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96년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및 협력기금(RCF: Restructuring and Collaboration Fund)'을 창설하여 대학간 구조조정과 대학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도 이와 같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대학의 구조조정 정도에 따라 획기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 조정 시 일정기간동안 재정결손액을 지원하고 대학간 M&A로 인한 재정손실 및 과중한 인건비 부담액을 지원하며 그 밖에 각종 지방대학의 자구노력에 부응하여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6)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대학의 육성

지방대학과 지역은 상호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지방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대학으로 거듭나야 되고 지역사회 역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대학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이 매우 중시되고 있는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RIS)¹⁰구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전략은 이탈리아의 '제3이태리' 미국의 '실리콘 벨리', 영국의 '캠브리지 과학단지' 등 많은 선진국에서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 참여 정부에서도 내발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연구비를 대폭 확대하고

10) '지역혁신체계(RIS)'란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NGO, 지방인론, 연구소 등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생산과정이나 행정제도 개혁,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말함(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2004).

각종 R&D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국가 및 지역 그리고 대학수준의 조정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을 특성화하고 새로운 신기술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하며 대학이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1사1전담교수제 등 산업체 애로기술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주문식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과 특허권의 대학 취득 허용 등 산학 기술개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이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체계의 구축과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 주민 등 지역사회에 개방,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정도를 대학의 재정지원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8

요약 및 결론

이 장에서는 앞의 모든 장의 내용을 고려하되, 특히 제6장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7장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대량생산시대를 지나 지식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가 지난 시기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구시대의 잔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요소투입형 성장을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과거 시대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중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다.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와 산업의 불균형 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에도 투입자원 배분에서 조차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극복하지 않고는 설사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량생산시대 태어난 수도권과 지방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소극적·하향적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상향식의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16개 시도별 지역혁신발전 5

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방향만 설정되어 있지 이렇다 할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지방대학이 자립형 지방화의 구심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그 시발점으로서 우선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을 활성화하며, 지역의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산업발전은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인재가 지방에 정착하게 되며, 다시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인식하에서 우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하고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및 효과라는 시스템 모형을 설정하여 파악하였다. 투입요소는 학생, 교수, 재정, 시설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 대학의 문제로서는 첫째, 학생 측면에서 입학생 확보 난과 우수 학생 수도권 유출, 둘째, 교수 측면에서 교수의 양적 부족과 우수 교수 확보난, 셋째, 재정측면에서 지방대학 재정 확보 난, 넷째, 시설측면에서 지방대 시설의 낙후 문제가 대두되었다.

구조와 과정의 문제로서는 첫째, 교육기능 측면에서 백화점식 학과 난립, 교육과정의 현장성 부족, 둘째, 연구기능 측면에서 연구여건 열악과 활동 미흡 및 산학협력체제 미구축, 셋째, 봉사측면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미흡 등이 당면과제로 나타났다.

산출 및 효과의 문제로서는 산출 측면에서 지방대 경쟁력 약화, 지방대생 취업난, 지방대 교수연구실적 저조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영향 측면에서는 지방대생 외지 취업, 지방대학에 대한 지역관심 저하, 수도권·지방 격차 심화 등이 주요 당면문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현재 지방대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입학생 충원문제, 졸업생의 취업난,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지방대학 재정난, 교육 및 연구여건 낙후, 지역과 산업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지방대학의 문제가 야기된 원인으로서는 첫째, 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 성장, 둘째,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입학정원의 팽창(수급불균형), 셋째,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지원 미흡, 넷째, 지방 대학졸업생에 대한 취업차별, 다섯째, 사회 전반의 수도권 선호 사상, 여섯째, 공급자중심의 교육체계(백화점식 학과개설과 교육내용의 현장성 부족 등), 일곱째,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체의 관심 부족, 여덟째, 지방대학 자체의 자구노력 부족, 아홉째, 지방대학 교수의 역량 미흡 등이다. 이로 볼 때 외생적 요인이 지방 대학 내부적 요인 보다 훨씬 크고 특히 교육외적인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지방대학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문제는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방대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둘째,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 우대정책의 강구, 셋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추진, 넷째, 지역과 지방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다섯째, 실효성 있고 일관된 합리적 지방 대학 육성정책의 실행 등으로 육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지방분권·분산·분업 정책에 의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 과제,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방대학 우대 조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지방대학의 우수교수 및 학생 유치 지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밀착형 대학 육성이 그것이다.

실천과제로서 제시된 여섯 가지 중 다섯 가지는 지방대학관련 과제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지방분권·분산·분업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달성과 이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이다. 자립형 지방화가 달성된다면 나머지 지방대학과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혁신계정 중에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은 거의 없고, 부처

별로 추진하던 기존사업들이 지역혁신계정으로 묶였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역혁신계정 중 신규 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지방대학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지역이 발전하며 결국에는 자립형 지방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직·간접적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시스템 분석과정에서 많은 지표들을 활용하였는데, 모두 직접조사를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투입, 구조와 과정, 산출 및 영향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분석하다 보니 많은 지표가 필요하였고 시간과 인력 및 기타 사유로 2차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자원으로 가장 중요한 고교 졸업생의 진학의사 및 행태, 지방대학 경영일선에 있는 처·실장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문제와 원인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의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도출하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가네마키 나오부미(신충우 譯) 1995. 「실리콘밸리 파워」. 서울, 대청.
- 강무섭. 1984. “고등교육 투입 및 산출측정의 경제학적 접근”, 「한국교육」 11(1).
- 강무섭. 2000. “지방대학의 학생 유인 체제 강화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주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세미나.
- 교육인적자원부. 2000. 「국가인적자원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대책」.
- 교육인적자원부. 2001.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대학교육 역량제고”, 국가인적자원비전 2005, 2001. 9. 23
- 교육인적자원부. 2003a. “지역인재 육성프로젝트 마련을 위한 협의자료”, 지방대학 관계자 간담회 회의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3b.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 사업설명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3c.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전북지역)”, 2003. 7. 23.
- 교육인적자원부. 2003d.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방안 정책토론회(대전충남지역)”, 2003. 8. 14.
- 교육인적자원부. 2003e.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방안 정책토론회(광주·전남지역)”, 2003. 9. 4.
- 교육인적자원부. 2003f.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 권역별 간담회 결과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3.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3. 10. 30-31.
- 구자문. 2003. “성숙된 발전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테크노폴리스의 분석 및 연구”, 「국토

- 계획」 38(1),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1.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a.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발전방안”, 제2 차 국정과제회의자료, 2003. 4. 24.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b.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구축방안”, 제14회 국정과제 회의, 2003. 7. 24.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c.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총론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d. “참여정부의 新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 제23회 국정과 제회의, 2003. 9.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e. “국가균형발전 관련 통계자료”.
- 국토연구원. 2003. 「통합 선진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정책 총괄요약 보고서」.
- 권상철. 2001. “인구 이동과 지역발전 :한국에 있어서의 인적자원 유출”, 한국도시지리학 회지, 4(1).
- 권영섭. 1992. “서울소재대학 지방분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지역 연구」 8(1).
- 권영섭·허은영. 2000. 「지역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 국토연구원.
- 권영섭. 2001. 「시범테크노파크 사업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국토연구원.
- 김원섭·김소희. 2002. “세계 유명대학의 발전 동향과 21세기 대학발전 Vision 2011모 형”, 「대학지성」 16호.
- 김중후. 2000. “지역발전과 지방국립대학의 역할 및 발전방안”, 「지방교육경영」 5(1).
- 김진영 외. 2003. “지방대학의 경영진단과 재정지원 방안”, 제19차 KEDI 교육정책포럼.
- 박영한. 1995. “대학의 입지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리학논총」 25.
- 박영한·조영국·안영진. 2001. “대학과 지역발전 : 연구동향과 전망”, 「대한지리학회 지」 36(4).
- 박찬석·김윤상. 1997. “인재 지역할당제: 지방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대학교육」 85.
- 박헌주·이환성. 1997.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 수도권 대학규제의 실효 성 제고방안」. 국토연구원.

- 산업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3.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 삼성경제연구소. 2002. 「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
- 서정화 · 박중배 · 정영근. 2003. “외국 대학의 통합사례와 그 시사점”, 제13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서찬수. 2002.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지역연구」 18(3).
- 설 훈. 2002.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하여”, 총장 질의서 내용, 2002. 9. 30.
- 안영진. 2001.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2).
- 유현숙 외. 2000. “쿼터제 도입, 지방대출신 고용 확대”, 「교육마당21」.
- 유현숙. 2000.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체계”, 「교육행정학연구」 18(4).
- 유현숙. 2001.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 「교육개발」 129.
- 윤주명. 1995. “산학협동을 통한 지방대학의 지역발전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9(3).
- 이대식. 2000a.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지역경제 발전과 대학의 역할”,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주최 세미나.
- 이대식. 2000b.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 「지방교육경영」 4(1).
- 이만희. 2003.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구조조정 방안”, 제19차 KEDI 교육정책포럼.
- 이상주. 1976. “전환기에 접어든 학교교육”, 「교육경남」 52.
- 이성근. 2000. “경산 대학도시의 형성과 지역혁신의 전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3).
- 이재정. 2002. “한국 대학교육의 현황진단과 정책 대안”, 이재정의원 정책자료실.
- 이재정. 2003.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주요과제”, 이재정의원 정책자료실
- 이재웅. 1999. “미국대학의 사회봉사체제와 프로그램운용에 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보」 9(1).
- 이현청. 2003a. “지방대 활성화 어떻게 할까”, 교육소식(105호).
- 이현청. 2003b. “고등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 구조조정 전략”, 제13회 대학교육정책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임승달. 1989.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국토계획」 24(1),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 임정덕·장영재. 1997. “지역우수두뇌의 유출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20(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2. 「CEO가 본 한국의 국가경쟁력」.
- 정기오. 2003. “지방대학위기 현상과 원인: 지방균형발전정책의 담론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교육」 30(2).
- 정책희·이만희·조미영. 1999.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주철안. 2000. “지식기반경제사회를 위한 지방대학의 실태 분석과 육성 전략”, 「지방 교육경영」 5(1).
- 지방대학육성대책위원회. 2000. 「지방대학 육성대책(안)」, 2000. 9.
- 최은옥. 2004.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전략 추진사례”, 「도시문제」.
- 표시열. 2000. “지방소재 대학의 발전전략”, 「교육행정학연구」 17(2).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산학연연계 활성화 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2003. “지방대학의 위기진단과 발전방안” 제19차 KEDI 교육정책포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3a.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 2003년도 하계대학 총장 세미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3b. “대학 M&A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14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 홍성범. 2001. 「해외 신흥 혁신클러스터의 특징 및 성장요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홍형득. 2003.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계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산업대학의 역할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1).
- Armstrong, Harvey W. 1993. “The Local Income and Employment Impact of Lancaster University”, *Urban Studies* 30(10) : 1653-1668.
- Beck, Roger et al. 1995. “Economic Impact Studies of Regional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Growth and Change* 26 : pp.245-260.
- Bugliarello, George and Harold Simon. 1973. *The Impact of the University on its Environment: The Regional Role of Engineering Colleges*, Chicago.
- David A. Wolfe. 2002. “The Innovation Systems Research Network: An experimental

- design for knowledge management" Program on Globalization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 Elliott, D., S. Levin, and J. Meisel. 1987.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8(1) : pp.17-33.
- Etzkowitz & Leydsdorff. 2000. "The Dynamics of Innovation: From National System and "Mode2" to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Research Policy*. 29 : pp.109-123.
- Etzkowitz et al. 2000.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he Future: Evolution of Ivory Tower to Entrepreneurial Paradigm." *Research Policy* 29(2) : pp.313-330.
- Felsenstein, D. 1993. *A preliminary look at the local income, output and employment effects associated with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Center for Urban Affairs and Policy Research.
- Gieser E. & Rubenstein A. 1989. "University-Industry Relation Issues". In Link A. & Tassej G.(eds).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Industry-University -Government Relationship*. Kluwer Academic Publisher.
- Goldstein, Harvey A. and Michael I. Luger. 1992. "University-Based Research Parks as a Rural Development Strategy", *Policy Studies Journal*, 20(2) : pp.249-263.
- Habison, F. H. & Meyers. C. 1964.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 Strategi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N. Y. : McGraw-Hill.
- Haywood. C. F. 1993. *Analysis of the annual economic impacts in Kentucky of the state's public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University of Kentucky Center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 Hedrick. D. W, S. E. Henson. and R. S. Mack. 1990. "The effects of universities on local retail, service, and F.I.R.E. employment : Some cross-sectional evidence". *Growth and Change* 21(3): pp.21-31.
- Hilary Winchester et. al. *The role of universities in the regions*.
- Iowa Stat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66. *The Role of Growth Centers in*

-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S. Iow. September.
- Kevin J. Dougherty. 2000. "Community Colleges and Contract Training: Content, Origins, and Impact", *Teachers College Record* 102.
- Kevin J. Dougherty and Marianne F. Bakia. 2000. "The new economic development role of the community college", *Community College Research Center (CCRC)* January 2000.
- Klaus Kunzel. 1985. "Regional Development and Continuing Education", *Oxford Review of Education* 11(3).
- Knapp, J., T. Fox, R. McGrath. and R. Cox. 1990. "The University of Virginia's Impact on the Charlottesville metropolitan area: A study for 1989-90". *Charlottesville, VA* : Center for public Service, University of Virginia, October.
- Kott, J. 1987-88. "Regional economic impact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Planning for Higher Education* 16(4) : pp.19-32.
- Kwon, Y. S. 2002. "University-Industry Link and Innovative Clust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Lechat, Jean-Marie. 1979. "University Influence on Regional Development : example of a new creation - the Louvain Catholic University at Louvain -la-Neuve",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14(3).
- Longhi, C., M. Quere. 1993. "Innovative Networks and the Technopolis Phenomenon : the Case of Sophia - Antipolis", *Environment and Planning C : Government and Policy* 11 : pp.317-330.
- Lonnberg, Harri & Puukka. 2003. "The University and Its Region: The Case of the Univ. of Turku", *Higher Education in Europe*, 26(3).
- Michael E. Porter. 2001. "San Diego : Clusters of Innovation Initiative", *Harvard University*.
- Neave, Guy. 1979.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n overview of a growing controversy",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14(3).
- OECD. 1981. *The future of University Research*.

- Pulver, Glen C., Daniel J. Schler and Lee J. Cary. 1969. *The Role of the University in Community Development,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School of Social and Community Services, University Extension Division.*
- Rodriguez, A. C. 1975. "Brain Drain and Economic Growth-a Dynamic Model",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
- Roman, J. T. 1974. "Benefits and Burdens of Migration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Brain Drain", *Southern Economic Journal.*
- Smith, H. Lawton. 1991. "Industry - Academic Links: the Case of Oxford University", *Environment and planning : Government and Policy* 9 : pp.403-416.
- Vassilios C. Kelessidis. 1998. "The role of technology park in reg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northern greece", XV IASP World Conference on Science & Technology 18-23 October.
- 中國教育與人力資源問題報告課題組. 2003. 「從人口大國邁向人力資源強國」,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각 지방대학교 홈페이지(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www.pcbnd.go.kr)

국제경영개발원(www.02.imd.ch/wcy)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앙일보(www.joins.com)

통계청(www.nso.go.kr)

한국교육개발원(www.kedi.re.kr):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SUMMARY

Measures to Foster Regional Universiti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eung-Dal Lim, Young-Sub Kwon, and Seh-Il Byeon

Regional universities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ducational, social, cultural, technological and economic sectors. Especially the R&D function of regional universities is one of important sources of regional innovation. But regional universities have faced many difficulties in recent years because of over-concentration of top-class universities o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nsufficient enrollment of the freshmen, high unemployed rate of graduates, inferior conditions for education, and so on.

As a necessary consequence of these conditions, competitiveness of regional universities has been weakened and a gap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 regions has been widened. Therefore measures are needed to foster regional universiti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study intends to raise problems of regional universities accumulated i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dimension, consider reasons of functional deterioration of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 imbalance,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to solve problems in the field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is report is organized with eight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It contains background, necessity, goal, methodologies and ranges of the research with respect to time, space, and contents. In addition, we provide follow chart of research to help understanding of this research.

In the chapter 2, relevant concept and role, effects of regional universities are reviewed from a viewpoin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the distinction of this research,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papers, is presented.

In the chapter 3, spatial location and shift of universities in Korea and behavioristic characteristics of students going to universities are reviewed. To this end, we focus on differences of spatial loca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 regions,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going to universities.

In the chapter 4, we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regional connection and origin of crisis, effects of regional universities on development of the region. To this end, we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regional universities utilizing system model, origin of crisis utilizing result of survey on CEO of regional universities and actual condition.

In the chapter 5, we review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o foster regional universities. To this end, we review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other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and so on. In addition, we review policies to foster regional universities in Japan, China, Europe, USA and so on, and drew out five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chapter 6, we provide result of a survey on CEO of regional universities and graduates of regional high schools. This result is used

for suggesting an alternative policy for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To this end, we provide result of evaluation on existing policies and alternative policies,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university, prospect of the development of regional universities and so on.

In the chapter 7, we provide alternative policies for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in a viewpoin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we provide five basic directions of alternative policies utilizing result of analysis on problems and reason of crisis of regional universities. And we analyzed effects of twenty policy devices in contrast with seventeen main problems of regional universities. Lastly, we suggest six efficient policy devices for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utilizing all results of these analyses.

In the chapter 8, we draw out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nd provide next research issues. As we studied above, alternative policies for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re very important to achieve goal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fter studying, we can draw out five basic directions of policy devices for the fostering of regional universities as follows. First, multifarious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reducing interregional discrepancy. Second, affirmative action for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should be considered. Third, downsizing policy should be considere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regional university. Fourth, policies to develop the region and regional universities together should be considered. Fifth, efficient and consistent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universities should be implemented.

The measures to foster regional universiti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under these basic policy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preferential policy for regional universities by enactment of a special law should be considered. Second, downsizing policy should be considere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regional universities. Third,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prepared to foster regional universities. Fourth, the establishment of region-oriented universities should be considered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if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gional universities in order to attract qualified and competent professors and brilliant students. Sixth, multifarious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 reduce discrepancy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 regions.

부 록

<부록 1> 장별 연구관련 참고자료

<부표 1-1-1> 수도권과 지방간 중추기능의 중력지수 비교

(전국 = 100)

| 지역 | 국가공공기관의 지역별 중력지수(A) | 500대 기업본사의 지역별 중력지수(B) | 중추기능의 지역별 평균중력지수 ((A+B)/2) |
|----------|------------------------|---------------------------|----------------------------------|
| 수도권 | 99.3 | 98.3 | 98.8 |
| 지방 | 0.7 | 1.7 | 1.2 |
| · 충청권 | 0.6 | 0.4 | 0.5 |
| · 호남권 | 0.0 | 0.1 | 0.0 |
| · 영남권 | 0.1 | 1.2 | 0.7 |
| · 강원·제주권 | 0.0 | 0.0 | 0.0 |

자료 : 국토연구원(2003), 통합선진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정책 총괄요약 보고서.

<부표 1-3-1> 설립별 소재지별 지역별 대학 분포

| 구 분 | | 설립 별 | | 소 재 지 | | 합 계 |
|-----|----------|------|-----|-------|-----|-----|
| | | 국공립 | 사립 | 대도시 | 중도시 | |
| 수도권 | | 4 | 62 | 42 | 24 | 66 |
| 지방 | · 충청권 | 8 | 20 | 14 | 24 | 28 |
| | · 호남권 | 7 | 19 | 7 | 19 | 26 |
| | · 영남권 | 4 | 26 | 8 | 21 | 30 |
| | · 강원·제주권 | 3 | 7 | - | 10 | 10 |
| | 합 계 | 26 | 143 | 71 | 98 | 169 |

<부표 1-3-2> 시군별 인구 10,000명당 대학생수 현황

| 구분 | 1970년 | 1980년 | 1990년 | 2000년 | 2002년 |
|-------------|---|---|--|--|--|
| 0 ~ 300명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수원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청주시, 전주시, 익산시, 마산시, 진주시, 제주시 (16개)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부천시, 화성시, 용인시, 원주시, 충주시, 공주시, 군산시, 목포시, 안동시, 구미시, 마산시, (16개)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군포시, 화성시, 광주시(경기), 재천시, 논산시, 남원시, 여주시, 포항시, 상주시, 창원시 (19개) |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고양시, 동해시, 군포시, 동해시, 공주시, 예산군, 여주시, 광양시, 영광군, 포항시, 창원시, 통영시, 서귀포시(21개) |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고양시, 동해시, 예산군, 여주시, 광양시, 영광군, 포항시, 구미시, 영주시,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서귀포시(23개) |
| 300 ~ 600명 | | 광주시, 대전시, 수원시, 춘천시, 강릉시, 천안시, 연기군, 전주시, 진주시, 제주시(10개) | 광주시, 대전시,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원주시, 충주시, 공주시, 전주시, 군산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안동시, 구미시, 마산시, 김해시, 제주시 (18개) |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서산시, 논산시, 익산시, 남원시, 목포시, 순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마산시, 김해시, 양산시, 제주시 (16개) |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원주시, 논산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순천시, 안동시, 마산시, 밀양시, 양산시, 제주시(14개) |
| 600 ~ 900명 | | 청주시(1개) | 청주시, 연기군, 익산시, 완주군, 경주시, 진주시 (6개) | 광주시, 대전시, 오산시, 화성군, 포천군, 원주시, 강릉시,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홍성군, 전주시, 나주시, 경주시, 상주시, 밀양시(16개) | 광주시, 대전시, 오산시, 포천군, 강릉시, 삼척시, 양양군,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서산시, 전주시, 남원시, 나주시, 무안군, 경주시, 상주시(17개) |
| 900 ~ 1200명 | | 익산시, 경산시(2개) | 용인시, 강릉시, 천안시(3개) | 춘천시, 삼척시, 양양군, 충주시, 천안시, 군산시, 무안군, 고령군, 진주시(9개) | 용인시, 화성시, 춘천시, 충주시, 천안시, 공주시, 홍성군, 고령군, 진주시(9개) |
| 1200명 이상 | | | 춘천시, 경산시 (2개) | 용인시, 안성시, 아산시, 연기군, 완주군, 경산시 (6개) | 안성시, 아산시, 연기군, 완주군, 경산시(5개) |

주: 인구 10,000명당 대학생수=(대학생수/인구수)×10,000.

자료: 통계청(인구수), 한국도시연감(대학생수).

<부표 1-3-3> 시군별 대학교 수 현황

| 구분 | 1970년 | 1980년 | 1990년 | 2000년 | 2002년 |
|--------|---|--|--|--|--|
| 1 ~ 2개 | 인천시, 수원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익산시, 마산시, 진주시, 제주시(9개) | 인천시, 울산시, 부천시, 화성시, 용인시, 원주시, 강릉시, 충주시, 천안시, 연기군, 공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마산시, 진주시(19개) | 인천시, 울산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군포시, 화성시, 광주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연기군, 논산시, 군산시,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제주시(37개) | 울산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안성시, 광주군, 포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영광군,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고령군,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주시, 서귀포시(52개) | 울산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고양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군,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양양군,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영광군,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고령군,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주시, 서귀포시(50개) |
| 3 ~ 4개 | 대전시, 광주시, 청주시(3개) | 수원시, 춘천시, 청주시, 전주시, 제주시(5개) | 대구시, 용인시, 청주시, 전주시, 경산시(5개) | 대구시, 화성시, 춘천시, 원주시, 충주시, 아산시, 전주시, 목포시, 경주시(9개) | 대구시, 수원시, 화성시, 춘천시, 원주시, 충주시, 청주시, 아산시, 전주시, 목포시, 포항시, 경주시, 진주시(13개) |
| 5 ~ 6개 | 부산시, 대구시 (2개) |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3개) | 광주시, 대전시, 수원시, 천안시 (4개) | 인천시(1개) | 인천시(1개) |
| 7 개 이상 | 서울시, 전주시(2개) | 서울시, 부산시 (2개) | 서울시, 부산시 (2개) |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용인시, 천안시, 경산시(7개) |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용인시, 천안시, 경산시(7개) |

자료: 한국도시연감(1971, 1981, 1991, 2000, 2002년).

<부표 1-4-1> 상위 20개 대학 학술연구비 총액

(단위 : 억원)

| 순위 | 학 교 | 2001년 | 2000년 |
|-----|---------------|-------------------|-------------------|
| 1 | 서울대 | 1264 | 1485 |
| 2 | 연세대 | 1123 | 605 |
| 3 | 한국과기원 | 855 | 824 |
| 4 | 포항공대 | 809 | 574 |
| 5 | 고려대 | 650 | 469 |
| 6 | 성균관대 | 578 | 425 |
| 7 | 한양대 | 550 | 396 |
| 8 | 전남대 | 390 | 362 |
| 9 | 경북대 | 368 | 334 |
| 10 | 부산대 | 338 | 246 |
| 11 | 인하대 | 336 | 245 |
| 12 | 이화여대 | 330 | 206 |
| 13 | 경희대 | 248 | 184 |
| 14 | 충남대 | 246 | 215 |
| 15 | 조선대 | 227 | 140 |
| 16 | 광주과기원 | 219 | 187 |
| 17 | 전북대 | 218 | 171 |
| 18 | 명지대 | 194 | 138 |
| 19 | 아주대 | 190 | 136 |
| 20 | 충북대 | 181 | 129 |
| 수도권 | 10개 (50%) | 5,463 (58.7%) | 4,289 (57.4%) |
| 지방 | 10개 (50%) | 3,851 (41.3%) | 3,182 (42.6%) |
| 계 | 20개 (100%) | 9,314 (100.0%) | 7,471 (100.0%)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업무통계자료, 정기오(2003), 지방대학위기 현상과 원인, p.13에서 재인용.

<부표 1-4-2> 부설연구소 연구비 지원 현황

(단위 : 개, 명, 천만원)

| 순위 | 대학명 | 부설연구소 | 전임연구원 | 외부연구비 |
|-----|-------|-------------|---------------|----------------|
| 1 | 서울대 | 60 | 109 | 6,891 |
| 2 | 연세대 | 114 | 443 | 4,494 |
| 3 | 고려대 | 84 | 170 | 3,988 |
| 4 | 포항공대 | 43 | 381 | 3,681 |
| 5 | 부산대 | 46 | 74 | 2,607 |
| 6 | 인하대 | 39 | 19 | 2,357 |
| 7 | 한양대 | 45 | 47 | 2,161 |
| 8 | 경북대 | 54 | 53 | 1,675 |
| 9 | 중앙대 | 41 | 55 | 1,557 |
| 10 | 이화여대 | 27 | 128 | 1,394 |
| 11 | 경희대 | 39 | 117 | 1,343 |
| 12 | 충북대 | 20 | 29 | 1,185 |
| 13 | 강원대 | 28 | 10 | 1,125 |
| 14 | 숙명여대 | 15 | 15 | 1,085 |
| 15 | 전남대 | 35 | 58 | 913 |
| 16 | 부경대 | 21 | 30 | 871 |
| 17 | 전북대 | 30 | 51 | 837 |
| 18 | 동국대 | 23 | 14 | 752 |
| 19 | 서울시립대 | 12 | 81 | 708 |
| 20 | 배재대 | 10 | 197 | 553 |
| 수도권 | | 499(63.5%) | 1,198(57.6%) | 26,730(66.5%) |
| 지방 | | 287(36.5%) | 883(42.4%) | 13,447(33.5%) |
| 계 | | 786(100.0%) | 2,081(100.0%) | 40,177(100.0%) |

<부표 1-4-3> 대학지원사업 예산의 지방대 배분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계 | 구성비 |
|-----------------------|-----|---------|---------|---------|---------|---------|---------|-------|
| 대학다양화· 특성화지원 | 수도권 | 21,079 | 15,723 | 13,596 | 13,560 | 13,774 | 77,732 | 31.2 |
| | 지 방 | 38,921 | 38,277 | 31,404 | 31,440 | 31,226 | 171,268 | 68.8 |
| | 계 | 60,000 | 54,000 | 45,000 | 45,000 | 45,000 | 249,000 | 100.0 |
| 대학개혁 추진 | 수도권 | 18,200 | 17,056 | 12,189 | 10,105 | 9,922 | 67,472 | 54.1 |
| | 지 방 | 11,800 | 9,944 | 7,811 | 9,895 | 17,878 | 57,328 | 45.9 |
| | 계 | 30,000 | 27,000 | 20,000 | 20,000 | 27,800 | 124,800 | 100.0 |
|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지원 | 수도권 | - | - | - | 154,859 | 159,413 | 314,272 | 71.6 |
| | 지 방 | - | - | - | 52,199 | 72,533 | 124,732 | 28.4 |
| | 계 | - | - | - | 207,058 | 231,946 | 439,004 | 100.0 |
| 국제전문 인력양성 특성화지원 | 수도권 | 20,000 | 20,000 | 16,000 | 10,000 | 10,000 | 76,000 | 100.0 |
| | 지 방 | - | - | - | - | - | - | - |
| | 계 | 20,000 | 20,000 | 16,000 | 10,000 | 10,000 | 76,000 | 100.0 |
| 이공계 대학 연구소 지원 | 수도권 | 8,427 | 9,720 | 9,280 | 5,930 | 6,500 | 39,857 | 54.7 |
| | 지 방 | 6,573 | 7,280 | 7,720 | 5,970 | 5,500 | 33,043 | 45.3 |
| | 계 | 15,000 | 17,000 | 17,000 | 11,900 | 12,000 | 72,900 | 100.0 |
|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 수도권 | 10,922 | 15,909 | 15,043 | 11,086 | 12,257 | 65,217 | 13.7 |
| | 지 방 | 64,502 | 94,952 | 98,034 | 80,255 | 72,061 | 409,804 | 86.3 |
| | 계 | 75,424 | 110,861 | 113,077 | 91,341 | 84,318 | 475,021 | 100.0 |
|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 수도권 | 54,152 | 61,990 | 56,428 | 41,474 | 36,821 | 250,865 | 49.2 |
| | 지 방 | 50,848 | 63,010 | 58,572 | 43,526 | 43,179 | 259,135 | 50.8 |
| | 계 | 105,000 | 125,000 | 115,000 | 85,000 | 80,000 | 510,000 | 100.0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보유 업무통계에서 재구성.

<부표 1-4-4>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자 및 취업률 추이

(단위 : 명, %)

| 구분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자 | 기타 | 취업률 |
|------|----------------|--------------|--------------|---------------|--------------|------|
| 1965 | 36,180(100.0) | 1,036(2.9) | 5,762(15.9) | 12,564(34.7) | 16,818(46.5) | 42.8 |
| 1970 | 23,515(100.0) | 1,091(4.6) | 2,961(12.6) | 13,743(58.4) | 5,720(24.3) | 70.6 |
| 1975 | 33,610(100.0) | 2,179(6.5) | 4,076(12.1) | 19,635(58.4) | 7,720(23.0) | 71.8 |
| 1980 | 49,735(100.0) | 6,088(12.2) | 4,796(9.6) | 28,349(57.0) | 10,502(21.1) | 73.0 |
| 1985 | 118,581(100.0) | 12,278(10.4) | 13,163(11.1) | 48,552(40.9) | 44,591(37.6) | 52.1 |
| 1990 | 465,916(100.0) | 12,782(7.7) | 7,830(4.7) | 79,975(48.2) | 65,329(39.4) | 55.0 |
| 1995 | 180,664(100.0) | 16,500(9.1) | 4,326(2.4) | 97,290(53.9) | 62,548(34.6) | 60.9 |
| 2000 | 214,498(100.0) | 26,000(12.1) | 2,225(1.0) | 104,371(48.7) | 81,902(38.2) | 56.0 |
| 2002 | 244,852(100.0) | 29,526(12.1) | 2,137(0.9) | 129,414(52.9) | 83,775(34.1) | 60.7 |

주: 1. 기타는 무직과 일부의 미상을 포함.

2. 취업률 = 해당연도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100.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부표 1-4-5>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률 추이

(단위 : 명, %)

| 연도 | 졸업자 | 취업자 | | | | 취업대상자 (F)=A-(C+D) | 취업률 (B/F) |
|------|-------|-------------|-----------|------------|-----------|----------------------|--------------|
| | | 순수취업 (B) | 진학 (C) | 군입대 (D) | 소계 (E) | | |
| 1990 | 4,044 | 1,474 | 243 | 171 | 1,888 | 3,630 | 40.6 |
| 1992 | 3,893 | 1,730 | 193 | 208 | 2,131 | 3,492 | 49.5 |
| 1994 | 3,452 | 1,509 | 253 | 164 | 1,926 | 3,035 | 49.7 |
| 1996 | 3,428 | 1,888 | 316 | 139 | 2,343 | 2,973 | 63.5 |
| 1998 | 3,715 | 1,420 | 376 | 106 | 1,902 | 3,226 | 44.0 |
| 1999 | 3,521 | 1,261 | 411 | 98 | 1,770 | 2,834 | 44.5 |
| 2000 | 3,064 | 1,151 | 283 | 87 | 1,521 | 2,667 | 43.2 |
| 2001 | 3,093 | 1,263 | 350 | 9 | 1,622 | 2,734 | 46.2 |
| 2002 | 3,506 | 1,307 | 311 | 60 | 1,678 | 3,135 | 41.7 |
| 2003 | 3,202 | 1,131 | 282 | 11 | 1,424 | 2,909 | 38.9 |

주: 90년까지는 매년 2월말 조사자료이며, 그 후는 매년 3월말 조사자료임.

자료: 전남대학교 통계연보 각 년도.

<부표 1-4-6> 2001년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직종별 취업현황

(단위 : 명, %)

| 단과 대학 | 졸업자 | 일반기업 | | | | | | | | | | 취업률 |
|-------|-------|-------|-------|-------|-------|-------|-----|----|-----|-------|-------|------|
| | | 일반 기업 | 국영 기업 | 금융 기관 | 연구 기관 | 언론 출판 | 공무원 | 교직 | 특수직 | 자영 기타 | 소계 | |
| 가정대 | 110 | 50 | - | - | - | - | 1 | 2 | - | - | 53 | 49.5 |
| 경영대 | 312 | 73 | 4 | 60 | - | - | 8 | - | - | 24 | 169 | 61.2 |
| 공과대 | 693 | 214 | 1 | 4 | 3 | 3 | 7 | 2 | - | 16 | 250 | 45.6 |
| 농과대 | 334 | 65 | 6 | 8 | 4 | 2 | 6 | - | 1 | 28 | 110 | 38.6 |
| 법과대 | 95 | 1 | - | 1 | - | - | 4 | - | - | 2 | 8 | 9.5 |
| 사범대 | 274 | 4 | - | 1 | - | 2 | - | 47 | - | 35 | 89 | 34.6 |
| 사회대 | 131 | 11 | 1 | 2 | 1 | 3 | 2 | 4 | 1 | 6 | 31 | 29.8 |
| 수의대 | 57 | 2 | - | - | 1 | - | - | 1 | 17 | - | 21 | 72.4 |
| 약학대 | 73 | - | - | - | - | - | - | - | 22 | - | 22 | 36.7 |
| 예술대 | 191 | 12 | - | 1 | - | 1 | 5 | - | - | 42 | 61 | 38.9 |
| 의과대 | 219 | - | - | - | - | - | - | 1 | 196 | - | 197 | 91.2 |
| 인문대 | 255 | 24 | 1 | 4 | - | 4 | 2 | 2 | - | 16 | 53 | 22.7 |
| 자연대 | 274 | 32 | 1 | 3 | 8 | 1 | 3 | 1 | 9 | 6 | 64 | 30.9 |
| 치과대 | 74 | - | - | - | - | - | - | - | 56 | - | 56 | 96.6 |
| 합계 | 3,093 | 488 | 14 | 84 | 17 | 16 | 28 | 60 | 302 | 165 | 1,184 | 45.2 |

자료: 안영진(2001).

<부표 1-4-7> 전남대학교 졸업생 중 취업자의 취업지 분포(2001년)

| 구분 | 일반 기업 | 국영 기업 | 금융 기관 | 연구 기관 | 언론 출판 | 공무원 | 교직 | 특수직 | 자영 기타 | 기타 | 소계 |
|----|-------|-------|-------|-------|-------|-----|----|-----|-------|----|-------|
| 광주 | 165 | 4 | 39 | 9 | 7 | 12 | 26 | 143 | 33 | 67 | 505 |
| 서울 | 173 | 4 | 36 | - | 1 | 6 | 1 | 77 | - | 1 | 309 |
| 전남 | 38 | 2 | 6 | 2 | - | 9 | 6 | 9 | 5 | 15 | 92 |
| 경기 | 42 | - | - | - | - | - | 5 | 16 | - | 1 | 64 |
| 인천 | 4 | - | - | - | - | - | - | 14 | - | - | 18 |
| 강원 | - | - | - | - | - | - | - | 5 | - | - | 5 |
| 충남 | 3 | - | - | - | - | - | 1 | 5 | - | - | 9 |
| 대전 | 1 | - | - | 2 | - | - | - | - | - | 1 | 4 |
| 충북 | 6 | - | - | - | - | - | 1 | - | - | - | 7 |
| 경북 | 4 | - | - | - | - | - | - | - | - | - | 4 |
| 경남 | - | - | - | - | - | 1 | - | - | - | - | 1 |
| 부산 | - | - | - | - | - | - | - | 1 | - | - | 1 |
| 울산 | 2 | - | - | - | - | - | - | - | - | 1 | 3 |
| 전북 | 3 | - | - | - | - | - | 1 | 9 | - | - | 13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441 | 10 | 81 | 13 | 28 | 28 | 41 | 279 | 38 | 86 | 1,035 |

자료: 안영진(2001).

<부표 1-4-8> 수도권 순이동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2002년)

| 연령대 | 수도권 | | | |
|---------|----------------|----------|--------|---------|
| | 전체 | 서울 | 인천 | 경기 |
| 0 ~ 9 | 19,382(9.2) | -23,303 | -2,880 | 45,565 |
| 10 ~ 19 | 26,893(12.8) | 4,660 | -1,823 | 24,056 |
| 20 ~ 29 | 118,247(56.4) | 4,294 | 9,597 | 104,356 |
| 30 ~ 39 | 23,695(11.3) | -35,265 | -2,741 | 61,701 |
| 40 ~ 49 | 10,344(4.9) | -16,359 | -2,292 | 28,995 |
| 50 ~ 59 | 3,481(1.7) | -21,382 | 206 | 24,657 |
| 60 ~ 69 | 3,401(1.6) | -14,034 | 165 | 17,270 |
| 70 ~ | 4,148(2.0) | -5,032 | -2 | 9,182 |
| 계 | 209,591(100.0) | -106,421 | 230 | 315,782 |

자료: 통계청(www.nso.go.kr) 인구 순이동 자료(2002).

<부표 1-5-1> 통합 협의·검토 중인 대학

| 구분 | 대학 | 비고 |
|-------|---------------------------------------|--|
| 국립 | 히로사키대+아키타대+이와테대 | 통합·협의 중 |
| 국립 | 사이타마대+군마대 | 통합·협의 중 |
| 국립 | 쇼에츠교육대 | 니이가타대와 통합, 그 외 토야마대, 신슈대와의 통합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
| 국립 | 시즈오카대+하마마츠의대 | 통합·협의 중 |
| 국립 | 豊橋과학기술대 | · 나고야대학과 통합을 둘러싸고 협의 중 · 시즈오카대와 하마마츠의과대에도 통합을 요청하고 있음 |
| 국립·공립 | 기후대+시립 기후약학대 | 통합·협의 중 |
| 국립 | 사가대+사가의과대+교토교육대+교토공예섬유대 | 통합·협의 중 |
| 국립 | 이바라키대+우추노미야대+군마대+사이타마대 | 4개 대학이 연계(제휴) 방침에 대해서 협의 중 |
| 국립 | 도쿠시마대+나루토교육대+카가와대+카가와과대+코치대+코치과대+애히메대 | · 연계(제휴)를 위한 시코쿠 국립대학협의회 설치 · 7개 대학의 단위교환 등을 목표로 함 |
| 공립 | 사이타마현립대 | 단기대 학부를 2006년도를 목표로 폐지하고 4년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
| 공립 | 교토부립대+교토부립과대 | 통합을 목표로 하여 연계(제휴)를 검토하고 있음 |
| 공립 | 나가사키협립대+협립나가타키 시볼트대 | 2005년 4월 독립행정법인화, 2008년도 중에 통합을 검토하고 있음 |

자료: 서정화 외(2003).

<부표 1-5-2> 중국의 주요 합병 대학('211공정' 대학을 중심으로)

| 합병 후 학교 명칭 | 합병 전 학교 명칭 | 주관부문 | 합병시기 |
|------------|--|-----------|------------|
| 鄭州大學 | 河南體育專科學校, 鄭州大學 | 河南省 | 1992-5-18 |
| 北京工業大學 | 北京工業大學, 北京計算機學院 | 北京市 | 1992-6-6 |
| 南昌大學 | 南昌大學, 江西醫學院 | 江西省 | 2001-1-21 |
| 上海大學 | 上海工業大學, 上海科技大學, 上海大學, 上海科技高等專科學校 | 上海市 | 1994-4-25 |
| 南開大學 | 天津對外貿易學院, 南開大學 | 國家教委 | 1994-11-15 |
| 延邊大學 | 延邊大學, 延邊醫學院, 延邊農學院, 延邊師範高等專科學校, 吉林藝術學院延邊分院 | 吉林省 | 1996-4-16 |
| 同濟大學 | 上海城建學院, 上海建材學院, 同濟大學 | 國家教委, 上海市 | 1996-7-18 |
| 北京科技大學 | 北京科技大學, 北京冶金管理幹部學院 | 教育部 | 1998-7-20 |
| 浙江大學 | 浙江大學, 杭州大學, 浙江農業大學, 浙江醫科大學 | 教育部 | 1998-8-26 |
| 上海交通大學 | 上海交通大學, 上海農學院 | 教育部 | 1999-8-16 |
| 清華大學 | 清華大學, 中央工藝美術學院 | 教育部 | 1999-9-22 |
| 北京大學 | 北京大學, 北京醫科大學 | 教育部 | 2000-3-29 |
| 湖南大學 | 湖南大學, 湖南計算機高等專科學校 | 教育部 | 2002-5-23 |
| 復旦大學 | 復旦大學, 上海醫科大學 | 教育部 | 2000-4-21 |
| 華中科技大學 | 華中理工大學, 同濟醫科大學, 武漢城市建設學院 | 教育部 | 2000-5-23 |
| 吉林大學 | 吉林大學, 吉林工業大學, 白求恩醫科大學, 長春科技大學, 長春郵電大學 | 教育部 | 2000-6-5 |
| 武漢大學 | 武漢大學, 武漢水利電力大學, 武漢測繪科技大學, 湖北醫科大學 | 教育部 | 2000-7-26 |
| 江南大學 | 無錫輕工大學, 江南學院, 無錫教育學院 | 教育部 | 2001-1-4 |
| 遼寧大學 | 遼寧大學, 遼寧外國語師範高等專科學校 | 遼寧省 | 2002-5-15 |

자료: 서정화 외(2003).

<부표 1-5-3> 영국대학의 통합 현황

| 통합한 이후의 학교명 | 설립 | 당초 학교명 | 통합 년도 |
|---|------|--|----------|
| University of Glamorgan | 1913 | South Wales and Monmouthshire School of Mines | 1975 |
| University of Wales, Aberystwyth | 1872 | University College of Wales, Aberystwyth | 1995 |
| University of Wales, Bangor | 1884 | University College of North Wales | 1996 |
| Cardiff University (University of Wales Cardiff) | 1883 | University College of South Wales and Monmouthshire | 1988 |
| University of Wales Institute, Cardiff | 1976 | South Glamorgan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 1976 |
| University of Wales College, Newport | 1975 | Gwent College of Higher Education | 1975 |
| North East Wales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 1975 | North East Wales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 1975 |
| Swansea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 1976 | West Glamorgan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 |

자료: 서정화 외(2003).

<부표 1-5-4> 호주의 대학교육 개혁에 따른 대학통합 현황(1990.8)

| 대학교 명 | 통합되는 기관(통합시기) |
|--|--|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 | · Canberra Institute of Arts(1991.1) |
| Maquarie University | ·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Studies Sydney, CAE (1991.1) |
| University of Newcastle | · Hunter Institute(1989.11) · NSW Conservatorium of Music : Newcastle branch (1989.11) |
| University of New England | · Armidale CAE (1989.7) · Northern Rivers CAE (1989.7) · Orange Agricultural College (1990.1) |
| University of Sydney | · Cumberland College of Health Science (1990.1) · Sydney College of the Arts (1990.1) · NSW Conservatorium of Music : Sydney branch (1990.1) · Education, Sydney CAE (1990.1) · Institute of Nursing Studies Sydney CAE (1990.1) |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 City Art Institute (1990.1) · St. George Institute of Education :(CAE 1990.1) |
|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 Kuring-gai CAE (1990.1) · ILATE, Sydney CAE (1990.1) |
| Griffith University | · Brisbane CAE : Mt. Gravatt (1990.1) · Gold Coast CAE (1990.1) |
| University of Queensland | · Queensland Agricultural College (1990.1) · Queensland Conservatorium of Music(1991.1) |
| University of Adelaide | · Roseworthy Agricultural College (1990.1) · City Campus of SACAE (1991.1) |
| Flinders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 · Sturt Campus of SACAE (1991.1) |
| University of Tasmania | · Australian Maritime College (1991.1) · Tasmanian State Institute of Technology (1991.1) |
| Deakin University | · Warrnambool IAE (1990.8) |
| La Trobe University | · Bendigo CAE (1991.1) |
| Monash University | · Chisholm Institute of Technology(1990.7) · Gippsland IAE (1990.7) |

자료: 서정화 외(2003).

<부표 1-5-5>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 국 가 | 개혁의 핵심 | 개혁의 방향 |
|-------------|---|--|
| 미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제고 - 교육의 수월성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스템의 개혁(특히, 교육부의 서비스 기능 강화) - 대학의 연구개발비 확대(“21세기 연구기금” 설치) - 원격교육의 강화(관련법규 정비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 독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의 국제 경 쟁력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임용 절차 간소화(우수 두뇌의 해외유출 방지책 일환) - 연구업적별 보수체계 차등화, 국제화 교육과정 도입, 첨단 원 격시스템 구축 -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 강화 |
| 프 랑 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의 질적인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동 연구체제 확립 - 고등교육기관 연구비 예산 대폭 증액 (2000~2006년, 총 450억 프랑) |
| 영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의 질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학습과 교수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추진 - 고등교육 질 관리청(QAA : Quality Assurance Agency)의 설치 추진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국가규모의 독립적 자문기관, 5년 단위로 실시) |
| 일 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바뀌면 일본 도 변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에 기초한 경쟁원리의 철저 - 국립대학을 민간 경영원리의 도입에 의한 법인화로 전환 - 대학의 新산업 창출 역할 강화(세계수준의 전문가 육성) |
| 중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류대학 건설”과 “과교흥국(科教興 國)”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이후 일류대학(중국→아시아→세계 수준) 건설을 목표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지원 정책 실시 - 21세기를 대비한 세계 일류대학 건설 프로젝트인 ‘211공정’ 을 추진하며 2003년 현재 100여 개의 대학을 중점 지원·육 성 -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 일류대학 진입을 목적으로 10개 내외 의 대학을 특별히 중점 육성 |

<부록 2>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대학 규제

1.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대학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학 규제는 크게 학교 신·증설, 학교의 총량규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학교 신·증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를 신·증설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법 제7조~9조). 또한 건교부장관은 수도권내 학교 신·증설의 총허용량을 설정하여 학교의 신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12조).

둘째로, 학교의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은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이 50인 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 이내인 대학)의 신설의 허용여부와 그 총 증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 24조).

한편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 증가수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300인 이내(다만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수는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이상의 증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총량규제의 경과조치(부칙 제5조)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95학년도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총량규제는 관련규정에 불

구하고 첨단관련 이공계학과의 입학정원을 2천명 이내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례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실제로 늘어난 정원은 약 9천명이었다.

<부표 2-1>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시행령 제24조)

| 구분 | 총 량 규 제 |
|--------|--|
| 학 교 | <p>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이 50인 이내인 대학(컴퓨터, 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 이내인 대학)의 신설의 허용여부와 그 총 증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p> <p>2.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 증가수는 다음 각목의 1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산업대학, 전문대학 :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0분의 10</p> <p>나. 대학원 대학 : 매년 300인. 다만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수는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p> |

셋째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 11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의 신설은 금지하고 있다(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신설 금지는 서울특별시만 해당).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 설치를 위한 입학정원의 증원 또한 심의없이 허용하고 있다. 총량규제 범위 안에서는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총 증가수는 전년도 전국 대학 증원의 10%이내에서, 대학원대학의 총 증가수는 총300인 이내에서 허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대학의 이전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허용된다.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시행령 제11조)

| 학 교 |
|--|
| ·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대학원 대학의 신설(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의 신설에 한함) |
| ·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
|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전하거나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으로서 교육정책상 부득이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의 설치를 위한 입학정원의 증원 |

넷째로,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 12조에 있다. 총량규제 범위 안에서의 입학정원 50인 이내(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 이내)인 대학의 신설은 심의없이 허용한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의 총증가수는 총량규제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수도권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한다.

■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시행령 제12조)

| 학 교 |
|--|
| ·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 |
| ·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
| · 수도권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

다섯째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 14조에 있다. 총량규제의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 50인 이하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의 신설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되고 입학정원 증원이 허용된다.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입학정원 50인 이내인 대학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된다.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시행령 제14조)

| 학 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전문대학·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전문대학·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이전 |

2. 수도권 대학규제의 문제점¹¹⁾

수도권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입학정원을 동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수도권 대학규제 제도가 총량규제적 운영과 건교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간 협조가 미미한데 기인한다.

11) 국토연구원(1998)을 중심으로 재정리.

1) 총량규제의 문제점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의 총량규제가 안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야간계 대학 입학정원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간계 대학은 등교시간이 야간이고 학생들은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 증가와 관련이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985년 10월 10일부터 총량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각 대학들이 야간계의 입학정원을 직장인이 아닌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편법으로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야간계 학과의 신·증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 뿐만 아니라 주간계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교육여건이 월등이 좋기 때문에 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이해관계가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건교부장관의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허용 권한(동법시행령 제24조)에 관한 규정이 수도권 입학정원 총량규제의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도권 규제가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

2) 건교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간 협조 미비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개혁시책 중 주요 내용인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입학정원의 자율화 등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시책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대학 정원관리에 대한 부처간 협조가 미흡하여 대학 규제의 실효성이 미미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부처간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1990년대 들어 규제 완화와 자율화의 추세로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수요가 가증되고 있다. 일례로 국제교류 및 첨단과학 관련 분야에 대해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에 9,000명을 증원시켰지만 1996년과 1997년에는 이러한 학과에 대한 증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와 관련없는 주간계나 야간계 학과의 정원이 증가하였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시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다.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예외규정 중 컴퓨터,통신,디

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에 관한 상대적 신설조건 완화와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수는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으나 이 것이 오히려 총량규제의 맹점을 이용한 관련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결국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예외 조항에 대해 관련 중앙 행정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간 협조 부족의 또 다른 예로, 1997년에 정원이 감축된 서울대 등 4개 대학 220명을 카톨릭대 등 7개 대학에 배정한 사실도 있다. 이는 기존의 입학정원이 줄었을 경우, 부처 협의없이 다른 대학과 학과에 입학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당시 법제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다.

<부록 3> 고교생 대학진학 행태 설문조사 결과

<부표 3-1> 응답학생의 계열 분포 현황

| 구 분 | 인문계 | 자연계 | 예체능계 | 무응답 | 계 |
|------|-----------|-----------|--------|----------|------------|
| 청주고 | 45(22.7) | 145(73.2) | 2(1.0) | 6(3.0) | 198(100.0) |
| 광주일고 | 48(26.7) | 107(59.4) | - | 25(13.9) | 180(100.0) |
| 경북고 | 83(42.1) | 105(53.3) | 3(1.5) | 6(3.0) | 197(100.0) |
| 강릉고 | 53(27.3) | 118(60.8) | - | 23(11.9) | 194(100.0) |
| 전체 | 229(29.8) | 475(61.8) | 5(0.7) | 60(7.8) | 769(100.0) |

주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35.350$, $p=.000$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2> 응답학생의 수능등급 분포 현황

| 구 분 | 수능등급 | | | | | | | 무응답 | 계 |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이하 | | |
| 청주고 | 3 (1.5) | 9 (4.5) | 31 (15.7) | 38 (19.2) | 71 (35.9) | 35 (17.7) | 2 (1.0) | 9 (4.5) | 198 (100.0) |
| 광주일고 | 14 (7.8) | 20 (11.1) | 34 (18.9) | 26 (14.4) | 19 (10.6) | 12 (6.7) | 2 (1.2) | 53 (29.4) | 180 (100.0) |
| 경북고 | 30 (15.2) | 22 (11.2) | 52 (26.4) | 32 (16.2) | 30 (15.2) | 8 (4.1) | 6 (3.0) | 17 (8.6) | 197 (100.0) |
| 강릉고 | 32 (16.6) | 38 (19.7) | 48 (24.9) | 26 (13.5) | 11 (5.7) | 1 (0.5) | 2 (1.0) | 35 (18.1) | 193 (100.0) |
| 계 | 79 (10.3) | 89 (11.6) | 165 (21.5) | 122 (15.9) | 131 (17.1) | 56 (7.3) | 12 (1.6) | 114 (14.8) | 768 (100.0) |

주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97.114$, $p=.000$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3> 응답학생의 내신등급 분포 현황

| 구 분 | 내신등급 | | | | | | | 무응답 | 계 |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이하 | | |
| 청주고 | 13 (7.0) | 3 (1.6) | 23 (12.4) | 20 (10.8) | 17 (9.2) | 8 (4.3) | 9 (4.6) | 92 (49.7) | 197 (100.0) |
| 광주일고 | 18 (11.3) | 10 (6.3) | 20 (12.5) | 18 (11.3) | 7 (4.4) | 1 (0.6) | - | 86 (53.8) | 180 (100.0) |
| 경북고 | 21 (12.2) | 21 (12.2) | 24 (14.0) | 21 (12.2) | 19 (11.0) | 9 (5.2) | 12 (6.1) | 45 (26.2) | 197 (100.0) |
| 강릉고 | 2 (1.2) | 9 (5.3) | 4 (2.4) | 3 (1.8) | 4 (2.4) | - | 2 (1.0) | 146 (85.9) | 193 (100.0) |
| 전체 | 54 (7.9) | 43 (6.3) | 71 (10.3) | 62 (9.0) | 47 (6.8) | 18 (2.6) | 23 (3.0) | 369 (53.7) | 767 (100.0) |

주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61.755$, $p=0.000$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4> 진학 희망 대학의 소재지(학교별)

| 구분 | 진학 희망 대학의 소재지 | | | | | | 무응답 | 계 |
|------|---------------|--------------|---------------|--------------|-------------|-------------|-------------|----------------|
| | 서울 | 경기, 인천 | 동일 시도 | 기타 시도 | 전문대학 | 기타 | | |
| 청주고 | 28 (15.1) | 6 (3.2) | 124 (67.0) | 21 (11.4) | 4 (2.2) | 2 (1.1) | - | 185 (100.0) |
| 광주일고 | 43 (26.9) | 10 (6.3) | 74 (46.3) | 20 (12.5) | 8 (5.0) | 2 (1.3) | 39 (1.9) | 160 (100.0) |
| 경북고 | 45 (26.2) | 5 (2.9) | 88 (51.2) | 22 (12.8) | 7 (4.1) | 5 (2.9) | - | 172 (100.0) |
| 강릉고 | 117 (68.8) | 19 (11.2) | 15 (8.8) | 16 (9.4) | - | 3 (1.8) | - | 170 (100.0) |
| 전체 | 233 (33.9) | 40 (5.8) | 301 (43.8) | 79 (11.5) | 19 (2.8) | 12 (1.7) | 3 (0.4) | 687 (100.0) |

주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93.174$, $p=0.000$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5> 수능등급별 진학 희망 대학의 소재지

| 수능 등급 | 진학 희망대학의 소재지 | | | | | | 무응답 | 계 |
|----------|--------------|-----------|-----------|----------|----------|---------|--------|------------|
| | 서울 | 경기, 인천 | 동일 시도 | 기타 시도 | 전문대 학 | 기타 | | |
| 1등급 | 54(72.0) | - | 12(16.0) | 5(6.7) | 1(1.3) | 3(4.0) | - | 75(100.0) |
| 2등급 | 54(66.7) | 5(6.2) | 14(17.3) | 6(7.4) | 1(1.2) | 1(1.2) | - | 81(100.0) |
| 3등급 | 50(34.2) | 12(8.2) | 61(41.8) | 17(11.6) | 2(1.4) | 3(2.1) | 1(0.7) | 146(100.0) |
| 4등급 | 24(21.4) | 11(9.8) | 53(47.3) | 17(15.2) | 4(3.6) | 2(1.8) | 1(0.9) | 112(100.0) |
| 5등급 | 14(12.1) | 3(2.6) | 81(69.8) | 12(10.3) | 4(3.4) | 2(1.7) | - | 116(100.0) |
| 6등급 | 3(5.9) | 1(2.0) | 38(74.5) | 7(13.7) | 2(3.9) | - | - | 51(100.0) |
| 7등급 이하 | 1(9.0) | 1(9.0) | 6(54.5) | 2(18.1) | 1(9.0) | - | - | 11(100.0) |
| 무응답 | 33(34.7) | 7(7.4) | 36(37.9) | 13(13.7) | 4(4.2) | 1(1.1) | 1(1.1) | 95(100.0) |
| 전체 | 233(33.9) | 40(5.8) | 301(43.8) | 79(11.5) | 19(2.8) | 12(1.7) | 3(0.4) | 687(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88.428$, $p=.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6> 내신등급별 진학 희망대학의 소재지

| 내신 등급 | 무응답 | 진학 희망대학의 소재지 | | | | | | 계 |
|----------|--------|--------------|-----------|-----------|----------|---------|---------|------------|
| | | 서울 | 경기, 인천 | 동일 시도 | 기타 시도 | 전문대학 | 기타 | |
| 1등급 | 1(1.9) | 32(59.3) | 2(3.7) | 13(24.1) | 2(3.7) | 1(1.9) | 3(5.6) | 54(100.0) |
| 2등급 | - | 26(60.5) | - | 12(27.9) | 3(7.0) | 1(2.3) | 1(2.3) | 43(100.0) |
| 3등급 | 1(1.4) | 20(28.2) | 5(7.0) | 35(49.3) | 9(12.7) | 1(1.4) | - | 71(100.0) |
| 4등급 | - | 10(16.1) | 3(4.8) | 36(58.1) | 11(17.7) | 1(1.6) | 1(1.6) | 62(100.0) |
| 5등급 | - | 8(17.0) | - | 34(72.3) | 1(2.1) | 3(6.4) | 1(2.1) | 47(100.0) |
| 6등급 | - | 2(11.1) | - | 11(61.1) | 3(16.7) | 1(5.6) | 1(5.6) | 18(100.0) |
| 7등급 | - | - | 1(6.3) | 13(81.3) | 1(6.3) | 1(6.3) | - | 16(100.0) |
| 8등급 | - | 1(14.3) | 1(14.3) | 3(42.9) | 1(14.3) | 1(14.3) | - | 7(100.0) |
| 무응답 | 1(0.3) | 134(36.3) | 28(7.6) | 144(39.0) | 48(13.0) | 9(2.4) | 5(1.4) | 369(100.0) |
| 전체 | 3(0.4) | 233(33.9) | 40(5.8) | 301(43.8) | 79(11.5) | 19(2.8) | 12(1.7) | 687(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08.721$, $p=.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7> 지원대학 선택시 고려사항(학교별)

| 구분 | 지원대학 선택시 우선 고려사항 | | | | | | | | | 무응답 | 계 |
|----------|------------------|---------------|-------------|-----------------|-------------|-----------------|-------------|-----------------|------------|-------------|-----------------|
| | 합격 가능성 | 대학의 명성 | 지리적 근접성 | 취업 또는 장래성 | 경제적 사정 | 적성과 학과 특성 | 교육 환경 | 대학 소재지 특성 | 기타 | | |
| 청주고 | 109 (29.5) | 22 (5.9) | 27 (7.3) | 99 (26.8) | 31 (8.4) | 68 (18.4) | 11 (3.0) | 2 (0.5) | - | 1 (0.3) | 370 (100.0) |
| 광주 일고 | 81 (25.3) | 43 (13.4) | 18 (5.6) | 90 (28.1) | 24 (7.5) | 56 (17.5) | 4 (1.3) | 3 (0.9) | 1 (0.3) | - | 320 (100.0) |
| 경북고 | 89 (25.9) | 34 (9.9) | 12 (3.5) | 110 (32.0) | 16 (4.7) | 64 (18.6) | 9 (2.6) | 3 (0.9) | 1 (0.3) | 6 (1.7) | 344 (100.0) |
| 강릉고 | 70 (20.6) | 58 (17.1) | 4 (1.2) | 95 (27.9) | 14 (4.1) | 75 (22.1) | 15 (4.4) | 3 (0.9) | - | 6 (1.8) | 340 (100.0) |
| 전체 | 349 (25.4) | 157 (11.4) | 61 (4.4) | 394 (28.7) | 85 (6.2) | 263 (19.1) | 39 (2.8) | 11 (0.8) | 2 (0.1) | 13 (0.9) | 1374 (100.0) |

주 :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72.668$, $p=0.000$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8> 지원대학 선택시 고려사항(수능등급별)

| 수능 등급 | 합격 가능성 | 대학의 명성 | 지리적 근접성 | 취업 또는 장래성 | 경제적 사정 | 적성과 학과 특성 | 교육 환경 | 대학 소재지 특성 | 기타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35 (23.3) | 24 (16.0) | 2 (1.3) | 46 (30.7) | 4 (2.7) | 30 (20.0) | 7 (4.7) | 1 (0.7) | - | 1 (0.7) | 150 (100.0) |
| 2등급 | 33 (20.4) | 28 (17.3) | 2 (1.2) | 54 (33.3) | 8 (4.9) | 28 (17.3) | 5 (3.1) | 1 (0.6) | - | 3 (1.9) | 162 (100.0) |
| 3등급 | 76 (26.0) | 32 (11.0) | 10 (3.4) | 84 (28.8) | 19 (6.5) | 55 (18.8) | 9 (3.1) | 3 (1.0) | 1 (0.3) | 3 (1.0) | 292 (100.0) |
| 4등급 | 49 (21.9) | 20 (8.9) | 5 (2.2) | 73 (32.6) | 18 (8.0) | 44 (19.6) | 9 (4.0) | 3 (1.3) | 1 (0.4) | 2 (0.9) | 224 (100.0) |
| 5등급 이하 | 109 (30.6) | 23 (6.5) | 29 (8.1) | 94 (26.4) | 26 (7.3) | 68 (19.1) | 4 (1.1) | 1 (0.3) | 1 (0.3) | 1 (0.3) | 356 (100.0) |
| 무응답 | 47 (24.7) | 30 (15.8) | 13 (6.8) | 43 (22.6) | 10 (5.3) | 38 (20.0) | 5 (2.6) | 2 (1.1) | - | 2 (1.1) | 190 (100.0) |
| 전체 | 349 (25.4) | 157 (11.4) | 61 (4.4) | 394 (28.7) | 85 (6.2) | 263 (19.1) | 39 (2.8) | 11 (0.8) | 3 (0.2) | 12 (0.9) | 1,374 (100.0) |

주 :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93.064$, $p=.048$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9> 지원대학 선택시 고려사항(내신등급별)

| 내신 등급 | 합격 가능성 | 대학의 명성 | 지리적 근접성 | 취업 또는 장래성 | 경제적 시정 | 적성과 학과 특성 | 교육 환경 | 대학 소재지 특성 | 기타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26 (24.1) | 16 (14.8) | 3 (2.8) | 35 (32.4) | 5 (6.4) | 14 (13.0) | 8 (7.4) | 1 (0.9) | - | - | 108 (100.0) |
| 2등급 | 21 (24.4) | 15 (17.4) | 2 (2.3) | 30 (34.9) | 1 (1.2) | 14 (16.3) | 1 (1.2) | 1 (0.9) | - | 1 (1.2) | 86 (100.0) |
| 3등급 | 37 (26.1) | 16 (11.3) | 6 (4.2) | 47 (33.1) | 11 (7.7) | 20 (14.1) | 3 (2.1) | - | 1 (0.7) | 1 (0.7) | 142 (100.0) |
| 4등급 | 30 (24.2) | 7 (5.6) | 8 (6.5) | 34 (27.4) | 9 (7.3) | 34 (27.4) | 2 (1.6) | - | - | - | 124 (100.0) |
| 5등급 이하 | 49 (27.8) | 16 (9.1) | 11 (6.3) | 48 (27.3) | 12 (6.8) | 32 (18.2) | 3 (1.7) | 2 (1.1) | 1 (0.6) | 2 (1.1) | 176 (100.0) |
| 무응답 | 186 (25.2) | 87 (11.8) | 31 (4.2) | 200 (27.1) | 47 (6.4) | 149 (20.2) | 22 (3.0) | 7 (0.9) | 1 (0.1) | 8 (1.1) | 738 (100.0) |
| 합계 | 349 (25.4) | 157 (11.4) | 61 (4.4) | 394 (28.7) | 85 (6.2) | 263 (19.1) | 39 (2.8) | 11 (0.8) | 3 (0.2) | 12 (0.9) | 1,374 (100.0) |

주: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83.904$, $p=.159$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10>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학교별)

| 구분 | 대학의 지명도 | 취업 또는 장래성 | 우수한 교육환경 | 다양한 사회문화 혜택 | 지방에 남기 싫어서 | 기타 | 무응답 | 계 |
|------|---------------|---------------|--------------|-------------------|------------------|------------|-------------|----------------|
| 청주고 | 19 (26.4) | 20 (27.8) | 6 (8.3) | 20 (27.8) | 7 (9.7) | - | - | 72 (100.0) |
| 광주일고 | 32 (28.1) | 34 (29.8) | 11 (9.6) | 28 (24.6) | 8 (7.0) | 1 (0.9) | - | 114 (100.0) |
| 경북고 | 26 (24.5) | 42 (39.6) | 13 (12.3) | 12 (11.3) | 9 (8.5) | 1 (0.9) | 3 (2.8) | 106 (100.0) |
| 강릉고 | 66 (24.1) | 81 (29.6) | 29 (10.6) | 72 (26.3) | 16 (5.8) | 2 (0.7) | 8 (2.9) | 274 (100.0) |
| 전체 | 143 (25.3) | 177 (31.3) | 59 (10.4) | 132 (23.3) | 40 (7.1) | 4 (0.7) | 11 (1.9) | 566 (100.0) |

주: 복수 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20.157$, $p=.324$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11>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수능등급별)

| 수능 등급 | 대학의 지명도 | 취업 또는 장래성 | 우수한 교육환경 | 다양한 사회문화 혜택 | 지방에 남기 싫어서 | 기타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27 (25.0) | 40 (37.0) | 14 (13.0) | 19 (17.6) | 6 (5.6) | - | 2 (1.9) | 108 (100.0) |
| 2등급 | 34 (28.3) | 40 (33.3) | 10 (8.3) | 29 (24.2) | 5 (4.2) | - | 2 (1.7) | 120 (100.0) |
| 3등급 | 32 (24.6) | 37 (28.5) | 10 (7.7) | 33 (25.4) | 15 (11.5) | 1 (0.8) | 2 (1.5) | 130 (100.0) |
| 4등급 | 12 (16.7) | 20 (27.8) | 11 (15.3) | 24 (33.3) | 3 (4.2) | 1 (1.4) | 1 (1.4) | 72 (100.0) |
| 5등급 이하 | 13 (25.0) | 14 (26.9) | 6 (11.5) | 14 (26.9) | 3 (5.8) | - | 2 (3.8) | 52 (100.0) |
| 무응답 | 25 (29.8) | 26 (31.0) | 8 (9.5) | 13 (15.5) | 8 (9.5) | 2 (2.4) | 2 (2.4) | 84 (100.0) |
| 합계 | 143 (25.3) | 177 (31.3) | 59 (10.4) | 132 (23.3) | 40 (7.1) | 4 (0.7) | 11 (1.9) | 566 (100.0) |

주: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35.537$, $p=.749$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12>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내신등급별)

| 내신 등급 | 대학의 지명도 | 취업 또는 장래성 | 우수한 교육환경 | 다양한 사회문화 혜택 | 지방에 남기 싫어서 | 기타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18 (26.5) | 25 (36.8) | 7 (10.3) | 13 (19.1) | 4 (5.9) | - | 1 (1.5) | 68 (100.0) |
| 2등급 | 16 (29.6) | 19 (35.2) | 6 (11.1) | 7 (13.0) | 5 (9.3) | - | 1 (1.9) | 54 (100.0) |
| 3등급 | 19 (35.2) | 18 (33.3) | 4 (7.4) | 7 (13.0) | 5 (9.3) | 1 (1.9) | - | 54 (100.0) |
| 4등급 | 6 (23.1) | 4 (15.4) | 3 (11.5) | 11 (42.3) | 2 (7.7) | - | - | 26 (100.0) |
| 5등급 이하 | 11 (36.7) | 8 (26.7) | 3 (10.0) | 7 (23.3) | 1 (3.3) | - | - | 30 (100.0) |
| 무응답 | 73 (21.9) | 103 (30.8) | 36 (10.8) | 87 (26.0) | 23 (6.9) | 3 (0.9) | 9 (2.7) | 334 (100.0) |
| 합계 | 143 (25.3) | 177 (31.3) | 59 (10.4) | 132 (23.3) | 40 (7.1) | 4 (0.7) | 11 (1.9) | 566 (100.0) |

주: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32.710$, $p=.955$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13>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학교별)

| 구분 | 지방대학 진학 이유 지리적 근접성 | 성적 | 경제적 이점 | 취업이 잘되는 학과가 있어서 | 장래성 | 대학의 평판 | 교육 시설과 교수진 | 기타 | 무응답 | 계 |
|------|-----------------------|---------------|---------------|-----------------|--------------|-------------|-------------|------------|------------|----------------|
| 청주고 | 95 (31.7) | 92 (30.7) | 66 (22.0) | 11 (3.7) | 19 (6.3) | 7 (2.3) | 7 (2.3) | 1 (0.3) | 2 (0.7) | 300 (100.0) |
| 광주일고 | 55 (26.7) | 53 (25.7) | 53 (25.7) | 20 (9.7) | 15 (7.3) | 8 (3.9) | - | 2 (1.0) | - | 206 (100.0) |
| 경북고 | 57 (23.8) | 75 (31.4) | 42 (17.6) | 23 (9.6) | 27 (11.3) | 10 (4.2) | - | 2 (0.8) | 3 (1.3) | 239 (100.0) |
| 강릉고 | 6 (9.1) | 16 (24.2) | 10 (15.2) | 15 (22.7) | 12 (18.2) | 1 (1.5) | 4 (6.1) | 1 (1.5) | 1 (1.5) | 66 (100.0) |
| 전체 | 213 (26.3) | 236 (29.1) | 171 (21.1) | 69 (8.5) | 73 (9.0) | 26 (3.2) | 11 (1.4) | 6 (0.7) | 6 (0.7) | 811 (100.0) |

주 :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78.864$, $p=0.000$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14>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수능등급별)

| 수능 등급 | 지리적 근접성 | 성적 | 경제적 이점 | 취업이 잘되는 학과가 있어서 | 장래성 | 대학의 평판 | 교육 시설과 교수진 | 기타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7 (16.7) | 5 (11.9) | 7 (16.7) | 10 (23.8) | 9 (21.4) | 2 (4.8) | 2 (4.8) | - | - | 42 (100.0) |
| 2등급 | 5 (11.9) | 8 (19.0) | 9 (21.4) | 8 (19.0) | 8 (19.0) | - | 1 (2.4) | 1 (2.4) | 2 (4.8) | 42 (100.0) |
| 3등급 | 37 (22.3) | 37 (22.3) | 44 (26.5) | 23 (13.9) | 14 (8.4) | 5 (3.0) | 1 (0.6) | 3 (1.8) | 2 (1.2) | 166 (100.0) |
| 4등급 | 36 (23.7) | 41 (27.0) | 35 (23.0) | 14 (9.2) | 12 (7.9) | 8 (5.3) | 2 (1.3) | 2 (1.3) | 2 (1.3) | 152 (100.0) |
| 5등급 이하 | 95 (31.3) | 108 (35.5) | 57 (18.8) | 7 (2.3) | 25 (8.2) | 9 (3.0) | 2 (0.7) | 1 (0.3) | - | 304 (100.0) |
| 무응답 | 33 (31.1) | 37 (34.9) | 19 (17.9) | 7 (6.6) | 5 (4.7) | 2 (1.9) | 3 (2.8) | - | - | 106 (100.0) |
| 합계 | 213 (26.2) | 236 (29.1) | 171 (21.1) | 69 (8.5) | 73 (9.0) | 26 (3.2) | 11 (1.4) | 7 (0.9) | 6 (0.7) | 812 (100.0) |

주: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18.147$, $p=0.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15> 지방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내신등급별)

| 구분 | 지리적 근접성 | 성적 | 경제적 이점 | 취업이 잘되는 학과가 있어서 | 장래성 | 대학의 평판 | 교육 시설과 교수진 | 기타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8 (20.0) | 6 (15.0) | 6 (15.0) | 5 (12.5) | 10 (25.0) | 2 (5.0) | 3 (7.5) | - | - | 40 (100.0) |
| 2등급 | 6 (17.6) | 8 (23.5) | 7 (20.6) | 5 (14.7) | 5 (14.7) | - | - | 1 (2.9) | 2 (5.9) | 34 (100.0) |
| 3등급 | 19 (21.6) | 21 (23.9) | 24 (27.3) | 13 (14.8) | 7 (8.0) | 4 (4.5) | - | - | - | 88 (100.0) |
| 4등급 | 22 (22.4) | 32 (32.7) | 25 (25.5) | 7 (7.1) | 7 (7.1) | 4 (4.1) | - | 1 (1.0) | - | 98 (100.0) |
| 5등급 이하 | 49 (33.1) | 46 (31.0) | 23 (15.5) | 7 (4.7) | 13 (8.8) | 6 (4.1) | - | 2 (1.4) | 2 (1.4) | 148 (100.0) |
| 무응답 | 109 (27.0) | 123 (30.4) | 86 (21.3) | 32 (7.9) | 31 (7.7) | 10 (2.5) | 8 (2.0) | 3 (0.7) | 2 (0.5) | 404 (100.0) |
| 합계 | 213 (26.2) | 236 (29.1) | 171 (21.1) | 69 (8.5) | 73 (9.0) | 26 (3.2) | 11 (1.4) | 7 (0.9) | 6 (0.7) | 812 (100.0) |

주: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46.749$ p=.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16> 수도권 대학 진학시 거처

| 구분 | 수도권내 거처 자취 | 기숙사 | 하숙 | 친척집 | 기타 | 무응답 | 계 |
|------|------------------|---------------|-------------|--------------|-------------|--------------|----------------|
| 청주고 | 10 (27.8) | 11 (30.6) | 5 (13.9) | 6 (16.7) | 3 (8.3) | 12 (32.8) | 36 (100.0) |
| 광주일고 | 13 (22.8) | 31 (54.4) | 5 (8.8) | 5 (8.8) | 2 (3.5) | 1 (1.8) | 57 (100.0) |
| 경북고 | 13 (24.5) | 27 (50.9) | 3 (5.7) | 3 (5.7) | 3 (5.7) | 4 (7.5) | 53 (100.0) |
| 강릉고 | 20 (14.6) | 72 (52.6) | 13 (9.5) | 16 (11.7) | 7 (5.1) | 9 (6.6) | 137 (100.0) |
| 전체 | 56 (19.8) | 141 (49.8) | 26 (9.2) | 30 (10.6) | 15 (5.3) | 15 (5.3) | 283 (100.0) |

주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5.135$, p=.442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17>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수능등급별)

| 구분 | 잘 알고 있음 | 조금 알고 있음 | 잘 모름 | 전혀 모름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3 (4.0) | 19 (25.6) | 30 (40.0) | 23 (30.7) | - | 75 (100.0) |
| 2등급 | 4 (4.9) | 21 (25.9) | 33 (40.7) | 23 (28.4) | - | 81 (100.0) |
| 3등급 | 3 (2.1) | 28 (19.2) | 80 (54.8) | 35 (24.0) | - | 146 (100.0) |
| 4등급 | 4 (3.6) | 20 (17.9) | 57 (50.9) | 29 (25.9) | 2 (1.8) | 112 (100.0) |
| 5등급 이하 | 5 (2.8) | 42 (23.6) | 85 (47.8) | 46 (25.8) | - | 178 (100.0) |
| 무응답 | 8 (8.4) | 28 (29.5) | 34 (35.8) | 25 (26.3) | - | 95 (100.0) |
| 합계 | 27 (3.9) | 158 (23.0) | 319 (46.4) | 181 (26.3) | 2 (0.3) | 687 (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36.865$ p=.254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18>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내신등급별)

| 구분 | 잘 알고 있음 | 조금 알고 있음 | 잘 모름 | 전혀 모름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4 (7.4) | 13 (24.1) | 19 (35.2) | 18 (33.3) | - | 54 (100.0) |
| 2등급 | 2 (4.7) | 9 (20.9) | 23 (53.5) | 9 (20.9) | - | 43 (100.0) |
| 3등급 | 3 (4.2) | 17 (23.9) | 32 (45.1) | 19 (26.8) | - | 71 (100.0) |
| 4등급 | 2 (3.2) | 16 (25.8) | 38 (61.3) | 6 (9.7) | - | 62 (100.0) |
| 5등급 이하 | 3 (3.4) | 19 (21.6) | 45 (51.1) | 21 (23.9) | - | 88 (100.0) |
| 무응답 | 13 (3.5) | 84 (22.8) | 162 (43.9) | 108 (29.3) | 2 (0.5) | 369 (100.0) |
| 합계 | 27 (3.9) | 158 (23.0) | 319 (46.4) | 181 (26.3) | 2 (0.3) | 687 (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26.694$ p=.732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19> 지방대학 발전 전망(학교별)

| 구분 | 크게 발전 | 조금 발전 | 현상 유지 | 조금 나빠짐 | 크게 나빠짐 | 계 |
|------|--------------|---------------|---------------|--------------|-------------|----------------|
| 청주고 | 12 (6.5) | 101 (54.6) | 60 (32.4) | 10 (5.4) | 2 (1.1) | 185 (100.0) |
| 광주일고 | 18 (11.3) | 88 (55.0) | 44 (27.5) | 7 (4.4) | 3 (1.9) | 160 (100.0) |
| 경북고 | 9 (5.2) | 74 (43.0) | 56 (32.6) | 17 (9.9) | 16 (9.3) | 172 (100.0) |
| 강릉고 | 4 (2.4) | 72 (42.4) | 52 (30.6) | 28 (16.5) | 14 (8.2) | 170 (100.0) |
| 전체 | 43 (6.3) | 335 (48.8) | 212 (30.9) | 62 (9.0) | 35 (5.1) | 687 (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52.352$, $p=0.000$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20> 지방대학 발전 전망(수능등급별)

| 수능등급 | 크게 발전 | 조금 발전 | 현상 유지 | 조금 나빠짐 | 크게 나빠짐 | 합계 |
|-----------|--------------|---------------|---------------|--------------|-------------|----------------|
| 1등급 | 2 (2.7) | 35 (46.7) | 18 (24.0) | 12 (16.0) | 8 (10.7) | 75 (100.0) |
| 2등급 | 4 (4.9) | 41 (50.6) | 23 (28.4) | 9 (11.1) | 4 (4.9) | 81 (100.0) |
| 3등급 | 12 (8.2) | 65 (44.5) | 48 (32.9) | 12 (8.2) | 9 (6.2) | 146 (100.0) |
| 4등급 | 4 (3.6) | 64 (57.1) | 31 (27.7) | 12 (10.7) | 1 (0.9) | 112 (100.0) |
| 5등급 이하 | 11 (6.2) | 98 (55.1) | 52 (29.2) | 12 (6.7) | 5 (2.8) | 178 (100.0) |
| 무응답 | 10 (10.5) | 32 (33.7) | 40 (42.1) | 5 (5.3) | 8 (8.4) | 95 (100.0) |
| 합계 | 43 (6.3) | 335 (48.8) | 212 (30.9) | 62 (9.0) | 35 (5.1) | 687 (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56.032$ $p=0.005$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21> 지방대학 발전 전망(내신등급별)

| 구분 | 크게 발전 | 조금 발전 | 현상 유지 | 조금 나빠짐 | 크게 나빠짐 | 합계 |
|-----------|-------------|---------------|---------------|--------------|-------------|----------------|
| 1등급 | 3 (5.6) | 27 (50.0) | 14 (25.9) | 5 (9.3) | 5 (9.3) | 54 (100.0) |
| 2등급 | 2 (4.7) | 24 (55.8) | 11 (25.6) | 4 (9.3) | 2 (4.7) | 43 (100.0) |
| 3등급 | 6 (8.5) | 37 (52.1) | 21 (29.6) | 4 (5.6) | 3 (4.2) | 71 (100.0) |
| 4등급 | 4 (6.5) | 33 (53.2) | 18 (29.0) | 6 (9.7) | 1 (1.6) | 62 (100.0) |
| 5등급 이하 | 7 (8.0) | 39 (44.3) | 28 (31.8) | 10 (11.4) | 4 (4.5) | 88 (100.0) |
| 무응답 | 21 (5.7) | 175 (47.4) | 120 (32.5) | 33 (8.9) | 20 (5.4) | 369 (100.0) |
| 합계 | 43 (6.3) | 335 (48.8) | 212 (30.9) | 62 (9.0) | 35 (5.1) | 687 (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8.472$ p=.973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22> 효과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수능등급별)

| 구분 | 지방 인재 활당제 | 국비 장학금 지급 | 교육, 연구 시설 개선 | 우수 교수 확보 | 복지 시설 확충 | 지방 국립대 집중 육성 | 지방대 특성화 | 수도권 지역의 격차 해소 | 기타 | 합계 |
|-----------|-----------------|-----------------|-----------------------|----------------|----------------|-----------------------|---------------|------------------------|------------|------------------|
| 1등급 | 32 (21.5) | 15 (10.1) | 30 (20.1) | 18 (12.1) | 2 (1.3) | 11 (7.4) | 17 (11.4) | 24 (16.4) | - | 149 (100.0) |
| 2등급 | 34 (21.0) | 18 (11.1) | 23 (14.2) | 15 (9.3) | 4 (2.5) | 13 (8.0) | 22 (13.6) | 32 (19.8) | 1 (0.6) | 162 (100.0) |
| 3등급 | 67 (22.9) | 26 (8.9) | 48 (16.4) | 32 (11.0) | 9 (3.1) | 26 (8.9) | 29 (9.9) | 53 (18.2) | 2 (0.7) | 292 (100.0) |
| 4등급 | 48 (21.4) | 18 (8.0) | 40 (17.9) | 20 (8.6) | 11 (4.9) | 18 (8.0) | 24 (10.7) | 45 (20.1) | - | 224 (100.0) |
| 5등급 이하 | 70 (19.7) | 44 (12.4) | 59 (16.6) | 30 (8.4) | 20 (5.6) | 33 (9.3) | 45 (12.6) | 55 (15.4) | - | 356 (100.0) |
| 무응답 | 42 (22.2) | 21 (11.1) | 38 (20.1) | 17 (9.0) | 6 (3.2) | 16 (8.5) | 18 (9.5) | 31 (16.4) | - | 189 (100.0) |
| 합계 | 293 (21.4) | 142 (10.3) | 238 (17.3) | 132 (9.6) | 52 (3.8) | 117 (8.5) | 155 (11.3) | 240 (17.5) | 3 (0.2) | 1,372 (100.0) |

주: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45.029$ p=.965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23> 효과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내신등급별)

| 구분 | 지방 인재 할당제 | 국비 장학금 지급 | 교육, 연구 시설 개선 | 우수 교수 확보 | 복지 시설 확충 | 지방 국립대 집중 육성 | 지방대 특성화 | 수도권 지역의 격차 해소 | 기타 | 합계 |
|-----------|-----------------|-----------------|-----------------------|----------------|----------------|-----------------------|---------------|------------------------|------------|------------------|
| 1등급 | 21 (19.4) | 12 (11.1) | 27 (25.0) | 13 (12.0) | 1 (0.9) | 7 (6.5) | 10 (9.3) | 16 (14.8) | 1 (0.9) | 108 (100.0) |
| 2등급 | 20 (23.3) | 9 (10.5) | 13 (15.1) | 11 (12.8) | 3 (3.5) | 7 (8.1) | 9 (10.5) | 14 (16.3) | - | 86 (100.0) |
| 3등급 | 39 (27.5) | 12 (8.5) | 17 (12.0) | 14 (9.9) | 7 (4.9) | 9 (6.3) | 16 (11.3) | 28 (19.7) | - | 142 (100.0) |
| 4등급 | 19 (15.3) | 18 (14.5) | 23 (18.5) | 14 (11.3) | 8 (6.5) | 10 (8.1) | 12 (9.7) | 20 (16.1) | - | 124 (100.0) |
| 5등급 이하 | 32 (18.2) | 21 (11.9) | 37 (21.0) | 21 (11.9) | 7 (4.0) | 13 (7.4) | 18 (10.2) | 26 (14.8) | 1 (0.6) | 176 (100.0) |
| 무응답 | 162 (22.0) | 70 (9.5) | 121 (16.4) | 59 (8.0) | 26 (3.5) | 71 (9.6) | 90 (12.2) | 136 (18.5) | 1 (0.1) | 736 (100.0) |
| 합계 | 293 (21.4) | 142 (10.3) | 238 (17.3) | 132 (9.6) | 52 (3.8) | 117 (8.5) | 155 (11.3) | 240 (17.5) | 3 (0.2) | 1,372 (100.0) |

주: 복수응답,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65.471$ p=.425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24> 졸업생에게 유리한 조건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학교별)

| 구분 | 적극 고려 | 약간 고려 | 의향 없음 | 잘 모름 | 무응답 | 전체 |
|------|---------------|---------------|--------------|------------|------------|----------------|
| 청주고 | 105 (56.8) | 73 (39.5) | 6 (3.2) | 1 (0.5) | - | 185 (100.0) |
| 광주일고 | 79 (49.4) | 68 (42.5) | 13 (8.1) | - | - | 160 (100.0) |
| 경북고 | 75 (43.6) | 74 (43.0) | 22 (12.8) | - | 1 (0.6) | 172 (100.0) |
| 강릉고 | 34 (20.0) | 90 (52.9) | 46 (27.1) | - | - | 170 (100.0) |
| 전체 | 293 (42.6) | 305 (44.4) | 87 (12.7) | 1 (0.1) | 1 (0.1) | 687 (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83.923$, p=.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25> 장학금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학교별)

| 구 분 | 적극 고려 | 약간 고려 | 의향 없음 | 잘 모름 | 무응답 | 전체 |
|------|---------------|---------------|---------------|------------|------------|----------------|
| 청주고 | 68 (36.8) | 100 (54.1) | 17 (9.2) | - | - | 185 (100.0) |
| 광주일고 | 37 (23.1) | 79 (49.4) | 44 (27.5) | - | - | 160 (100.0) |
| 경북고 | 63 (36.6) | 79 (45.9) | 28 (16.3) | 1 (0.6) | 1 (0.6) | 172 (100.0) |
| 강릉고 | 18 (10.6) | 90 (52.9) | 61 (35.9) | 1 (0.6) | - | 170 (100.0) |
| 전 체 | 186 (27.1) | 348 (50.7) | 150 (21.8) | 2 (0.3) | 1 (0.1) | 687 (100.0) |

주 :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74.326$, $p=0.000$

자료 :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26> 장학금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수능등급별)

| 수능등급 | 적극 고려 | 약간 고려 | 의향 없음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11 (14.7) | 26 (34.7) | 38 (50.7) | - | 75(100.0) |
| 2등급 | 13 (16.0) | 42 (51.9) | 26 (32.1) | - | 81(100.0) |
| 3등급 | 38 (26.0) | 80 (54.8) | 27 (18.5) | 1(0.7) | 146(100.0) |
| 4등급 | 27 (24.1) | 64 (57.1) | 21 (18.8) | - | 112(100.0) |
| 5등급 이하 | 74 (41.6) | 89 (50.0) | 13 (7.3) | 2(1.1) | 178(100.0) |
| 무응답 | 23 (24.2) | 47 (49.5) | 25 (26.3) | - | 95(100.0) |
| 합계 | 186 (27.1) | 348 (50.7) | 150 (21.8) | 3(0.4) | 687(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07.816$ $p=0.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27> 장학금 제공시 지방대학 진학 의향(내신등급별)

| 내신등급 | 적극 고려 | 약간 고려 | 의향 없음 | 무응답 | 합계 |
|--------|---------------|---------------|---------------|------------|----------------|
| 1등급 | 11 (20.4) | 21 (38.9) | 22 (40.7) | - | 54 (100.0) |
| 2등급 | 6 (14.0) | 20 (46.5) | 17 (39.5) | - | 43 (100.0) |
| 3등급 | 21 (29.6) | 38 (53.5) | 12 (16.9) | - | 71 (100.0) |
| 4등급 | 22 (35.5) | 33 (53.2) | 7 (11.3) | - | 62 (100.0) |
| 5등급 이하 | 28 (31.8) | 47 (53.4) | 11 (12.5) | 2 (2.3) | 88 (100.0) |
| 무응답 | 98 (26.6) | 189 (51.2) | 81 (22.0) | 1 (0.3) | 369 (100.0) |
| 합계 | 186 (27.1) | 348 (50.7) | 150 (21.8) | 3 (0.4) | 687 (100.0) |

주: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09.660$ p=.000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28> 고교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발전방안(수능등급)

| 지방대학 발전방안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이하 | 무응답 | 합계 |
|----------------|--------------|--------------|--------------|--------------|--------------|-------------|----------------|
| 국가의 구조, 정책 개편 | 2 (40.0) | - | 1 (20.0) | 1 (20.0) | - | 1 (20.0) | 5 (100.0) |
| 국가의 적극적 지원 | 2 (6.7) | 2 (6.7) | 11 (36.7) | 5 (16.7) | 9 (30.0) | 1 (3.3) | 30 (100.0) |
| 대학 평준화 | 2 (16.7) | 3 (25.0) | 3 (25.0) | 2 (16.7) | 1 (8.3) | 1 (8.3) | 12 (100.0) |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 5 (13.2) | 6 (15.8) | 9 (23.7) | 4 (10.5) | 12 (31.6) | 2 (5.3) | 38 (100.0) |
| 수도 이전 | - | - | 2 (16.7) | 1 (8.3) | 3 (25.0) | 6 (50.0) | 12 (100.0) |
| 장학금 혜택 | 2 (9.5) | 2 (9.5) | 6 (28.6) | 5 (23.8) | 4 (19.0) | 2 (9.5) | 21 (100.0) |
| 좋은 시설과 교수진 | 2 (5.1) | 4 (10.3) | 13 (33.3) | 7 (17.9) | 9 (23.1) | 4 (10.3) | 39 (100.0) |
| 지방대에 대한 인식 개혁 | 2 (6.7) | 6 (20.0) | 5 (16.7) | 8 (26.7) | 6 (20.0) | 3 (10.0) | 30 (100.0) |
| 지방대의 특성화 | 8 (19.5) | 8 (19.5) | 7 (17.1) | 7 (17.1) | 9 (22.0) | 2 (4.9) | 41 (100.0) |
| 취업여건 개선 | 6 (8.6) | 7 (10.0) | 18 (25.7) | 14 (20.0) | 18 (25.7) | 7 (10.0) | 70 (100.0) |
| 기타 | 1 (14.3) | 1 (14.3) | 1 (14.3) | 1 (14.3) | 2 (28.6) | 1 (14.3) | 7 (100.0) |
| 합계 | 32 (10.5) | 39 (12.8) | 76 (24.9) | 55 (18.0) | 73 (23.9) | 30 (9.8) | 305 (100.0) |

주: 1.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01.521$ p=.551

2. 유효설문 전체 687개중 응답개수는 305개임.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표 3-29> 고교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발전방안(내신등급)

| 지방대학 발전방안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이하 | 무응답 | 합계 |
|----------------|-------------|-------------|--------------|-------------|--------------|---------------|----------------|
| 국가의 구조, 정책 개편 | 1 (20.0) | - | 1 (20.0) | - | 1 (20.0) | 2 (40.0) | 5 (100.0) |
| 국가의 적극적 지원 | 2 (6.7) | 2 (6.7) | 4 (13.3) | 4 (13.3) | 5 (16.7) | 13 (43.3) | 30 (100.0) |
| 대학 평준화 | - | 1 (8.3) | 1 (8.3) | 3 (25.0) | - | 7 (58.3) | 12 (100.0) |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 4 (10.5) | 5 (13.2) | 6 (15.8) | 1 (2.6) | 5 (13.2) | 17 (44.7) | 38 (100.0) |
| 수도 이전 | - | - | 1 (8.3) | - | 1 (8.3) | 10 (83.3) | 12 (100.0) |
| 장학금 혜택 | 5 (23.8) | - | 4 (19.0) | 1 (4.8) | 2 (9.5) | 9 (42.9) | 21 (100.0) |
| 좋은 시설과 교수진 | 5 (12.8) | - | 5 (12.8) | 5 (12.8) | 3 (7.7) | 21 (53.8) | 39 (100.0) |
| 지방대에 대한 인식 개혁 | 1 (3.3) | 1 (3.3) | 2 (6.7) | 1 (3.3) | 4 (13.3) | 21 (70.0) | 30 (100.0) |
| 지방대의 특성화 | 3 (7.3) | 6 (14.6) | 9 (22.0) | 3 (7.3) | 2 (4.9) | 18 (43.9) | 41 (100.0) |
| 취업여건 개선 | 5 (7.1) | 3 (4.3) | 11 (15.7) | 9 (12.9) | 6 (8.6) | 36 (51.4) | 70 (100.0) |
| 기타 | - | - | - | 3 (42.9) | 2 (28.6) | 2 (28.6) | 7 (100.0) |
| 합계 | 26 (8.5) | 18 (5.9) | 44 (14.4) | 30 (9.8) | 31 (10.2) | 159 (51.1) | 305 (100.0) |

주: 1. pearson 카이제곱 검증결과 : $\chi^2=106.784$ $p=.406$

2. 유효설문 전체 687개중 응답개수는 305개임.

자료: 학생설문조사 결과.

<부록 4> 대학 처·실장 지방대학 발전방안 설문조사 결과

<부표 4-1> 권역별 대학특성별 분포

| 구분 | 대학 특성 | | | 무응답 | 합계 |
|--------|--------------|---------------|--------------|-------------|----------------|
| | 일반국립대 | 일반사립대 | 산업·기타대 | | |
| 충청권 | 6 (12.8) | 33 (70.2) | 8 (17.0) | - | 47 (100.0) |
| 호남권 | 14 (29.2) | 21 (43.8) | 11 (22.9) | 2 (4.2) | 48 (100.0) |
| 영남권 | 16 (23.5) | 45 (66.2) | 7 (10.3) | - | 68 (100.0) |
| 강원·제주권 | 4 (21.1) | 12 (63.2) | 3 (15.8) | - | 19 (100.0) |
| 무응답 | - | 1 (25.0) | 1 (25.0) | 2 (50.0) | 4 (100.0) |
| 합계 | 40 (21.5) | 112 (60.2) | 30 (16.1) | 4 (2.2) | 186 (100.0) |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부표 4-2> 권역별 대학규모별 분포

| 구분 | 대학 규모 | | | | | 무응답 | 합계 |
|--------|--------------|--------------|--------------|--------------|--------------|-------------|----------------|
| | 5천명 미만 | 5천~1만 명 미만 | 1만~1만5천 명 미만 | 1만5천~2만 명 미만 | 2만명 이상 | | |
| 충청권 | 8 (17.0) | 25 (53.2) | 10 (21.3) | - | 4 (8.5) | - | 47 (100.0) |
| 호남권 | 21 (43.8) | 13 (27.1) | 4 (8.3) | 5 (10.4) | 3 (6.3) | 2 (4.2) | 48 (100.0) |
| 영남권 | 18 (26.5) | 19 (27.9) | 13 (19.1) | 5 (7.4) | 13 (19.1) | - | 68 (100.0) |
| 강원·제주권 | 8 (42.1) | 7 (36.8) | 4 (21.1) | - | - | - | 19 (100.0) |
| 무응답 | - | - | 1 (25.0) | - | - | 3 (75.0) | 4 (100.0) |
| 합계 | 55 (29.6) | 64 (34.4) | 32 (17.2) | 10 (5.4) | 20 (10.8) | 5 (2.7) | 186 (100.0) |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부표 4-3> 대학특성별 대학규모별 분포

| 구분 | 대학 규모 | | | | | 무응답 | 합계 |
|--------|----------|-----------|-------------|-------------|----------|----------|------------|
| | 5천명 미만 | 5천~1만명 미만 | 1만~1만5천명 미만 | 1만5천~2만명 미만 | 2만명 이상 | | |
| 일반국립대 | 2(5.0) | 14(35.0) | 8(20.0) | 3(7.5) | 13(32.5) | - | 40(100.0) |
| 일반사립대 | 41(36.6) | 34(30.4) | 23(20.5) | 7(6.3) | 7(6.3) | - | 112(100.0) |
| 산업·기타대 | 12(40.0) | 16(53.3) | 1(3.3) | - | - | 1(3.3) | 30(100.0) |
| 무응답 | - | - | - | - | - | 4(100.0) | 4(100.0) |
| 합계 | 55(29.6) | 64(34.4) | 32(17.2) | 10(5.4) | 20(10.8) | 5(2.7) | 186(100.0) |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부표 4-4> 권역별 지방대학의 당면문제

| 구분 | 지방대학의 당면한 문제 | | | | | |
|--------|-----------------|-------------------|--------------|-----------|---------------|------------|
| | 입학생 총원 문제 | 우수학생 수도권 유출 | 재정악화와 경영난 가중 | 졸업생의 취업난 | 교육 및 연구 여건 낙후 | 지역산업과 연계부족 |
| 충청권 | 98(34.8) | 43(15.2) | 28(9.9) | 66(23.4) | 7(2.5) | 11(3.9) |
| 호남권 | 103(35.8) | 33(11.5) | 28(9.7) | 66(22.9) | 7(2.4) | 17(5.9) |
| 영남권 | 130(31.9) | 57(14.0) | 59(14.5) | 94(23.0) | 21(5.1) | 6(1.5) |
| 강원·제주권 | 50(43.9) | 12(10.5) | 14(12.3) | 17(14.9) | 3(2.6) | 2(1.8) |
| 무응답 | 4(16.7) | 3(12.5) | 9(37.5) | 7(29.2) | - | 1(4.2) |
| 합계 | 385(34.5) | 148(13.3) | 138(12.4) | 250(22.4) | 38(3.4) | 37(3.3) |
| 구분 | 지방대학의 당면한 문제 | | | | 무응답 | 합계 |
| | 학생 중도이탈 (수도권편입) | 교수 양적부족, 우수교원 확보난 | 사기저하 | 기타 | | |
| 충청권 | 18(6.4) | 4(1.4) | 7(2.5) | - | - | 282(100) |
| 호남권 | 20(6.9) | 2(0.7) | 9(3.1) | 3(1.0) | - | 288(100) |
| 영남권 | 20(4.9) | 7(1.7) | 13(3.2) | - | 1(0.2) | 408(100) |
| 강원·제주권 | 11(9.6) | 4(3.5) | - | - | 1(0.9) | 114(100) |
| 무응답 | - | - | - | - | - | 24(100) |
| 합계 | 69(6.2) | 17(1.5) | 29(2.6) | 3(0.3) | 2(0.2) | 1116(100) |

주: 첫째 3점, 둘째 2점, 셋째 1점을 각각 곱한 점수임, 복수응답 처리.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부표 4-5> 지방대학 문제의 주된 원인(권역별)

| 구분 | 지방대학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 | | | | |
|--------|---------------------|-------------|----------------|-----------|---------------------|---------------|
| | 수도권-지방 불균형성장 | 수급불균형 | 정부정책과 지원 미흡 | 취업차별 | 대학자체의 자구노력 부족 | 공급자중심 교육체계 |
| 충청권 | 80(28.4) | 62(22.0) | 41(14.5) | 46(16.3) | 2(0.7) | 8(2.8) |
| 호남권 | 88(30.6) | 52(18.1) | 44(15.3) | 41(14.2) | - | 13(4.5) |
| 영남권 | 126(30.9) | 88(21.6) | 70(17.2) | 64(15.7) | 9(2.2) | 10(2.5) |
| 강원·제주권 | 40(35.1) | 31(27.2) | 21(18.4) | 8(7.0) | - | 5(4.4) |
| 무응답 | 8(33.3) | 4(16.7) | 5(20.8) | 1(4.2) | - | 3(12.5) |
| 합계 | 342(30.6) | 237(21.2) | 181(16.2) | 160(14.3) | 11(1.0) | 39(3.4) |
| 구분 | 지방대학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 | | | 무응답 | 합계 |
| | 지역사회의 관심부족 | 수도권 선호사상 | 교수의 역량 미흡 | 기타 | | |
| 충청권 | 5(1.8) | 37(13.1) | 1(0.4) | - | - | 282(100) |
| 호남권 | 6(2.1) | 43(14.9) | - | 1(0.3) | - | 288(100) |
| 영남권 | 7(1.7) | 34(8.3) | - | - | - | 408(100) |
| 강원·제주권 | 2(1.8) | 4(3.5) | 2(1.8) | - | 1(0.9) | 114(100) |
| 무응답 | - | 2(8.3) | 1(4.2) | - | - | 24(100) |
| 합계 | 20(1.8) | 120(10.8) | 4(0.4) | 1(0.1) | 1(0.1) | 1116(100) |

주: 첫째 3점, 둘째 2점, 셋째 1점을 각각 곱한 점수임, 복수응답 처리
 자료: 대학 처·실장 설문조사 결과.

<부록 5> 고교생 대학진학 행태 및 지방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지

고교생 대학 진학 행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현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고교생의 대학 진학 행태에 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여 귀 학생에게 몇 가지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성의껏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의 무기명 통계자료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12.

국토연구원장

담 당 : 국토연구원 임승달 초빙연구위원, 권영섭 연구위원,
변세일 연구원, 공성애 연구원
(전화 : 031-380-0645)
(팩스 : 031-380-0479)
(E-Mail : yskwon@krihs.re.kr, sibyun@krihs.re.kr)

3. 수도권 소재 대학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학의 사회적 지명도
- ② 졸업후 취업 가능성이나 장래 발전성
- ③ 우수한 교육환경(교육시설, 교수진 등)
- ④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화혜택
- ⑤ 지방에 남기 싫어서
- ⑥ 기 타 ()

☞ 수도권에 진학한다면 거처는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

- ① 자취 ② 기숙사 ③ 하숙 ④ 친척집 ⑤ 기타

4. 지방대학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가까운 지리적 위치
- ② 성적
- ③ 경제적 이점(등록금, 생활비 등)
- ④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있어서(의치대, 약대 등)
- ⑤ 장래 발전성
- ⑥ 대학의 평판도
- ⑦ 교육시설과 교수진
- ⑧ 기 타 ()

5.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6.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대학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 | | | | |
|--|--|--|--|--|
| | | | | |
|--|--|--|--|--|

- ① 현재보다 크게 발전 ② 현재보다 조금 발전 ③ 현재 수준 유지 ④ 현재보다 조금 나빠짐 ⑤ 현재보다 크게 나빠짐

7. 학생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방대학 육성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방인재할당제 (지방공무원 및 회사 취업 시 지방대학 출신자 우대제)
- ② 국비 장학금 지급 (일정 수준이상 지방대학 진학자)
- ③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시설 개선
- ④ 우수 교수의 확보
- ⑤ 기숙사 및 학생 복지시설 확충
- ⑥ 지방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
- ⑦ 지방대학 특성화와 집중육성
- ⑧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격차 해소
- ⑨ 기 타 ()

8. 지역인재 할당제를 실시하여 지방공무원이나 회사 취업시 그 지방대학 졸업자에게 유리한 여건을 준다면 지방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적극 고려
- ② 약간 고려
- ③ 의향 없음

지방대학 발전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대학 처·실장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현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하여 각 대학의 관련 처·실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성의껏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의 무기명 통계자료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국토연구원장

담 당 : 국토연구원 임승달 초빙연구위원, 권영섭 연구위원,
변세일 연구원, 공성애 연구원
(전화 : 031-380-0645)
(팩스 : 031-380-0479)
(E-Mail : yskwon@krihs.re.kr, sibyun@krihs.re.kr)

★ 응답하여 주신 분께 연구 완료 후 연구보고서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실상과 정책에 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만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에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서 심각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첫째: () ■ 둘째: () ■ 셋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학생 충원 문제 ②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질적 저하 문제) ③ 지방대학의 재정악화와 경영난 가중 ④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⑤ 교육 및 연구 여건 낙후 ⑥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⑦ 지방학생의 중도이탈 급증(수도권편입 등) ⑧ 교수의 양적 부족과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 ⑨ 사회적 편견에 따른 사기 저하문제 ⑩ 기타 () |
|---|

2. 위와 같은 지방대학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서 심각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첫째: () ■ 둘째: () ■ 셋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 성장 ②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입학정원의 팽창(수급불균형) ③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지원 미흡 ④ 지방 대학졸업생에 대한 취업차별 ⑤ 지방대학 자체의 자구노력 부족 ⑥ 공급자중심의 교육체계(백화점식 학과개설과 교육내용의 현장성 부족 등) ⑦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체의 관심 부족 ⑧ 사회 전반의 수도권 선호 사상 ⑨ 지방대학 교수의 역량 미흡 ⑩ 기타 () |
|--|

3. 지방대학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지역발전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첫째: () ■ 둘째: () ■ 셋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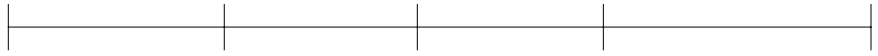
- 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공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② 지역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공급하여 외지 진학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 ③ 지역정보 및 두뇌은행(Data bank&Think Tank)으로서 지역발전 선도
- ④ 새로운 기술개발과 공급으로 신산업 창출과 지역산업발전에 기여
- ⑤ 대학시설의 지역사회 개방과 평생교육 등으로 지역의 사회문화활동 촉진
- ⑥ 대학 구성원의 소비 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⑦ 대학의 지역주민 고용으로 취업기회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
- ⑧ 대학 구성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지역발전 기여
- ⑨ 대학 구성원의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혁신
- ⑩ 기 타 ()

4.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첫째: () ■ 둘째: () ■ 셋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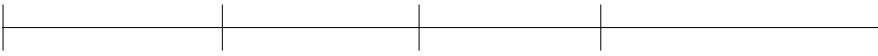
- ① 지방대학의 학과 통폐합 등 자체 구조조정 및 특성화 전략
- ② 지방대학 졸업생과 입학생에 대한 우대조치 전략(인재할당제 등)
- ③ 산·학·연 연계와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
- ④ 지방대학 통폐합 및 M&A 전략
- ⑤ 권역별 지방대학 연합(제휴)체제 구축 전략
- ⑥ 지방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 전략(지방대학지원법 제정 등)
- ⑦ 지방대학의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 전략
- ⑧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친화형 대학 육성
- ⑨ 객관적인 대학평가제도 확립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전략
- ⑩ 수요자(학생, 산업체)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전략
- ⑪ 지방대학 교수에 대한 우대 전략
- ⑫ 지방대학의 국제화 전략
- ⑬ 기 타 ()

5.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② 잘 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못 하고 있다 ⑤ 매우 잘 못 하고 있다

6.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 각종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② 잘 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못 하고 있다 ⑤ 매우 잘 못 하고 있다

7. 참여정부에서는 현재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대학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보다 크게 개선 ② 현재보다 조금 나아짐 ③ 현재수준과 비슷 ④ 현재보다 조금 악화됨 ⑤ 현재보다 크게 나빠짐

8.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① 대학 내부의 학과 통폐합 및 구조 조정
- ② 지방대학의 통폐합 및 M&A 추진
- ③ 권역별 지방대학 연합(제휴)체제 구축
- ④ 대학의 기능별 분담체제 구축
- ⑤ 국립대학의 책임 기관화와 개혁

9.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에 우대조치를 취한다면 다음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적 우대조치(지방대학 육성법 등)
- ② 지방대학 교수에 대한 우대조치(연구비 등)
- ③ 지방대학 우수입학생에 대한 우대조치(국비장학금 지급, 병역특례 등)
- ④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우대조치(인재 할당제)

10. 대학협력체제의 구축을 강화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내대학간 교류 협력체제
- ②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체제
- ③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 ④ 외국대학과의 국제협력체제

※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해서 찬반 여부, 정책도입의 난이도, 지방대학 발전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1. 일본에서는 현재 국립대학을 책임운영기관화(공익 법인화)하여 국립대학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찬반 의견(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중립 ④반대 ⑤적극 반대)

■ 정책도입 난이도(①매우 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 ④쉽다 ⑤매우 쉽다)

■ 지방대학발전효과(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보통 ④적다 ⑤없다)

2. 광주전남지역 등의 국립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연합대학 체제 구축(관내 국립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반 의견(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중립 ④반대 ⑤적극 반대)

■ 정책도입 난이도(①매우 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 ④쉽다 ⑤매우 쉽다)

■ 지방대학발전효과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보통 ④적다 ⑤없다)

3.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간 통폐합과 인수 합병(M&A)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반 의견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중립 ④반대 ⑤적극 반대)

■ 정책도입 난이도 (①매우 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 ④쉽다 ⑤매우 쉽다)

■ 지방대학발전효과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보통 ④적다 ⑤없다)

4. 경쟁력 없는 학과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혀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반 의견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중립 ④반대 ⑤적극 반대)

■ 정책도입 난이도 (①매우 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 ④쉽다 ⑤매우 쉽다)

■ 지방대학발전효과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보통 ④적다 ⑤없다)

5. 지방대학이 재정확보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대학에 교부금으로 지원토록 하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반 의견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중립 ④반대 ⑤적극 반대)

■ 정책도입 난이도 (①매우 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 ④쉽다 ⑤매우 쉽다)

■ 지방대학발전효과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보통 ④적다 ⑤없다)

6.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공직의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역인재 할당제’나 민간기업이 지방대학 출신자를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반 의견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중립 ④반대 ⑤적극 반대)

■ 정책도입 난이도 (①매우 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 ④쉽다 ⑤매우 쉽다)

■ 지방대학발전효과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보통 ④적다 ⑤없다)

7. 참여정부에서는 현재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반 의견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중립 ④반대 ⑤적극 반대)
- 정책도입 난이도 (①매우 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 ④쉽다 ⑤매우 쉽다)
- 지방대학발전효과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보통 ④적다 ⑤없다)

8. 지방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정책도 선 내부구조 조정, 후 정부지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반 의견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중립 ④반대 ⑤적극 반대)
- 정책도입 난이도 (①매우 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 ④쉽다 ⑤매우 쉽다)
- 지방대학발전효과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보통 ④적다 ⑤없다)

9.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 외국대학간, 지역내 대학간의 학생 및 교수 교류, 교수 순환 근무제, 시설 공동 활용, 공동 프로그램 운영(공동 학위제 등) 등 대학간 교류 및 제휴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반 의견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중립 ④반대 ⑤적극 반대)
- 정책도입 난이도 (①매우 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 ④쉽다 ⑤매우 쉽다)
- 지방대학발전효과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보통 ④적다 ⑤없다)

10. 지방대학을 교육과 연구경쟁력에 따라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실무중심대학 등으로 기능을 특화 전문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반 의견 (①적극 찬성 ②찬성 ③중립 ④반대 ⑤적극 반대)

■ 정책도입 난이도 (①매우 어렵다 ②어렵다 ③보통 ④쉽다 ⑤매우 쉽다)

■ 지방대학발전효과 (①매우 크다 ②크다 ③보통 ④적다 ⑤없다)

11.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 대학의 일반적인 사항

■ 대학명 : ■ 대학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대학 규모

- ① 5천명 미만 ② 5천명-1만명 미만 ③ 1만명 -1만5천명 미만
 ④ 1만 5천-2만명 미만 ⑤ 2만명 이상

■ 대학 특성

- ①일반국립대학 ②일반사립대학 ③교육대학
 ④산업대학 ⑤기타 대학

■ 입학생의 출신 시도별 분포

(자료가 불충분하면 개략적인 구성비를 써 주십시오)

| 구 분 | | 학생 수 | 구성비(%) |
|-------|-------|------|--------|
| 관내 학생 | 통학권내 | | |
| | 기타 도내 | | |
| | 소 계 | | |
| 외지 학생 | 수도권 | | |
| | 타 시도 | | |
| | 소 계 | | |
| 합 계 | | | |

■ 응답자 직위 및 성명

| 직 위 | 성명 |
|-----|-------------------------------|
| 연락처 | 전화) 핸드폰) |